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024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3 Annual Report

발간사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Mr. Kim

“

‘신(新)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와 ‘저출생’이 우리사회에서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는 만큼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을 마련 하여 수주 호황에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던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였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로 외국인 숙련인력이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며 우리 산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와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절근로자, 조선업 근로자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도입하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내 ‘안전 보건 교육’을 추가하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체류질서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본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입니다. 그간 꾸준히 증가해온 체류외국인 숫자는 5년 이내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4년 9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유치와 이민사회에 선제적 대비를 목표로 ①우수인재 유치, ②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③사회통합 강화, ④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준비로 출입국·이민정책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감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한 주요 업무, 각종 통계,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연감이 출입국·이민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배 상 업

Contents

2023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3	INTRO
4	발간사

제1장 일반사항

16	제1절 기본방향
16	제1항 정책 여건
18	제2항 2023년 전략목표
19	제2절 비전과 미션
21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21	제1항 기구·인원
30	제2항 인사
39	제3항 시설·예산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46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46	제2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정비
48	제3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49	제4항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53	제5항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54	제6항 출입국자 현황
56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56	제1항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58	제2항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E-7) 비자제도 개선
60	제3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62	제4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제도개선
64	제5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자이민제도 개선

65	제6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66	제7항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69	제8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71	제3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71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73	제2항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74	제3항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 등 인권보호 강화
7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76	제1항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77	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79	제3항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80	제4항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
81	제5항 외국인력 조기정착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 운영
82	제6항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 기회 확대
83	제7항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85	제8항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87	제9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실화
88	제10항 결혼이민 관련 제도의 명확화·통일화 추진
90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90	제1항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 국민정체성 함양
92	제2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신설 및 국적심의위원회 개편·운영
93	제3항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95	제4항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 제도 개선
97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97	제1항 추진배경
98	제2항 2023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99	제3항 「난민법」 개정 추진
99	제4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101	제5항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Contents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102	제6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개선
103	제7항 재정착난민 수용
104	제8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104	제9항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교류·협력 강화
105	제10항 난민인식 개선
106	제11항 향후 추진계획
107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108	제1항 난민 이의신청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109	제2항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109	제3항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110	제4항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 강화
111	제5항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활동
112	제6항 향후 추진계획
113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113	제1항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116	제2항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117	제3항 2023년 정책발표회 개최
119	제4항 2023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121	제9절 국제협력 강화
122	제1항 장·차관의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123	제2항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개최
124	제3항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127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127	제1항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128	제2항 등록외국인의 신분증명서인 외국인등록증 개선
130	제3항 등록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설
132	제4항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133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133	제1항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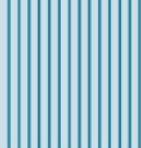
135	제2항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136	제3항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136	제4항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138	제5항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139	제6항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140	제12절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140	제1항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41	제2항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관련 공론화 진행
143	제3항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144	제4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145	제5항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범 도입
146	제6항 향후 계획

● 제3장 일자별 주요업무 처리내용(행정 연표)

150	제1절 상반기
161	제2절 하반기

● 제4장 법령·예규 정비

176	제1절 법령
176	제1항 법률
179	제2항 대통령령
181	제3항 총리령 및 법무부령
187	제2절 훈령·예규 정비
187	제1항 훈령
187	제2항 예규
188	제3항 주요지시



Contents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제5장 주요 통계

- 192 제1절 출입국자 현황
- 197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 213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 214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6장 보도(설명) 자료

- 220 2023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부록

- 268 ① 체류자격일람표
- 278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 284 ③ 주요 행사 연설문
- 290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291 ⑤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 292 ⑥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 296 ⑦ 주요 언론보도
- 408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표

23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31	표 2	2023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42	표 3	2023년 예산 내역
49	표 4	K-ETA 신청 현황
51	표 5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52	표 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58	표 7	연도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현황
60	표 8	조선분야 외국인 기능인력(E-7) 증가 현황
60	표 9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67	표 10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72	표 11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72	표 12	자진출국자 현황
74	표 13	기획조사 추진 실적
96	표 14	유형별 국적취득(귀화,회복) 현황
98	표 15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100	표 16	2023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102	표 17	2023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103	표 18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107	표 19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108	표 20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124	표 21	2023년 국제회의 참여 현황
125	표 22	2023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138	표 23	2023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142	표 24	2023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문화 현황

Contents

2023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그림

23	그림 1	본부 조직도
24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27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5개 기관)
28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4개 국가, 22개 공관, 24명)
40	그림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감도
40	그림 6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41	그림 7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조감도
41	그림 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51	그림 9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경과
54	그림 10	출입국자 증감 추이
55	그림 11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55	그림 12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56	그림 13	법무부 장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브리핑('23. 9. 25.)
59	그림 14	법무부 장관 조선업 정책현장 방문
71	그림 15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78	그림 16	자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79	그림 17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82	그림 18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현장
83	그림 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평가(CBT) 대전센터 개소(2023. 11. 21.)
84	그림 20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운영
87	그림 21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3. 5. 19.)
91	그림 22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2023. 8. 7.)
94	그림 23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설명회
101	그림 24	2023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3. 1. 11.)
105	그림 25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면담 (2023. 11. 29.)

110	그림 26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2023. 7. 4.)
114	그림 27 외국인정책위원회
115	그림 28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118	그림 29 제26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3. 11. 27.)
120	그림 30 2023년도 이민정책포럼
122	그림 31 장·차관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및 교류 협력 강화
123	그림 32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128	그림 3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129	그림 34 신형 외국인등록증 등 견본 이미지
129	그림 35 신형 외국인등록증 개선 사항
131	그림 36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소셜미디어 홍보 자료
132	그림 37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134	그림 38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주요 내용
135	그림 3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언론보도
137	그림 40 통계월보 시각화화면
137	그림 41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분석·시각화 화면
139	그림 42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141	그림 43 이민정책 전담조직 및 이민정책 활용 관련 언론보도
142	그림 44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2023. 11. 3.)
143	그림 45 법무부장관, 유럽 주요 국가 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 회담 (2023. 3. 7.~3. 15.)
144	그림 46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발표(2023. 12. 6.)



일반 사항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비전과 미션
-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제1절

기본방향

제1항 정책 여건

2021년 0.81을 기록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까지 하락하고, 2021년 139.4였던 고령화 지수는 2022년 151.0으로 높아져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2023년 6월 발족하여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업 강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가사·육아 서비스 등 돌봄인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돌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찬반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나아가 지역 소멸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높아졌고,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은 제조업, 농·어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 산업현장 전반에 만연한 현상이 되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청년층과 사업주 간의 눈높이 차이로 발생하는 ‘미스매치’로 인해 인력난이 개선될 여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TF」를 구성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① 수요자 중심, ② 통합적 관리, ③ 공공책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국 인력의 유입 증가와 함께

입국한 신규 인력의 적응을 지원하고 기존 인력과의 갈등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는 더 이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발표하며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코로나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완전한 일상회복 절차로 진입하였고, 국가간 인적이동 또한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출입국자 수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도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침체되었던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합헌 결정 이후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시한(2025. 5. 31.)까지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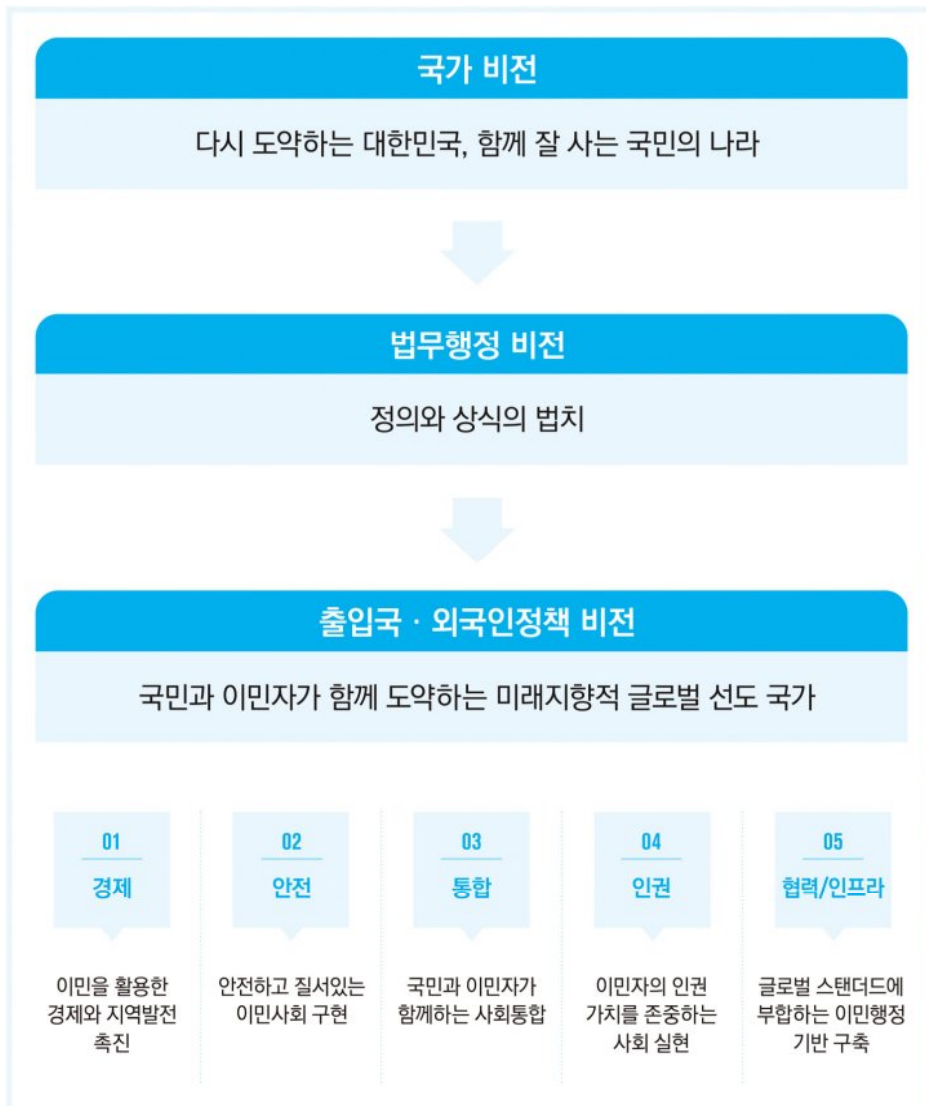
제2항 2023년 전략목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가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는 성과목표를 수립하였다.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불법체류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 역량 강화를 관리과제로 설정하였다.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을 관리과제로 설정하였다.

제2절

비전과 미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능

- 출입국심사 및 비자 발급
-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 체류관리
- 국적부여 및 난민인정
- 체류외국인 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 외국인정책

2023년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성과 목표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제1항 기구·인원

1 2023. 4. 11.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을 재배치하였으며(전국 11개 사무소), 국적판정 수행, 출국대기실 운영, 울산사무소 보호과 신설을 위하여 7명(5급 1명, 6급 2명, 8급 4명)을 증원하였다. 도심공항출장소 직제 폐지에 따라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타 사무소로 재배치, 난민심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원 1명을 인력 재배치하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0.5명) 2명이 퇴직하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정원 1명 증원하였다.

2 2023. 6. 8. 직제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운영 종료('23. 5. 31.부)로 본부에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대기실운영팀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소속기관 직급상향 인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었다.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1명(8급)을 기계운영(8급) 직렬에서 공업(8급) 직렬로 전환하였다.

3 2023. 12. 26.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이민정책 전담기구 및 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단속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원 및 2명 재배치(5급 1명, 7급 1명), 3명 직급상향(5급 → 4.5급) 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본부 1명(5급 1명), 소속기관 17명(6급 3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감축하였다.

총액기구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운영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3. 12. 31.에서 '26. 5. 31.까지 연장하였고,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전산직 2명의 원소속 복귀 결정으로 직급상향 인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다.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라 대전사무소 천안출장소 사무운영 9급 1명을 출입국 9급으로 직렬 전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하부조직 명칭 변경하였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분장사무 상의 정보화사업 용어를 변경하였다.

'18년 증원인력인 단속 90명을 신규인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원 정규화되었고, '23년 수시직제에 따른 증원인력 단속 55명이 신규인력 평가대상에 추가되었다.

그림 1 본부 조직도

(1 본부장, 2 정책단장, 10 과장, 1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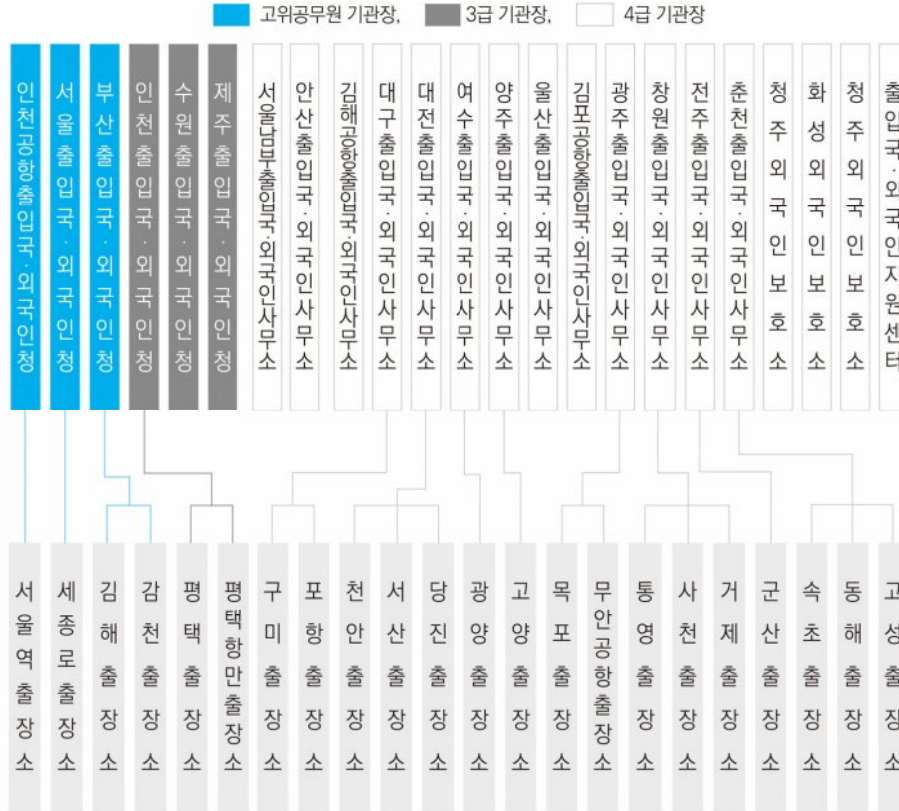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출입국기획과 - 출입국관리행정 종합계획 수립 - 인사·조직·예산·홍보·국제협력 등	출입국심사과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 출입국규제에관한 사항 등	체류관리과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비자발급 심사 등
이민조사과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이민정보과 -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 작성·분석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평가 - 소관 법령의 입안 관련 사항 등	국적과 -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 - 국적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수립	이민통합과 -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총괄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난민정책과 - 난민법령 및 제도, 난민인정심사 등 총괄 - 난민인정자 등 처우 지원 및 관리	난민심의과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 - 난민위원회 운영 및 국가정황정보 등 자료 수집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6 출입국·외국인청, 1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외국인보호소, 1 센터, 22 출장소 등 총 45개 기관)



본부 및 산하기관 4급 이상 간부 현황

('23. 12. 31. 현재)

■ 본부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본부장	이재유	'21. 7. 2.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석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22. 9. 19.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23. 8. 17.
체류관리과장	김태형	'23. 2. 8.
이민조사과장	박재완	'21. 8. 9.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23. 8. 25.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23. 8. 30.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21. 2. 26.
국적과장	장희정	'23. 2. 8.
이민통합과장	이승현	'23. 8. 17.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23. 8. 17.
난민심의과장	이정미	'16. 10. 27.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고영석	'22. 2. 7.
법무부 부이사관	송소영	'23. 12. 16.

■ 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인천공항청장	김종민	'22. 1. 1.
서울청장	배상업	'22. 9. 19.
부산청장	이동휘	'22. 3. 8.
인천청장	공석	
수원청장	김현채	'23. 2. 8.
제주청장	공석	
서울남부사무소장	문수용	'23. 2. 8.
안산사무소장	구본준	'23. 2. 8.
김해공항사무소장	구병모	'23. 2. 8.
대구사무소장	김종복	'22. 1. 1.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대전사무소장	이종국	'23. 9. 1.
여수사무소장	임선봉	'22. 7. 20.
양주사무소장	강수근	'22. 1. 1.
울산사무소장	강대열	'22. 1. 1.
김포공항사무소장	이문한	'23. 2. 8.
광주사무소장	김용규	'23. 8. 17.
창원사무소장	공석	
춘천사무소장	권택성	'23. 2. 8.
청주사무소장	김진성	'23. 2. 8.
전주사무소장	강성록	'23. 2. 8.
화성보호소장	박찬순	'22. 7. 25.
청주보호소장	나현웅	'23. 11.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23. 8. 16.
인천공항 지원국장	권택성	'22. 2. 12.
인천공항 심사1국장	길강목	'23. 8. 17.
인천공항 심사2국장	김태완	'23. 8. 17.
인천공항 총무과장	박진수	'23. 2. 8.
서울 총무과장	이한태	'23. 11. 7.
서울 관리과장	김세진	'22. 8. 21.
서울 이민조사대장	김홍규	'23. 2. 8.
서울 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2. 7. 1.
부산 관리과장	김기락	'23. 8. 31.
부산 이민조사대장	김재남	'23. 3. 1.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5개 기관)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4개 국가, 22개 공관, 24명)



해외 주재관 현황

('23. 12. 31. 현재)

국가	공관명	직급	성명	부임일
일본	대사관	4급	강성환	'23. 8. 30.
미국	L.A.(총)	4급	박제성	'23. 8. 17.
중국	대사관	4급	은기범	'22. 1. 28.
	상하이(총)	5급	여양구	'23. 1. 4.
	선양(총)	5급	박수완	'22. 2. 25.
	칭다오(총)	4급	이대우	'23. 8. 25.
	광저우(총)	5급	구성림	'22. 2. 24.
		5급	임동영	'23. 2. 24.
	우한(총)	5급	최명호	'22. 8. 18.
	청두(총)	5급	김원희	'23. 2. 24.
	대사관	4급	최문정	'21. 2. 2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	5급	용창식	'21. 2. 22.
태국	대사관	4급	김병철	'21. 8. 23.
인도	대사관	4급	강영우	'22. 8. 18.
필리핀	대사관	4급	이상목	'22. 2. 22.
		5급	김용국	'21. 3. 16.
인도네시아	대사관	5급	이성용	'22. 2. 22.
몽골	대사관	5급	정은화	'22. 8. 24.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5급	이우진	'21. 3. 2.
방글라데시	대사관	5급	박홍상	'23. 3. 1.
베트남	대사관	4급	최병철	'23. 2. 8.
	호치민(총)	5급	유상변	'23. 2. 24.
캄보디아	대사관	5급	주지정	'23. 8. 30.
독일	대사관	4급	김민경	'21. 8. 23.

제2항 인사

1 2023년 상반기 인사

2023년 상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022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및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및 승진인사 등을 위해 '23. 2. 8. 부이사관 1명, 4급 20명, 5급 6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23. 2. 10. 6급 87명, 7급 104명, 8급 122명, 9급 2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23. 4. 1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직제 폐지에 따른 정원 재배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신설에 따른 승진 및 전보 등 인사 실시하였으며, '23. 6. 5. 재외동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 전략추진단신설에 따른 신규 파견 등 5급이상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3. 6.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신설됨에 따라 4급 1명, 5급 2명 등의 전보인사를 시행하였다

2 2023년 하반기 인사

2023년 하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3. 7. 3. 상위직급 승진, 퇴직, 파견, 휴·복직 등에 따른 출입국관리직 6급 이하 공무원 결원 보충을 위해 6급 91명, 7급 110명, 8급 102명, 9급 4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23. 8. 17. 명예퇴직, 공로 연수, 주재관 귀·부임, 공모직위 임용, 타부처 파견 등에 따른 4급 16명, 5급 6명에 대한 전보 인사 실시 및 '23. 9. 3. 5급 임용 인사를 실시하였다. '23. 11. 7. 우리부 자율기구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존속 기한종료에 따른 4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23. 12. 16. 국립외교원 파견복귀에 따른 부이사관 1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3 5급 이상 승진, 전보, 퇴직 현황

2023년 5급 이상 승진자와 전보자는 각각 15명과 148명이며, 퇴직자는 15명으로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023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임용	신규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퇴직
계	197		1	15	148	14	3	15
고 위	2							2
3 급	6				2		2	2
4 급	48			2	37	3	1	5
5 급	141		1	13	109	11		6

2023년 5급 이상 상세 인사 현황

1 승진

■ 서기관(4급) : 2명

- '23. 2. 8.부(2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박주현

신임직	성명
법무부(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이한태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3명

- '23. 2. 8.부(9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김창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송병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박창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23. 2. 28.부)	이동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장	김형진

신임직	성명
법무부(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운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김택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박병건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심사과)	김성

- '22. 4. 11.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체류관리과	박정석

- '23. 6. 5.부(3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박송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익산다문화센터장)	박정원

신임직	성명
법무부(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김연우

2 전보

■ 3급 이상 : 2명

직급	신임직	성명	시행일자
부이사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재	'23. 2. 8.
부이사관	법무부	송소영	'23. 12. 16.

■ 서기관(4급) : 37명

- '23. 2. 8.부(18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주베트남대사관)	최병철	법무부(국가정보원)	임은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류재석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태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이승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이호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박진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홍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문수용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본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성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문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택성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성록

- '23. 6. 8.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장	장희정

- '23. 8. 17.부(16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류인성	법무부(주LA총영사관)	박제성
법무부(주칭다오총영사관 '23. 8. 25.부)	이대우	법무부(주일본국대사관 '23. 8. 30.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23. 8. 25.부)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장('23. 8. 30.부)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길강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23. 9. 16.부)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23. 8. 18.부)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23. 8. 31.부)	김기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23. 9. 1.부)	이종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장	류재석

- '23. 11. 7.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한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나현웅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09명

- '23. 2. 8.부(57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주청두총영사관 '23. 2. 24.부)	김원희	법무부(주광저우총영사관 '23. 2. 24.부)	임동영
법무부(주호치민총영사관 '23. 2. 24.부)	유상변	법무부(주방글라데시대사관 '23. 3. 1.부)	박홍상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김은호	법무부(KOTRA)	오동록
법무부(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신하균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최준호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임연주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법무부 국적과('23. 2. 25.부)	배창준	법무부 이민통합과	황민하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이정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박광균

신입직	성명	신입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김종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장	최성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조기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과장	권옥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김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최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7과장	이종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23. 3. 7.부)	고귀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9과장	이상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조근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3과장	주태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홍창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장 (‘23. 3. 3.부)	정해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장	천영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김준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이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정영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여옥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순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우윤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재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장 (‘23. 3. 3.부)	김기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박상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법과장	이원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김병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다문화센터장 ‘23. 2. 28.부)	최은숙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다문화센터장 ‘23. 2. 28.부)	주정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장	주지정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김대중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법과장	김종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23. 3. 7.부)	조홍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김용남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이강록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장	안현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	김윤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덕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장	배천기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이대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휴빈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정민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최종원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23. 3. 18.부)	김상희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23. 2. 28.부)	박영숙		

- '23. 4. 11.부(3명)

신임직	성명
수원출입국·외국인청(관리과)	천영우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심사과)	배덕환

신임직	성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김성

- '23. 6. 5.부(2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이운선

신임직	성명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김현호

- '23. 6. 8.부(2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김경아

신임직	성명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송병희

- '23. 7. 3.부(3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연주
법무부 체류관리과	황민하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재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경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5과장	최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2과장	주태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박정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배덕환
인천출입국·외국인청(김포다문화센터장)	박영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장	강대평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홍창기
법무부 체류관리과	손흥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박지원
법무부 이민통합과	이주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주지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김택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3과장	황선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팀장)	정길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기성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장	조근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이동용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다문화센터장)	서봉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백천기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 운영팀장)	박민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다문화센터장)	임동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장	홍인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법과장	신학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다문화센터장)	박성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김종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장)	정양교		

- '23. 8. 17.부(6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23. 8.30.부)	주지정	법무부('23. 9. 3.부)	홍인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	이정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23. 9. 1.부)	심미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조영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장 ('23. 9. 3.부)	이연주

- '23. 9. 3.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김형준

- '23. 11. 7.부(7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김명훈	법무부	김민기
법무부	이향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천영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강대평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조영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장	윤병승		

3 퇴직

■ 3급 이상 : 4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렬	'23. 1. 9.(의원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규석	'23. 6. 30.(정년퇴직)
부이사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이규홍	'23. 12. 31.(명예퇴직)
부이사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진영	'23. 12. 31.(정년퇴직)

■ 서기관(4급) : 5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서기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오점근	'23. 6. 30.(명예퇴직)
서기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희정	'23. 8. 31.(명예퇴직)
서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상수	'23. 10. 4.(의원면직)
서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임홍헌	'23. 12. 31.(정년퇴직)
서기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안숙열	'23. 12. 31.(명예퇴직)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6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현수	'23. 2. 28.(명예퇴직)
출입국관리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금택	'23. 6. 30.(정년퇴직)
출입국관리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	이정현	'23. 12. 31.(정년퇴직)
출입국관리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6과장	박병현	'23. 12. 31.(정년퇴직)
출입국관리 사무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김성현	'23. 12. 31.(정년퇴직)
출입국관리 사무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김용남	'23. 12. 31.(정년퇴직)

제3항 시설·예산

1 소속기관 청사 신축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지역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청사를 관할 내로 이전하여 민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22.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3. 12. 12. 착공하였다.

울산지역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 및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영남지역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19년부터 추진되었던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사업은 '20년 12월 착공하여 약 2년 6개월의 공사를 거쳐 '23년 5월 준공하였으며, '23. 6. 26.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23년에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증축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증축사업의 시설공사가 진행되어 각각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진행 후 '24년 하반기 착공 및 '25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3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이 반영되어 '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충분한 민원 공간 및 보호시설을 확보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 부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 총사업비 : 1,122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사업규모 : 부지 9,034㎡, 건물 17,633㎡

그림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감도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38
- 총사업비 : 177억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부지 11,244㎡, 건물 6,876㎡

그림 6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 총사업비 : 85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7,076㎡, 건물(증축 부분) 2,843㎡

그림 7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조감도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증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 총사업비 : 22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1,602㎡, 건물(증축 부분) 720㎡

그림 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국제화지구 업무 3-2-1지구
- 총사업비 : 49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부지 3,906㎡, 건물 2,210㎡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59억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 7,730㎡, 건물 8,528㎡

2 예산

2023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세출예산은 총 3,08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 증액 편성되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3년 예산 내역

■ 주요경비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
계	286,959	308,482	21,523	7.5
인 건 비	150,893	157,706	6,813	4.5
기본경비	15,360	15,718	358	2.3
사 업 비	120,706	135,058	14,352	11.9

■ 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
이민정책개발지원	429	390	-39	-9.1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2,004	2,268	264	△13.2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43,843	48,462	4,619	10.5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3,986	4,657	671	△16.8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7,864	25,175	△3,116	17.4
외국인보호관리	18,200	19,736	1,536	8.4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4,158	14,026	-132	-0.9
외국인체류질서확립	9,740	9,812	72	0.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482	10,532	50	△0.5
합 계	120,706	135,058	14,352	11.9



2

CHAPTER

주요 업무 추진실적

-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제3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 제9절 국제협력 강화
-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 제12절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제1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정비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그간 침체되었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20. 2월부터 중지되었던 환승객 대상 3가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3.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였다.

*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 재개), △ 인천공항 일반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및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 재개)

나.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연장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22. 6. 1.부터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이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출국하려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호남권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공항과 마찬가지로 무안공항에도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을 건의해와 이를 수용하여 '23. 3. 15.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하여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1년 단위로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의 경우 강원지역 경제활성화 등 제도 운영 성과가 인정되어 2024. 5. 31.까지 제도 연장이 결정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세계 관광시장 수요 회복 및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환승무사증 제도의 재개는 이러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아울러,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연장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으로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체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리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제2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개선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관광 활성화 지원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적용 면제 ▲ K-ETA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2개 → 8개*) ▲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30명 → 50명) ▲ 공통항목 자동 입력 기능 제공 ▲ 청소년(17세 이하)·고령자(65세 이상) 의무 적용 대상 제외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한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또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 (ISP)*」을 수립('23. 5. ~ 8.)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단체관광객 전용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등 수립

2 평가 및 발전방향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으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표 4 K-ETA 신청 현황

구분	신청건수
2021년	86,211 건
2022년	2,082,385 건
2023년	2,134,136 건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입국불허율과 불법체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 국가 국민의 입국심사 및 체류질서 확립에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자에 대한 다양한 사후 분석을 통해 국익 위해 외국인의 선별 및 정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국경 관리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3항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와 사무관 최재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코로나19로 '20. 1월부터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23. 8월 운항을 재개됨에 따라 '23. 12월부터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빈번 출입국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등록 절차를 통해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시범사업을 통해 소무역상을 포함한 평택항 이용 승객들의 입출국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심사장의 혼잡도가 완화되는 등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고 간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 전면확대

'19. 7월 인천공항을 포함한 주요공항 및 부산항에서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이 사전등록 없이 출국 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 12월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을 나머지 3개 공항(청주, 무안, 양양)과 3개 항만(평택, 인천, 군산)에 추가 확대 시행하여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이 모든 공항만에서 출국 시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9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경과

2008. 6.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국민, 승무원
2010. 8.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영주·투자자격 등록외국인
2012. 4.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확대 결혼이민자 등 11개 체류자격 소지자
2013. 7.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14세 이상 국민, 복수상륙허가 승무원
2014.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한국방문우대카드
2015. 11.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외국국적 동포·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2016. 7.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2017. 3.		자동 출입국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2018. 10.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생략
2019. 7.		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2022. 12.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7세 이상 등록외국인
2023. 12.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전면 시행

표 5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3.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 공항	김해 공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양양 공항	무안 공항	인천 항	부산 항	평택 항	군산 항
설치대수	247	159	26	10	10	4	8	3	4	9	5	5	4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래 외국인 이용 대상 확대,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 회복됨에 따라 전년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가 27,232,777명 증가하여 3,725% 상승하였다.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비율은 54.6%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및 이용 가능 지역 확대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표 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입국자	계	93,548,093	14,701,839	4,391,173	19,223,428	68,121,658
	국민	57,795,389	9,171,423	2,326,774	12,778,752	45,423,313
	외국인	35,752,704	5,530,416	2,064,399	6,444,676	22,698,345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37,697,784	5,490,622	908,914	9,992,181	37,224,958
	국민	32,093,114	4,729,477	800,626	8,403,293	29,850,937
	외국인	5,604,670	761,145	108,288	1,588,888	7,374,021
전체 대비 자동 이용률(%)		40.3%	37.3%	20.7%	52.0%	54.6%
국민 자동 이용률		55.5%	51.6%	34.4%	65.8%	65.7%
외국인 자동 이용률		15.7%	13.8%	5.2%	24.7%	32.5%

제4항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출입국심사와 사무관 이상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2. 1. 1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22. 1. 13.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특례시는 그 인구 규모, 자치 권한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준하여 자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23. 12.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되었던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도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 평가

특례시에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존중하고 특례시 출범 취지도 반영하는 한편 특례시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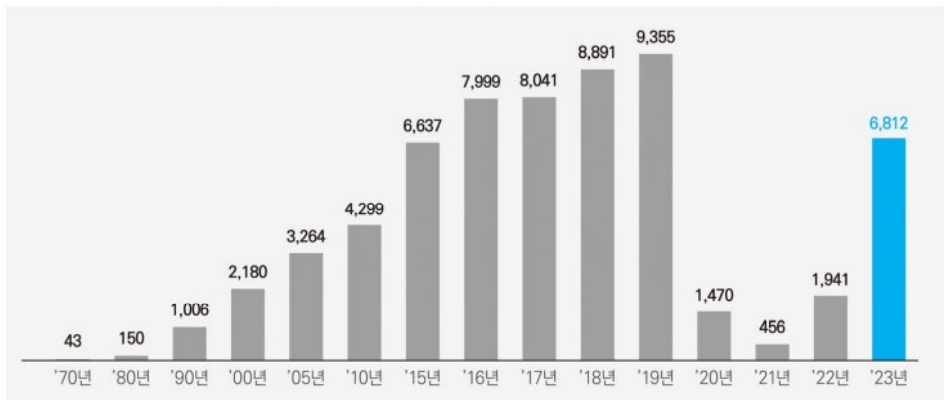
제5항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와 사무관 김영오

2023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19,414,228명 보다 250.9% 증가한 68,121,658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45,423,313명으로 전년도 12,889,166명에 비해 252.4%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22,698,345명으로 전년도 6,525,062명에 비해 247.9% 증가하였다.

그림 10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2023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1,500,883명으로 전년도 3,390,009명에 비해 239.3%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일본 약 234만 명(20.3%), 중국 약 221만 명(17%), 미국 약 117만 명 (10.2%), 대만 약 97만 명(8.4%)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약 873만 명(75.9%)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38.9만 명(3.7%), 유학 약 24.7만 명(2.1%), 비전문취업 약 16.8만 명(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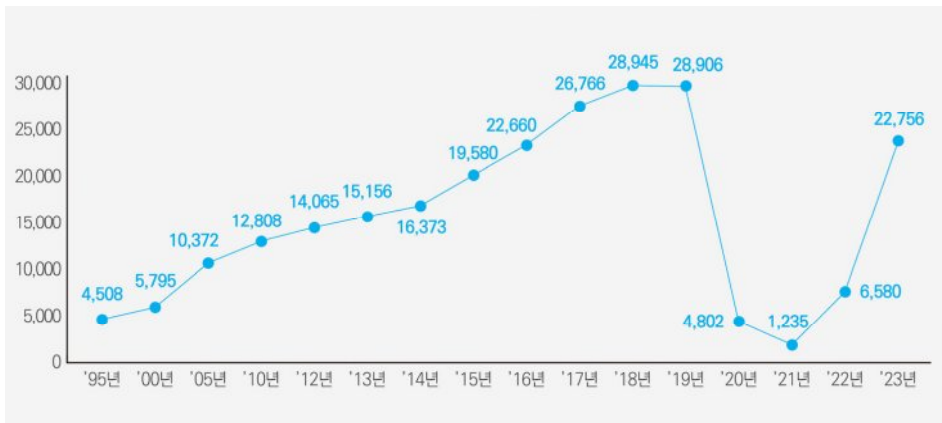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2,756,008명으로 전년도 6,580,145명 대비 432.9%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 출국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전 세계적 방역 관련 조치 해제로 국민의 출국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 12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제1항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산업현장에 숙련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2023. 9. 25.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하였다.

*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한 후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그림 13 법무부 장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브리핑('23. 9. 25.)



2 추진내용

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

법무부 장관이 국가재정전략회의(2023. 6. 28.)에서 발표한 것처럼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23년 3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숙련근로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점수제 항목 간소화 및 한국어능력 검증 강화

우수한 숙련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11개 이상이었던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필수화하여 업무숙련도, 직무적합도 등을 검증받도록 하였고, 한국어능력 또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여 국내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근무처에서의 2년 이상 근무를 전환 필수 요건으로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였다.

라. 온라인 전자민원 및 전담심사팀 운영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민원을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공사로 인한 유휴인력들을 활용하여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였다.

3 주요 성과

전년 대비 6.75배 증가한 12,035명의 숙련근로자들이 공급되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표 7 연도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전환인원	706	983	1,218	1,781	12,035

제2항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E-7)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2023년 한국 조선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총 14,000여 명에 달할 정도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

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 발표

이에 법무부는 2023. 1. 6.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을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공동)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먼저, 법무부 본부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조선소가 있는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심사 소요기간을 기존 5주 이상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기존 20%까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였으며, 국내 대학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에 취업한 경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하여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연수생이 국내 조선업체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인력(E-7)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연수생의 전문인력(E-7) 전환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였다.

나. 조선업 정책현장 방문

그동안 추진했던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 7월(현대삼호중공업), 11월(HD현대중공업)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선업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조선업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효과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그림 14 법무부장관 조선업 정책현장 방문



현대삼호중공업 방문(2023. 7. 10.)



HD현대중공업 방문(2023. 11. 24.)

3 주요성과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달성*하여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23. 3분기까지 국민 2,020명, 전문인력(E-7) 6,966명, 비전문인력(E-9) 5,373명 등 총 14,359명 투입 완료

표 8 조선분야 외국인 기능인력(E-7) 증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도장, 전기, 용접, 플랜트공	422	1,382	8,100

제3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17년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표 9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단위 : 명)

구분	2015 ~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영 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50 (해외입국자 559 +국내체류자 1,291)	12,027 (해외입국자 10,630 +국내체류자 1,397)	32,837 (해외입국자 32,489 +국내체류자 34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도 운영인원이 대폭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어 해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고용주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전국 132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40,647명을 배정하여 직전년도('22년 19,718명) 대비 2배 이상 배정인원을 확대하였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어가에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확대하였고,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 중 이탈률이 낮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확대하였다.

한편, 전년도 이탈률 5% 이상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신규 유치 지자체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도 강화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성실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브로커 개입 등 제도 운영 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여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감소

결혼이민자 등 국내 연고자 초청 방식 확대, 체류기간 상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이탈률은 2.1%로 직전년도('22년 9.6%)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제4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제도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최근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커지고,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은 구인난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유학비자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유학비자 발급 시 학위과정은 연간 2만 달러, 지방대학은 1만 8천 달러, 어학연수과정은 1만 달러 이상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했으나, 학위과정은 2천만 원, 어학연수과정은 1천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실제 등록금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과정은 8백만 원으로 완화하였다.

* '23년 지방대학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 대학의 80% 수준(출처: 교육부)

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 허용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은 국내 유학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대학을 다니며 유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국내 학위 소지자는 가점 20점 인정

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

유학비자 심사 시 한국어능력 입증방식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유학생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라.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

구인난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재학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고, 방학 중에는 유학생이 전문분야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규정된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적절한 체류관리를 통해 유학생이 재학 중에는 학업활동에 집중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어능력과 전공에 대한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제5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자이민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납입된 투자금은 지역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전용 저리 대출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유지된 투자 기준금액(5억 원)이 체류 상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이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2종류(관광·휴양시설, 공익사업)의 투자이민제도 운영 중

2 추진내용

가. 투자 기준금액 상향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이민협의회를 2차례('23. 4~5월) 개최하여 적정 투자금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종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23. 5월) 또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중 투자금 대비 과도한 복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은퇴투자이민(3억 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형 공익투자는 종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고액형 공익투자는 종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23. 6월)

나. 투자 허용기준 강화

투자기준금액 상향 외에도,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투자이민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투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3. 12월)함으로써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은 외국인이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제6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재원

1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가. 동남아 3개국 단체전자비자* 대상 확대

기존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은 기업인센티브와 수학여행단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를 위해 일반여행객까지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단체관광 요건인 5인 이상 구성원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단체전자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 외국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담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여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시스템

나.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고부가산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의 지정 상한(기존 50개 기관 제한)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를 면제하였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일반 유치기관의 외국인환자 초청 상한을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였으며, 외국인환자의 동반자 범위를 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제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중국 정부가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화 15달러인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여 관광객 국내 유입을 촉진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단체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7항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체류관리과 사무관 유수열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지역특화형비자'를 1년('22. 10. 4. ~ '23. 10. 3.)간 시범운영 하였다.

2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변경, 취업제한 완화 등의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가.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실시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을 제안하고,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하면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한다.

나.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단순 노무 허용 등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였다.

3 추진성과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우선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28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가.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선정심사를 거쳐 총 28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표 10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선정지자체	지자체명
총 28개 기초지자체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경상북도(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고성군

나. 시범운영 및 비자발급 개시

2022. 10. 4.부터 2023. 10. 3.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3. 12. 31. 기준 총 1,476명(지역우수인재 1,406명, 외국국적동포 70명)이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았다.

다. 정식사업 공모

2023. 12. 8.부터 2024. 1. 8.까지 '24년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비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언론과 국회에서도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여 정식실시 및 확대를 요구하였다.

1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변경 대상 제한, 한국어능력 및 소득요건 강화, 외국국적동포의 지자체 추천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여 2024년도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8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체류관리과 사무관 유수열

1 추진배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 구인난 및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무부는 한국어가 능통하고 우리 문화에 익숙한 동포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여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가. 인력부족률 상위 6개 직종에 재외동포(F-4) 취업 허용

'22년도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쉼 산업 부족률 3.4% 대비 1.5배 높은 상황이므로 우선하여 취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었던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6개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였다.

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 취업제한 해제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산업 부진, 그에 따른 인구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동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다.

3 향후 계획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 완화가 산업계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면서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재외동포의 취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른 산업분야의 취업제한 해제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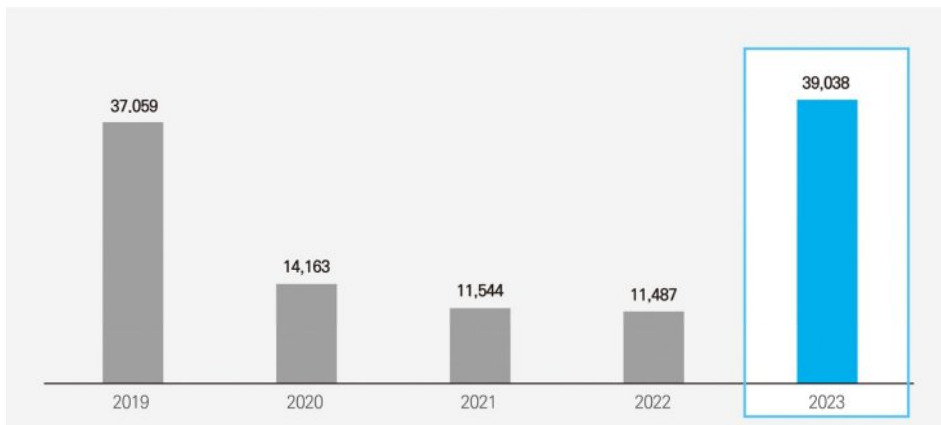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이민조사와 주무관 신철승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적 단속체제를 통한 단속, 6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중심으로 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간 합동단속 및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39,038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15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단위 : 명)



2023년 정부합동단속은 각 2개월간 3차례 실시하여 외국인 범죄 및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등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947명, 불법고용주 4,687명 및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 브로커 41명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1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2	2023
기간	• 3.6. ~ 5.12. • 9.4. ~ 11.17.	• 2.26. ~ 5.11. • 9.3. ~ 11.16.	• 매 짝수달 각 4주	• 10.10. ~ 12.10.	• 3.2. ~ 4.30. • 6.12. ~ 7.31. • 10.10. ~ 12.9.
참여인원	658	830	899	830	530
불법체류 외국인	13,255	16,218	2,806	3,865	20,947
불법고용주	2,549	2,835	495	483	4,687

※ 2019년 실적산정 방식 변경(전 기관 실적 인정에서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으로 실적 감소

※ 2020년 ~ 2021년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합동단속 잠정 중단 후 2022. 10월 재개

한편,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규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2차례(1회 : '22. 11. 7. ~ '23. 2. 28., 2회 : '23. 9. 11. ~ '24. 2. 29.)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의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표 12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2 대비 2023 실적
자진출국자	71,663	55,260	32,867	32,026	43,133	11,107 ↑ (34% ↑)

※ 특별자진출국 운영기간(1. 1 ~ 2. 28., 9. 11. ~ 12. 31.)동안 24,329명 자진출국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제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감소되었다.

제2항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이민조사와 주무관 빈중찬

2023년도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 난민신청 알선 및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3,337명(678건)을 적발하여 그중 59명을 구속, 33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472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조치 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페이스북 등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찬양 글 및 사진을 게시하거나 테러의심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35명 검거, 우즈베키스탄에서 강도범행 후 국내로 도피한 인터폴 수배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아프리카 말리, 앙골라 국적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말리 등 16개국 아프리카인 총 173명을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한 한국인 및 말리·앙골라인 3명 구속, 브라질 등 남미국적 여성 106명을 아이돌 연습생, 모델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 후 유흥업소接客원으로 불법 고용한 일당 10명을 적발, 4명 구속, “본국에서 범죄자로 오인 받아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등의 허위 난민사유를 작성하여 카자흐스탄인 등 157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카자흐스탄인 브로커 등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12명을 구속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베트남·태국인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이 주말에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첩보가 다수 접수되어 연중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국인 등 총 45명*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람 중 마약 판매 및 양성반응자 40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음성반응자 5명은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 (국적별) 베트남 21, 태국 14, 러시아 5, 카자흐스탄 1, 베트남 귀화자 4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13 기획조사 추진 실적

연도	구분	계		허위서류 제출		허위초청		불법취업		유형업소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2년		593	1,980	117	132	52	76	132	789	40	278	252	705
2023년		678	3,337	105	242	61	100	192	1,531	91	778	229	686
전년대비(%)		114.3	168.5	89.7	183.3	117.3	131.6	145.5	194.0	227.5	279.9	90.9	97.3

제3항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 등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고성훈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 6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3. 11월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하였다. 보호시설 내 철창을 제거하여 생활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PC, 휴대폰 사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소통 및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보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 3월 국가인권위원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2022. 4월부터 운영된 개방형 보호시설의 인권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3. 8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인권보호관의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내 소지 가능 물품의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2023년 한해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체불임금 처리 566건 등 총 22,367건의 다양한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3명을 국군의무사령부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에 파견하여 약 9주 간의 교육 수료 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2023. 11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2급 응급구조사 위탁 교육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다.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제1항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의 사회통합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지자체 9개 지역(광역 4곳, 기초 5곳)을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는 등 균형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최신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지역사회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임(2022. 11월 기준)

이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뜻을 모아 2023. 12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침서는 부처별로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주요 정책을 체류단계별, 지원 분야별로 정리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비자 업무 소개, 지자체 위임사무, 관련 법령, 외국인 지원 기관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지침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김포시, 시흥시, 구로구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본 지침서, 제본 및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본 지침서, 제본 및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지자체 외국인 지원
정책지원

외국인 사증(VISA)
제도

부 록

2 지방자치단체 지원
2 1. 일반 안내
3 2. 업무 추진 순서
4 3. 지원 내용
10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16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16 지방자치단체 지원
16 1. 일반 안내
17 2. 업무 추진 순서
18 3. 지원 내용
24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30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42 지방자치단체 지원
42 1. 일반 안내
43 2. 업무 추진 순서
44 3. 지원 내용
50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56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56 지방자치단체 지원
56 1. 일반 안내
57 2. 업무 추진 순서
58 3. 지원 내용
64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70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70 지방자치단체 지원
70 1. 일반 안내
71 2. 업무 추진 순서
72 3. 지원 내용
78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84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84 지방자치단체 지원
84 1. 일반 안내
85 2. 업무 추진 순서
86 3. 지원 내용
92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98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114 지방자치단체 지원
114 1. 일반 안내
115 2. 업무 추진 순서
116 3. 지원 내용
122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128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128 지방자치단체 지원
128 1. 일반 안내
129 2. 업무 추진 순서
130 3. 지원 내용
136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142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142 지방자치단체 지원
142 1. 일반 안내
143 2. 업무 추진 순서
144 3. 지원 내용
150 4. 지역별 외국인 주민 현황
156 5.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136 1. 외국인 입국 안내
140 2. 외국인 입국 절차
141 3. 외국인 입국 절차
142 4. 외국인 입국 절차
143 5. 외국인 입국 절차
144 6. 외국인 입국 절차
145 7. 외국인 입국 절차
146 8. 외국인 입국 절차
147 9. 외국인 입국 절차
148 10. 외국인 입국 절차
149 11. 외국인 입국 절차
150 12. 외국인 입국 절차
151 13. 외국인 입국 절차
152 14. 외국인 입국 절차
153 15. 외국인 입국 절차
154 16. 외국인 입국 절차
155 17. 외국인 입국 절차
156 18. 외국인 입국 절차
157 19. 외국인 입국 절차
158 20. 외국인 입국 절차
159 21. 외국인 입국 절차
160 22. 외국인 입국 절차
161 23. 외국인 입국 절차
162 24. 외국인 입국 절차
163 25. 외국인 입국 절차
164 26. 외국인 입국 절차
165 27. 외국인 입국 절차
166 28. 외국인 입국 절차
167 29. 외국인 입국 절차
168 30. 외국인 입국 절차
169 31. 외국인 입국 절차
170 32. 외국인 입국 절차
171 33. 외국인 입국 절차
172 34. 외국인 입국 절차
173 35. 외국인 입국 절차
174 36. 외국인 입국 절차
175 37. 외국인 입국 절차
176 38. 외국인 입국 절차
177 39. 외국인 입국 절차
178 40. 외국인 입국 절차
179 41. 외국인 입국 절차
180 42. 외국인 입국 절차
181 43. 외국인 입국 절차
182 44. 외국인 입국 절차
183 45. 외국인 입국 절차
184 46. 외국인 입국 절차
185 47. 외국인 입국 절차
186 48. 외국인 입국 절차
187 49. 외국인 입국 절차
188 50. 외국인 입국 절차
189 51. 외국인 입국 절차
190 52. 외국인 입국 절차
191 53. 외국인 입국 절차
192 54. 외국인 입국 절차
193 55. 외국인 입국 절차
194 56. 외국인 입국 절차
195 57. 외국인 입국 절차
196 58. 외국인 입국 절차
197 59. 외국인 입국 절차
198 60. 외국인 입국 절차
199 61. 외국인 입국 절차
200 62. 외국인 입국 절차
201 63. 외국인 입국 절차
202 64. 외국인 입국 절차
203 65. 외국인 입국 절차
204 66. 외국인 입국 절차
205 67. 외국인 입국 절차
206 68. 외국인 입국 절차
207 69. 외국인 입국 절차
208 70. 외국인 입국 절차
209 71. 외국인 입국 절차
210 72. 외국인 입국 절차
211 73. 외국인 입국 절차
212 74. 외국인 입국 절차
213 75. 외국인 입국 절차
214 76. 외국인 입국 절차
215 77. 외국인 입국 절차
216 78. 외국인 입국 절차
217 79. 외국인 입국 절차
218 80. 외국인 입국 절차
219 81. 외국인 입국 절차
220 82. 외국인 입국 절차
221 83. 외국인 입국 절차
222 84. 외국인 입국 절차
223 85. 외국인 입국 절차
224 86. 외국인 입국 절차
225 87. 외국인 입국 절차
226 88. 외국인 입국 절차
227 89. 외국인 입국 절차
228 90. 외국인 입국 절차
229 91. 외국인 입국 절차
230 92. 외국인 입국 절차
231 93. 외국인 입국 절차
232 94. 외국인 입국 절차
233 95. 외국인 입국 절차
234 96. 외국인 입국 절차
235 97. 외국인 입국 절차
236 98. 외국인 입국 절차
237 99. 외국인 입국 절차
238 100. 외국인 입국 절차

156 1. 외국인 입국 안내
160 2. 외국인 입국 절차
161 3. 외국인 입국 절차
162 4. 외국인 입국 절차
163 5. 외국인 입국 절차
164 6. 외국인 입국 절차
165 7. 외국인 입국 절차
166 8. 외국인 입국 절차
167 9. 외국인 입국 절차
168 10. 외국인 입국 절차
169 11. 외국인 입국 절차
170 12. 외국인 입국 절차
171 13. 외국인 입국 절차
172 14. 외국인 입국 절차
173 15. 외국인 입국 절차
174 16. 외국인 입국 절차
175 17. 외국인 입국 절차
176 18. 외국인 입국 절차
177 19. 외국인 입국 절차
178 20. 외국인 입국 절차
179 21. 외국인 입국 절차
180 22. 외국인 입국 절차
181 23. 외국인 입국 절차
182 24. 외국인 입국 절차
183 25. 외국인 입국 절차
184 26. 외국인 입국 절차
185 27. 외국인 입국 절차
186 28. 외국인 입국 절차
187 29. 외국인 입국 절차
188 30. 외국인 입국 절차
189 31. 외국인 입국 절차
190 32. 외국인 입국 절차
191 33. 외국인 입국 절차
192 34. 외국인 입국 절차
193 35. 외국인 입국 절차
194 36. 외국인 입국 절차
195 37. 외국인 입국 절차
196 38. 외국인 입국 절차
197 39. 외국인 입국 절차
198 40. 외국인 입국 절차
199 41. 외국인 입국 절차
200 42. 외국인 입국 절차
201 43. 외국인 입국 절차
202 44. 외국인 입국 절차
203 45. 외국인 입국 절차
204 46. 외국인 입국 절차
205 47. 외국인 입국 절차
206 48. 외국인 입국 절차
207 49. 외국인 입국 절차
208 50. 외국인 입국 절차
209 51. 외국인 입국 절차
210 52. 외국인 입국 절차
211 53. 외국인 입국 절차
212 54. 외국인 입국 절차
213 55. 외국인 입국 절차
214 56. 외국인 입국 절차
215 57. 외국인 입국 절차
216 58. 외국인 입국 절차
217 59. 외국인 입국 절차
218 60. 외국인 입국 절차
219 61. 외국인 입국 절차
220 62. 외국인 입국 절차
221 63. 외국인 입국 절차
222 64. 외국인 입국 절차
223 65. 외국인 입국 절차
224 66. 외국인 입국 절차
225 67. 외국인 입국 절차
226 68. 외국인 입국 절차
227 69. 외국인 입국 절차
228 70. 외국인 입국 절차
229 71. 외국인 입국 절차
230 72. 외국인 입국 절차
231 73. 외국인 입국 절차
232 74. 외국인 입국 절차
233 75. 외국인 입국 절차
234 76. 외국인 입국 절차
235 77. 외국인 입국 절차
236 78. 외국인 입국 절차
237 79. 외국인 입국 절차
238 80. 외국인 입국 절차
239 81. 외국인 입국 절차
240 82. 외국인 입국 절차
241 83. 외국인 입국 절차
242 84. 외국인 입국 절차
243 85. 외국인 입국 절차
244 86. 외국인 입국 절차
245 87. 외국인 입국 절차
246 88. 외국인 입국 절차
247 89. 외국인 입국 절차
248 90. 외국인 입국 절차
249 91. 외국인 입국 절차
250 92. 외국인 입국 절차
251 93. 외국인 입국 절차
252 94. 외국인 입국 절차
253 95. 외국인 입국 절차
254 96. 외국인 입국 절차
255 97. 외국인 입국 절차
256 98. 외국인 입국 절차
257 99. 외국인 입국 절차
258 100. 외국인 입국 절차

186 1. 외국인 입국 안내
190 2. 외국인 입국 절차
191 3. 외국인 입국 절차
192 4. 외국인 입국 절차
193 5. 외국인 입국 절차
194 6. 외국인 입국 절차
195 7. 외국인 입국 절차
196 8. 외국인 입국 절차
197 9. 외국인 입국 절차
198 10. 외국인 입국 절차
199 11. 외국인 입국 절차
200 12. 외국인 입국 절차
201 13. 외국인 입국 절차
202 14. 외국인 입국 절차
203 15. 외국인 입국 절차
204 16. 외국인 입국 절차
205 17. 외국인 입국 절차
206 18. 외국인 입국 절차
207 19. 외국인 입국 절차
208 20. 외국인 입국 절차
209 21. 외국인 입국 절차
210 22. 외국인 입국 절차
211 23. 외국인 입국 절차
212 24. 외국인 입국 절차
213 25. 외국인 입국 절차
214 26. 외국인 입국 절차
215 27. 외국인 입국 절차
216 28. 외국인 입국 절차
217 29. 외국인 입국 절차
218 30. 외국인 입국 절차
219 31. 외국인 입국 절차
220 32. 외국인 입국 절차
221 33. 외국인 입국 절차
222 34. 외국인 입국 절차
223 35. 외국인 입국 절차
224 36. 외국인 입국 절차
225 37. 외국인 입국 절차
226 38. 외국인 입국 절차
227 39. 외국인 입국 절차
228 40. 외국인 입국 절차
229 41. 외국인 입국 절차
230 42. 외국인 입국 절차
231 43. 외국인 입국 절차
232 44. 외국인 입국 절차
233 45. 외국인 입국 절차
234 46. 외국인 입국 절차
235 47. 외국인 입국 절차
236 48. 외국인 입국 절차
237 49. 외국인 입국 절차
238 50. 외국인 입국 절차
239 51. 외국인 입국 절차
240 52. 외국인 입국 절차
241 53. 외국인 입국 절차
242 54. 외국인 입국 절차
243 55. 외국인 입국 절차
244 56. 외국인 입국 절차
245 57. 외국인 입국 절차
246 58. 외국인 입국 절차
247 59. 외국인 입국 절차
248 60. 외국인 입국 절차
249 61. 외국인 입국 절차
250 62. 외국인 입국 절차
251 63. 외국인 입국 절차
252 64. 외국인 입국 절차
253 65. 외국인 입국 절차
254 66. 외국인 입국 절차
255 67. 외국인 입국 절차
256 68. 외국인 입국 절차
257 69. 외국인 입국 절차
258 70. 외국인 입국 절차
259 71. 외국인 입국 절차
260 72. 외국인 입국 절차
261 73. 외국인 입국 절차
262 74. 외국인 입국 절차
263 75. 외국인 입국 절차
264 76. 외국인 입국 절차
265 77. 외국인 입국 절차
266 78. 외국인 입국 절차
267 79. 외국인 입국 절차
268 80. 외국인 입국 절차
269 81. 외국인 입국 절차
270 82. 외국인 입국 절차
271 83. 외국인 입국 절차
272 84. 외국인 입국 절차
273 85. 외국인 입국 절차
274 86. 외국인 입국 절차
275 87. 외국인 입국 절차
276 88. 외국인 입국 절차
277 89. 외국인 입국 절차
278 90. 외국인 입국 절차
279 91. 외국인 입국 절차
280 92. 외국인 입국 절차
281 93. 외국인 입국 절차
282 94. 외국인 입국 절차
283 95. 외국인 입국 절차
284 96. 외국인 입국 절차
285 97. 외국인 입국 절차
286 98. 외국인 입국 절차
287 99. 외국인 입국 절차
288 100. 외국인 입국 절차

표지

목차

제3항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7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3. 6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10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 : 김포시) 주관으로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 관련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욱이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7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3. 6. 8.)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3. 10. 6.)

제4항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한 예산증액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그간 정부의 시혜적 지원 정책은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이민자의 자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법무부는 교육 참여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출입국관리법령에 마련함으로써,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여 참여자의 학습성취도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한편, 유료화로 인한 반발 및 참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유료화는 교육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성실 참여자 등 재수료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교육참여 희망자의 교육기회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의 직접적 편익을 받는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및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한편, 교육 참여자의 자립 의식과 책임성 고취를 통해 이민자의 한국 사회 자립을 지원함과 아울러 이민자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5항 외국인력 조기정착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선업종 등 산업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해안에 위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잔업·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23. 5월부터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교육 대상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부터 시작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까지 진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선업 등 국내 산업현장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외국인력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장기간 산업현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입국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조선업 분야 외국인력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조선업 이외에 외국인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8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현장



제6항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 기회 확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무부는 '22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평가(CBT)를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큰 대규모 집합평가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CBT 평가장이 광명에 위치한 광명시험장 1곳 뿐이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평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23. 11월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를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을 대전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고,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 2회 실시하는 대전 CBT 센터의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이민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CBT 센터 추가 개소 등을 통해 지방 거주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림 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평가(CBT) 대전센터 개소
(2023. 11. 21.)



제7항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지역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빠른 적응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별로 개별 시행하고 있던 계절근로자 대상 입국초기 교육을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23. 4월 태백시를 시작으로 9개 지자체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1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와 한국사회 필수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정보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적응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0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운영



제8항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2007. 7. 1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 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2008. 5. 20.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3년에 제16회차를 맞이 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정부 주관의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는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는 간소화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행사로, 주한 독일 대사,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외교사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5. 19.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59년에 입국하여 44년 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결혼이민자 출신 ‘김추리 여사’(중앙기독교유치원 설립자, 복수국적)가 올해의 이민자(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동대문구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개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단체)가 대통령표창을,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원장, 강원대학교 한건수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교육실장, 울산동구가족센터 이정숙 센터장과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주시가족센터, 국제이주민씨앗센터 등 3개 단체가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양주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이올가 회장 등 5명과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단체)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장에서는 한국, 미국 등 총 15개 국가 출신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 공연,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 등 공연이 기념식을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나눔 행사를 진행하였고, 세계인의 날 연혁, 포상자 소개, 출입국 홍보영상, 인식개선 동영상 등을 상영하는 세계인의 날 주제관을 운영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포토존 설치 및 즉석 인화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사 참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2008년부터 16회 걸쳐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인 주간 행사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고, 상생·공존·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의 장이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세계인의 날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갈등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1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3. 5. 19.)

법무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정부 포상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합창



폐회 및 기념촬영

제9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실화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국가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와 가정폭력 방지 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에는 결혼이민(F-6) 관련 규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체류 가이드북(공통책자)과 각 국가별(7개국) 책자 21,518권을 발행하여 전국 17개 일선 출입국관서에 배부하였고, 교육기관 및 주말 교육 횃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인 배우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의 형성·유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10항 결혼이민 관련 제도의 명확화·통일화 추진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범죄전력이 있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혼인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국제결혼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관련 규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20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결혼이민 자격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출국명령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제1항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2018. 12. 20. 시행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14,431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선조들의 강인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각자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내고, 다음 세대에게도 기꺼이 물려줄 만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로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용남(독립유공자 남인상 선생의 후손)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였고, 김마리나(독립유공자 강상진 선생 후손) 씨는 “아직 러시아에 묻혀 계신 증조부께서 제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5년을 맞이하였고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적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2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3. 8. 7.)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기념촬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축사

제2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신설 및 국적심의위원회 개편·운영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개정(2022. 10. 1.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설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던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관련 부처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종전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외에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2023. 5. 25.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한 이래 연간 총 3회(분과위원회 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위원회에서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99건, 예외적 국적이탈 184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153건 등 총 436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2회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생략 근거 및 위원 명단 비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고,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도 2회 개정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금년도는 개편된 위원회가 처음으로 운영된 해로 새롭게 심의 안건에 포함된 예외적 국적이탈에 대한 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온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남성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통해 국적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를 가진 사할린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통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등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우수인재 국적회복 평가기준도 개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체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제3항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인재에게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카이스트(KAIST) 등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23.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을 △3년 후 연구 경력 등이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F-5-S1) 자격을 △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패스트트랙은 2021년 시범운영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 2023. 12월 말까지 거주(F-2-7S) 자격을 122건 부여하였다. 또한 패스트트랙 영주(F-5-S1) 신청 대상을 기존 '점수제 거주(F-2-7)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하여 2023. 11월 영주(F-5-S1) 자격 변경(1건)을 최초로 허가하였다.

그림 23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설명회



KAIST 패스트트랙 설명회(2023. 10. 27.)



UNIST 패스트트랙 설명회(2023. 11. 2.)

법무부는 우수인재가 패스트트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 네이버 밴드 'Fast-track program for Talents in Sci & Tec'를 운영 중이고 2023. 10월 KAIST(대전), 11월 UNIST(울산)에서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189명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교육하고 패스트트랙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수인재에게 단순히 국내 정주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운영하여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활동 중인 우수인재 및 그 가족들이 지방 출입국 관서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류기간 연장 및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연구소나 기업 등이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민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4항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김종승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이며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귀화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6,852명, 2020년 16,52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18,091명, 2022년 18,079명, 2023년 18,736명으로 18,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13,187명) 대비 9.43% 증가한 14,431명이 귀화(10,295명), 회복(4,136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귀화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종합평가의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3. 1월부터는 1년 이내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였고 컴퓨터 시험방식(CBT방식, 광명·대전)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귀화 면접 심사제도 연구 및 심사문항개발」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단순

지식측정 문항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개편하여 면접심사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귀화 민간면접관 결원발생에 따라 신규 면접관 12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3회)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귀화신청 시 질병·장애 등 거동 불편자 대상 우편접수 및 국적 민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귀화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거동 불편자 등 노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적민원 온라인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지방관서의 업무 비효율과 혼잡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을 모색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표 14 유형별 국적취득(귀화, 회복)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종류별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9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6	18,091	10,895	3,069	2,741
2022		22,789	13,187	18,079	10,171	4,710	3,016
2023		23,754	14,431	18,736	10,295	5,009	4,136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제1항 추진배경

'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발생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94년 난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건수는 18,8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난민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심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화상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난민심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난민신청자도 난민신청 단계부터 난민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및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고, 재정착난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업무를 시작하는 등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인식 개선을 위해 국어사전에 「난민법」상 난민 정의 추가,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 및 난민정책 소식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난민법」을 보다 난민협약에 부합하게 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위해 '23. 12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표 15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난민신청	15,452	6,684	2,341	11,539	18,837
대기	1차	22,330	14,983	7,649	11,066
	이의신청	3,254	5,115	4,526	4,888
					6,492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제2항 2023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94년 난민 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3년까지 총 103,759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25,030건을 제외한 총 51,991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439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61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총 4,052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3년 난민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18,837건으로 전년(11,539건) 대비 6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20,247건으로 전년(11,066건) 대비 83% 증가하였다.

'23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949건으로 전년도 4,907건 대비 21% 증가하였고, 난민인정은 101건으로 전년도 175건 대비 42% 감소하였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129건으로 전년도 67건 대비 93% 증가하였다.

제3항 「난민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는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13년에는 독립 「난민법」을 제정·시행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의 전 세계적 난민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난민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제도 남용방지, 난민위원회 개방성 제고, 난민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1.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2. 12월 제4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23. 3월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23. 12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국가안보·공공질서 위해자를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 결정할 수 있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제4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23년 연간 난민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보호가 필요한 난민의 심사대기 기간이 길어짐을 우려하여 법무부는 난민인정 가능성이 높은 난민신청자가 있는 경우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신속심사를 허용하였으며, 난민신청 후 장기 대기 중인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지연 사유를 파악,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의 정황 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3년에는 아동 면접 시 유의 사항, 난민 모의 면접 등 실무 중심 교육과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총 6회),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표 16 2023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3.13. ~ 3.14.)	32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 정황정보 수집·분석 방법 등	법무부
2차 (4.24. ~ 4.25.)	29명	- 난민인식 개선 교육 - 아동면접 시 유의사항 - 전문가 초청 강연 - 러시아 정황	법무부
3차 (6.9.)	10명	- 난민이론 및 특이사례 분석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 모의 면접	법무부
4차 (8.16. ~ 8.18.)	19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UNHCR 등 전문가 초청 강연 - 수단 정황 등	법무부
5차 (9.18. ~ 9.19.)	40명	- 난민이론 개관 - 전문가 초청 강연 - 아프리카 국가 정황, 유럽 난민 사례 등	법무부
6차 (12.7. ~ 12.8.)	32명	- 출입국향 난민회부 절차 및 심사 유의 사항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소송의 이해, 난민 공공외교	법무부

제5항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3. 12. 31. 기준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131개국으로 국적과 구사 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년부터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인증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2. 1월 제1회 인증제를 통과한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22년 제2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3. 1월 25개 언어 148명의 통역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34개 언어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보하였다. '23년에도 제3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5개 언어 106명을 선발하였으며, '24. 1월 이들이 위촉되면 난민전문통역인은 총 34개 언어 414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9년부터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에도 4차례에 걸쳐 난민(전문)통역인 108명에 대한 통역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역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 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림 24 2023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3. 1. 11.)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제6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개선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참고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23년도 생계비 지원금액은 '22년 7월 기준 긴급복지지원금 수준으로 상향하여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3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5억 7천만 원 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7 2023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23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8,837명 중 568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79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3년 7월 난민처우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난민의 처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7항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정착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23년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24개국이 재정착난민 수용에 참여하며 국제사회 내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약 6개월간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 정착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15년부터 '17년까지 1차 시범사업(3년간)을 추진하여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였으며, '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2차 시범사업(2년)'에 따라 18년 26명, '19년 37명, '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20년 사업 및 '21년 사업을 '22년에 추진하였고, '22년 사업을 '23년에 추진하여 '22년도에 67명(24가구), '23년도에 12명(6가구)을 수용하였다.

표 18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12(6)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제8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숙식·교육·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3년 신규 입소자는 총 77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착난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3. 3월부터 인천중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착난민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9항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교류·협력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교류를 통해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정착사업 추진 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받는 등 활발히 교류하여 '23년도에 재정착난민 12명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국내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난민전담공무원 등 교육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난민조사관 교육을 공동 주최하는 등 난민심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였다.

한편, '23. 11월 법무부차관은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유엔난민기구 (UNHCR) 부대표와 면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림 25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면담(2023. 11. 29.)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면담

제10항 난민인식 개선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옥

최근 1년간 포털, 뉴스 및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난민’을 주로 가난, 빈곤, 전쟁, 기아 등의 이미지로 인식하는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고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이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 「난민법」상 ‘난민’ 정의를 추가(수정) 요청하여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난민’의 법률적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난민정책 홍보를 통한 난민 인식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난민소식지 (RPM)’를 발간·배포하였다.

제11항 향후 추진계획

'24년에는 화상면접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는 등 난민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난민심사·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수언어 등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계속 시행하는 등 난민심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착사업 정규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내 난민인정자 등의 체류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굴하는 등 난민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교육·의료 등 처우 지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제도 남용 방지' 및 '난민 처우 강화' 「난민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자를 난민불인정 취소·철회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통과를 위해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난민심의과는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0. 2. 25. 신설되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에만 해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약 340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5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차 심사기관의 심사결정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도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5,249건에 이르게 되었다.

2023년 한 해 난민심의과는 난민위원회 총 6회, 난민분과위원회 총 44회를 개최하여 약 3,10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였고,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표 19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표 20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의신청	5,277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9
심사결정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제1항 난민 이의신청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심의회와 사무관 박병건

그간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 2월 「난민법 시행규칙」(2023. 2. 27.)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전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조사관의 자격을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교육이수 의무 등 난민조사관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2023. 7월, 난민 신청 다변화 추세에 맞게 아동, 정신건강/의료, 국제법 분야를 신설하고 자문위원을 기존 34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는 등 자문위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난민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제2항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023년은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 한해였다. 2023. 2월 개정된 「난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의신청인 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사실조사, 추가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기존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외 추가 16개 특수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제3항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023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발간한 것이다. 난민심의과는 사전 발간을 위해 약 1년간 국제기구 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의 용어를 수집한 후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와 5차례의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이민·난민용어사전」 등재 용어의 정확도 및 민감도를 점검하는 등 공동 연구 과정을 거쳐 761개 용어를 「이민·난민용어사전」에 최종 수록하였다.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을 기념하여 2023. 7. 4.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법무부장관과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향후 사전 개정판 발간뿐만 아니라 난민 정책 및 심사 관련 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이민·난민용어사전」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 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난민심의과는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하여 「이민·난민용어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6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2023. 7. 4.)



법무부-유엔난민기구(UNHCR)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제4항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 강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는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결정 시 활용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 자료이다.

2023년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등 38건을 한국어로 번역·감수하는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이를 e-book으로 제작하여 난민심사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3. 12월 그간 난민위원회 분과위 소속이던 국가정황조사관을 국가정황 정보조사 전담팀으로 신규 편성하고 팀 운영 기준 및 업무 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국가정황정보조사팀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제5항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활동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 및 난민 신청사유는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난민심의과는 2021. 2월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을 개설하여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2023년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친화적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공익법센터 어필 등 외부 기관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3. 4월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아동편」을 발간하였다.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지역 등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강연 및 의견 공유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화된 이해와 의견 공유를 바탕으로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였다.

제6항 향후 추진계획

2024년에는 국정과제인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난민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을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공신력있는 외국기관 등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번역·감수하여 난민심사에 활용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를 통해 난민심사의 객관성 및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6개 언어로 배포해왔던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16개 특수언어(이란어, 튀르키예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로 추가 발간·배포(총 22개언어)하고,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자국어로 작성된 이의신청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SMS)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불복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발간하고,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교육 사업 등을 정례화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제1항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 '27.)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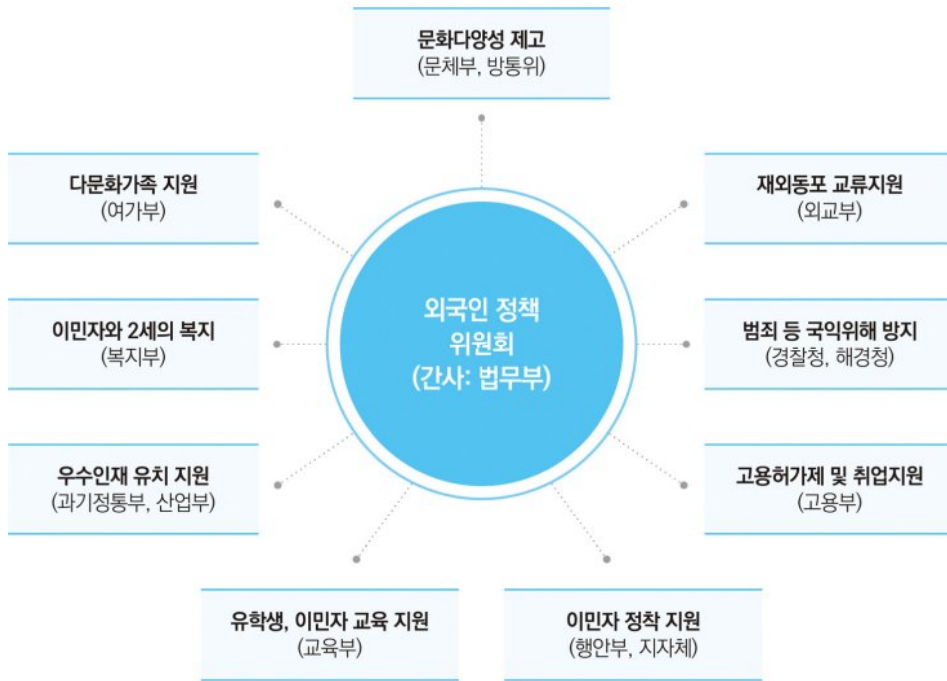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오명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관계 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2023년 12월 27일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계획이자, 정책치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기본 설계도인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3 ~ '27년)」을 수립하였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총 290명)하여 온라인회의와 대면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무분별한 이민 유입의 확대나 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유입하고, 엄정한 체류 관리를 희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반영하였다.

그림 27 외국인정책위원회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를 ‘해외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하였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상 한계가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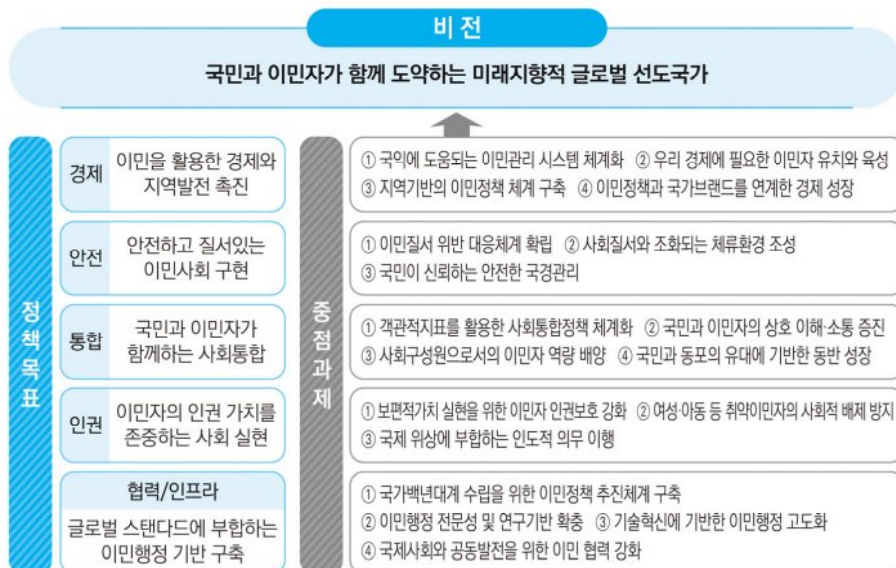
지난 제1차~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서있는 개방과 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양적 확대를 이루고, 이민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민 전달기구의 부재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 ’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정책목표([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와 18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향후 5년간 범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 ’27년)」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육성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구위기,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8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제2항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박지원

1 추진배경

최근 지역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증대로 이민정책 총괄 부서가 설치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인프라·역량과 이민정책 연구기반은 아직 미진한 단계이다.

2 주요내용

법무부는 적극적인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23년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총 5회 개최(권역별 3회, 주제별 2회)하였고, '23. 7월에는 법무부 - 광역지자체 간 정책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 지자체, 학계 및 연구계의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3. 11월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역 이민정책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 12개 광역지자체, 31개 지역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법무부 등 총 46개 기관 참여

3 향후계획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에서 지역연구원 간의 공동연구, 정기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지역 이민정책 논의 및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논의된 과제들은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자체용 '외국인

업무지침서'를 활용한 권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주요 현안 공유 등 지역이민 정책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제3항 2023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종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3. 11. 27. 출입국·외국인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현장·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제26회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 매년 출입국·외국인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61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3. 11. 27. 개최된 제26회 정책발표회 본선에서는 '직업소개소 동향조사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이 최우수상을, 'K-Point E74 제도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외국인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효율화 방안'이 우수상을, '전자 입국신고서 도입 및 운영방안'과 'NWC 도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증진 방안' 및 '사전 생체정보취득 및 전자민원과 민원 대행을 통한 외국인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정책발표회는 '본부 현안 또는 중점 추진사항 중 지정과제에

대한 발표과제 선정 방식'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최결과

구분	제안자			과제명
	소속	직급	성명	
최우수	수원청	7급	박충순	직업소개소 동향조사 법적근거 신설
우수	안산시사무소	7급	이창연	K-POINT E-7-4 체류자격 관리체계 관리 방안
우수	서울청	8급	조아혜	외국인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방안
장려	인천공항청	7급	오재균	전자 입국신고서 도입 및 운영방안
장려	안산시사무소	8급	윤서영	NWC* 도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증진 방안 * Newcomer Welcome Center
장려	청주시사무소	9급	고준섭	사전 생체정보 취득 통한 외국인등록 업무 처리기간 단축 방안
정책제안	양주시사무소	8급	허유재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리 방안
정책제안	인천청	8급	류재상	효율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제안	서울남부사무소	8급	성희원	쿼터제 도입을 통한 유학생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방안
정책제안	인천청	9급	정명진	효율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외국인 호송 방안

그림 29 제26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3. 11. 27.)



제4항 2023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종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 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 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2022. 5월부터는 운영방식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포럼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3년 이민정책포럼은 총 4회 개최되었다. IOM, 캐나다 이민부 등 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파견 경험 내부직원,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본의 고령화와 지역의 공간적 변화(이호상, 인천대 교수), 캐나다의 이민정책(이영범, 캐나다 이민국 근무 경력자), 국제기구! 그것을 알려드립니다(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미국 USCIS 및 이민정책 소개(김재남,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30 2023년도 이민정책포럼



제9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임연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감염병 확산 및 초국경적 범죄의 증가로 이민·출입국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이민정책 정보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입국·이주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장·차관이 유럽·미주 국가 이민정책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또한,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일본, 캄보디아 등 이민 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주한 공관원들과 해외 이민정책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세계 이민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수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국제회의에도 참여하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우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분석 및 감식 기법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제1항 장·차관의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2023. 3월 법무장관이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딜란 예실괴즈 제저리우스(Dilan Yeşilgöz-Zegerius) 장관,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 등을 만나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 사례와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Sutter) 연방내무부 차관, 한스 에크하르트 쏜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림 31 장·차관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및 교류 협력 강화



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회담



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 회담



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 회담



차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이민부 장관 회담

2023. 10월에는 법무차관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폴 창(Paul Chiang) 정무차관을 만나 우수인재 및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이민부 및 노인복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이민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수도권 등 선호지역 편중화 해소 방안 및 지역 정주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항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개최

2023. 7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그간 연기되었던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3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3. 12월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이민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는 2022. 12. 1. 한·캄 FTA 발효로 향후 인력 도입 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국가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우수인재 등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2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제3항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3년에는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제8차 아시아 문서 감식 네트워크(ANDEX) 연례회의, 제51차 OECD 국제이주 작업반(WPM) 정례회의, 제2차 APT 이민청장 회의, OECD 이주 전문가 그룹(SOPEMI) 연례회의,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RF), 제3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등 다수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APT 이민청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이민환경 변화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2023. 11월 개최된 제8차 ANDEX 연례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참가국들과 문서 위변조 동향 및 감식 기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여국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약 4,200여 명이 참석했던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 GRF)에 한국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세계 난민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 국가의 난민법·제도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였다.

표 21 2023년 국제회의 참여 현황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	2. 27. ~ 3. 4.	아일랜드	• 재정착에 관한 실무회의(WGR)	권강이 출입국관리주사보
2	5. 24.	화상회의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ANDEX)	김종무 출입국관리사무관 외 1명
3	6. 20. ~ 6. 25.	프랑스	• 제51차 OECD 국제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홍인표 출입국관리사무관 외 1명
4	8. 8. ~ 8. 12.	태국	• 제2차 APT 이민청장회의	하용국 외국인정책과장 외 1명
5	10. 9. ~ 10. 11.	프랑스	• 이주전문가 그룹(SOPEMI) 연례회의	이향숙 출입국관리사무관 외 1명
6	10. 17. ~ 10. 24.	스위스	• 제5차 UN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박재완 이민조사과장 등 2명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7	11. 23. ~ 11. 24.	태국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ANDEX) 제8차 연례회의	이종철 이민정보과장 외 3명
8	12. 12. ~ 12. 17.	스위스	• 제2차 글로벌난민포럼	허진경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9	12. 20. ~ 12. 21.	일본	• 제3차 도쿄 출입국포럼	장희정 국적과장 외 2명

표 22 2023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연번	일자	국가/기구	방문목적	방문자
1	1. 3.	태국	• 태국인 불법체류 현황 및 대책 방안 논의	왓타나쑈와곤 니티팻 주한 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2	1. 30.	UNHCR (유엔난민기구)	• 난민업무 관련 협력 등 논의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선임보호관 오호 르부샤 등 6명
3	2. 9.	몽골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에르데네쑤흐 사란토고스 주한 몽골대사
4	4. 27.	UNHCR (유엔난민기구)	• 난민업무 관련 교류 협력 등 논의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길리안 트리스 등 5명
5	5. 19.	몽골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우간바야르 네르구이 몽골 이민청장
6	7. 4.	UNHCR (유엔난민기구)	•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참석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전혜경
7	7. 20.	일본	• 양국 협력관계 강화 위해 장관 예방 •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8	8. 4.	중국	• 양국 간 출입국·이민 관련 협조 사항 논의	종홍늬 주한중국대사 총영사
9	10. 18.	미국	• 미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정보 공유	피트 아코스타 주한미국대사관 CBP 주재관
10	10. 20.	카자흐스탄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아탈리코브 아슬란 이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11	11. 6.	몰타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논의 및 양국 협력 방안 논의차 장관 예방	이안 보그 몰타 외교장관
12	11. 15.	캐나다	•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양국 이민·난민 정책 공유	타일러 알렐 캐나다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이주 지역국장
13	11. 29.	UNHCR (유엔난민기구)	• 난민 정책 관련 상호 의견교환	유엔난민기구 부대표 켈리 클레멘츠 등 5명

연번	일자	국가/기구	방문목적	방문자
14	11. 29.	스리랑카	•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디아스 갈라가마 아라치 도나 사치니 주한스리랑카대사관 2등 서기관
15	12. 12.	베트남	• 베트남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목적으로 차관 예방	응우옌 바 환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16	12. 13.	캄보디아	•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속 비에스나 캄보디아 이민청장
17	12. 19.	조지아	• 사증면제 방안 및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논의차 본부장 예방	파파스쿠아 타라쉬 주한 조지아대사
18	12. 20.	UNHCR (유엔난민기구)	• 교육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및 난민동향 관련 정보 교류 등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전혜경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제1항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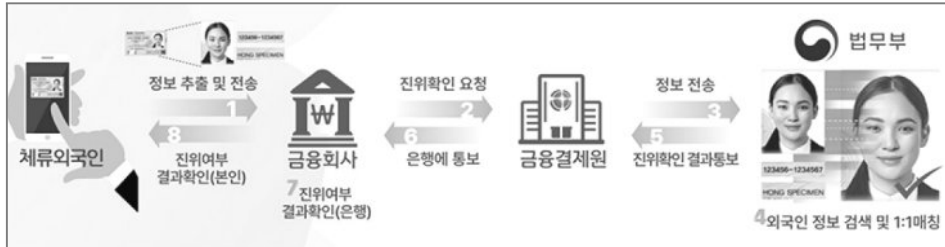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금융회사 등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이 없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 추진내용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등록외국인이 금융업무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 9. 18.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림 3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업무흐름도]**

-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회사)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2023. 12월말까지 제1금융권 10개 은행에 약 45만 여건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추후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2금융권까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2항 등록외국인의 신분증명서인 외국인등록증 개선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흑백이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등록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 등 의견 반영이 필요했다.

2022. 5월 신형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협의*(한국조폐공사)를 시작으로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2023. 4월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하였다.

* 보안 요소 적용 및 컬러사진 인쇄 등 진행 단계별 시제품 제작

그림 34 신형 외국인등록증 등 견본 이미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2 주요 추진내용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사진 크기를 기존보다 35% 확대하여 본인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등록증 인적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고, 뒷면을 활용하여 외국인 이름 전체를 표기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35 신형 외국인등록증 개선 사항



구형 앞면

신형 앞면

- 1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변경
- 2 사진 크기 확대(35%) 및 위치 변경 (좌→우)
- 3 등록증 정보 자동판독 기능(QR코드) 추가
 -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 일자



구형 뒷면



신형 뒷면

- 1 뒷면에 성명을 풀(Full)로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인적 정보 확인 가능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글자 수 39자를 줄 바꿈 없이 한 줄로 표기

3 평가 및 발전방향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2023. 4월부터 2023. 12. 31.까지 499,382건이 발급되어 전체 등록외국인의 37%가 개선된 등록증을 소지하고 하고 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대부분이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제3항 등록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설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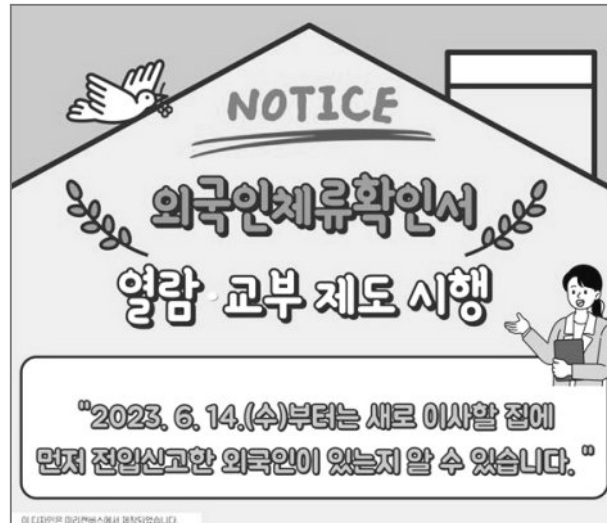
특정 물건 소재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등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 6. 1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와 유사한 제도로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하면 특정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소셜미디어 홍보 자료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체류확인서’는 2023. 6. 14.부터 2023. 12. 31.까지 45,281건이 열람·교부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소재지 물건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전세 사기 방지 등 국민과 외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4항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발전 계획(2019. 10월, 2020. 6월 국무회의)의 범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추진계획*에 따라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 (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 (23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 (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3. 6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3.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IC칩 내장 실물 등록증·모바일 등록증 발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2023. 12월)하여 2025.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림 37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2 평가 및 발전방향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정부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등 이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제1항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표준화하고, 각 부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인 행정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23. 3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23. 11월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2023. 12. 7.에는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형사사법기관(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법원) 및 주요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석하였다.

* 입국 시 외국인이 제시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의미함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법무부와 기관 간 정확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공유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존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출국정지자 누락, 조세 체납 및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 곤란과 같은 행정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플랫폼에서는 기존 외국인 행정정보 연계 시, 동일 정보를 기관별로 각기 개발·제공하는 것을 개선하여, 자주 쓰는 13종(출입국 기록, 출입국 사실증명, 등록외국인 명단 등)의 정보항목 기준으로 표준 연계 서비스(API 방식으로 제공)를 개발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외부기관에서 연계를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외국인 행정정보 주요 항목을 Open API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직접 조회·분석·시각화하고, 분석사례 공유 및 전문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추후 본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부 개방하여 지자체의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림 38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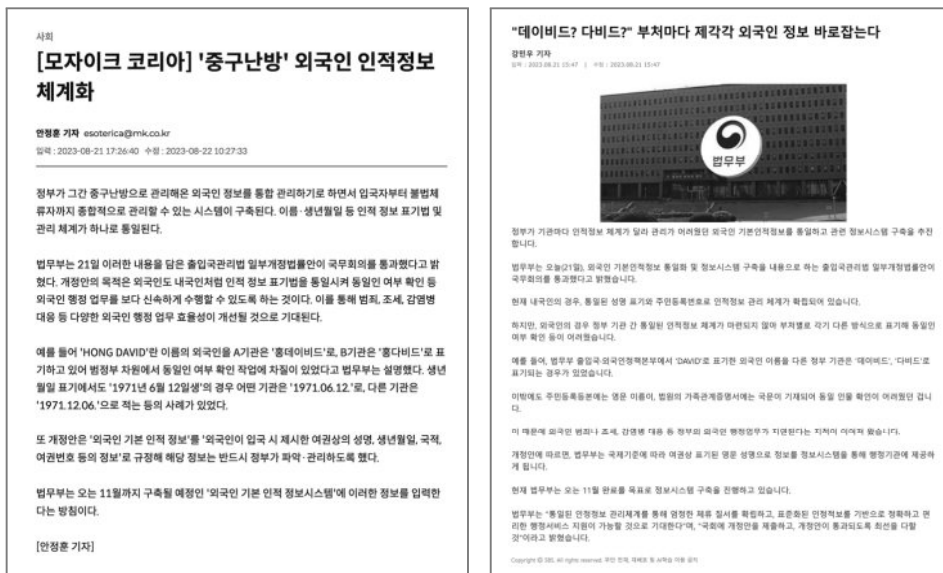
제2항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부처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법무부 차원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기본인적정보의 정의(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제78조의 2), ▲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제78조의3)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 4. 17. ~ 5. 30.), 법제처 심사(2023. 7. 1. ~ 8. 10.)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2023. 8. 21.)하여 2023. 8. 22.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23. 12. 1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되었다.

그림 3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언론보도



제3항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지역 상황을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서와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와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9개 지자체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외국인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및 지역별 외국인 고용·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를 정책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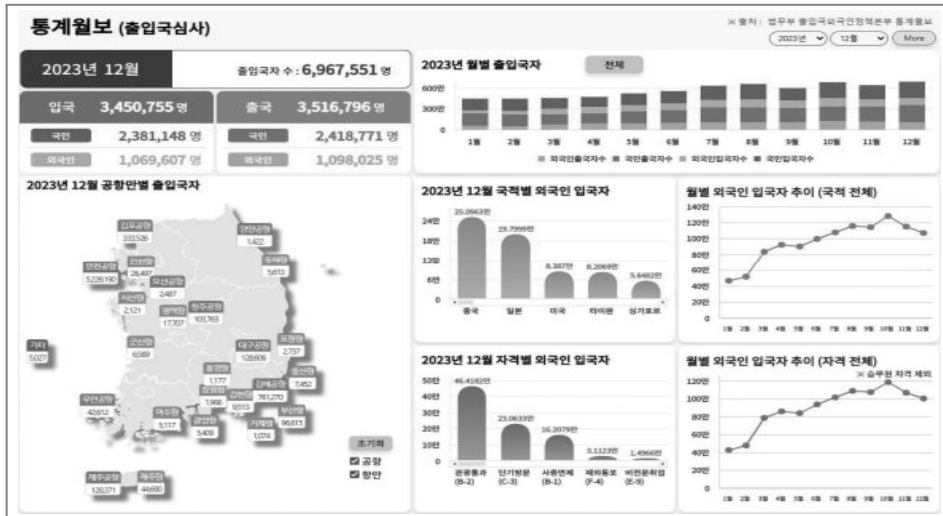
제4항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1 통계월보 분석 시각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의 ‘빅데이터 분석’ 메뉴를 통해 통계월보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을 매달 업데이트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출입국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www.all.data.go.kr)에 63종의 정보를 등재하고, 매달 외국국적동포 현황 등 35종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등 출입국행정 통계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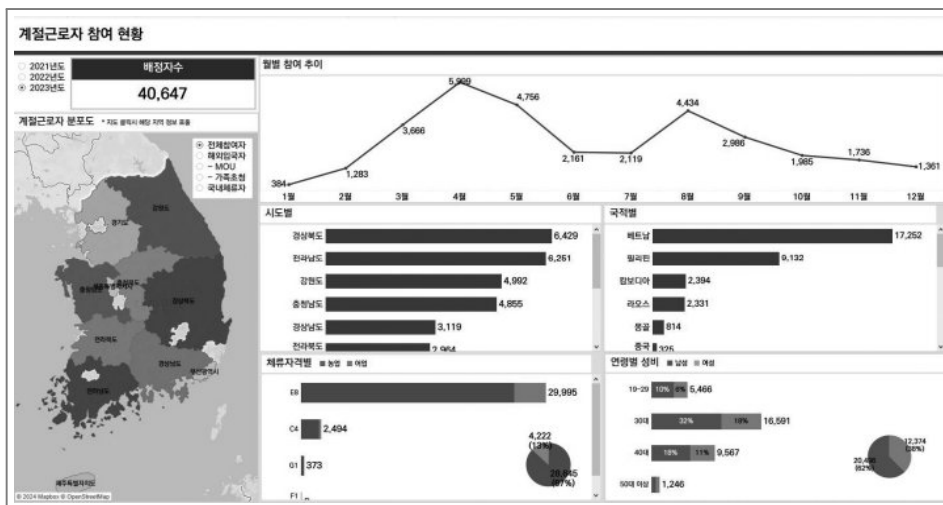
그림 40 통계월보 시각화화면



2 농어촌 계절근로자 현황분석 및 수요예측 시범모델 개발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역별 운영현황, 이탈률, 국내-해외 지자체간 MOU 체결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분석·시각화 자료를

그림 41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분석·시각화 화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월별추이, MOU 현황

개발하여, 소관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법무부가 보유한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모델을 완성하기 위하여, 향후 국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측 모델의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제5항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2023. 4. 3., 10. 16. 총 2차례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2회 각 5일간 운영하였다. 1, 2차 교육과정에 총 4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3 2023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및 저장
2일차	빅데이터 분석 이해 및 Tableau 활용 방법	• 빅데이터 분석 이해 • Tableau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4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
5일차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제6항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2023. 4. 24. ~ 7. 27. 이민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 4. 24. ~ 6. 23.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3팀(20명)이 지원하였으며, 내·외부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외국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개발-kairbag), 우수상(외국인선원 편의성 제고 OCR기반 택시카드 - 아주브레멘), 장려상(한국형 실리콘밸리 향한 이민자 구인·구직 서비스 - 데이파이브) 총 3팀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표창 및 상금을 전달하고 최우수 수상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42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홍보 배너



2차 발표 심사 ('23. 7. 20.)

제12절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김명훈

제1항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농·어업 분야 및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인구 위기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등 능동적인 이민정책 활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하여 '23년 현재 약 251만 명에 이른다.

*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0년 2,903만 명까지 약 771만 명 감소 전망(통계청, 2023.)

**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 2021.)

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 간 갈등 및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 11.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속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을 추진 하였다(자율기구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2023. 11. 7.부터 임시조직 전환).

그림 43 이민정책 전달조직 및 이민정책 활용 관련 언론보도



제2항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관련 공론화 진행

추진단은 2022년부터 국민, 전문가 대상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포럼 (2023. 8. 11.)」에서는 과학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위원장 : 정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23. 11. 3.)」에서는 다부처 협업 방식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및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 외국인력 도입 분야규모 결정 체계 개선방안과 같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우수인재 및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확대 등 유연한 비자정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체류질서의 확립, 내·외국인 간 갈등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수렴 내용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44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2023. 11. 3.)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표 24 2023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현황

일자	내용
2. 2.	- 이민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2. 15.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단체 면담 - 청 신설에 대한 우려 등 의견수렴
5. 15.	5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 인구감소 시대의 이민정책
5. 23.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정부와 기업이 win-win 하는 이민 방향 모색
5. 26.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 포럼 -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6. 14.~15.	2023 저출산고령사회 인구포럼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7. 7.	- 외국인 인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외국인 인력 유지·활용과 사회통합 방안
7. 10.	-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모자이크 코리아! 한국형 이민사회로 가는 길
7. 21.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현실과 과제
8. 11.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포럼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9. 6.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KEY’ 관련 좌담회 - 미래를 좌우할 이민정책, 바른 방향은?
9. 13.	- 농어업·농어촌 이민정책 관련 토론회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9. 2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 - 최근 해외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11. 3.	-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방향 등

제3항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2023. 3월 법무부장관은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 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하여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회담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난민 문제 등 주요 이민정책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밝혔으며,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역할, 필요성, 조직 구성에 관하여 자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민정책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러한 국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정책 노하우는 향후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5 법무부장관, 유럽 주요 국가 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 회담(2023. 3. 7.~3. 15.)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회담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회담

제4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위와 같은 공론화 및 전문가 자문, 주요 선진국의 최신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 및 과거 추진 사례에 대한 재검토 등을 바탕으로, 2023. 11월 추진단은 다부처 협업 방식의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부처 협업 방식이란,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되는 이민정책의 특성을 고려, 각 정책 영역 소관 부처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 기능별 소관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업하는 조직 형태이다.

추진단은 마련된 신설방안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립하였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청 신설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2023. 11. 15. ~ 12. 5.) 또한 법무부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청 신설방안과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였다.(2023. 12. 6.)

그림 46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발표(2023. 12. 6.)



제5항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범 도입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우수 외국인력 선발 및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 예측 ▲그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분석 ▲해외 주요 국가 총량 산출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각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 12월 주요 취업비자별 연간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별도 상한 없이 도입이 허용되어 온 전문인력 분야의 경우 상한을 설정하지 않되, 신규 도입 분야(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는 연간 비자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비전문인력(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의 경우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기업 및 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비자 발급규모 산정 시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및 도입 필요성, 불법체류 등 유입 부작용,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년도가 아닌 3년 단위의 발급규모 발표를 추진하는 등 제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6항 향후 계획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담조직 설치와 함께,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을 국익의 관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4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3

CHAPTER

일자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행정 연표)

제1절 상반기

제2절 하반기

제1절

상반기

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	■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법령 시행 •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인신매매 등 피해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보호일시해제 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 불법체류 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활동범위 확대 등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마련	외국인 정책과
1. 1.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주요내용 : △예비 우수인재 영주 (F-5)자격 신설 △우수인재 특별귀화 패스트트랙 신설 △거주·영주·귀화 단계별 트랙 완성 및 요건 명확화 • 운영방식 : 석·박사⇒거주⇒영주 또는 특별귀화(이공계 특성화 기관* 대상) * 4개 과학기술원(KAIST, GIST, UNIST, D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국적과
1. 2.	■ 2023년도 출입국정보화사업 추진 지시 • 총 8개 추진 정보화 사업, 소요예산 280억원	이 민 정보과
1. 6.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 발표 • 조선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산업부 공동)	체 류 관리과
1. 9.	■ 전자여행허가(K-ETA) 운영지침 개정 시행 •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제도 적용,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적용 면제 등	출입국 심사과
1. 10.	■ 제247회 이민정책 포럼 개최 • 강사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 주제 : 일본 고령화와 지역의 공간적 변화	외국인 정책과
1. 11.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 • 일시, 장소 : 1. 11.(수) 14:30, 법무부 대회의실 • 내용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업하여 신규 위촉한 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이며, 총 414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보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2.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액 고시 • 내용 :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23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등에 반영하여 관보에 게재	난 민 정책과
1. 13.	■ 2023년도 상반기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 13.(금) 15:00, 법무부 출입국본부 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과장급 • 내용 :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특별 감축 방안, 부처별 불법체류 감축 지원 방안 등	이 민 조사과
1. 16.	■ 제248회 이민정책 포럼 개최 • 강사 : 前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직원 • 주제 : 캐나다의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과
1. 24.	■ '23년도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 방안 시달 • 내용 : '23년 외국인 밀집지역 총 85개소 지정(기존 64, 신규 22, 해제 1) - 밀집지역내 순찰활동 강화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정보수집	이 민 조사과
1. 25.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허가 허용 재개 • 내용 : 최근 코로나19 상황 호전 및 항만 검역완화 조치에 따라 상륙허가 제도 정상화 ※ 다만, 중국·홍콩·마카오발 선박에 대해서는 중대본의 방역지침 준수	출입국 심사과

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2.	■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제 :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 ‘이민청’의 역할과 정책과제 우선순위 -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이민정책 - 이민 차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	외국인 정책과
2. 7.	■ 크루즈선 입항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항만시설 점검 • 내용 : 관계기관과 크루즈 입항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보안 및 CIQ 관리상황, 비상사태 대응체계 점검 등	출입국 심사과
2. 10.	■ 2023년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2. 10.(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0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2. 13.	■ 2023년 법무부 감시정 운용계획(안) 수립 • 내용 : 효과적인 감시정 관리·운용 등을 위한 ‘2023년 감시정 운용 계획(안)’ 수립·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13.	■ 「2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연구 추진 계획」 마련 • 연구과제 :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 9개 과제(총 예산액 6억5천5백만원)	외국인 정책과
2. 15.	■ 2023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출입국절차 간소화 지원 실무회의 참석 • 내용 : 대회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논의	출입국 심사과
2. 16.	■ 전국 출입국기관 조사과장 영상 회의 개최 • 일시, 방식 : 2. 16.(목) 15:00, 온나라 영상회의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민조사과장, 각 청(사무소) 조사과장 등 • 안건 : '23년 불법체류 단속 강화 등 향후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방향 논의 등	이 민 조사과
2. 17.	■ 불법체류 감축 특별 추진단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2. 17.(금) 16:00, 법무부 출입국정책담당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장(주재), 이민조사과장, 조사과·심사과·정보과·체류과 사무관 등 • 주요 내용 : 불법체류 감축대책 추진사항 점검	이 민 조사과
2. 21.	■ 무안공항출장소 노후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등 개선사업 추진 지시 • 내용 : 무안공항 출장소 정보통신망 정밀실사 결과 심각한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 추진 - L2 스위치 교체, 광랜 포설 등	이 민 정보과
2. 25.	■ 「한국이민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제 : “윤석열 정부의 이민행정 과제”	외국인 정책과
2. 28.	■ 전문보호시설 보호·사범과장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2. 28.(화) 14: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 - (본부) 출입국정책담당장(주재), 이민조사과장, 이민조사과 사무관 - (소속기관) 화성(보)·청주(보)·여수소, 인천청 사범·보호과장 및 담당자 • 주요 안건 : 불법체류 감축 대책에 따른 상반기 정부합동단속 관련 전문보호시설의 보호업무 및 강제퇴거 집행 현안 논의	이 민 조사과

3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1.	■ 관광상록허가 규정 개정·시행 • 내용 : 얼굴정보 전송을 하지 못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사증면제·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관광객에 대해 관광상록허가를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출입국 심사과	
3. 2.	■ '23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기간 : 3. 2.(수) ~ 4. 30(화), 2개월 • 참여기관 : 법무부,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등 5개 부처 530명 • 중점단속 분야 :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유령·마사지 업종 종사자,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건설 현장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 주요 실적 : △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및 불법 고용주 1,713명 적발, △ 자진출국자 5,247명(일평균 88명 자진출국)	이 민 조사과	
3. 2.	■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3. 2.(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회장단 14명 등 17명 참석 • 내용 :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23년 중앙협의회 활동방향 등 논의	이 민 통합과	
3. 6.	■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시행 • 배경 :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호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인권보호관 지정, 인권침해 신고 및 특별계호의 세부 절차 마련, 보호 장비 사용기준 등 구체화	이 민 조사과	
3. 7.~ 3. 15.	■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 일자, 장소 : 3. 7.(화)~3. 15.(수), 프랑스·네덜란드·독일 • 출장자 :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기획단장,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추진단장 등 • 목적 :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현안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3. 10.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 계약 •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행정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기간 : '23. 3. 10. ~ '23. 11. 5.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3. 13.	■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화 위촉 • 3.13.자 임기만료 변호사 93명 중 재위촉(연임) 75명, 신규위촉 10명 등 총 85명 위촉 ※ 위촉기간 : '23. 3. 13. ~ '25. 3. 12.	이 민 통합과	
3. 13.~ 3. 14.	■ 제1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기간, 장소 : 3. 13.(월) ~ 3. 14.(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참석 : 신규 난민전담공무원 등 32명 • 내용 : 난민이론, 유엔난민기구(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15.	■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 내용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자국에서 출발,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무사증 입국 허용	출입국 심사과
3. 1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개정령안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절차 마련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에 관한 절차 마련 ※ (입법예고 기간) '23. 3. 15.(수) ~ '23. 4. 24.(월)	외국인 정책과
3. 15.	■ 2023년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국적실무 교육 • 일시, 장소 : 3. 15.(금) 14:00, 대전가정법원 • 강사 : 국적과 사무관 및 담당 계장 • 내용 : 대한민국 국적취득 대상·절차 등 관련 규정	국적과
3. 20.	■ 수도권 조사과장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3. 20.(월) 11: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 - (본부) 이민조사과장, 이민조사과 사무관 - (소속기관) 인천공항·서울·인천·수원청, 양주·안산·춘천소 조사(심사)과장 등 • 주요 안건 : 정부합동단속 관련 단속 과정의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 논의	이 민 조사과
3. 20.	■ 제24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발표자 : 체류관리과장 • 주제 : “국제기구,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정책과
3. 23.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 • 3.23.자 임기만료 위원 19명 중 재위촉(연임) 12명, 신규위촉 14명 등 총 26명 위촉 ※ 위촉기간 : '23. 3. 23. ~ '25. 3. 22.	이 민 통합과
3. 28.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 개정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78조의3) 등 신설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3. 30.	■ 제36차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이사회 개최 • 주요안건 - '22년도 결산 보고 및 사업실적 승인 - '23년도 예산(안)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외국인 정책과
3. 31.	■ 난민신청자를 위한 가이드북,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체류 가이드북 배포 • 내용 : 비영어권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가이드북 내용 보완 후 다국어 버전으로 추가 제작 배포	난 민 정책과

4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1.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행 • 내용 : 외국인등록증 관련 그간의 민원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등록증 활용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신형외국인등록증 발급 - ①사진 컬러 인쇄, 크기 확대(35%), ②사진 위치 변경(왼쪽 ▶ 오른쪽)으로 본인 확인 용이[주민등록증과 동일, 성별 생략]	이 민 정보과	
4. 3.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출입국정보 연계 개시 지시 • 내용 :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요청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2019)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정보연계 지시 - 연계 근거 : 고용보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4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규정 준수 요구 및 업무 이외 조회 금지	이 민 정보과	
4. 3.~ 4. 7.	■ '23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운영(1차) • 내용 :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소속 직원(20명) 대상으로 5일간 맞춤형 교육 진행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4. 7.	■ 2023년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4. 7.(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4. 13.~ 4. 14.	■ '23년 제1회 중앙·지자체(수도권·강원권)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장소 : 강원도 홍천군 • 목적 : △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의 외국인정책 이해 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지자체 의견공유 및 협업 강화	외국인 정책과	
4. 18.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공포 • 주요내용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3. 7. 19.	외국인 정책과	
4. 20.	■ 조선업 외국인력의 정착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실시 • 내용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5사 외국인력 대상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 민 통합과	
4. 24.~ 4. 25.	■ 제2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기간, 장소 : 4. 24.(월) ~ 4. 25.(화), 서울글로벌센터 교육장 • 참석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등 29명 • 내용 : 난민인식 개선 교육, 러시아 정황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난 민 정책과	
4. 25.	■ 라오스 이민국 간담회 참석 • 주요 내용 - KOICA 라오스 출입국행정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 한국 불법체류 관리정책 및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소개 △ 양국 이민당국 간 출입국행정 협력 방안 모색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6.	■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참석 - 일시, 장소 : 4. 26.(수) 10:00, 외교부 양자회의실 - 참석 : 양국 외교부 관계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 주요 안건 : △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 영사분야 협정 이행 현황 등	이 민 조사과
4. 27.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교육 실시 - 일자, 장소 : 4. 27.(목),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 내용 : 태백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9명을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 필수 사회적응정보 등을 안내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교육 실시	이 민 통합과
4. 28.	■ 전자여행허가(K-ETA) 다국어 서비스 개시 내용 : 한국어, 영어 등 2개 언어로 제공되던 전자여행허가제 지원 언어를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프랑스어, 스페인어, 말레이어 등 6개 국어를 추가하여 총 8개 국어로 제공	출입국 심사과
4. 30.	■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시점 개정 시행 내용 :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단체 환승객 등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대상 및 허가요건 등 정비	출입국 심사과

5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	■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 내용 : 난민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통역인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난민통역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난 민 정책과
5. 15.	■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법무부 고시 - 배경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5 제2항에 따른 출국대기실 물품 제공방법 및 세부기준 마련 - 내용 :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법무부 고시(제2023-214호) * 침구, 생활용품, 음식물 그 밖의 물품의 제공방법 및 구체적 범위	출입국 심사과
5. 15.	■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 주제 :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과
5. 17.	■ '23년 제2회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5. 17.(수) 15: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장(위원장), 법무부·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외교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8개 부처 과장급 - 안건 : '23년도 제2차 정부합동단속 방향 및 불법체류 감축대책 논의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9.	■ 제16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 장소 : 5. 19.(금) 10:0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참석 : 법무부 장관, 주한외교사절, 국제기구 대표, 정부포상자 및 가족 등 약 650여명 • 내용 : 기념식, 귀빈 축하, 정부포상 수여, 축하공연 등	이 민 통합과
5. 24.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 주요내용 - 전국 107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2,869명 배정	체 류 관리과
5. 24.	■ 「제6기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주요내용 - 사회 저명인사·이민정책·인구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임기 : 위촉일로 3년) 신규위촉	외국인 정책과
5. 25.	■ 2023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5. 25.(목) 15:00, 법무부 영상회의실 • 참석 : 위원장(차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총 15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 예외적 국적이탈 등	국적과
5. 26.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외국인 정책과

6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	■ 수도권 청(사무소) 사범업무 실무자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6. 1.(목) 10: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 - (본부) 이민조사과장, 이민조사과 담당 사무관 등 - (소속기관) 인천공항·서울·인천·수원청, 서울남부·안산·양주사무소 사범업무 담당자 • 주요 안건 - '23. 2월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방안' 종료에 따른 사범심사 지침 개정 방안 검토 등	이 민 조사과
6. 1. ~ 6. 5.	■ 2022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신청 접수 • 기간, 장소 : 6. 1.(목) ~ 5.(월), 인천청 3층 대회의실 • 대상 : '22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17명(동포 1세 11명, 직계비속 206명)	국적과
6. 2.	■ 2023년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6. 2.(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8.	■ 제8회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일시, 장소 : 6. 8.(목) 14: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참석 :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등 • 내용 : 양자간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 관련 6개 안건 논의	이 민 통합과
6. 9.	■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회의 개최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중기부, 산업부 등 담당 부서장 및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담당자 • 논의사항 : △ '23년도 외국인정책반 신규과제 △ 기타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	외국인 정책과
6. 9.	■ 제3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자, 장소 : 6. 9.(금), 서울글로벌센터 교육장 • 참석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등 10명 • 내용 : 난민 이론, 유엔난민기구(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난 민 정책과
6. 12.	■ '23년 제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기간 :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기관 : 법무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해양청 등 5개 기관 530명 • 중점단속 분야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국민 안전 위협·민생 침해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 주요 실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등 적발	이 민 조사와
6. 1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령안 주요내용 - 파종기·수확기 등에 계절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5개월)을 유지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 ※ (입법예고 기간) '23. 6. 12.(월) ~ '23. 6. 22.(목)	외국인 정책과
6. 12.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개정법을 공포 • 주요내용 - '실물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거소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23. 12. 14.	외국인 정책과
6. 14.	■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 시행 • 내용 : 특정 물건소재지에 체류하는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등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 방지 -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소재지 물건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 확인 *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와 유사한 제도,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열람·교부 신청	이 민 정보과
6. 15.~ 6. 16.	■ '23년 제2회 중앙·지자체(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장소 : 부산광역시 • 목적 : △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의 외국인정책 이해 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지자체 의견공유 및 협업 강화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8.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배포 • 배경 :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방한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심사 환경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선제적 추진 • 내용 : △국민/외국인용 입국 심사장 전환 운용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적극 홍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등	출입국심사과
6. 19.	■ 「인구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 참석 • 참석 : △(공동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작업반) 법무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여가부 등 17개 중앙부처 실장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참석 • 논의사항 :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 방향 및 작업반별 주요 논의과제·일정 등	외국인정책과
6. 19.~ 6. 20.	■ 세계난민의 날 기념,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기간, 장소 : 6. 19.(월)~ 6. 20.(화),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 참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3명 • 내용 : 난민정책의 방향과 재정착 수용 사례 공유,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 방안 논의 등	난민정책과
6. 20.~ 6. 29.	■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점검 • 기간 : 6. 20.(화)~ 6. 29.(목) • 내용 : 이민통합과 소관 15개 비영리법인 중 11개 법인에 대한 운영 실태 현장점검 실시, 미흡한 점 시정조치 등 요구	이민통합과
6. 21.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실무그룹 담당자 간담회 참석 • 내용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업무 내용 소개, ABTC 관련 사업 발굴 논의 등	출입국심사과
6. 22.	■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전담여행사 간담회 참석 • 일시, 장소 : 6. 22.(목) 10:00, 강원도청 회의실 • 참석 : 강원도(주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한국공항공사 및 국내 전담여행사 22개사 ※ 출입국심사과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참석 • 내용 :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 국내 전담여행사 지정증 수여 및 제도 개요, 세부운영계획 설명,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	출입국심사과
6. 23.	■ 여름 장마철 단속시 유의사항 시달 • 내용 : 장마 기간 중 △ 단속 및 호송과정에서 도주 및 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유의	이민조사과
6. 23.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과제명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 연구 • 일시, 장소 : 6. 23.(금) 10:30, 법무부 법정국 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국적과장, 한성대 연구책임자 등 2명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26.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 업무 개시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성안동 238) • 시설 : 지상 4층(1~2층 업무공간, 3~4층 보호시설*), 지하 1층 *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출입국 기획과
6. 27.	■ 동남아 3개국 단체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 • 내용 : '23. 6. 27.부터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인 이상 일반관광객에게 단체전자비자 발급 확대 시행 ※ 기존 5인이상 인센티브관광, 수학여행단에 단체전자비자 발급	체 류 관리과
6. 27.	■ 2023년 상반기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 일시, 방식 : 6. 27.(화) 13:30, 온라인 강의 • 참석 : 난민(전문)통역인 117명 • 내용 : 통역기법 등 연습, 21세기 세계 난민동향 및 국내 정책 등	난 민 정책과
6. 29.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이민정책 중·장기 과제 및 우선순위 개발	외국인 정책과
6. 30.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 세미나 개최 • 참석 : 빅데이터팀장, 외국인정책과장,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등 • 일시·장소 : 6. 30.(금) 15:00,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 내용 : 이민정책 고도화를 위한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방향 논의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6. 3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개정령 주요내용 - 파종기·수확기 등에 계절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5개월)을 유지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	외국인 정책과

제2절

하반기

7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3.	■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지침 개정 시행 • 주요내용 : △단체신청 가능 인원 확대(30명→50명)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3년)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추가 등	출입국 심사과
7. 3.	■ 인구위기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 일시, 장소 : 7. 3.(월) 15:00, 법무부 지하대강당 • 대상 : 법무부장관, 실·국·본부장 및 본부 직원 • 강연자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 인구변동과 법무행정)	출입국· 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7. 4.	■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3차 회의 참석 • 내용 : 잼버리 대회 준비상황 및 분야별 정부지원 추진사항, 대회 기간 중 인력 지원 등 논의 등	출입국 심사과
7. 4.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시행 • 주요내용 : 출입국우대카드 △선정기관 및 발급대상 명칭 현행화 △발급대상 세부규정 명확화 △발급대상 확대*(추가 및 신설) * 법무부장관 선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종사자 및 복지부장관 선정, 건강친화 인증기업 종사자 등	출입국 심사과
7. 4.	■ 전국 출입국기관 조사과장 영상 회의 개최 • 일시, 방식 : 7. 4.(화) 10:30, 온나라 영상회의 • 참석 : 이민조사과장(주재), 각 청(사무소) 조사과장 등 • 안건 : △2차 정부합동단속 중간 점검 △향후 단속 방향 및 유의사항 △청주보호소 업무중단에 따른 보호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 및 권역 구분 없이 보호의뢰 적극 수용	이 민 조사과
7. 4.	■ 「이민·난민 용어사전」 발간 • 내용 : 이민·난민 정책 용어 통일을 위해 UNHCR과 공동으로 「이민·난민 용어사전」 발간	난 민 심의과
7. 5.	■ 제21기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 운영 • 일시, 방식 : 7. 5.(수) ~ 7. 7.(금),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 • 과목 : 외국인정책, 이민통합정책, 체류관리, 국적,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이민정보의 이해 등	이 민 통합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6.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확대 개편 • 내용 : '20. 7. 6. 최초 구성된 제1기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임기(3년)가 '23. 7. 5.부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자문위원단을 구성(총 44명)	난 민 심의과
7. 7.	■ '법무부-지자체 이민정책 협력 세미나' 개최 • 일자, 장소 : 7. 7.(금), 서울역 회의실 • 주제 : 지자체 이민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체계 방안, 지역 연구기관 이민정책 현황 및 유관기관 협력 추진 등 • 참석자 : 외국인정책과장 등 법무부 직원, 6개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담당자 및 지역 연구원 등 총 28명	외국인 정책과
7. 19.~ 7. 28	■ ICRM2019 안정화 및 데이터 품질 정제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배경 : ICRM2019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데이터 수정·삭제·프로그램 개선 요청이 많아,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이용 불편 사항(오류, 버튼 위치 조정 등) 파악 필요 • 간담회 개요 - 일자 : 7. 19.(금) ~ 7.28.(금) - 대상 : 사증, 국적, 조사, 사범, 보호, 난민 업무 담당자 - 방식 : 다자간 회의 형식(문답)으로 진행,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개선사항을 단기, 중·장기(별도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개선추진	이 민 정보과
7. 20.	■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 내용 : 이민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경진대회 개최, 총 3팀의 수상작 선정 ※ 4. 24.~6. 23. 아이디어 공모 → 7.20. 2차 발표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7. 20.	■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방안」 마련 • 내용 : 현재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자의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를 높이고, 이민자에게 사회통합의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	이 민 통합과
7. 21.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 주제 :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현실과 과제 - 한국사회의 현실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외국인 정책과
7. 21.	■ 2023년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7. 21.(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7.25.	■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일시, 방식 : 7. 25.(화) 14:00,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 :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개 중앙부처 총 10명 • 내용 : 난민 처우 현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등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27.	■ 제9차 외국인 장기보호심의회 개최 - 일시, 장소 : 7. 27.(목) 15: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내·외부위원 등 9명 - 내용 :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중 단기간에 출국이 곤란한 보호외국인 8명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여부 심의	이 민 조사과

8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2.~ 8. 4.	■ 국가정황정보 순회교육 실시 - 기간 : 8. 2.(수) ~ 8. 4.(금) - 대상 : 인천청, 광주사무소, 부산청 등 난민전담공무원 - 내용 : 국가정황조사관이 권역별로 1차 심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정황정보 조사기법 등 강의 실시	난 민 심의과
8. 4.	■ 「인구정책기획단」 ‘외국인정책반’ 제2차 회의 개최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주재), 법무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이민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 내용 : '23년 외국인정책반 추가과제' 논의 및 과제별 추진 현황 점검 등 * △외국인력 숙련도·전문성 제고 방안(부리양성대) △계절근로제도를 통한 농·어업 인력지원(통합인력관리플랫폼) △이민통합기금 신설 △외국인근로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단속인력 확충 등	외국인 정책과
8. 4.	■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자료 제공 협조 요청 - 내용 : 국내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와 동향조사 실시를 위하여 질병청이 보유한 임시신생아 정보 제공 요청 - (아동) 임시신생아번호, 성별 / (보호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이 민 정보과
8. 7.	■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일시, 장소 : 8. 7.(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 - 내용 : 독립유공자(최재형 선생 등) 13명의 후손 20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 (특별귀화, 국적회복)	국적과
8. 8.	■ 제2차 APT*(ASEAN+한·중·일) 이민청장·영사국장 회의 참석 * ASEAN Plus Three - 목적 : 아시아 국가간 이민정책 및 국경관리 관련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일정, 장소 : 8. 8.(화) ~ 8. 12.(토) 3박 5일, 태국 - 출장자 : 외국인정책과장 등	외국인 정책과
8. 16.~ 8. 18.	■ 제4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자, 장소 : 8. 16.(수) ~ 8. 18.(금), 법무연수원 - 참석 : 난민전담공무원 등 19명 - 내용 :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유엔난민기구(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21.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조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외국인인적정보 제공 및 사용권고 △외국인행정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8. 23.	■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TF 회의 참석 - 참석 : 기재부 차관보(주재), 법무·행안·문체·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 우리 부 출입국심사과장 참석 - 회의내용 : 소관 부처별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문체부 안건) 논의 등	출입국 심사과
8. 23.~ 10. 6.	■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소재확인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8. 23.(수) ~ 10. 6.(금), 1개월 15일 - 대상 : '15년 ~ '23년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5,183명 -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신생아 5,183명에 대해 아동 소재·안전 등 확인	이 민 조사과
8. 29.	■ 지역기반 비자 관련 지자체 워크숍 개최 - 일자, 장소 : 8. 29.(화), aT센터(양재) - 참석 : 체류관리과장 등 업무담당자,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및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담당자 총 200여명 - 주요내용 - 지역기반의 계절근로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간 소통의 장 마련 - 제도 소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건의사항 청취 등	체 류 관리과
8. 30.	■ 전국 조사과장 영상회의 개최 - 일시, 방식 : 8. 30.(수) 15:00, 온나라 영상 회의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주재), 각 청(사무소) 조사과장 등 - 안건 : '23년 하반기 불법체류 단속 강화 등 향후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방향 논의 등	이 민 조사과
8. 31.	■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8. 31.(목)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민간위원 등 - 안건 : 국민·이민자 상생을 위한 상호문화이해 증진방안 등	이 민 통합과
9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 12. 31.	■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 기간 : '23. 9. 1. ~ '23. 12. 31. - 내용 : 해당 기간동안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규제 유예 및 범칙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 * 밀입국자, 형사범, 위변조여권 행사자 등 제외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9. 1.(금) 13:00,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종로구) • 참석 - (내부) 출입국정책단장(주재), 외국인정책과장, 체류관리과·이민통합과 담당 사무관 - (외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경찰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과장급 • 안건 : △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지원 △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비자 제도 소개	외국인 정책과
9. 8.	■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 내용 :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비자발급 수수료(15달러 상당) 한시 면제 ※ 수수료 면제기간 : '23. 9. 8. ~ 12. 31.	체 류 관리과
9. 8.	■ 2023년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9. 8.(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9. 18.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 고시 개정 • 내용 : 사증면제협정 발효 등 체류지역 확대 허가 대상 국가를 현행화하여 법무부 고시 개정(법무부고시 제2023-479호) ※ (외교·관용·일반여권)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제외 및 남수단 포함 (관용·일반여권)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일반여권) 오만 제외 등	출입국 심사과
9. 18.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 내용 : 등록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부 - 금융회사 간 ①등록증 인적정보, ②사진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회신하는 서비스 구축 및 시행	이 민 정보과
9. 18.~ 9. 19.	■ 난민전담공무원 워크숍(제5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개최 • 기간, 장소 : 9. 18.(월) ~ 9. 19.(화), 라까사 호텔(광명시 소재) • 참석 : 본부 및 지방 난민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 • 내용 : '23년 난민정책 현안 공유 및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방안 발표 및 토의 등	난 민 정책과
9. 20.	■ 「OECD 구조미션단*」 방문 * OECD 12개 집행국 중 하나인 경제국 국가분석과 소속으로 회원국 경제검토 보고서 및 OECD 경제전망 작업을 주요 기능으로 함 • 목적 : '24년 한국경제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 참석자 - △(우리측) 외국인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전문위원 등 △(OECD) 빈센트 코엔(Head of Division, Economic department, A5(선임과장급 이상)), 윤 파렐리우센(Head of Korea desk) 등	외국인 정책과
9. 21.~ 9. 22.	■ 2023년 제3회 중앙-지자체(광주·충청권·전라권)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장소 : 전남 여수시 • 목적 : △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의 외국인정책 이해 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지자체 의견공유 및 협업 강화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21.	■ 2023년 제2회 국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9. 21.(목) 14:00, 법무부 영상회의실 - 참석 : 위원장(직무대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총 13명 - 심의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 예외적 국적이탈 등	국적과
9. 21.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시흥시 센트럴병원 업무협약 체결 내용 : 재정착난민의 신체·정서적 자립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 체결	난 민 정책과
9. 23.	■ 2023년 하반기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 일시, 방식 : 9. 23.(토) 13:30, 온라인 강의 - 참석 : 난민(전문)통역인 83명 - 내용 : 난민업무에서의 통역의 중요성, 실기, 언어 향상법 등	난 민 정책과
9. 25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내용 : 도입쿼터 35,000명으로 확대, 기업추천 및 한국어능력 의무화, 점수제 항목 간소화(11개→5개) 등	체 류 관리과
9. 26.	■ 주한 공관원 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9. 26.(화) 15:00, 법무부 출입국회의실 - 참석자 - 이민조사과장(주재), 이민조사과 사무관 등 - 태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약 10여명 - 주요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관련 적극 홍보 등 협조 요청	이 민 조사과
9. 30.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재위촉, 신규위촉) 9.30.자 임기만료 위원 9명 중 재위촉(연임) 5명, 신규위촉 21명 등 총 26명 위촉 ※ 위촉기간 : '23. 10. 1. ~ '25. 9. 30.	이 민 통합과

10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5.	■ 이민정책연구원 제38차 이사회 개최 - 안건 : 제5대 원장 후보자 추천 - 결과 :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10. 6.	■ 제9회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일시, 장소 : 10. 6.(목) 14:00, 애기봉평화생태공원(김포시) - 참석 :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등 - 내용 : 양자간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 관련 6개 안건 논의	이 민 통합과
10. 8.~ 10. 13.	■ 2023년 OECD 이주 전문가그룹 연례회의 참석 - 일정, 장소 : 10. 8.(일) ~ 10. 13.(금) 4박6일, 프랑스 파리 - 참석 : 추진단 사무관, 외국인정책과 전문위원 - 내용 : 한국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이민정책 전반을 OECD에 소개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0.	■ '23년 제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기간 : 10. 10.(화) ~ 12. 9.(토) - 참여 기관 : 법무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해경청 등 5개 기관 530명 - 중점단속 분야 :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 국민 안전 위협·민생 침해 △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 주요 실적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255명, 불법 고용주 1,664명 등 적발	이 민 조사과
10. 13.	■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출입국지원 실무 회의 참석 - 참석 : 출입국심사과 및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조직위' 담당자 등 6명 - 내용 : '24년 1~2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실무 논의(대회 참가 외국인 관련)	출입국 심사과
10. 16.~ 10. 20.	■ '23년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운영(2차)' - 내용 :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소속 직원(20명) 대상으로 5일간 교육 진행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0. 23.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영수번호 조회 관련 시스템 개선 알림 - 배경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업무 처리 관련, 복수의 영수번호가 있는 경우 수납사무소 확인이 어렵고 수수료 이체 및 정산 문제 발생 - 내용 : 수수료 수납사무소 확인이 용이하도록 '수납사무소' 항목 추가 및 '처리 일자'와 '거래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이 민 정보과
10. 2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주요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 -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외국인 전문상담 기능을 갖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차 통역지원 근거 마련 - 시행일 : '24. 4. 25.	외국인 정책과
10. 30.~ 10. 31.	■ 취업비자 총량제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출장 - 일자, 장소 : 10. 30.(월)~10. 31.(화), 일본 - 출장자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 및 담당 사무관 - 목적 : 다부처 협업방식의 이민정책 전담조직 운영 실태 파악, 일본 특정기능(特定技能) 제도 운영 관련 자료수집 등	출입국· 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10. 31.	■ 「2023년도 인신매매 방지 관련 교육」 개최 - 장소 :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 및 '고충상담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 등 46명 - 교육내용 : △ 인신매매 등의 유형 및 특징 △ 인신매매 등 범죄의 주요 내용 △ 인신매매 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 △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 등	외국인 정책과

1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1.	■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 임명 - 대상자 : 우병렬(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외국인 정책과
11. 3.	■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 브리핑 - 발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내용 : 최근 태국인 입국불허 언론보도 관련 입국심사 및 태국인 불법체류 현황, 국경관리 필요성 등 법무부 입장 설명	출입국 심사과
11. 3.	■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1. 3.(금) 10: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정인섭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 및 본부장, 인권국장 - 안건 :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추진(안), 취업비자 총량제 등 외국인력 도입 분야·규모 결정 체계 개선방안	출입국· 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11. 8.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보고 - 개요 : '23. 3. 10. ~ '23. 11. 5.(약 8개월)간 진행된 종합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른 완료 보고 - 주요 내용 : 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Open API 기능 구현 ② 주요 연계데이터 표준화 개선 ③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1. 13.~ 11. 14.	■ 2023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 개최 - 일자, 장소 : 11. 13.(월) ~ 14.(화), 영종도 - 참석 - (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출입국심사과장 등 - (소속기관) 출입국 심사과장(출장소장) 및 과제 발표자 등 - 내용 : 공항만 소속기관에서 출입국·선박심사 7개 연구과제 분야에 제출한 과제 중 본선 발표과제로 선정된 과제 발표 및 토론	출입국 심사과
11. 14.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절차 안내 등 협조 요청 - 배경 :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의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 - 내용 :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체류지 변경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에 외국인의 신고 의무 전파	이 민 정보과
11. 17.	■ 2023년도 제6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1. 17.(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11. 16.	■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관원 대상 간담회 실시 - 일시, 장소 : 11. 16.(목) 12:00, 광화문 인근 - 참석 - (우리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주무관 및 이민특수조사대 사무관, 주무관 등 6명 - (공관원) 영사, 노무관 등 4명 - 내용 : 불법체류 감축 협력 방안, 자진출국제도 홍보, 출입국관리분야 협력관계 구축 등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20.~ 11. 24.	■ 2023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중앙협의회」 개최 • 방식 : 서면회의 • 내용 :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	이 민 통합과
11. 22.~ 11. 24	■ 제22기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 운영 • 기간, 장소 : 11. 22.(수) ~ 11. 24.(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 • 과목 : 외국인정책, 이민통합정책, 사증·체류관리, 국적,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아시아의 국제이주동향 등	이 민 통합과
11. 23.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 CBT 센터 개소 •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평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전(중부권)에 상설 평가장인 CBT 센터 추가 개소	이 민 통합과
11. 24.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 지역 이민정책 연구기반 확충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 광역지자체(12개), 지역연구원(31개) 등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 일시, 장소 : 11. 24.(금) 14: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주재), 외국인정책과장 등 - (지자체) 총 12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 - (연구진)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지역연구기관(31개) • 내용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외국인 정책과
11. 27.	■ 제26회 정책발표회 개최 • 목적 : 직원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발굴 창구 마련을 통한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 기여 • 일시, 장소 : 11. 27.(월) 09: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정책과장, 본부 각과 사무관, 본선과제 제안자 10명 등 • 개최결과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정책제안상 4명	외국인 정책과
11. 29.	■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부대표(Kelly Clements) 면담 • 일시, 장소 : 11. 29.(수) 14:00, 법무부 중회의실 • 내용 : 법무부-유엔난민기구간 난민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난 민 정책과
11. 30.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사업 추진 완료 • 사업명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 사업기간 : '23. 7. 28. ~ 11. 30. • 주요내용 - 난민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등 38건을 한국어로 번역·감수 (예산 : 192백만원)	난 민 심의과

1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	■ 2025년도 정보화사업 소요예산 계획서 제출 지시(알림) - 주요내용 - 기재부에 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정보화 예산 소요가 필요한 본부 각과 및 청(소)에 사업계획서 제출 지시(알림)	이 민 정보과
12. 4.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운영 개시 - 내용 : 철장을 제거하고 인터넷 PC 사용 공간 마련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	이 민 조사과
12. 5.	■ 「제3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참석 - 참석 - (정부위원) 외교부 장관(주재), 법무·기재·행안부 등 차관급 - (민간위원) 학계 인사 및 현장 전문가 등 ※ 우리부 출입국정책담당장 참석 - 내용 : '2023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4년 계획(안)' (심의) 및 민관 협업 증진 발굴, 해외안전여행 홍보 (토의) 등	출입국 심사과
12. 7.	■ 관계기관 대상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설명회 개최 - 일시, 장소 : 12. 7.(목) 15:30, 서울남부사무소 대회의실 - 내용 :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 및 주요 외국인 정책기관(고용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실무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요 및 기본인적정보 API 연계 매뉴얼 등 설명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2. 7.	■ 2023년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2. 7.(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총 13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국적과
12. 7.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개정 - 배경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등 현행화 - 내용 : 2인 가구 기준, 기존 연소득 약 2,073만원에서 중위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약 2,209만원으로 소득요건 개정	이 민 통합과
12. 7.~ 12. 8.	■ 제6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자, 장소 : 12. 7.(목) ~ 12. 8.(금), 서울글로벌센터 교육장 - 참석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등 32명 - 내용 : 출입국행 난민회부 절차 및 심사, 전문가 초청 강연	난 민 정책과
12. 8.	■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 주요내용 -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정식사업 희망 지자체 공모	체 류 관리과
12. 11.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종합 설명회 참석 - 일시, 장소 : 12. 11.(월) 10:00,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내용 : 개보위가 9월 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중 ①개인정보 처리 일반 및 처리방침 평가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정조치 기준 등 세부 설명 진행	이 민 정보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1.	■ 난민영주 취득요건 완화 관련 고시 및 시행 • 내용 : 참전용사 후손 및 참전국 국민으로 확인되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가재정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요건 일부 완화	난 민 정책과
12. 13.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내용 :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난민법에 명시 ※ 입법예고 기간 : '23. 12. 13. ~ '24. 1. 3.	난 민 정책과
12. 14.	■ 특별자진출국제도 연장 • 내용 : '23. 12.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연장 시행(~'24. 2. 29.)	이 민 조사과
12. 14.	■ 「출입국관리법」 등 시행 •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모바일거소신고증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명시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거소이전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사유 추가 등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한 간소화된 거소이전신고서 서식 마련 등	외국인 정책과
12. 14.~ 12. 15.	■ 2023년도 국적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일자, 장소 : 12. 14.(목) ~ 15.(금), 포포인츠바이셰라톤조선 서울역 • 참석 : 국적과장 및 각 소속기관 국적 담당자 등 총 30명 • 내용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공유, 온라인 국적민원신청시스템 추진 경과 등 발표 및 토의	국적과
12. 15.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 주요내용 - 전국 131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9,286명 배정	체 류 관리과
12. 18.	■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 운영 개시 • 배경 : 한·중 국제여객선 재개로 출입국자 증가에 따라, 승객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무역상에 대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내용 : 평택항만으로 출입국하는 소무역상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 하에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시범 운영 ※ 시범 운영기간 : '23. 12. 18. ~ '24. 6. 30.	출입국 심사과
12. 18.	■ '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 대상 : 2만 5천명(1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 최근 5년 이내 귀화자) ※ 법무부-통계청 협업으로 실시('23년 예산 : 16억 8,900만원)	외국인 정책과
12. 19.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개정 • 배경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변동사항 반영 필요 • 내용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별 혼인·이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수 대상 국가 지정	이 민 통합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20.	■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참석 - 참석 : 국무총리(위원장), 문체·법무·기재·외교부 등 관계부처, 강원도지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위촉직 민간위원 등 ※ 우리부 출입국정책담당장 참석 - 내용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심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현황 및 대회시설 설치·이용계획(보고·심의) 등	출입국 심사과
12. 20.	■ 난민인정 심사 화상면접 시범 운영 실시 - 내용 :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 시범 운영기간 : '23. 12. 20. ~ '24. 4. 30.	난 민 정책과
12. 22.	■ 제27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 위원장 : 국무총리 - 기간, 방식 : 12. 22.(금) ~ 12. 27.(수), 서면회의 - 안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 202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 ('23. 12. 15. ~ '23. 12. 20.) 제32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12. 27.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확정 - 주요내용(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 목표) ①경제, ②안전, ③통합, ④인권, ⑤협력/인프라 - (중점 과제)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등 18개	외국인 정책과
12. 27.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내용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준법 사항 안내를 위한 서식 개선	난 민 정책과
12. 31.	■ 이민자·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배포 - 내용 :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인 대상 기초 법·질서 및 마약예방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영상출연 등 직접 참여	이 민 통합과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4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법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제1항 법률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

가. 추진배경

-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하므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2023. 1. 10. (조정훈 국회의원) 제안
- 2023. 3. 30. 국회의결
- 2023. 4. 18. 법률 제19355호로 공포
- 2023. 7. 19. 시행

다.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법인격 부여, 수행사업, 국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2015. 1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22. 12. 21. (정점식 국회의원) 제안
- 2023. 5. 25. 국회의결
- 2023. 6. 13. 법률 제19434호로 공포
- 2023. 12. 14.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거주국’)을 삭제

3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2. 12. 21. (정점식 국회의원) 제안
- 2023. 5. 25. 국회의결
- 2023. 6. 13. 법률 제19435호로 공포
- 2023. 12. 14.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

가. 추진배경

-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1. 11. 18. (김영배 국회의원) 제안
- 2023. 10. 6. 국회의결
- 2023. 10. 24. 법률 제19742호로 공포
- 2024. 4. 25.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 지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2항 대통령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부동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계약당사자나 금융기관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0개 금융기관으로 정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
- 출국금지·정지 요청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까지 확대
-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증에 적는 사항 중 거주국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를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한편, 거소를 이전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성별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사유에서 “거주국” 제외, “성별” 추가
- 국내거소 이전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제3항 총리령 및 법무부령

I. 제정

1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신설하고, 회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난민 조사관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난민 전문가를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나. 추진경과

- 2022. 12. 입안 보고
- 2022. 12. 입법 예고
- 2023. 2. 27. 법무부령 제104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위원회 심의 안전을 조사하는 난민조사관의 직급 및 경력 기준 등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난민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난민 전문가를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기반 마련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6. 14. 법무부령 제1052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서식을 정함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근로(E-8) 자격을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6. 30. 법무부령 제105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2호, 106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재발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 간소화된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함
-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정함
-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의 자료 제공의무 범위를 축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4호, 1065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재발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 간소화된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함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것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정함

6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나. 추진경과

- 2023. 12. 27. 법무부령 제10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불법 취업 시 처벌 안내 등(별지 제3호서식)
 -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 ‘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별지 제6호서식)
 -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별지 제22호서식)
 -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항 훈령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320	4. 18.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23. 2. 27. 개정된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민조사관의 필수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예규로 정함	난민 심의과
1470	5. 1.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 난민전문통역인, 소수언어 통역인, 긴급한 필요 등에 따른 당일 섭외 통역인에 대한 통역료 인상	난민 정책과
1478	8. 1.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인권보호관 지정 세부 기준 및 인권침해신고 세부절차등을 규정하고, 물품 소지 제외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이민 조사과

제2항 예규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319	3. 27.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22. 10. 1.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장 격상, 정부위원 참석 인원 감소 및 직급 상향 조정,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근거 마련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등 세부사항을 개정	국적과
1329	11. 10.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국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해 국적심의조사관 직위 도입,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생략 근거 신설, 위원 명단 비공개 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국적과

제3항 주요지시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 11.	2023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 개정 알림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교육 및 평가 일정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2. 15.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제16회 세계인의 날(2023. 5. 19.) 기본계획 시달 및 관서별 자체 행사 계획 보고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3. 30.	이민자·다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배포 및 활용 지시	•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홍보영상을 민원실 등에서 영상 상영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4. 5	2023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알림	• 교육 참여대상에 계절근로자 추가, 중도입국 청소년 참여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4. 20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출입국편의 제공협조 지시	•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5. 1.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 재외동포(F-4) 자격자에 대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낮은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체류 관리과
5. 19.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관련 고시 개정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 변경 및 투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6. 29.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고시명 변경 및 투자금액 상향, 은퇴이민 폐지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7. 3.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알림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대학 유학생 재능능력 심사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8. 22.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소재확인 실태조사 지시	•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신생아 5,183명에 대해 아동 소재·안전 등 확인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조사과
8. 28.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알림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9. 8.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알림	•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C-3-2)의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9. 25.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K-point E74) 시행	•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 및 고용기업 추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체류 관리과
10. 4.	영주(F-5) 및 거주(F-2)자격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 준법시민교육 대상자의 범위반사향의 범위 및 위반기간 명확화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체류 관리과
10. 23.	제10회 한마음 걷기축제 참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 인정 지시	• 한마음 걷기 축제 행사에 참여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1. 8.	기타(G-1) 자격 체류관리 지침개정	• 기타(G-1) 체류자격 지침의 보호일시 대상자를 보호일시해제 업무 처리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체류 관리과
11. 9.	마약류 등 예방교육(시민교육)실시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민교육으로 마약류 등 예방교육 추가 실시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2. 4.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실시 지시(협조)	•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실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2. 7.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알림	•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 변경 등 결혼이민 사증 발급요건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2. 13.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추가 확대 관련 업무 지시	• 출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 확대 시행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2. 14.	난민인정자 영주(F-5-27) 취득 요건 일부 개정 알림	• 난민인정자 중 참전용사 후손 등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일부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난민 정책과



주요 통계

제1절 출입국자 현황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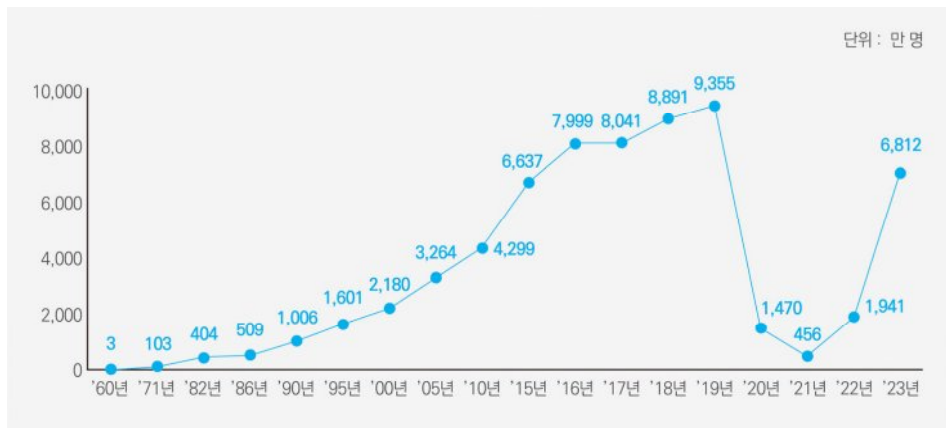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1절

출입국자 현황

1 출입국자 증가 추이



■ 1960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총계	입국			출국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33,984	18,402	9,727	8,675	15,582	7,856	7,726

■ 2023년 출입국자 총괄

(단위 : 명)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총계	68,121,657	34,168,188	33,953,469
소 계	45,423,313	22,667,305	22,756,008
국민	승 객	21,134,530	21,333,549
	승무원	1,532,775	1,422,459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소 계	22,698,344	11,500,883	11,197,461
외국인	21,273,475	10,744,867	10,528,608
승무원	1,424,869	756,016	668,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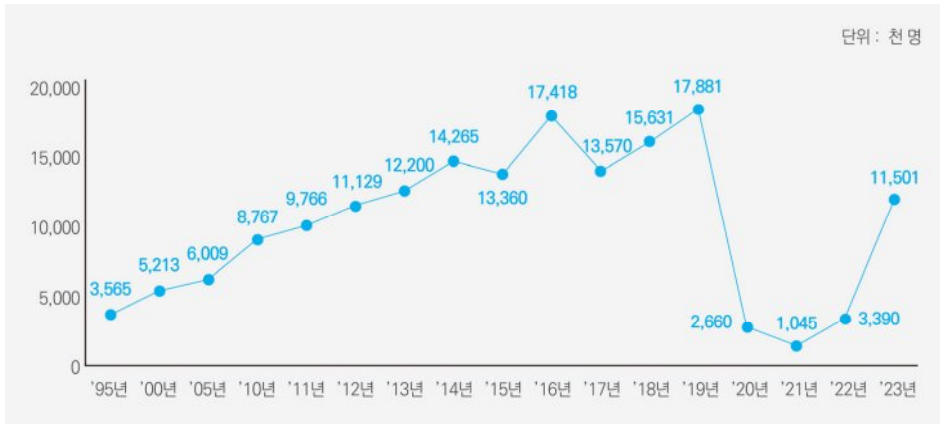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 민	16,372,830	19,580,398	22,659,640	26,765,503	28,945,447	28,905,763	4,301,903	1,234,697	6,580,145	22,756,008
외국인	14,665,282	13,901,391	17,255,769	13,393,163	15,418,228	17,872,201	2,870,505	1,082,631	3,135,053	11,197,461
소 계	31,038,112	33,481,789	39,915,409	40,158,666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33,953,469
국 민	16,349,538	19,531,418	22,654,258	26,679,527	28,914,223	28,889,626	4,869,578	1,197,820	6,309,021	22,667,305
외국인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소 계	30,614,046	32,891,119	40,072,565	40,249,036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34,168,188
출입국자총계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7

2 외국인 입국 현황

■ 외국인 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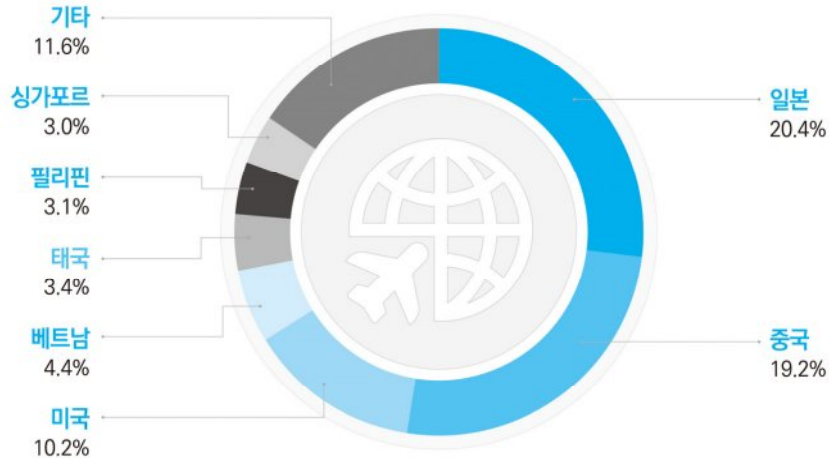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 주요 국가 국민 입국 현황

(2023. 12. 31. 현재)



※ 전년대비 입국자 : 중국 969.7% 증가, 일본 658% 증가, 미국 92.1% 증가, 베트남 110.8% 증가

■ 외국인입국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미 국	1,139,150	265,134	251,203	610,103	1,172,266
중 국 ¹⁾	6,284,486	740,039	187,908	206,883	2,212,966
한국계	1,004,319	132,191	65,929	43,993	255,562
필 리 핀	516,503	120,171	117,316	206,529	356,046
미 안 마	74,243	43,637	57,023	66,301	57,212
인 도 네 시 아	280,146	67,301	46,998	108,178	252,473
러 시 아 (연방)	350,093	75,117	35,235	63,810	165,217
인 도	144,758	34,299	31,633	66,018	124,736
캐 나 다	208,280	35,437	30,201	94,589	205,369
베 트 남	624,640	112,938	25,359	239,269	504,347
독 일	121,989	24,543	20,381	66,002	134,506
일 본	3,303,088	438,708	18,025	309,460	2,345,679

1) 한국계 포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프 랑 스	112,588	19,891	16,195	63,984	135,850
우즈베키스탄	95,634	17,570	16,177	42,314	60,170
우 크 라 이 나	28,360	11,834	14,540	13,779	16,435
네 덜 란 드	39,496	12,636	13,542	25,958	49,736
카 자 흐 스 탄	56,011	11,100	9,504	33,932	51,693
태 국	565,784	580,191	78,878	9,351	185,409
영 국	146,132	21,124	9,337	46,414	124,415
싱 가 포 르	246,736	18,136	7,625	165,713	348,736
몽 골	118,977	22,535	6,511	67,146	141,638
캄 보 디 아	45,713	12,447	5,908	28,164	45,631
타 이 완	1,290,683	171,943	5,779	77,707	978,311
터 키	31,764	6,734	5,505	18,490	32,548
말 레 이 시 아	409,254	48,741	4,596	70,988	261,103
기 타	1,631,588	248,952	98,693	512,869	1,332,515

■ 외국인입국자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총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239.3%
사 증 면 제(B-1)	2,053,173	222,306	19,938	663,699	1,689,221	154.5%
관 광 통 과(B-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5,121,560	441.9%
단 기 방 문(C-3)	5,184,417	503,028	89,288	439,865	1,919,908	336.5%
단 기 취 업(C-4)	24,507	12,750	18,193	21,451	25,009	16.6%
유 학(D-2)	291,007	89,414	53,366	111,101	247,596	122.9%
일 반 연 수(D-4)	84,653	29,048	26,718	41,094	66,384	61.5%
상 사 주 재(D-7)	9,072	2,045	1,044	2,539	5,145	102.6%
기 업 투 자(D-8)	42,442	9,252	4,574	13,009	28,760	121.1%
무 역 경 영(D-9)	8,669	3,169	2,562	3,418	5,792	69.5%
교 수(E-1)	6,904	2,061	964	2,460	4,114	67.2%
회 화 지 도(E-2)	29,115	11,326	5,376	11,868	20,998	76.9%
연 구(E-3)	9,212	2,569	1,618	4,346	6,945	59.8%
기 술 지 도(E-4)	1,577	444	233	461	830	80.0%
전 문 직 업(E-5)	2,526	578	76	358	578	61.5%
예 술 흥 행(E-6)	5,436	1,790	1,934	3,816	7,807	104.6%
특 정 활 동(E-7)	46,475	12,398	5,827	20,099	49,101	1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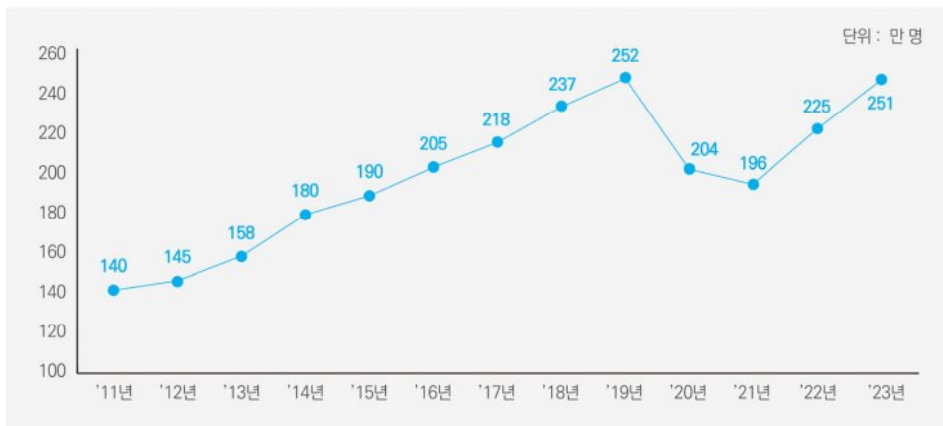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계 철 근 로(E-8)	-	-	565	9,051	30,401	235.9%
비전문취업(E-9)	151,116	41,992	16,732	135,167	168,755	24.8%
선 원 취 업(E-10)	11,634	6,325	4,895	9,329	11,344	21.6%
방 문 동 거(F-1)	97,159	32,329	11,306	46,485	84,677	82.2%
거 주(F-2)	58,425	13,330	3,637	12,238	45,436	271.3%
동 반(F-3)	40,284	13,651	9,254	21,388	34,935	63.3%
재 외 동 포(F-4)	579,522	112,752	64,246	123,610	389,703	215.3%
영 주(F-5)	177,531	34,140	11,644	24,322	136,492	461.2%
결 혼 이 민(F-6)	159,499	46,119	15,504	66,847	151,521	126.7%
방 문 취 업(H-2)	250,655	58,992	53,799	29,480	77,479	162.8%
기 타	1,396,955	458,289	506,223	627,385	1,170,392	86.6%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2022년	2,245,912	1,189,585	499,270	557,057
2023년	2,507,584	1,348,626	533,295	625,663
전년대비 증감률	11.7%	13.4%	6.8%	12.3%
구성비	100%	53.8%	21.3%	25.0%

■ 불법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22년	전 체	411,270	138,013	269,532	3,725
	15~59세	394,817	134,589	258,235	1,993
2023년	전 체	423,675	137,954	283,687	2,034
	15~59세	405,461	134,349	269,907	1,205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3.0% ↑	0.04% ↓	5.3% ↑	45.4% ↓

※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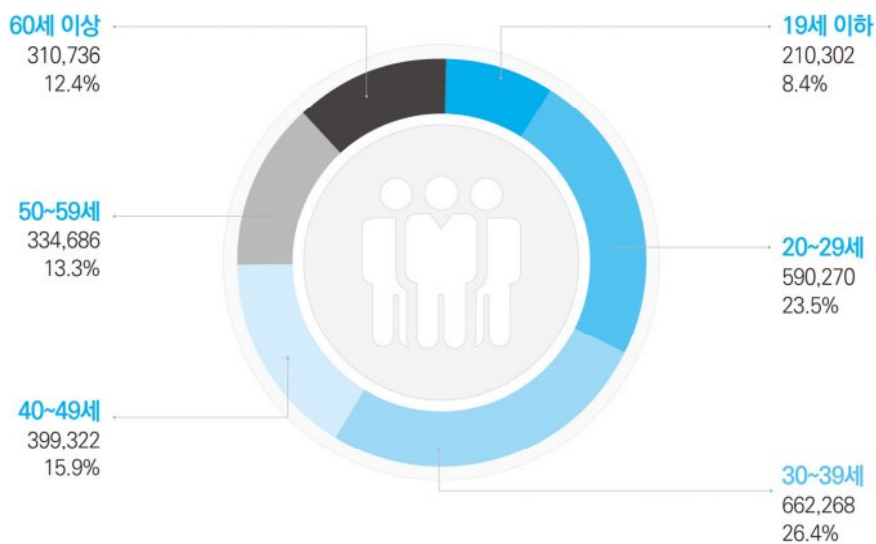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록 외국인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단기체류 외국인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557,057	625,663
거소신고	286,414	324,786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475,945	499,270	533,295
총계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2,507,584
중 국 ²⁾	942,395
한국계	627,450
베 트 남	271,712
태 국	202,121
미 국	161,895
우즈베키스탄	87,698
러시아(연방)	68,075
필리핀	64,055
캄보디아	57,018
몽골	54,846
네 팔	63,369
인도네시아	63,226
카자흐스탄	45,764
일본	58,438
미얀마	42,438
캐나다	27,607
스리랑카	30,370
타이완	33,225
방글라데시	26,636
파키스탄	16,295
인도	15,789
오스트레일리아	18,326
키르기즈	10,135
영국	8,499
기타	137,652

²⁾ 한국계 포함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2,507,584	2,083,909	423,675
사 증 면 제(B-1)	223,851	54,568	169,283
관 광 통 과(B-2)	137,116	116,359	20,757
단 기 방 문(C-3)	176,235	89,168	87,067
단 기 취 업(C-4)	2,196	1,728	468
유 학(D-2)	152,094	142,515	9,579
기 술 연 수(D-3)	1,828	612	1,216
일 반 연 수(D-4)	76,644	50,502	26,142
종 교(D-6)	1,530	1,478	52
상 사 주 재(D-7)	1,128	1,119	9
기 업 투 자(D-8)	7,565	7,418	147
무 역 경 영(D-9)	2,512	2,452	60
교 수(E-1)	1,897	1,896	1
회 화 지 도(E-2)	14,005	13,970	35
연 구(E-3)	3,916	3,909	7
기 술 지 도(E-4)	205	204	1
전 문 직 업(E-5)	223	218	5
예 술 흥 행(E-6)	4,711	3,410	1,301
특 정 활 동(E-7)	44,993	42,199	2,794
계 절 근 로(E-8)	14,143	11,838	2,305
비 전 문 취 업(E-9)	310,825	254,497	56,328
선 원 취 업(E-10)	21,476	11,919	9,557
방 문 동 거(F-1)	112,260	107,790	4,470
거 주(F-2)	53,325	51,763	1,562
동 반(F-3)	30,613	29,990	623
재 외 동 포(F-4)	536,374	534,241	2,133
영 주(F-5)	185,441	185,441	-
결 혼 이 민(F-6)	142,042	138,205	3,837
방 문 취 업(H-2)	103,981	100,901	3,080
기 타	144,455	123,599	20,856

2 등록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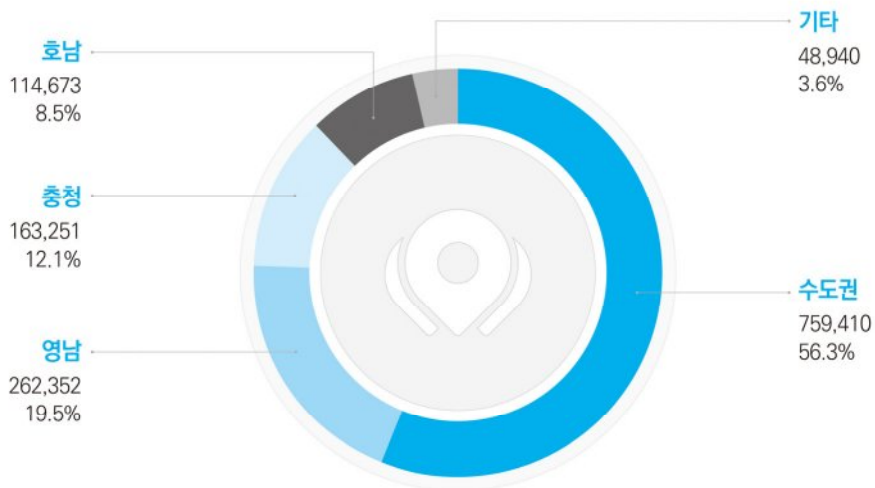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법체류	997,607	1,058,118	1,086,436	1,088,925	1,156,559	1,175,992	1,036,875	968,869	1,051,572	1,210,672
불법체류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138,013	137,954
총계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단위 : 명)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³⁾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425,629	252,765	91,001	81,016	89,312	67,025	49,090	48,866
1,348,626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강원	대전	울산
	49,110	40,215	33,305	25,348	25,456	23,484	23,384	23,620

3) 세종특별자치시 5,786명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 계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1,348,626	1,210,672	137,954
중	국 ⁴⁾	447,534	435,002	12,532
	한국계	242,032	238,042	3,990
베	트 남	227,930	174,839	53,091
우	즈 베 키 스 탄	55,239	49,013	6,226
캄	보 디 아	53,904	43,499	10,405
네	팔	60,663	55,681	4,982
필	리 핀	48,648	40,326	8,322
인	도 네 시 아	50,334	41,227	9,107
태	국	40,062	34,066	5,996
미	국	32,532	32,421	111
미	얀 마	39,630	36,259	3,371
몽	골	32,466	28,127	4,339
일	본	27,381	27,313	68
스	리 랑 카	28,258	23,030	5,228
타	이 완	17,704	17,398	306
방	글 라 데 시	22,939	21,313	1,626
카	자 흐 스 탄	20,203	17,460	2,743
러	시 아 (연방)	21,557	20,130	1,427
인	도	13,443	12,717	726
파	키 스 탄	13,762	12,092	1,670
키	르 기 즈	6,744	6,339	405
영	국	5,258	5,243	15
프	랑 스	5,291	5,279	12
캐	나 다	4,373	4,354	19
기	타	72,771	67,544	5,227

⁴⁾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1,348,626	1,210,672	137,954
문 화 예 술(D-1)	44	43	1
유 학(D-2)	151,483	142,083	9,400
일 반 연 수(D-4)	70,087	44,943	25,144
종 교(D-6)	1,436	1,399	37
상 사 주 재(D-7)	1,098	1,092	6
기 업 투 자(D-8)	7,528	7,386	142
무 역 경 영(D-9)	2,473	2,414	59
교 수(E-1)	1,890	1,889	1
회 화 지 도(E-2)	13,836	13,804	32
연 구(E-3)	3,877	3,870	7
기 술 지 도(E-4)	205	204	1
전 문 직 업(E-5)	223	218	5
예 술 흥 행(E-6)	4,302	3,143	1,159
특 정 활 동(E-7)	44,310	41,712	2,598
계 절 근 로(E-8)	11,941	10,290	1,651
비 전 문 취 업(E-9)	298,504	244,222	54,282
선 원 취 업(E-10)	20,945	11,721	9,224
방 문 동 거(F-1)	109,262	104,957	4,305
거 주(F-2)	53,056	51,494	1,562
동 반(F-3)	29,707	29,124	583
영 주(F-5)	185,213	185,213	-
결 혼 이 민(F-6)	140,161	136,750	3,411
관 광 취 업(H-1)	3,546	3,540	6
방 문 취 업(H-2)	101,434	98,516	2,918
기 타	92,065	70,645	21,420

3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기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법체류	270,906	306,885	303,561	386,113	430,259	415,830	499,703	143,895	124,694	287,525	341,976
불법체류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262,251	269,532	283,687
총계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557,057	625,663



■ 단기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총계			625,663
태	국		162,053
미	국		81,957
중	국 ⁵⁾		118,058
한국계			8,615
베	트	남	43,781
몽		골	22,379
일		본	30,263
필	리	핀	15,394
카	자	호 스 탄	12,368

⁵⁾ 한국계 포함

구분	전체
러 시 아 (연 방)	13,201
오 스 트 레 일 리 아	11,231
인 도 네 시 아	12,642
싱 가 포 르	9,709
말 레 이 시 아	7,863
캐 나 다	5,734
우 즈 베 키 스 탄	5,110
방 글 라 데 시	3,697
캄 보 디 아	3,107
네 팔	2,706
뉴 질 랜 드	2,369
파 키 스 탄	2,533
스 리 랑 카	2,112
기 타	57,396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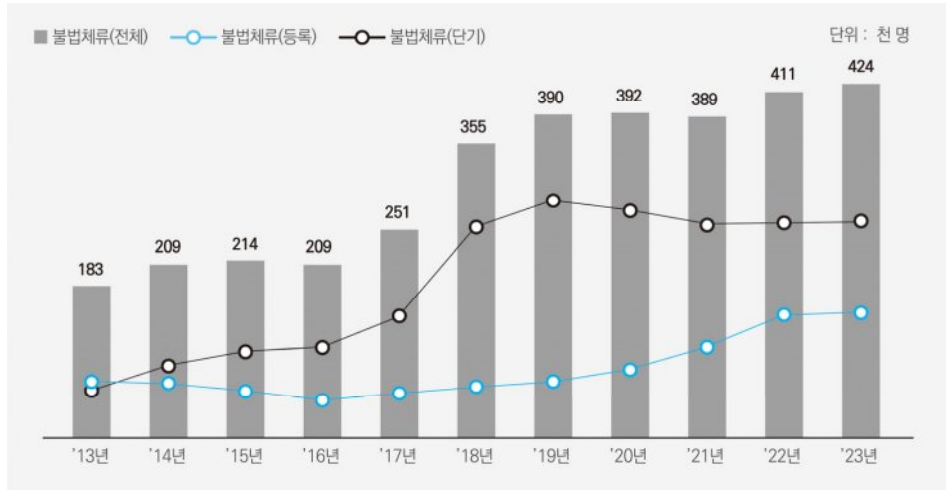
■ 불법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록외국인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138,013	137,954
단기체류 외국인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262,251	269,532	283,687
거소신고	2,066	1,114	941	1,064	1,015	1,316	1,674	1,427	3,725	2,034
총계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90,281	392,196	388,700	411,270	423,675
불법체류율 (%)	11.6	11.3	10.2	11.5	15.0	15.5	19.3	19.9	18.3	16.9

※ 불법체류율 : 총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율

■ 불법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비교



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총계	526,376	450,488	75,888	14.4%
전문인력	72,146	67,534	4,612	6.4%
단순기능인력	450,425	379,155	71,270	15.8%
기타	3,805	3,799	6	0.2%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총계	526,376	450,488	75,888	14.4%
소계	72,146	67,534	4,612	6.4%
단기취업(C-4)	2,196	1,728	468	21.3%
교수(E-1)	1,897	1,896	1	0.1%
회화지도(E-2)	14,005	13,970	35	0.2%
연구(E-3)	3,916	3,909	7	0.2%
기술지도(E-4)	205	204	1	0.5%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단순 기능 인력	전 문 직 업(E-5)	223	218	5	2.2%
	예 술 흥 행(E-6)	4,711	3,410	1,301	27.6%
	특 정 활 동(E-7)	44,993	42,199	2,794	6.2%
	소계	450,425	379,155	71,270	15.8%
	계 절 근 로(E-8)	14,143	11,838	2,305	16.3%
	비 전 문 취 업(E-9)	310,825	254,497	56,328	18.1%
	선 원 취 업(E-10)	21,476	11,919	9,557	44.5%
	방 문 취 업(H-2)	103,981	100,901	3,080	3.0%
	기타 관 광 취 업(H-1)	3,805	3,799	6	0.2%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526,376
중 국 ⁶⁾	101,568
한국계	(88,488)
베 트 남	62,605
네 팔	52,017
인 도 네 시 아	47,868
캄 보 디 아	47,003
필 리 핀	31,672
미 얀 마	30,321
태 국	29,158
스 리 랑 카	25,466
우 즈 베 키 스 탄	24,914
방 글 라 데 시	15,687
미 국	9,031
파 키 스 탄	5,530
카 자 흐 스 탄	5,311
몽 골	5,256
동 티 모 르	3,820
인 도	3,432

6) 한국계 포함

구분	총체류자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3,286
일 본	2,707
영 국	2,703
라 오 스	2,698
키 르 기 즈	2,519
기 타	11,804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298,504	244,222	54,282
소계	293,809	244,120	49,689
제 조 업(E-9-1)	222,904	194,604	28,300
건 설 업(E-9-2)	10,320	6,721	3,599
농 업(E-9-3)	40,377	30,468	9,909
어 업(E-9-4)	19,744	11,918	7,826
서 비 스 업(E-9-5)	464	409	55
기 타 ⁷⁾	4,695	102	4,593

■ 비전문취업(E-9)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총계	298,504
네 팔	45,440
캄 보 디 아	43,623
베 트 남	35,459
인 도 네 시 아	33,238
미 안 마	26,610
타 이	25,802
필 리 핀	24,244
스 리 랑 카	21,146
우 즈 베 키 스 탄	13,102
방 글 라 데 시	12,680

7) 기타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합법조치(E-9-98)

국적	총체류자
파 키 스 탄	4,225
몽 골	4,090
티 모 르 민 주 공 화 국	3,619
라 오 스	1,591
키 르 기 즈	1,484
중 국	1,994
기 타	157

[6] 결혼이민자⁸⁾ 체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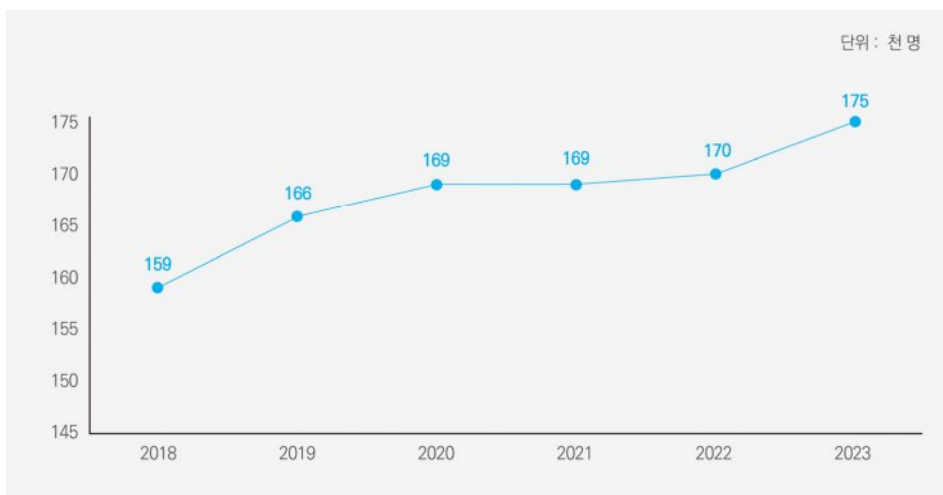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 원	159,206	166,025	168,594	168,611	169,633	174,895
전년대비 증감률	2.4%	4.3%	1.5%	0.0%	0.6%	3.1%

〈참고〉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129,028	135,056	141,773	148,118	154,926	161,357



⁸⁾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등록외국인)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⁹⁾	경북	부산	전남
172,899	53,857	27,799	12,565	10,895	10,194	8,052	7,515	6,777
	전북	충북	대구	강원	광주	울산	대전	제주
	5,992	5,790	5,733	3,989	3,842	3,481	3,394	3,024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¹⁰⁾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기타
전체	174,895	60,048	(21,343)	39,956	15,662	12,557	8,669	5,093	4,794	28,116
남자	34,526	14,039	(8,284)	4,475	1,325	610	140	3,484	788	9,665
여자	140,369	46,009	(13,059)	35,481	14,337	11,947	8,529	1,609	4,006	18,451

※ 여성 80.3%, 남성 19.7%

※ 중국 34.3%, 베트남 22.8%, 일본 9.0%, 필리핀 7.2% 순임

9) 세종특별자치시 883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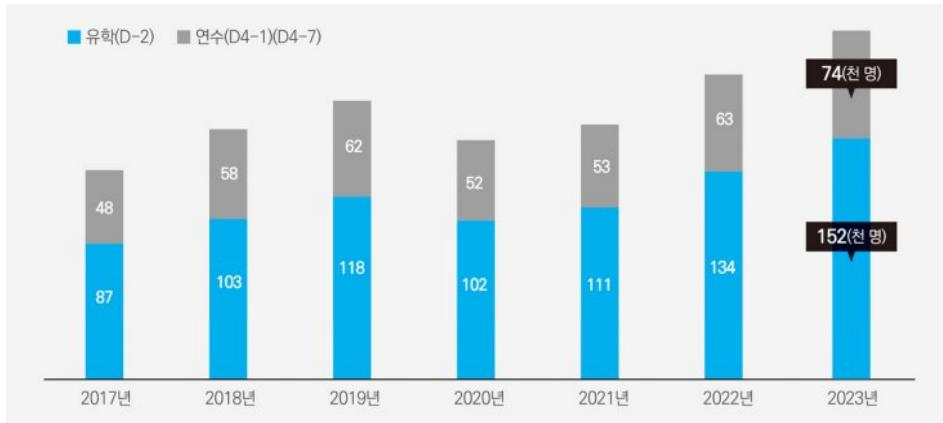
10) 한국계중국인 포함

7 외국인 유학생¹¹⁾ 체류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86,410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226,507
유학(D-2)	61,257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2,094
한국어연수(D-4·1)	25,138	30,017	39,873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63,146	74,361
외국어연수(D-4·7)	15	6	14	4	10	10	6	15	26	52
전년대비증감률	5.6	11.5	20.3	16.5	18.9	12.1%	-14.9%	6.7%	20.5%	14.8%



■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총계	226,507	152,094	74,361	52
베 트 남	80,343	33,797	46,544	2
중 국 ¹²⁾	70,888	63,129	7,759	0
한국계	(356)	(352)	(4)	(0)
몽 골	13,802	7,950	5,852	0
우즈베키스탄	12,530	10,581	1,949	0
미얀마	5,064	1,790	3,274	0

11) 2009년 이전(D-2전체 및 D-4-4), 2010년 이후(D-2전체 및 D-4-1), 2014년 5월 이후(D-2전체 및 D-4-1, D-4-7)

12) 한국계 포함

구분		총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일	본	4,544	2,896	1,648	0
네	팔	4,543	4,251	282	10
인	도 네 시 아	2,511	2,175	336	0
러	시 아(연방)	2,142	1,084	1,058	0
방	글 라 데 시	2,058	1,948	72	38
인	도	1,916	1,658	258	0
프	랑 스	1,882	1,615	267	0
파	키 스 탄	1,690	1,627	63	0
미	국	1,633	1,356	277	0
(타	이 완)	1,538	1,035	503	0
카	자 흐 스 탄	1,349	1,004	344	1
독	일	1,327	1,249	78	0
말	레 이 시 아	1,139	941	198	0
기	타	15,608	12,008	3,599	1

8 체류허가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2023.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1,885,801	2,004,345	1,749,212	1,788,051	2,019,999
기 간 연 장	584,889	1,052,327	728,693	587,287	587,672
자 격 부 여	7,587	10,755	12,622	35,356	7,484
자 격 변 경	123,522	119,463	104,604	121,019	139,417
재 입 국	1,380	41,374	111,320	36,485	816
체 류 지 변 경	657,882	456,788	461,287	563,572	764,439
자 격 외 활 동	19,743	15,109	12,024	9,085	16,820
근무처(장소)변경·추가	52,434	49,853	40,570	45,954	67,556
외 국 인 등 록	294,319	119,085	104,797	207,817	281,509
거 소 신 고	49,003	37,557	55,854	58,625	56,302
등 록 사 항 변 경	95,042	102,034	117,441	122,851	97,984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처리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1	121,225	9,986	29,567	2,922	1,304	77,446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1 국적업무 처리 현황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8년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2019년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년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년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년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년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국가	연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귀화	11,556	9,914	13,885	10,895	10,248	10,346
		회복	2,698	2,443	1,764	2,742	3,043	4,203
중	국	귀화	4,838	4,371	7,932	5,145	4,480	4,904
		회복	144	181	120	185	114	98
베	트	귀화	4,849	3,867	4,076	4,225	4,431	3,807
		회복	45	39	29	14	18	23
필	리	귀화	597	423	375	241	203	243
		회복	7	11	7	25	11	14
몽	골	귀화	99	102	145	103	60	126
		회복	14	6	10	3	6	8
우	즈	귀화	72	78	138	97	119	113
		회복	12	6	8	12	10	13

국가	연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	본	귀화	17	14	15	20	30	29
		회복	53	41	54	86	94	120
태	국	귀화	58	52	68	78	89	110
		회복	5	3	7	6	7	9
파 키 스 탄		귀화	42	48	26	34	26	13
		회복	2	0	0	0	0	0
기	타	귀화	984	959	1,110	952	810	1,001
		회복	2,416	2,156	1,529	2,411	2,783	3,918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총계	상실	이탈
2018년		33,594	26,608 ¹³⁾	6,986 ¹⁴⁾
2019년		24,539	22,078	2,461
2020년		28,685	25,034	3,651
2021년		25,579	21,271	4,308
2022년		28,686	25,425	3,261
2023년		29,302	25,399	3,903

국가	연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상실	26,608	22,078	25,034	21,271	25,425	25,399
		이탈	6,986	2,461	3,651	4,308	3,261	3,903
미	국	상실	13,754	14,109	10,238	10,292	14,955	17,147
		이탈	5,128	1,933	2,961	3,330	2,592	3,115
캐 나 다		상실	3,342	2,807	2,948	4,157	4,489	2,911
		이탈	749	133	144	207	151	219
오스트레일리아		상실	1,911	1,804	1,396	1,238	2,728	2,466
		이탈	219	39	26	80	62	58
일	본	상실	4,998	841	8,832	3,541	724	662
		이탈	609	256	374	464	287	299

13) ('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14)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국가	연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뉴 질 랜 드		상실	686	807	355	584	909	787
		이탈	60	14	36	48	19	42
영 국		상실	366	372	210	191	338	233
		이탈	21	16	14	16	23	15
독 일		상실	289	297	239	270	255	178
		이탈	36	16	17	40	26	46
기 타		상실	1,262	1,041	816	998	1,027	1,015
		이탈	164	54	79	123	101	109

2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구분	연도	총계	'94 ~ '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1차	103,759	15,250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이의 신청	43,413	7,566	5,277	3,723	3,110	4,067	5,954	4,718	3,749	5,249
	소계	93,425	15,356	10,602	9,634	6,879	9,306	11,894	10,979	8,543	10,232
심사 결정	1차	58,482	10,131	6,326	5,219	4,295	5,875	8,102	5,982	5,463	7,089
	이의 신청	34,943	5,225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소계	27,008	2,004	815	1,245	2,412	4,264	6,230	4,003	2,966	3,069
철회*	1차	25,030	1,807	735	1,197	2,305	4,138	5,929	3,693	2,659	2,567
	이의 신청	1,978	197	80	48	107	126	301	310	307	502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3 난민신청 심사결과

구분	연도	총계	'94 ~ '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심사완료		51,991	7,498	5,665	5,874	3,954	5,060	6,236	6,848	4,907	5,949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4,052 (7.8)	1,488 (19.8)	350 (6.2)	437 (7.4)	651 (16.5)	308 (6.1)	223 (3.6)	123 (1.8)	242 (4.9)	230 (3.9)
	인정 (인정률, %)	1,439 (2.8)	580 (7.7)	98 (1.7)	121 (2.1)	144 (3.6)	79 (1.6)	69 (1.1)	72 (1.1)	175 (3.6)	101 (1.7)
	인도적 체류	2,613	908	252	316	507	229	154	51	67	129
불인정		47,939	6,010	5,315	5,437	3,303	4,752	6,013	6,725	4,665	5,719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2건 포함



보도(설명) 자료

2023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월일	주요내용
1. 1.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1. 6.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1. 11.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1. 20.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2. 5.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
2. 9.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2. 21.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2. 26.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3. 2.	모 언론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에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관련
3. 6.	법무부 장관 출장 관련
3. 9.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3. 10.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3. 12.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3. 14.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3. 15.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3. 2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3. 24.	Exemption of Extension of Stay Fees for Ukrainians of Korean Descent
3. 26.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3. 28.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3. 29.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알려드립니다.

월일	주요내용
3. 3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4. 26.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4. 27.	'23. 4. 27. 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관련
4. 28.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5. 1.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5. 3.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5. 4.	한겨레, 「예배당도 급습... 한동훈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인권침해 속출」 기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5. 4.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5. 10.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5. 12.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5. 16.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5. 16.	MOJ Publishes English Version of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ers!
5. 19.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5. 30.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6. 8.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6. 14.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 14.	'23. 6. 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
6. 16.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6. 19.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6. 23.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6. 25.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29.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6. 29.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7. 3.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7. 4.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7. 10.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월일	주요내용
7. 11.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7. 20.	(법무부알림) 한동훈 법무부장관,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
7. 21.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7. 21.	마약(아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7. 24.	KBS의 공황 대기실서 9개월...“난민 심사라도 받고 싶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7. 27.	충청남도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관련
8. 7.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8. 7.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오늘부터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8. 9.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8.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8. 21.	법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8. 23.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8. 24.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9. 8.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9. 11.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9. 15.	9월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9. 15.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vailable to Registered Foreigners Starting from September 18, 2023
9. 25.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10. 5.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10. 30.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11. 3.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11. 6.	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11. 6.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11. 17.	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11. 20.	법무부장관,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면담
11. 21.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월일	주요내용
11. 21.	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11. 24.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11. 24.	법무부장관, 울산 지역 정책현장 방문
11. 24.	Minister of Justice visits Ulsan to hear voices of the field
12. 1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 14.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12. 14.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12. 28.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12. 28.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12. 29.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12. 2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12. 29.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23. 1. 1.)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법치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1. (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21)	
		담당자	사무관	정금실 (02-2110-4131)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 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우수인재 특별귀화)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23. 1. 6.)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법치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6. (금)		
담당 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박지현 (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여수향 (044-203-4332)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 현황

○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 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조선협회)

* 국내수주량(만CGT): ('19) 1,006 → ('20) 827 → ('21) 1,746 → ('22) 1,559
* 고부가(58%)·신환경(50%) 선박 시장점유율 1위

○ 민간 적도입이 시행된 '22.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하였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

■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3. 1. 11.)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11. (수)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기흠 (02-2110-4155)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2-2110-4178)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 영어에서 아랍어, 스와힐리어까지,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심사 공정성을 높인다 -

□ 1월 11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합니다.

■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23. 1. 20.)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1. 20. (금)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대우 02-2110-4090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2110-4091	

2022년 출입국자 전년대비 326% 증가
-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과 베트남 -

○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2022년 출입국자가 전년대비 326% 증가 하였습니다.

- 2021년 총 출입국자가 4,559,693명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9,414,228명으로 증가하였고,

- 내국인 출입국자는 12,889,166명(입국 6,309,021명, 출국 6,580,145명), 외국인 출입국자는 6,525,062명(입국 3,390,009명, 출국 3,135,053명)으로

■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23. 2. 5.)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2. 5.(일)		
담당 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원종필 (044-203-4336)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

- 2월까지 외국인력 총 2천여 명 조선업 현장배치 예정

- 조선용접공 경력증명 한시적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

-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 추진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23. 2. 9.)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2. 9.(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재완 02-2110-4075	
		담당자	사무관	이성호 02-2110-4079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튀르키예,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

○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합니다.

○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23. 2. 21.)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2. 21.(화)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원종필 (044-203-4336)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 20개 조선사, 외국인 유학생 직접 찾아가 채용 상담도 실시 -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였다.

■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3. 2. 26.)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2. 26.(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박재완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전동균 (02-2110-4082)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 법무부는 지난해 제정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23. 3. 2.(목) ~ 4. 30.(일), 2개월간

■ 모 언론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에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관련(‘23. 3. 2.)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모 언론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에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전일(2. 28.) 징집을 거부하여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러시아인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들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이동시켜 항후 소송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은 ▲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며, ▲ 항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 출입국항의 난민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되어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장관 출장 관련(‘23. 3. 6.)

[법무부장관 출장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들께 보고드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출장 기간(한국시각 기준) : 3. 7.(화) ~ 3. 15.(수)
- 주요 일정 (현지시각 기준)
 - 3. 8.(수)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및 이민통합청 (파리)
 - 3. 9.(목)~10.(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및 이민귀화청 (헤이그)
 - 3. 13.(월)~14.(화) 독일 연방내무부 (베를린), 연방이민난민청 (뉘른베르크)
 - ※ 현지 상황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23. 3. 9.)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 3. 8.(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넵(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넵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측 참석자

1. 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2. Anne-Lise BAGREL, 장관 외교 고문

■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23. 3. 10.)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피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하였습니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 딜란 예실피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임
- 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피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무안전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롬 하위저(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법무안전부 주요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참석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23. 3. 12.)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하였습니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임

○ 오늘 회담에는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 외에도 에우케 파버(Eeuwke Faber) 국제이민 담당 부차관보, 카린 모젠레크너(Karin Mössenlechner) 네덜란드 외교부 아태국장 등 법무안전부 및 외교부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23. 3. 14.)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하여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하였습니다.

* 연방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하여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 실시

○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불법체류 업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양국 회담에는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 외에도 미하일 니마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23. 3. 15.)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달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 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 책임자들은 세계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23. 3. 24.)

 법무부		보도자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3. 24.(금)	
담당 부서 <총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장	김태형 (02-2110-4055)
	세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2110-4065)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 Exemption of Extension of Stay Fees for Ukrainians of Korean Descent('23. 3. 24.)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		정의와 상식의 법치
Embargo	March 26 (Sun.) 2023	Release Date	March 24 (Fri.) 2023	
Division in Charge	Visa and Residence Korea Immigration Service	Point of Contact	Director Kim Tae-hyung (02-2110-4058) Deputy Director Park Jeong-seok (02-2110-4100)	

Exemption of Extension of Stay Fees for Ukrainians of Korean Descent

☐ The Ministry of Justice (MOJ) has decided to waive fees to extend stay for Ukrainia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until the Ukraine war comes to an end in an effort to support their livelihood in Korea as the war continues to prolong in Ukraine. ☐ The Ministry has also been implementing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support of Ukrainian nationals of Korean ancestry (Koryoin). ○ Supported their entry into Korea by simplifying the visa issuance process including waiving the required documents (as of March 8,
--

■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23. 3. 26.)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3. 26.(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58)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2110-4100)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하였고('22.3.8.), ○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

-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23. 3. 28.)

법무부

보 도 자 료

**정의와
상식의 법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3. 3. 28.(화)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대우 (02-2110-4090)
	이민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2110-4091)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 컬러사진 인쇄, 사진크기 확대, 규알(QR) 코드 추가 등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

□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 4. 1.부터 발급합니다.

○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 5. 1.부터 발급)이 주된 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

-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알려드립니다.(‘23. 3. 29.)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하였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 :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768명)
- 따라서 해당 월(2월) 입국자 통계에서 결혼이민 자격 남성 중 베트남인이 많다고 해서 국제결혼 1위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통계 해석입니다. 베트남 남성에게 발급된 결혼이민 비자 건수는 올해 1월 27건, 2월 30건이며,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규 외국인등록한 베트남 남성 결혼이민자는 1월 12명, 2월 12명입니다.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인구동태통계연보 중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경우 최근 3년간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순입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23. 3. 3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평화한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3. 31.(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을 통한
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토크(Talk Talk)!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345콜센터는 2008년 3월 31일 개소 당시, 상담원 56명으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현재 108명의 상담원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활·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20개 언어로

■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23. 4. 26.)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평화한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4. 26.(수)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 오는 5월부터 조선업체 근무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시범 실시 -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 '23. 4. 27. 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관련('23. 4. 27.)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불법체류외국인(남, 28세)이 2023. 4. 27.(목) 00:44경 도주하였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서부경찰서, 완도경찰서 등 경찰과 출입국 합동 검거반이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4. 27.(목) 08:58경 완도경찰서에서 도주자를 검거하였으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23. 4. 28.)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 우리!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4. 28.(금)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 '23. 3. 29.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포함

□ 이밖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입니다. (각 제도별 세부 안내는 붙임자료 참조)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23. 5. 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1.(월)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23. 5. 3.)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3.(수)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 ①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13명 적발
- ② 단속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 자진출국

□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 한겨레, 「예배당도 급습... 한동훈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인권침해 속출」 기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23. 5. 4.)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4.(목)

한겨레 '예배당도 급습... 한동훈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인권침해 속출' 기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위 기사에서 '네팔인 트씨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밤새 울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튿날에야 병원에 데려갔으며, 의료진의 수술 필요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강제출국되었고, 비용도 함께 불합한 동료에게 청구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즉, 네팔인 트씨는 ▲2016. 1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고 약 4년 6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2023. 3. 8. 충남 아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취업

-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23. 5. 4.)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4.(목)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23. 5. 10.)


법무부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과
새로운 국정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10.(수)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23. 5. 12.)


법무부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과
새로운 국정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12.(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금)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 15.(수)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매년 전세계 공항의 출입국서비스 등 평가

□ 이번 인천국제공항 방문은 2023년을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엄정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23. 5. 16.)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나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16.(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 -

법무부는 2023. 5. 16.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합니다.

※ 비자 내비게이터 ‘한글판’은 ‘22. 12. 29. 배포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 MOJ Publishes English Version of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ers!(‘23. 5. 16.)


법무부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Release Date 2023.5.16. (Tue)

**MOJ Publishes English Version of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ers!**
 - Better Access to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Expected -

The Ministry of Justice (MOJ) has published and released an English version of ‘Customized Stay Guide for Foreign 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sa Navigator’) on May 16, 2023, in the form of e-book, which is a guidebook containing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better servic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nation.

※ Korean version of the Visa Navigator was released on December 29, 2022

The Visa Navigator details types of visas (37 categories), scope of employment, process of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status (F-5) from initial stay, how to use e-Application servic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and obligations for foreigners under the nation’s Immigration Act. All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access to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staying in Korea.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3. 5. 19.)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나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19.(금)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 비전 제시 -

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2008년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규정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23. 5. 3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나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30.(화)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과중·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은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3. 6. 8.)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나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8.(목)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

□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6월 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23. 6. 14.)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나와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14.(수)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 '23. 6. 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23. 6. 14.)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연하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18일 후 비로소 출국('23. 4. 20.)하였습니다.
- 우선, 「아동 보호 경위」 관련하여, 대상자는 아동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고, 지인에게 맡겨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인에게 수차례 그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이후 대상자의 동의하에 관련 규정(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의 위탁 교육 기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보호 환경」 관련하여, 보호시설 입소 당시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지하에 있는) 임시격리시설에서 3일 간의 격리기간 경과 후 자상에 있는 채광·환기가 가능한 정규 보호시설로 이동하였고, 아동에게 아동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용 그림책 제공, 휴대폰 소지 허용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청문도 없는 반지하 보호실 구금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아동 건강」 관련하여, 요청에 따라 3회 외부 병원진료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어 관련 규정상 보호일시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해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아동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일시해제를 불허한 것처럼 기재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강제 퇴거 경위」 관련하여, 대상자는 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여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하였고, 대상자의 인권위 진정 전에 이미 해당국 주한 공관과 협의하여 여권발급 등 강제퇴거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강제 퇴거를 집행한 것입니다. [마치 대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이 사실을 알고 강제퇴거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것처럼 기재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23. 6. 16.)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16.(금)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차원

○ 법무부는 오늘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습니다.

○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23. 6. 19.)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다시 대한민국!
서로호응 국민의 나라

2023. 6. 19.(일)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가용 심사인력 집중 투입
- 입국 승객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장 탄력 운영 등
-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백만명으로,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약 64% 수준에 해당하고, 전년 대비는 약 740% 증가

□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23. 6. 23.)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다시 대한민국!
서로호응 국민의 나라

2023. 6. 23.(금)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3.7.3.)

○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 첫째,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정

■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23. 6. 25.)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아너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25.(일)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 '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완료,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 추진

□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합니다.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23. 6. 29.)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이 아너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29.(목)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

-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23. 6. 29.)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6. 29.(목)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

일반투자이민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	---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23. 7. 3.)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3.(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 조영태 교수,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23. 7. 4.)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4.(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 법무부, 국제기구와 손잡고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 노력

- 총 2개의 장(761개 용어)으로 구성, 용어 설명과 국제법 해설도 함께 제공

□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23. 7. 4.(화), 15:00, 법무부 7층 중회의실)

※ 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함

□ 이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범용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23. 7. 1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간담회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 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만 삼천여 명(협력업체 약 9천4백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 차지

□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하였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23. 7. 11.)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11.(화)

다시 돌아오세요!
서로 국민의 아끼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 11.(화)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오늘 면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 (법무부알림) 한동훈 법무부장관,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23. 7. 20.)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7. 20) 15:30 정부과천청사에서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하였습니다.

※ 일본은 2019. 4.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신설했고, 키쿠치 히로시 現출입국재류관리청장은 제2대 청장('22. 8.~)입니다. (별첨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등)

○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한·일 양국의 공통되는 도전과 위기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출입국·이민정책에 있어 비슷한 국민정서를 가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배석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정책과 조정관 타나카 노부코 등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23. 7. 2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21.(금)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음

■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23. 7. 2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21.(금)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바)*을 투약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 합동단속 과정에서 상기인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기인을

- KBS의 공항 대기실서 9개월...“난민 심사라도 받고 싶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3. 7. 24.)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국민의 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7. 24.(월)

**KBS의 「공항 대기실서 9개월... “난민 심사라도 받고 싶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어제 자(7. 23.) KBS 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현행 난민법령에 따르면, 입국과정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공항 난민신청자의 약 60%는 본안심사에 회부되고 입국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 제도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이 입국심사 및 국경관리와 연계 되기 때문에 국익과 인도주의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난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이며, 보도된 L씨는 이러한 현행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된 것입니다.
- 현재 L씨는 공항 출국대기실 및 환송구역에서 생활 중이며 숙식이

- 충청남도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관련(‘23. 7. 27.)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7월 25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결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에서 검색 가능

■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23. 8. 7.)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7.(월)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완도군 어가(漁家) 고용주 A,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5명에게 임금체불, 폭언·폭행

○ 법무부는 '23. 6.13.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오늘부터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23. 8. 7.)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7.(월)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오늘부터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 법무부는 8. 7.(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붙임 2)

■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23. 8. 9.)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서로와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9.(수)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515시간)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23. 8. 1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서로와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11.(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서기관(4급) 전보 (14명)

신 임 직	성 명	현 직
법무부 (주로스앤셀레스총영사관)	박 제 성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법무부 (주청다오총영사관 : '23.08.25.부)	이 대 우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 법무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3. 8. 21.)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인권보호
새로운 국정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21.(월)

**법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원정보 불일치			중요 공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불일치	
 홍대이비드 HONG DAVID	A 기관 홍대이비드	B 기관 홍대이비드	 주민등록표(종본) KIM DAVID GILDONG	 가족관계증명서 김대이비드길동

-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23. 8. 23.)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인권보호
새로운 국정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23.(수)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 자진출국

②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 법무부는 2023. 6. 12. ~ 7. 31.(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23. 8. 24.)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8. 24.(목)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23. 9. 8.)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9. 8.(금)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23. 9. 1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평화민국!
새로운 국면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9. 11.(월)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 계절근로자 전년 동기 대비 입국 3.5배 증가, 이탈률 1/9로 감소 -

□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6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

■ 9월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23. 9. 15.)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평화민국!
새로운 국면의 시작*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9. 15.(금)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18일(월) 시작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vailable to Registered Foreigners Starting from September 18, 2023('23. 9. 15.)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왔다

Embargo & Release Date: Friday, September 15, 2023 (for immediate release)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vailable to Registered Foreigners Starting from September 18, 2023
 - Implementation of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s implementing the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from September 18, making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ccessible for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in collabo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In case a registered foreigner needs to carry out identification verification with his/her residence card when using a mobile app for banking services, the registered foreigner may submit the

-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23. 9. 25.)



법무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왔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9.25.(월)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 부여)

□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3. 10. 5.)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0. 5.(목)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 -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23. 10. 30.)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10.30.(월)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① 법무부-전라북도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 체결 ② 완주군 스마트팜 계절근로 현장 점검

□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 10월 30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23. 11. 3.)

법무부

보도자료

발행처는 법무
부 관할한 국문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3. (금)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 방문 금지, 간간한 입국심사 탓”, “한국여행 가지말자, 입국되짜 급증에 태국인들 화났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태국과 1981년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23. 11. 6.)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금일(11. 6.) 15:00 법무부에서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과 면담하였습니다.
- 오늘 면담은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몰타를 방문한 데 이어 몰타 외교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성사되었습니다.
- 양측은 양국 간 우수한 청년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출입국관리·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석 인사
 - (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몰타측) 외교부장관, 외교부 정무국장·경제국장 등

■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23. 11. 6.)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6.(월)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 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14,000명) 이상 총원 완료 -
- 향후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총력 -

정부(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총원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하였다.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23년 108.8억원) :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금 지원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

■ 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23. 11. 1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17.(금)

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 17.(금)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 법무부장관,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면담('23. 11. 20.)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면담

- 법무부장관은 금일(11.20.)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이 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 참석인사
 -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하용국 외국인정책과장
 -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 손흥기 부원장

■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23. 11. 21.)


법무부
보도자료

발췌하는 정부
다 읽으면 국면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21.(화)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 중부 이남 지역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 기대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11. 21.(화) 11:2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평가 수탁기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0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임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은

■ 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23. 11. 21.)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안전한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11.21.(화)

**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21.(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23. 11. 24.)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안전한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24.(금)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에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 등 총 46개 기관 참여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계 협업 중요성 강조

법무부는 2023년 11월 24일 (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입니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 울산 지역 정책현장 방문('23. 11. 24.)


법무부

보도자료

될 말하는 정부
다 알만한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1. 24. (금)

법무부장관, 울산 지역 정책현장 방문
 ① HD현대중공업 방문 시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
 ② 울산과학기술원(UN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 간담회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오늘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하였습니다.

☐ 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

■ Minister of Justice visits Ulsan to hear voices of the field('23. 11. 24.)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

될 말하는 정부
다 알만한 국민

FOR IMMEDIATE RELEASE Friday, November 24, 2023

Minister of Justice visits Ulsan to hear voices of the field
 ① Concern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heard at HD Hyundai Heavy Industries
 ② A meeting with foreig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at UNIST

☐ To better reflect voices from the field in immigration policies, Minister Han Dong Hoon paid a visit to Jeonbuk on October 30th, Daegu on November 17th, and HD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today.

☐ Today's visit to HD Hyundai Heavy Industries was Minister Han's second visit to a shipyard, following his visit to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in Yeongam, Jeollanam-do last July. During his visit today, he took a tour around the shipbuilding site and held a meeting with officials from the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 12. 12.)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다 편안함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12. (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를 난민 불인정 -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23. 12. 14.)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다 편안함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14 (목)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①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024. 2월 말까지 연장 시행

② 불법체류 단속인력 88명 증원, 불법체류 감소정책 지속 추진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23. 12. 14.)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서점 배포 즉시 보도

일 줄하는 정부
더 안전한 국민

배포 2023. 12. 14.(목)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이민정책 논의 -

□ 법무부는 '23. 12.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입니다.

○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23. 12. 28.)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서점 배포 즉시 보도

일 줄하는 정부
더 안전한 국민

배포 2023.12.28.(목)

[2023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 금년 6월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혜택을 받은 계절근로자 8,940명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체류기간연장으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

□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23. 12. 28.)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안전한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28.(목)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

□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습니다.

<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기간/방식 : '23.12.22.(금)~27.(수), 서면회의
- 위원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9명), 민간위원(9명) 등 총 29인
- 회의 안건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등 3건

* '21년, '22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함께 심의확정

○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23. 12. 29.)

법무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안전한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29.(금)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23. 12. 29.)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 줄하는 정부
다 환한한 국한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29.(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 법무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 12. 29. 「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23. 12. 29.)

법무부

보도자료

발 줄하는 정부
다 환한한 국한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29.(금)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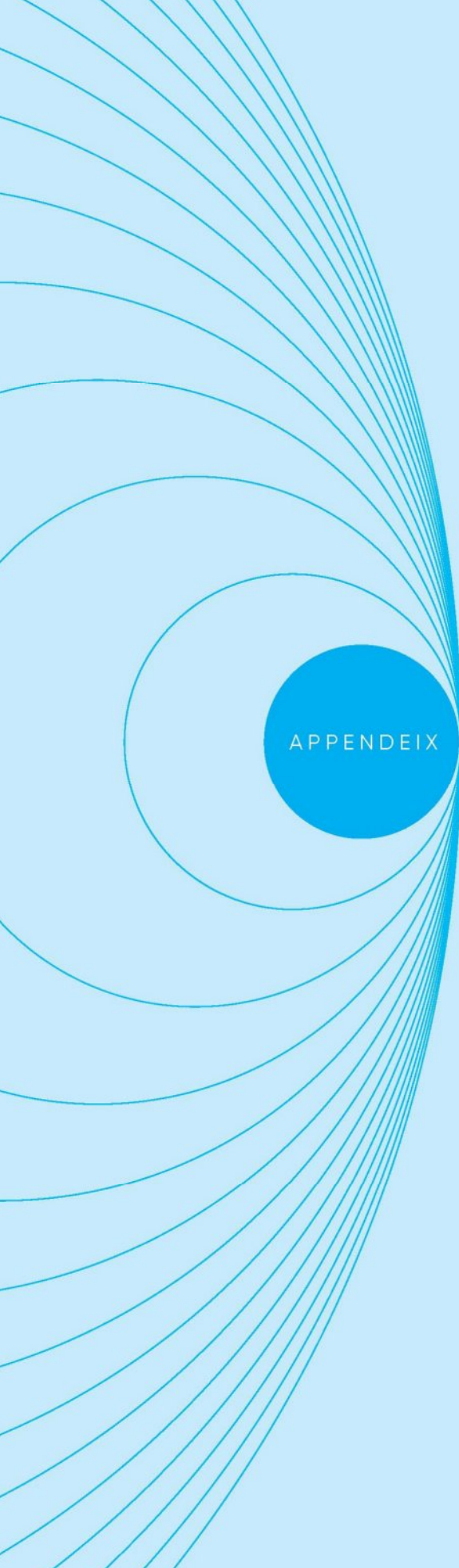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23.12.29.(금) 08:3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신규 송출국 지정 방안」 등

※ 동 회의 직후, '제4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APPENDEIX

부록

- ① 체류자격 일람표
-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 ③ 주요 행사 연설문
-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⑤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 ⑥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 ⑦ 주요 언론보도

부록1

체류자격 일람표

('23. 12. 31.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2. 1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9.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보호(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2022. 12. 27.)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택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5. 동반(F-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삭제 <2022. 12. 27.>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29. 방문취업(H-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삭제 <2022. 12. 27.> 타) 삭제 <2022. 12. 27.>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삭제 <2022. 12. 27.> 거) 삭제 <2022. 12. 27.> 너) 삭제 <2022. 12. 27.> 더) 삭제 <2022. 12. 27.> 러) 삭제 <2022. 12. 27.> 머) 삭제 <2022. 12. 27.> 버) 삭제 <2022. 12. 27.> 서) 삭제 <2022. 12. 27.> 어) 삭제 <2022. 12. 27.> 저) 삭제 <2022. 12. 27.> 처) 삭제 <2022. 12. 27.> 커) 삭제 <2022. 12. 27.> 티) 삭제 <2022. 12. 27.> 피) 삭제 <2022. 12. 27.> 히) 삭제 <2022. 12. 27.> 고) 삭제 <2022. 12. 27.> 노) 삭제 <2022. 12. 27.> 도) 삭제 <2022. 12. 27.> 로) 삭제 <2022. 12. 27.> 모) 삭제 <2022. 12. 27.> 보) 삭제 <2022. 12. 27.> 소) 삭제 <2022. 12. 27.> 오) 삭제 <2022. 12. 27.> 조) 삭제 <2022. 12. 27.> 초) 삭제 <2022. 12. 27.> 코) 삭제 <2022. 12. 27.> 토) 삭제 <2022. 12. 27.> 포) 삭제 <2022. 12. 27.> 호) 삭제 <2022. 12. 27.> 구) 삭제 <2022. 12. 27.> 누) 삭제 <2022. 12. 27.> 두) 삭제 <2022. 12. 27.> 루) 삭제 <2022. 12. 27.>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가) 수도업(36)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마) 수상 운송업(50) 바) 항공 운송업(51)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병창·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자) 우편 및 통신업(61) 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카) 정보서비스업(63) 타) 금융업(64) 파) 보험 및 연금업(65) 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거) 부동산업(68) 네) 연구개발업(70) 더) 전문 서비스업(71) 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바)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어) 교육 서비스업(85) 저) 국제 및 외국기관(99)
30. 기타(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12. 12.〉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중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록2

사증면제협정 현황

('23. 12. 31. 기준)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시 아	라 오 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 레 이 시 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 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 안 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 글 라 데 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 사증면제 일시중지(불체급증 사유)
		선원수첩	15일		
	베 트 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 가 포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 르 메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스 라 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 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인 도 네 시 아	외교, 관용, 공무	30일	'20.02.1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부임 전 사증 취득
	일 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 지 아	외교	30일	'13.04.01.	
		관용	30일	'13.08.18.	
	중 국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키르기즈스탄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 보 디 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쿠 웨 이 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 지 크 스 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 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시 아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튀 르 키 예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외교, 관용	30일 30일	'08.12.06. '19.05.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 키 스 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5.06.08.	※ '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중지(불체급증 사유)
	필 리 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 르 단	외교	90일	'17.0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미 주	카 타 르	외교	제한없음	'22.09.1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특별, 관용, 일반	90일		
	과 테 말 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 레 나 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니 카 라 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 미 니 카 공 화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멕 시 코	일반	3개월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 베 이 도 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 하 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 네 수 엘 라	외교, 관용	30일	'94.11.0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벨 리 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 리 비 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 주	브 라 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아 이 티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유럽주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74.01.24.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럽주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9.19.	○ '18. 4. 60일 → 90일로 변경 ※ 쥬스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포르투갈에서 90일 체류 가능, 포르투갈 정부에서 상호주의 요청하여 변경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아프리카주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반사회 범죄, 불체증가 사유)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프 리 카 주	튀 니 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카 보 베 르 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 잠 비 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 자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에 티 오 피 아	외교, 관용	90일	'23.11.24.	
	적 도 기 니	외교관, 관용, 공무	90일	'22. 9. 22.	
대 양 주	뉴 질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부록3

주요 행사 연설문

“

제16회 세계인 날 기념식

”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올해로 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에
“공감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기념식을 빛내 주신
미얀마 탄신 대사님을 비롯한 각 국의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국제이주기구 스티브 해밀턴 대표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김포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대한민국은
그간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
어느덧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7위 규모의 문화컨텐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었던
제조업 등 주력산업 분야의 부진이
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가 성장동력 상실”, “경제활력 저하”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2023년 4월기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39만명으로,
총 인구의 4.7%에 달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국가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III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세계인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
첨단 과학기술 분야, 미래 신산업 등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정하고 원칙있는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체류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과,
외국인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도
계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과,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V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 봤습니다.

다가 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V

끝으로, 1959년 대한민국에 오신 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소외계층,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신
김추리 여사님을 비롯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외국인 정착지원 유공으로

영예롭게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9.

법무부장관 **한 동 훈**

부록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가. 일반 책자 목록

발간 시기	책자 명
2023. 1.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체류 가이드북
2023. 5.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미담사례집

나. 전문가 연구 보고서 목록 (www.prism.go.kr 참조)

발간 시기	연구 보고서 명	연구자(단체)
2023. 9.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12.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기초1,2) 부교재 및 교안 개발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2023. 1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전달체계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2023. 12.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사)한국조직학회
2023. 12.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12.	지역기반 비자 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2023. 12.	해외 난민 불복심사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난민 불복심사·판결례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록5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23. 12. 31. 현재)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신설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錫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熺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曹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중(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량(兪炳亮)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駿)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景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일반직

부록6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23. 12. 31. 현재)

가. 본 부

직 위	성명	발령일
본부장	이재유	'21. 7. 2.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2. 9.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석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22. 9.19.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23. 8.17.
체류관리과장	김태형	'23. 2. 8.
이민조사과장	박재완	'21. 8. 9.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23. 8.25.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23. 8.30.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21. 2.26.
국적과장	장희정	'23. 2. 8.
이민통합과장	이승현	'23. 8.17.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23. 8.17.
난민심의과장	이정미	'16. 1.2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고동중	'19. 1. 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임연주	'23. 2. 8.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최준호	'23. 2. 8.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육효재	'22. 1.24.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홍창기	'23. 7. 3.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9. 9.17.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최재원	'22. 7.20.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23. 7. 3.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재원	'23. 7. 3.
체류관리과 사무관	손흥기	'23. 7. 3.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23. 4.11.
이민조사과 사무관	임용성	'21. 8. 9.
이민조사과 사무관	전동균	'22. 1.24.
이민조사과 사무관	이성호	'22. 3.21.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21. 1.7.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22. 1.24.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22. 1.24.

직 위	성명	발령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23. 2. 8.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서석주	'18. 7.23.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박지원	'23. 7. 3.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경수	'23. 7. 3.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20. 1. 1.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23. 2.25.
국적과 사무관	김종승	'22. 7.20.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21. 5. 1.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22.11.14.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23. 7. 3.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22. 7.20.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22. 8.24.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종욱	'22. 1.24.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21. 1. 1.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3. 2.28.
법무부	송소영	'23.12.16.
국무조정실	박주현	'23. 2. 8.
국민통합위원회	류인성	'23. 8.17.
방첩정보공유센터	임은진	'23. 2. 8.
감찰담당관실 사무관	김관영	'22.11.14.
재외동포청(재외동포정책과)	박송배	'23. 6. 5.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김연우	'23. 6. 5.
재외동포청(서비스지원센터)	이운선	'23. 6. 5.
외교부	김형준	'23.10.10.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호	'23. 6. 5.
국가인권위원회	김은호	'23. 2. 8.
KOTRA	오동록	'23. 2.24.
대테러센터	김창규	'23. 2. 8.
산업통상자원부	김기협	'22. 1. 1.
잼버리조직위원회	신하균	'23. 2. 8.

나. 소속기관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청장	김종민	'22. 1. 1.
인천공항 지원국장	이호원	'23. 2. 8.
인천공항 심사1국장	길강묵	'23. 8.17.
인천공항 심사2국장	김태완	'23. 8.17.
인천공항 총무과장	박진수	'23. 2. 8.
인천공항 심사지원과장	(공석)	
인천공항 입국재심1과장	서영균	'22. 7.20.
인천공항 입국재심2과장	이미라	'22. 1.24.
인천공항 심사 1과장	조기수	'23. 2. 8.
인천공항 심사 2과장	권옥례	'23. 2. 8.
인천공항 심사 3과장	김호진	'23. 2. 8.
인천공항 심사 4과장	심미림	'23. 9. 1.
인천공항 심사 5과장	최해원	'23. 7. 3.
인천공항 심사 6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7과장	이종수	'23. 2. 8.
인천공항 심사 8과장	고귀영	'23. 3. 7.
인천공항 심사 9과장	이상배	'23. 2. 8.
인천공항 심사10과장	김택균	'23. 7. 3.
인천공항 심사11과장	천영우	'23.11. 7.
인천공항 심사12과장	주태길	'23. 7. 3.
인천공항 심사13과장	황선주	'23. 7. 3.
인천공항 심사14과장	어원희	'22. 7.20.
인천공항 심사15과장	박정원	'23. 7. 3.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장	최성은	'23. 2. 8.
인천공항 조사과장	박광균	'23. 2. 8.
인천공항 감식과장	김종무	'23. 2. 8.
인천공항 보안관리과장	신한진	'22. 7.20.
인천공항 정보관리과장	김영규	'23. 3.27.
인천공항 서울역소장	정해정	'23. 3. 3.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청장	배상업	'22. 9.19.
서울 총무과장	이한태	'23.11. 7.
서울 관리과장	김세진	'22. 8.21.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장	김홍규	'23. 2. 8.
서울 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2. 7. 1.
서울 국적·통합과장	신안선	'22. 1.24.
서울 난민과장	김준철	'23. 2. 8.
서울 사법과장	이상한	'23. 2. 8.
서울 조사과장	정영부	'23. 2. 8.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배덕환	'23. 7. 3.
서울 사무관	최연준	'22. 7.20.
서울 사무관	안숙향	'22. 7.20.
서울 전자비자센터장	배용호	'22. 1.24.
서울정보화센터사무관	이미애	'22. 9.19.
서울정보화센터사무관	권만희	'23. 3.27.
서울 세종로소장	이호수	'22. 7.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청장	이동휘	'22. 3. 8.
부산 관리과장	김기락	'23. 8.31.
부산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23. 3. 1.
부산 심사과장	김순옥	'23. 2. 8.
부산 조사과장	여옥규	'23. 2. 8.
부산 사무관	주도현	'22. 9.19.
부산이민특수조사대 사무관	우윤희	'23. 2. 8.
부산 김해소장	조재용	'22. 1.24.
부산 감천소장	전성엽	'22. 7.2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청장	(공석)	
인천 관리과장	김기성	'23. 7. 3.
인천 심사과장	김병희	'22. 7.20.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 조사과장	김홍수	'22. 1. 24.
인천 사법과장	박창두	'22. 7. 20.
인천 사무관	박영숙	'23. 7. 3.
인천 사무관	황미숙	'22.11.1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청장	김현채	'23. 2. 8.
수원 관리과장	유현송	'22. 2. 24.
수원 사법과장	조근휘	'23. 7. 3.
수원 조사과장	최진혁	'22. 1. 24.
수원 평택항만소장	윤병승	'23.11. 7.
수원 평택소장	김재석	'21. 8. 9.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청장	(공석)	
제주 관리과장	이은경	'21. 8. 9.
제주 심사과장	박상원	'23. 2. 8.
제주 조사과장	이동용	'23. 7. 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사무소장	문수용	'23. 2. 8.
서울남부 관리과장	소근희	'22. 1. 24.
서울남부 사법과장	이원호	'23. 2. 8.
서울남부 조사과장	김병권	'23. 2. 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사무소장	구본준	'23. 2. 8.
안산 관리과장	백천기	'23. 7. 3.
안산 조사과장	이명표	'22. 3. 21.
안산시흥다문화센터장	주정희	'23. 2. 8.
안산다문화센터장	최은숙	'23. 2. 28.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장	구병모	'23. 2. 8.
김해공항 심사지원과장	조은주	'22. 1. 24.
김해공항 심사과장	정승화	'22. 7. 20.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박민구	'23. 7. 3.
김해공항 정보관리과장	신병묵	'23. 3. 27.

직 위	성명	발령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사무소장	김종복	'22. 1. 1.
대구 관리과장	이성문	'22. 7. 20.
대구 심사과장	전은석	'22. 1. 24.
대구 조사과장	박창현	'23. 2. 8.
대구 구미소장	(공석)	
대구 포항소장	박영신	'22. 1. 24.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사무소장	이종국	'23. 9. 1.
대전 관리과장	최종문	'22. 7. 20.
대전 조사과장	주재봉	'22. 1. 24.
대전 천안소장	최성희	'22. 1. 24.
대전 천안사무관	이동진	'23. 2. 28.
대전 천안사무관	임동규	'23. 7. 3.
대전 서산소장	최인섭	'22. 1. 24.
대전 당진소장	이연주	'23. 9. 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사무소장	임선봉	'22. 7. 20.
여수 관리과장	유용재	'22. 7. 20.
여수 사법과장	신학수	'23. 7. 3.
여수 보호과장	김대중	'23. 2. 8.
여수 의무과장	(공석)	
여수 광양소장	박형술	'22. 1. 2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사무소장	강수근	'22. 1. 1.
양주 관리과장	조승래	'22. 7. 20.
양주 사법과장	김종철	'23. 2. 8.
양주 조사과장	조홍남	'23. 3. 7.
양주 고양소장	(공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사무소장	강대열	'22. 1. 1.
울산 관리과장	김용진	'22. 1. 24.
울산 심사과장	이강록	'23. 2. 8.

직 위	성명	발령일
울산 보호과장	김성	'23. 4.1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 사무소장	이문한	'23. 2. 8.
김포공항 심사과장	김종오	'22. 7.20.
김포공항 K-ETA 센터장	안현숙	'22. 7.2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사무소장	김용규	'23. 8.17.
광주 관리과장	곽범현	'22. 7.20.
광주 조사과장	박인순	'22. 1.24.
광주 목포소장	김윤기	'23. 2. 8.
광주 무안공항소장	박준현	'22. 1.2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사무소장	(공석)	
창원 사무관	성덕재	'23. 2. 8.
창원 사무관	권오인	'22. 7.20.
창원 거제소장	김효수	'22. 7.20.
창원 통영소장	권선희	'22. 7.20.
창원 사천소장	배천기	'23. 2. 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사무소장	권택성	'23. 2. 8.
춘천 사무관	김일곤	'22. 1.24.
춘천 속초소장	김종석	'23. 7. 3.
춘천 동해소장	이대수	'23. 2.10.
춘천 고성소장	김형진	'23. 2.1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사무소장	김진성	'23. 2. 8.
청주 심사과장	강형욱	'22. 9.19.

직 위	성명	발령일
청주 사무관	박성규	'23. 7. 3.
청주 사무관	임휴빈	'23. 2. 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사무소장	강성록	'23. 2. 8.
전주 사무관	정왕교	'23. 7. 3.
전주 사무관	이정민	'23. 2. 8.
전주 군산소장	유심희	'22. 2.12.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보호소장	박찬순	'22. 7.25.
화성보호소 관리과장	하재춘	'22.11.14.
화성보호소 사법과장	백종규	'22.11.14.
화성보호소 보호과장	김두섭	'22.11.14.
화성보호소 의무과장	윤석영	'21. 9.27.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보호소장	나현웅	'23.11. 7.
청주보호소 관리과장	김상희	'23. 3.18.
청주보호소 사법과장	하경석	'22. 1.24.
청주보호소 보호과장	최종원	'23. 2. 8.
청주보호소 의무과장	박은실	'17. 4.2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지원센터장	류재석	'23. 8.16.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조영주	'23.11. 7.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윤병승	'22. 8.30.



07

주요 언론보도

1월

서울경제

2023년 01월 02일 월요일 A08면 경제 금융

과학기술 인재 3년만에 영주권·국적 취득

법무부 “이민 확대” 패스트트랙 시행
KAIST 등 5개 기관 석·박사 대상
연구실적 우수자는 특별귀화 가능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공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고급 외국 인력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1일 국내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5개 기관 소속 석·박사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같은 조건의 외국인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려면 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 귀화 등 4~5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석·박사→거주→영주, 특별 귀화 등 3단계로 줄어들고 취득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우선 총장이 추천하면 국내 취업을 하지 않고도 5년간 체류가 보장되는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연구 경력·실적을 쌓으면서 총 200점 만점 중 90점을 채운 우수 인재는 영주권(F5 비자)을 준다. 인구절벽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방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은 최대 10점의 가점을 제공한다. 우수 논문 게재 등 연구 실적 우수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특별 귀화’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별 귀화의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진석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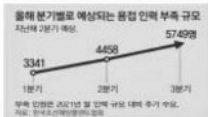
東亞日報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A01면 종합

造船 해외인력 급한데 석달째 “심사”... 총원 3%뿐

(재용 목표 대비)

수주 늘어 외국인 인력 수요 급증
정부 작년 인력확보에 완화했지만
국내 입국 절차에만 수개월 걸려
“용접공 600명 필요, 20명만 채용”



국내 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채용 담당자 A 씨는 다가오는 한 인력 총원 속도에 발을 중중 구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 정부와 조선업 관련 특성활동(OT) 비자 취득을 앞둔 외국인 인력 이 회사에 들어온 외국인 용접공은 20여 명뿐. 회사 측이 지난해 목표에 정한 채용 인원 600명의 3% 수준이다.

조선소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A 씨 회사의 선박(선체) 건조 일정은 이미 한 달 이상 밀렸다. 물리적으로 최종 기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납기 지연금은 상상을 기준으로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수주 호황으로 늘어난 2021년 하반기(7~12월) 확보 물량(선체)이 올해부터 실제 건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A 씨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용접공)을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도 관련 당국

은 석 달째 ‘정밀 중’이란 답변만 한다”고 했다.

4월 조선업체 및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소를 통해 새로 채용된 외국인 용접공은 90여 명이다. 한국조선해양(주)은 지난해 11월 17일 기준 수주 잔량은 3742만 OGT(3.9%) 늘었다. 수주량이 4년 연속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에 머물렀음에도 수주 잔량은 인력 수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생산능력을 넘어선다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조선해양은 “분식기관 플라스티시타에 따르면 2023년 80만 OGT(3.9%)를 생산할

수·200척에 불과하던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량은 2021년 178만 OGT(41%)로 88% 이상 늘었다. 지난해 1~11월 157만 OGT를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주 잔량은 3742만 OGT로 1년 전(2861만 OGT) 대비 781만 OGT(25.9%) 늘었다. 수주량이 4년 연속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에 머물렀음에도 수주 잔량은 인력 수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생산능력을 넘어선다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고가까지 치는 선박이 국내 주력 상품으로

올라가면서 단순 노무(비전문직)·30기 아닌 용접공 등 외국인 기능인력에 대한 입체들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선해양(주)은 지난해 5월 올해 1, 2분기 각각 3841명, 4458명의 조선 용접공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A 씨는 “해외 인력 확보에 발을 중중 구르는 게 다른 업체라고 다르지 않다”며 “수주 잔량이 3년 치를 훌쩍 넘어 호황의 여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ream@donga.com

▶ A3면 계속

東亞日報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A03면 종합

외국인 채용 행정절차만 5개월... 작년 입국 造船용접공 90여명뿐

해외인력 급한데 “심사중” ▶ A3면 계속

올 1분기 용접공 3341명 부족

“수주 선박 최종 납기 못 맞출 뻔”

인력 확보 못하면 생산 일정 지연

“결정인력 늘어 행정처리 속도내야”

정부는 조선업에 인력 부족으로 기세를 높이지 않고도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인력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 정부와 조선업 관련 특성활동(OT) 비자 취득을 앞둔 외국인 인력 이 회사에 들어온 외국인 용접공은 20여 명뿐. 회사 측이 지난해 목표에 정한 채용 인원 600명의 3% 수준이다.

조선소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A 씨 회사의 선박(선체) 건조 일정은 이미 한 달 이상 밀렸다. 물리적으로 최종 기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납기 지연금은 상상을 기준으로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수주 호황으로 늘어난 2021년 하반기(7~12월) 확보 물량(선체)이 올해부터 실제 건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A 씨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용접공)을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도 관련 당국



정부는 조선업에 인력 부족으로 기세를 높이지 않고도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인력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 정부와 조선업 관련 특성활동(OT) 비자 취득을 앞둔 외국인 인력 이 회사에 들어온 외국인 용접공은 20여 명뿐. 회사 측이 지난해 목표에 정한 채용 인원 600명의 3% 수준이다.

A 씨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용접공)을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도 관련 당국

순위	인력	내용
1	조선업	4500여 명 인력
2	조선업	4500여 명 인력
3	조선업	4500여 명 인력
4	조선업	4500여 명 인력

정부는 조선업에 인력 부족으로 기세를 높이지 않고도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인력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 정부와 조선업 관련 특성활동(OT) 비자 취득을 앞둔 외국인 인력 이 회사에 들어온 외국인 용접공은 20여 명뿐. 회사 측이 지난해 목표에 정한 채용 인원 600명의 3% 수준이다.

A 씨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용접공)을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도 관련 당국



정부는 조선업에 인력 부족으로 기세를 높이지 않고도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인력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등 정부와 조선업 관련 특성활동(OT) 비자 취득을 앞둔 외국인 인력 이 회사에 들어온 외국인 용접공은 20여 명뿐. 회사 측이 지난해 목표에 정한 채용 인원 600명의 3% 수준이다.

A 씨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용접공)을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도 관련 당국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A01면 종합

‘돈벌이 수단’ 된 유학 비자 불법체류 비율 5배 늘었다

<2018년 1.4% → 2022년 7.1%>

2023 신년기획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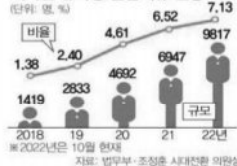
유학비자(D-2)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바뀌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학업 계획 없이 취업비자보다 비교적 문턱이 낮은 학생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식 루트인 유학

작년 9817명 → 5년새 8400명 ↑
지방대 재원위해 가짜학생 눈감아
어학당 수강생 인천공황서 도망도

원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손
유학을 선택하는 현지인들과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 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가 되
지적이 나온다. ★관련

3일 법무부가 조정한 시대에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2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
취업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자
인 비율이 2018년 1.38%에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면 2018년 1419명에서 2022
로 5년 만에 약 8400명 급증
수비자(D-4)를 받고 들어온 6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1년 2만 5726명으로 4년 만에 약 51%나 급증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원을 운영하던 A

서울경제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a05면 특집

코리안드림 안고 왔는데...취업비자 별따기 졸업한 유학생 10명 중 6명 ‘뒤흠라’

E-7 비자 자격요건 맞추기 힘들어 행정청 길 막혀 불법체류 양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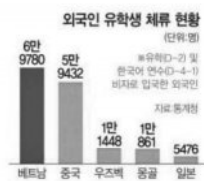
“그냥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고 사람도 문화도 좋아요. 전라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부티자엠)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좋아해서 유학을 꿈꿨어요. 한국 사람과 직접 소통하고 경험을 쌓고 싶어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끼오우부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대진유학원에서 만난 현지인 학생들은 왜 한국 유학을 꿈꾸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깊은 호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국이사회전문가협회에서 한국 취업준비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좋아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동생을 보내고 대신 한국에서 취업해 학비를 보내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한국이 좋다.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체면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 유학길에 오른다. 하지만 정착



공부를 마친 뒤에는 취업 비자(E-7)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만큼 다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직하는 등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비자다. E-7 비자를 받지 않고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취득해 1회에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면서 최장 2년까지 체류하는 방법으로 있지만 결국 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남아 있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최근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외국인 취업 비자의 문은 아직 제한적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국제대진유학원의 전비타 대표는

“유학생들이 E-7 비자를 받는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조건을 맞춰도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고용주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은 근로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불법체류자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외국인의 문제라고 이해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학위 과정 유학생 중 졸업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미상’ 범주에 포함된 졸업생은 50~60%에 달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1611명은 △본국 귀국 193명(12.0%) △국내 취업 257명(16%) △국내 잔학 189명(11.7%) △미상 972명(60.3%) 등이다. ‘미상’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비율은 2017년 36.7%, 2018년 42.3%, 2019년 49.9%, 2020년 56.2%, 2021년 60.3%로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다.

베트남에서 유학 준비생을 가르치는 한국어학원 A 원장은 “유학생을 받기만 하고 정착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안 타구기 때문에 (불법 취업과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E-7 비자를 받고 취업해 자생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박신원 기자

2023년 4월 05일 목요일 a05면 특집

〈2〉무늬만 유희생, 도벌이 하국행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classroom. In the foreground, two female students are seated at desks, focused on writing in their notebooks. Behind them, another student is visible, also writing. In the background, a female teacher or staff member stands near a bookshelf,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room is decorated with posters on the wall and a small table with various items, including a South Korean flag, on the right.

地址: 北京市东城区东直门内大街224号 邮编: 100027
 电话: 010-64639471 传真: 010-64639472 电子邮箱: jw@china.com.cn

비전문 유망성 기업 유형	유망 기업	일반 중소기업
₩ 7000~9000 원 (약 8000~1500 원)	연 2000~5000 원 (약 5000~2000 원)	
3~5개월	1~3개월	
고급 성취 비평 7월 이상 고급 졸업 후 2년 이내 가장 지역	없음	
20% 이상	30% 이상	

정식 유학원 적고 행정절차도 복잡
"브로커 잡아 비자 발급받을 수 있다"
1500만~2000만원 주고 유학학길
이여 돈 벌려고 유학 선택 많아지고
학교 적응도 어려워 불법체류자로
선발가중 등 유학시스템 재정비

정식 유학원 적고 행정절차도 복잡
"브로커 적야 비자 발급받을 수 있다"
1500만~2000만원 주고 유학학금

이에 돈벌려고 유학 선택 많아지고
학교 적응도 어려워 불법체류자로
선발기준 등 유학시스템 재정비

점자나 결과가 나온다며 '연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단 몇 주 안에 (모든 과점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약 700~900달러(약 890만~1150만 원) 정도지만 브로커가 중간에 끼면 금액이

24회 가까이 치렀다. 1만 2000~1만 5000달러(약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 서류가 많을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박정숙 (사)한국여성사회전문가협회(KJPA) 해외협력보통은 "브로커들이 받는 돈이 서류 하나에 1000달러(약 130만 원)라고 보면 된다"면서 "비용을 줄이려면 학점 향상, 통을 쌓아가면 되겠다" 서류 준비 과정

복잡하고 영시한 등에서 할 수 없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확실히 비자를 받 수 있는 한데서 시작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도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유학생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브로커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면접을 알리고 자

은 유학원이라고 [다들]하는 상이다.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학생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학교

[illegible]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한국 입국 목적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관'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나 이제 한국어를
온종日是 A 학은 "유학상 중점비행
전통 교육의 급증하는 것은 브리키의
한을 받아서 다른 모든 문장으로 이루어

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부들 하러 간 학생들도 임금이 훨씬 높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법 이민으로 유학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제가를 받은 정보 유출을 통해 들어온 책정금의 심층은 18주 다 된다. 유출된 정보 유출을 통해

2-12-11 11:00 AM TO 11:00 PM

과정부에 일컫는다. 공동학교 성격과
업 시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한국
서인쇄 시장으로 이탈하지 않고 공부
할 학생을 선발한다. 선술 이후에는 외
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친다. 유학생들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생활비를 낮추
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
은 유학생들은 베트남 전체에서 20%
정도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아무런
비 없이 학생을 보낸다.

10. 我昨天在街上看到一个小孩在哭。
 11. 他看起来很伤心。
 12. 我问他在做什么。
 13. 他说他迷路了。
 14. 我带他找到了他的家。
 15. 他的父母非常感谢我。
 16. 从那以后，我再也没有见过他。
 17. 他一定已经回家了。
 18. 我希望他能过得很好。
 19. 他一定很爱他的家人。
 20. 他一定很爱他的生活。

조언을 기다리게 해버린 합계여
인제에 변할 수 있는 기준을 재정의하
겠다'며 정치 유망들이 파행의 문
에 실려 정국을 정지할 수 있는 고사
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
은행으로 고위층 단위로도 삼각

2020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이다. 인구의 41.5%가 65세 이상이다. 이어 전남 고흥군(41.1%), 경북 군위군(40.7%), 경남 함안군(39.6%)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보은=글·사진 서승천 홍성현 기자
김이현 기자 siseo@kmib.co.kr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경제

2023년 02월 04일 토요일 A01면 종합

조선업종 만성 인력난에
2년 경력없는 外人 허용

정부, E-7 요건서 삭제 특단

기량 검증·용접 자격증 있으면
국내서 일할 수 있게 대폭 완화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 업종에서 경력이 없는 외국인 용접 공도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외국인 용접공 등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비자 발급 신속처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업종의 인력 부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4면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자격 조선 용접공 직종의 사증 및 사증 발급 인정서 발부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조선 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E-7 자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의 기량 검증 시험 합격 △국내 조선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 소유 △관련 분야의 경력 2년 이상 조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에 경력 2년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개정안이다.

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하는 상

조선업 외국인 확대 내용·배경

- ▶ 용접 경력 2년 조건 한시적 유예
- ▶ 조선사 세계 발주량 37% 차지
- ▶ 올해 생산인력 1만 4000명 부족
- ▶ 수주량만으로도 납기준수 어려움

황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 못할 수
으로 풀이
1559만
수주했다
에 달한다
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10
9만 5000
도 못 미친
업종 생산
할 것으로
조선업 등
도입 기간
폭 단축하
비율도 2%
확대하는
조선 기
속 대표는
인 근로자
며 "입국
투입할 수
한다"고 말

내일신문

2023년 02월 06일 월요일
014면 산업

조선현장 외국인노동자 2천명 투입

산업·법무부 "2월 중"
국내인력활용사업 시작

이번 달 안에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노동자 20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할 규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기능인력(E-7비자)에 대해 산업부가 1월말까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고,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용접공 도장공 등에 대한 쿼터제지, 외국인기능인력 도입비를 한시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결과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 속도도 높여 지난달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 요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엔 '외국인력 도입에 해소방안'을 마련해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 심사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되었던 비자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심사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면제(1월 31일부터 시행 중)했고, 6일부터는 국내 인력활용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도 시작한다.

이번달 내로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연결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iung@naeil.com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3년 02월 09일 목요일 012면 전국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400명, 경북 229명 유치 인구확대·경제활동 촉진·일손 해결 1석 3조 효과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았다. 연봉 3700만원을 받는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확정됐다. 그는 전북 김제시에 5년간 거주하는 지역 우수 인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물론 김제시 인구도 1명 증가했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를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에 머물지만 업종 인원이 많아지고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한국 특유의 이민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현재 9개 시도, 28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권에 따라 추진된 만큼 전북이 가장 활발하다. 전북은 올해 안에 40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8월 현재 3개 시군이 76명을 유지했다. 정읍시에 14명, 김제시에 58명, 남원시에 4명이 각각 배치돼 5년간 지역민으로 살아간다.

전북도가 유치한 외국인 인자는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모두

도내 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다. 모두 20대 청년으로 트레일러 제조, 식품, 금속가공 회사 등에 취업했다.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2500만~3700만원의 연봉이 보장된다.

경북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등 5개 시군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유치를 6월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229명 모집한다. 전남 영암·해남·장흥·강진·고흥·보성 등 6개 군은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심각한 조선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시도 1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5년 동안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비자를 계속 갱신해 주기 때문에 선

호도가 높다. 다만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은 신청자가 적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 인재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외국 인재 모시기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북도는 예초 도내 대학 출신으로 모집을 제한했다가 전국 대학 출신으로 확대했다.

임승학 기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지역	지자체
충청	충주, 사구, 영도구
부산	남구
대구	가평군, 연천군
경기	제천시
충남	보령시, 예산군
전남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북	고령군, 보성군, 정읍군, 김제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상주군
충북	고성군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2월 10일 목요일 A02면 종합

“중국행 문의 5배 폭증”... 비자 재개 설레는 여행업계

중정부,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허용

중국에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안중국대사관은 15일 위안 중저 계층에 유망 공직자를 통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40여 일 만에 중국과의 비자 갈등이 풀리면서 여행업계의 분위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의 비자 발급 재개 조치는 지난 주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18일부터 “도착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도착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한 경우, 초청에 응해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위해 입국한 경우, 기타 긴급 사유가 있을 때 특정 공항 또는 항공로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복귀한다.

관광 전문가들은 비자 갈등 완화와

비자 갈등 40여일 만에 정상화
중, 긴급입국 도착비자도 허용
경유지 무비자체류 정책 복구
여행사 “매출 30% 핵심 시장”
3년만에 수 천단부터 재가동

항공기 증편·단체관광은 아직
4월초까지 완전 정상화 기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중 간 예정된 항공편 증편은 아직 동결 상태다. 3월 말 상하이로 정 도된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관광비자 발급은 여전히 제한돼 있으며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현재 20개국)에 일본과 한국이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외교계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대다 양국 간 비자 갈등이 일단락될 만 할 양상이므로 제때로 한중 간 항공편을 주당 100편까지도 늘리는 논의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중국비자신청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단기비자 갈등이 풀리자 여행업계는 벅차고 있다. 비자 갈등이 풀리면서 15일 오전 중국 여행 관련 문의는 평소의 5배 수준까지 늘었다.

모두무어는 배이징자사를 정상 가동하는 한편 본사도 중국팀을 6명 제책로 재구성하고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제책로 비하인 3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팀이 주어진 건 3년 만이다. 또 후난성 장사 제대공공원에 있는 보고 간관도 3년 만에 세 곳으로 교체했다. 4~5월이 끝난 뒤인 장사제 폐기자의 정상 판매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다. 캄푼은 여행은 동남아시아에 파견사로 보냈던

중국팀 인력을 재소집하고 2월부터 중국팀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항공편이 정상화되고 단체관광이 풀리는 즉시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전문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한 중국팀을 따로 꾸렸다. 안바운도 단체여행이 풀릴 것

에 대비해 자회사인 하나투어(HT)를 통해 버스 투어 등 관련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완벽하게 구축했다. 호텔가 역시 모처럼 반겼다. 김로 광항 근처에 있는 베이징도호텔은 여에 중국 전담 세일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곧 직원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여행 모국어로 쓰는 중국인 유학생 인

원 채용을 위해 지난해 말에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비치호텔은 최근 서울 명동에 오랜 숙식단 “중심”에 중국어 능통 인력을 배치하고 중국어 매뉴얼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단체 관광이 풀리고 항공편이 재가동되는 4월 초 무렵이 완전 정상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코로나19 이전 시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계층이 곧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약·여행전문기자·신문특기

東亞日報

2023년 02월 10일 금요일 A26면 투데이

아프간 기여자들 “울산에 사는것 너무 좋습니다”

울산 정착 1년... “도와주셔서 감사”
자녀 손글씨로 현대중 등에 감사패
십시일반 모은 성금 120만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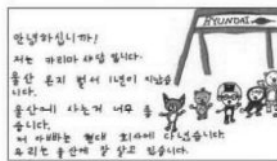
“울산에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 정착 1년을 맞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9일 지역 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금도 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들이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특별기여자의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그린 그림과 쓴 글씨로 제작했다. 이자녀는 “우리는 울산에 잘 살고 있다”며 아동 예 니메이션 “뽀로로 뽀로로”의 캐릭터를 그린 후 감사의 글을 썼다. 울산시교육청, 동구청, 동부경찰서, 법무부(울산출입국사무소) 등에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별기여자들은 이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찾아 십시일반 모은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과 울산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28가, 157명은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이 중 28명은 현대중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감사패, 현대중공업 제공

공업 사내협력사에 취업해 28가구가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아파트에 세 터정을 잡았다.

현대중공업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특별기여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언어, 생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경우 가구당 2명의 정착 도우미를 배정해 6개월 동안 돕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기여자 자녀 중 15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특별기여자들의 울산 동구 정착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해 2월에는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울산 53개 시민사회단체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달라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여자들의 이면 감사패 전달과 기부가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정재학 기자 naks@donga.com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3년 02월 20일 월요일 005면 종합

우크라 탈출 고려인 '인도적 체류'만 허용... 신분 여전히 불안

글 쓰는 손서

● 국내 체류 중인 난민들
●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1면서 계속

국내로 피난 온 고려인은 2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와 경기 인천에 조성된 고려인마을로 들어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9월 200여명, 2000년대 후반부터 평안도, 이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생계와 의료 접근·교육 등 어려움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국내 들어온 2000여명 역력스러운 삶
남성은 농사짓고 여성은 식당 등 취업
안정적 정착 위해 스스로 생계 꾸려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난민 인정만 돼 전쟁 끝나면 돌아가지
무국적자 10여명은 제출 한시적 해소

농촌생활이 가능해졌다"며 "임시직"을 했다.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전쟁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 됐지만
●한국에 주는 임시 신분
●우크라인 난민들의 어려움

광주 고려인마을 피난 온 우크라인 고려인 현황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난민 등 임시 체류자 100여명

The JoongAng

2023년 02월 15일 수요일 018면 종합

징집 피해 한국 온 러 청년, 녀달 공항살이 끝났다

안드레이, 입국 뒤 인천공항 거주
행정소송 이겨 난민심사 받게 돼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14일 수화기 너머 안드레이(가명·30대)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공항출입국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지난해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온 그는 131일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이날 판결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

사는 안드레이가 공항출입국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허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드레이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안드레이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난민 인정 심사를 통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여부와 입국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는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밖으로 가는 게 우선이라 다음 계획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ung@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3월

국민일보

2023년 03월 02일 목요일 012면 사회

“해외체류 중 낳은 아들, 한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마쳐야”

현재 만장일치 합헌 결정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다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한 국민 부모가 미국 유학을 하던 중 태어났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하겠다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그는 이후 법에 규정된 ‘영주할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현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적법은 친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외국 체류 중에 출산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돼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씨는 범상 규제범위가 너무 넓고 외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A씨의

헌법소원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영주할 목적’ 조항에 대해 “일시적 유학, 파견, 출장 등은 영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고 했다. 규정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우

연한 사정을 빌미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거나 부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이중국적자는 해당 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불이익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bi.co.kr

경향신문

2023년 03월 25일 토요일 001면 종합

현재, 강제되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에 제동

‘국외 추방 전까지 사설서 보호’ 조항, 위헌제정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기간에 상한 없이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 5년 전 ‘탈원’ 뒤집어

현재도 영구히 망명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계속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다했다. 외국인에게만 용인되는 ‘무기한 구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원다. 헌법불합치는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부호로 할 경우 영구 법적 공백과 사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외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즉시 출국할 수 없을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은 본국 송환여

가 배정될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헌제정 사건은 강제퇴거 명령과 동시에 보호 시설을 받은 외국인들이 많다. 신안면 이집트인 A씨는 17세이던 2018년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강제퇴거와 보호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동안 구금됐다. A씨 높은 보호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법원에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

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에 위헌제정을 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출입국관리법과 위헌법률심판 제정 사건에 대한 조항을 함께 개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당수 국가들은 강제 퇴거 대상자의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정도 언급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구금기간의 최대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데, 최소 구금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프랑스는 구금기간을 최대 90일까지 허용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대만은 10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0일로 최대 구금기간을 제한한다.

이런 결정은 현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5년 전 결정을 바꾼 것이다.

김해지 기자 hary@kookilnews.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3월 16일 목요일 A25면 사회

한동훈 “체계적 이민정책 없는 국가 성공 못해”

8박 9일 유럽출장 마무리

프랑스·독일·네덜란드 협력
이민청 설립때 큰 도움 기대

선진국의 이민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이 15일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8박9일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순회 출장을 마무리하며 내입장문에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문한 데에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곳들”이라며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만 아니라 그간 겪어온 심각한 실패 사례와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에게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할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

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한국의 출입국·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출장 기간에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이민난민청 등의 인사들과 만나 이민·이주정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세계일보

2023년 03월 10일 금요일 024면 사람들

한동훈, 佛 내무장관과 이민 정책 협력 논의

14일까지 네덜란드·독 이민청 방문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을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이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정책 주무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럽 출장 중인 한 장관은 8일(현지시간) 제랄드 다르마넵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양국의 이민·이주·국경 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는 치안·국경 관



리·재난 대비·지방행정 자원 등을 담당한다. 회담엔 다르마넵 장관 외에도 에릭 잘롱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

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9~1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13~14일 독일 베를린의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하고 15일 귀국한다.



07 주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요일 010면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저출산 심화... 이민 수용 확대 검토 때 됐다

산업현장 미충원 노동자 증가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인난뿐 아니라 청년층 구직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미충원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선 별 효과 없는 인구 대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구직자들이 파하는 일자리를 사실상 채우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충원 인력 1년 새 5만명↑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일자리 미충원 인력(구인 중이지만 인력을 보충하지 못한 일자리)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대 중후반까지 9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한국의 미충원 인력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2년 13만명을 돌파했다. 1년 새 5만명 넘게 늘었다.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히 구직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원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일감 분배가 수는 미충원 인원의 4.4% 이상 줄어든 89만3000명이었다. 구직자와 사업장 사이의 눈높이 차이가 빚은 '미스매치'가 미충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미충원 사업장의 28.1%가 총원 실패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일치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특별한 현상 경향이나 지적할 일도 직무수행할 수 있는 '수준 사업장'에서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 과충원에 실패했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미충원은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의 충속 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전체 미충원 인원의 97.7%가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미충원율을 보면 경



구인 중인데도 보충 못한 일자리 지난해 3분기 18,500명 역대 최대
경제활동인구 줄며 더 늘어날 듯

남(18.8%)·재주(17.6%)·총남(17.5%) 등 지방자치단체가 순위권을 독식했다.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청년 기피 업종인 제조업이 28.7%(5만3000명)의 미충원 인원이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가 배우는 산업 현장

구명 난 현상을 채운 것은 외국에서 건너온 근로자들이었다. 올해 초 조선업계가 수주 물량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에 인력 부족에 시달리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외국인 인력 허용 비율을 높이고 외국인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30일통'인 건설업은 2022년 이미 전체 인력 수요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외국인근로자들이 감당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수년 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부터 5년 간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인구는 2020년 378만명에서 2070년 173만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에 실행을 기울여 2008년부터 2018년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쏟아부은 재정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선 0.7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정책이 사실 상 막을 수 없는 마더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방 소

이민 유입, 내국인 일자리 줄이지 않고
지역 내 총생산 증대 등 긍정적 효과
전문가 '다양한 인재수용 노력 필요'

많은 농출카드로 이민자 유입이 부각되는 이유다. 법무부가 지난해 이민 정책 등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미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인은 130만2000명이었다. 이 중 84만3000명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가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민 이슈를 대하는 일각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제상이 엇보인다. 저소득 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이민자들이 높은 저임금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정부의 복지 재정까지 낭비된다는 논리도 있다. 이민자 유입이 필연적으로 불

법제류와 차관 불환, 다문화로 인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인재유입이 관건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역사회의 재정이나 노동구조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외국인 유입률이 상승할 때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증가했고, 지자체의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됐을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민자 유입이 전체 내국인 일자리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연구는 건설업과 기능직을 중심으로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일부 감소했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달라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결국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의 숙련 고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민자 유입은 지역의 인구 이동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이민자들은 주로 바수도권 중소도시로 정착하는데, 이민자가 늘더라도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가다. 전체적으로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저소득 근로자와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근로자만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산업현장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지만 보다 다양한 층위의 인재를 유입시켜 이민의 '포드폴리' 옹'을 대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재 기자 sentinel@kmb.co.kr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3월 31일 금요일 A13면 종합

“인구 붕괴 막기위해 이민청 설립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세미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이민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 감소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연구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국내 인구 문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발족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

장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출산율은 2.1명”이라며 “인구 회복을 지향하는 의지를 담아 세미나를 ‘인구 2.1’ 세미나로 명명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발기인 대표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이민에 관해 그간 관련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구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민 만능론이 아닌 체계적 이민 정책 쟁점을 제시했다. 또 이를 총괄할 이민정책 거버넌스(이민청 등)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진우 기자

매일경제

2023년 03월 15일 수요일 A02면 종합

3년만에 중국여행 열린다

中,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오늘부터 관광비자 발급재개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쌓았던 '방역 관리 장성'을 전면 해제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4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외국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이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홍콩과 마카오 지역 외국인 단체의 광둥성 무비자 입경, 아세안 관광단체의 광시 구이린 무비자 입국도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의 효력 정지도 해제돼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사업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외국인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했고 최근까지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이 자국 관광산업을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지난 1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5%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The JoongAng

2023년 04월 12일 수요일 09면 사설/칼럼

외국인 차별 소리 들어도 저임금 가사도우미 필요하다

소리나다

조창훈
국회위원

0.7% 정치를 하는 필자에게 가장 두렵고 부끄러운 숫자다. 전쟁도, 전염병도 없는 평시인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가 0.78명이다. 2017년 출생아 수 357만8000명에서 단 5년 만에 26만9000명이 됐다. 호화로운 한강의 야경에 K-원투가 세상을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교육, 연금,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년 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다. 출산수당, 아동 양육수당, 주택청약 우선권 부여 등은 20년 전부터 해 본 정책들이다. 그 뒤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함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의 제도와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다 소용 없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급소는 어디일까.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단연코 여성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세대와 달리 정책세라는 맞춤형이 기본이다. 기본이 바뀌는 것이다. 문제는 기본은 바뀌었는데 문화와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딸방이로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면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다.



최저임금 제정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그래픽=서준출 기자

저출산 핵심 원인은 육아 부담
‘출산은 경력 단절’ 공식 끊어야
급기 꺾야 작동하는 대책 나와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느리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이 안정되면 상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 3월 중 1명은 직장 재귀를 못 했다. 출산은 곧 회사란 공식이 생긴 셈이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지난해 정몽준 총리가 만들어 온 정책을 중단한 여성이 수다. 10만 명, 그 치밀한 숫자 속에서 단명의 이유로 잡힌 게 육아이다. 여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만 육아와 가사부담

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모여 육아 휴직을 알마와 아바 모두 스게 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단속 근무와 유연 근무 활성화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정책들도 나왔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눈치 보인다는 이유, 경력에 대한 걱정 등 문화 자체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K-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데, 문화강국이던 전사가 어색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보좌진과 대화를 나눴다. 그때 강한 충격을 받았다. 부끄럽지만 사막이 발령이 여성의 삶에 큰 혁명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했다. 한 보좌진이 “여 전이 세력이 누리는 건 여성”이라고 말했다. 별래가 좀 더 쉬워졌을 뿐 여성의 가사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잘

지는 점과 강요되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기본이 바뀔 세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을까. 이미 결혼한 청년세대들. 그리고 결혼과 육아를 고민하는 미래세대들에게 결혼과 육아가 그리 어렵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 확신이 바로 0.7% 명이라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단번에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비록 거침과 급기시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급소를 때리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법안을 만들어 조심스럽게 세상에 던졌다. 바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현재 내국인과 중국 등도 중심으로만 제한된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외국인은 5년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실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전제로 있는 최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 인종차별, 국적차별, 가사노동 편파적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이상적인 정책들이 작동하지 못했으니 뭐라도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급기시된 단어들을 던지면서까지 여성과 청년들에게만 자이클링 가사와 육아와 집을 사회 모든 구성원과 아껴주고 싶었다.

법안 발의 전 3040의 육아하는 청년 그룹에 먼저 이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외로웠다. “한국어 할 수 있나요?” 이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집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도 대화 중에 결혼 전이었다면, 외국인 자람이란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 건국은 무엇일까. 정치인으로 서 고민하는 지점이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 보면 매우 투박하다. 그럼에도 조항 하나하나에 출생과 육아, 가사,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풀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는 필자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고쳐나갔으면 한다.

※조창훈=중앙 사대인한 대표비서관, 국회의원, 공인기자로서 세계은행에서 일한 경력이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으며, 주4일 근로제를 주장한다.



조창훈은 중앙일보 사단
조창훈@joongang.co.kr
02-1234-5678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3년 04월 15일 토요일 A06면 사회

서류상 없는 '그림자 아이'... 보호망 밖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서울 구로구 원룸 방치된 7세 구조
미등록 외국인, 취약 상태 파악 불가
전문가 "전수조사 방안 고민해야"

서울의 한 단칸방에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던 7세 아이가 발견됐다. 부모는 장기간 집을 비운 채 아이를 방치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아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와 다름없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됐지만, 어느 기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어린아이가 방치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 멍한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A(7)군을 발견했다. 막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료수, 담배꽂이 등

이 가득 찬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부모는 A군을 방에 홀로 두고 수일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서울의 한 아동복지센터에 맡겼고, 부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압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A군은 2019년 어머니를 따라 입국했다. 아버지는 먼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군은 2021년 9월쯤 아버지와 함께 해당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난해까진 인근 어린이집을 다녔다.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된 올해부터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 안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끼니는 하루 한 번 사먹는 배달 음식이 전부. 인근에 살던 어머니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점점 눈동자 초점을 잃은 채 폭 처진 모습으로 변했다. "이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고시원 건물 관리인이 어린이집 원장에 이를 알리면서, 결국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우리나라 아동에 대해선 정부가 예비소집을 통해 아동 안전 등을 점검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위키아동'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반면 외국인 자녀에 대해선 그런 절차가 전무하다. 정부 관계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은 취학 시기에 맞춰 관할 구청에서 취학 통지서를 보낼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미등록 외국인은 취학 시기조차 확인할 수 없어 '깜깜이' 상태"라고 했다.

현행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소득, 국적, 인종, 불법이주와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

비준했고, 2010년부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거주 사실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A군도 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이달 초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A군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시원에 계속 방치될 뻔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보듬을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종 이화여대 교수는 "인력을 총원해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외국인 자녀들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선진국 대부분은 아이들에 대해선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은 경희대 교수도 "아동이라면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좀 더 포용력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수현이서원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국민일보

조선소, 외국인으로 일손 메웠더니... 직원 간 갈등 '고민'

내국인 기피·취업비자 완화 한쪽 언어불통에 기술 교육도 미흡적

알려진 내·외국인 일손 부족에 따른 조선소들이 외국인 근로자원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는다. 내·외국인 외국인 직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사들은 위계질서에 익숙한 내국인과 조직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의 융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조선사의 외국인 인력 현황 (단위: 명)



34사에서만 57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전체 합계는 직원들 약 29000명에서 외국인 비율이 19.6%에 달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에도 외국인 비율이 30%를 웃돈다. 1만4000명의 합계 직원 중 외국인은 4200명(30%)이다. 삼성

중공업에서도 약 1100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조선소에 외국인 인력이 급증한 건 구조적 요인이 크다. 근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수은 낮아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고 2000년대 초중반 조선업 불황기를 거치면서 다채 생산직이나 건설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소를 찾았다. 정부가 외국인이 조선소에서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것도 한몫했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풀기 위한 수단인 인력외-가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신원부터 발급까지 기간도 1개월로 단축했다.

조선사들이 외국인 직원들을 불러들

면서 현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사색이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련자들 생략양식에서도 불만이 쌓였다. 조선사들은 평소대로 형식과 동남아시아(글로브) 사단을 함께 채용 중이다. 내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원'이라는 뜻의 '인원'으로 인식해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 마음적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조선사들이 외국인 직원들을 불러들

한, 인도네시아 등 아슬한 국가에서 온 직원을 위한 식언도 별도로 제공한다. 다만 앞으로 외국인 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직원 화합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한다. HHD는 올해 연말까지 HHD중공업에서 10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 1000명가량을 추가로 채용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연말까지 900명을 더 채용한다. 삼성중공업은 본 추가와 생략 양식 포함 외국인 직원 500명을 관제하는 '조선소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뜻의 '조선소'로 인식해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 마음적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조선사들이 외국인 직원들을 불러들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 017면 종합

한겨레

2023년 04월 19일 수요일 009면 기획/특집

일손 부족한 농촌 현실 외면... "농민을 범죄자 만들지 말라"

법무부, 외국인 농업노동자 무차별 단속

마흔 안 되는 20대 남성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법무부, 외국인 농업노동자 무차별 단속

마흔 안 되는 20대 남성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고령자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20명 필요한 농장서 18명 단속...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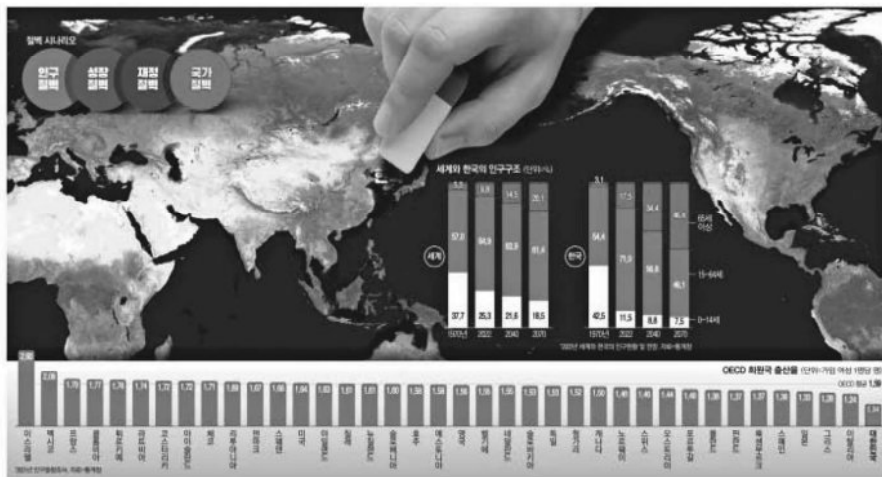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경기도 한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타국인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매일경제

2023년 04월 20일 목요일 A28면 종합

서기 2300년, 한국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이민은 필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세로로 늘어선 인구(population boom). 한국과 같은 식량 부족국의 인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나날어간다. 이제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핵 폭탄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희귀한 새인 '인구'는 2037년 100억명에 달하게 도달한다.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서는 한국 인구가 2037년 중국, 유럽, 일본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와 함께 세계 대국이 된다. 전진국은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경제 위기를 앞질러고 사회 안정성도 나빠진다. 여권도 불안해져야 한다.

인구폭탄을 거꾸로 맞다

[illegible]

1982년 대 출산율이 2.0명대에 머물렀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1982년 도입한 인구국 가 억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당시 8명중 후반까지 가장 높은 출산율이었다. 매년 인구가 성장률이 2%로 대략 22만2천 대 인구가 태어났다는 것을 현실상 나타내었다. 늦은 밤까지 연가도 하고 출근하기 위해 도시로 출근 들어왔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환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에 주 출장도 파가 시작됐다.

인구가 늘어났다고 아슬한 가리지 말고, 나쁜 일자는 가족계획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

다. 1990년까지 산악계통 정칙을 추진하는 정책의 오류를 범했다. 여기 응용소비가 그랬다. 산목가 밑에 깔린 연구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가장에서 여섯 해마다 시작되고 급진적 변화가 거듭도 들어왔다. 결국 2000년대에 이르러 출산율이 1.0명대로 떨어졌다. 오히려 막을 것을 가려도 막는다고 이따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차는 이미 역전했다. 오히려 연구가 몰려들어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혼돈도 벌어졌다. 연구 구조 변동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풍성, 식생활도 발달, 문화생활도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평균수명은 82세로 OECD 20개 회원국 중 일본보다 2년 정도 낮다. 일본(84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국이 2011년 일본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돼 남자가 20년 정도 젊었다면, 한국은 20년, 18년 정도였다. 독일은 74년, 미국은 68년, 프랑스는 55년밖에 젊었다. 한국은 2008년 초 고령화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보다 1971년 고령화되다, 1895년 고령화되다, 2000년 초 고령화되다 가는 데 걸린 30년을 뛰어넘는 것으로 세계 최단기간이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80년 21세, 2000년 44세에서 2020년 52세, 2060년 61세가 될 것이다. 2040년 중위연령이 52세가 되면 25%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고령자와 14세 이하 유년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 노동연구 감소에 따라 노년과 유년의 부양인구 증가로 인해 부담비가 올라간다.

질병 시나리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와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든다. 질병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인구감소-생산감소-대응방안-국가발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중순부터 시작해 인구오너스 시대와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3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도 계속 떨어뜨릴 것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감소해서 2030년 이후에는 1.0%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 복지, 교육, 국방, 산업 등 세출 수효는 늘어나게 될 것지만 지금의 조세 체계로는 이를 감당

OECD 꼴뻑 출산율 대한민국

2040년 25%가 75% 먹여살려야
"38개국 중 가장 먼저 연구소 열"

이대로면 2100년 **韓人**구 반토막

성장·재정·국가 연쇄준비 물가
2300년엔 인구 '0명' 계산 나와

매해 평균 3% 안팎 성장을 위해

2050년까지 외국인 500만명 필요
다문화·다인종 세계시민교육 절

[illegible]

정책 사다리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자
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결혼 기피가 출산
백과 함께 가족 해체를 통한 지역 소멸로 이어
진다.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에 따른 비혼(非
婚) 현상으로 가족 구성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나뉘고 있다. 2019년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
구에서 30%를 넘는다. 30대와 40대 여성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있다고 한다. 가족 해체와
외국에 대도시의 인구 감소, 중소도시의 청년
유출, 농촌지역의 인구 공백을 가족요면서 지
역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 복원의 계기로

환경과 적정 인구 규모는 3000만~5500만명이다. 지구자원의 인구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고 생태학적 자원의 부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혁신도시(1)에가하면, 일본정부와 유사한 지형의 천혜적 자연 자원이 좋은 토대다. 도시간도 통행만 살려 기찻길 만을 만들어 협곡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논밭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근경(近景)은 인구와 자연이 녹아들어서 사해하고 있는 주(主)가자위와 부(副)가자위라는 복수주자위를 통해 유동인구를 포획하는 중점기 때로이루어진다. 유동인구도 자원을 살리는 데 필요한다. 주(主)는 땅을 살리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고밀생태부(부)규모같은 지방비례제도도 혁신기술을 따른다.

한국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 연공지능

[illegible]

이민은 필수, 통합에 대비해야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작금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50년 후면 절반이 된다. 때때로 평균 3% 안팎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0만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다.

텔레비전(Televisation)에 의한 텔레리크투(Telework)도 분명하다. 고숙련직종에서는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이 불가피하다. 그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노숙인, 흑인, 프랑스 등에서 유입되어 사회활동의 관습에서 갈등 유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유망지역"과 "혁신지역"을 모두 면제하고 한국에서 근무를 수월한 외국인 노동자 장려에 의해 노동자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경청해야 한다. 한국은 순환주거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조건적응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다문화-다민족주의의 세계시민교육을 강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끼리 귀화, 외국어 교육, 다문화정책 지원, 국적 취득을 위한 노력, 전문직·고연임, 탈북자, 난민 등 실업 갈림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민정당연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849/05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요일 006면 종합

돌아온 외국인들로 북적... 명동, 다시 '봄'

출입국 규제 완화로 관광객 증가
구매력 큰 中 관광객 회복은 더더
노점 난립에 보행사고 우려 높아

이규희 기자 ikh@segye.com

“코로나19 유행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
게 봄벼요. 상황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
죠.”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화관 인근에
서 분식 노점상을 하는 박모씨는 지난
19일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박씨의 말
처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으로 3년 동안 침체했던 명동 거리에 다
시 ‘봄’이 찾아왔다. 이날 명동은 여러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오후 5시쯤 거리를 뒤덮었던 인파는
더 불어나더니 해거름 무렵에는 보행
로 곳곳에서 통행이 힘들 만큼 유동인
구가 크게 늘었다. 면세점이나 패션 브
랜드 쇼핑백을 든 수십명 규모의 단체
여행객은 흔하게 마주칠 수 있었다. 패
키지 여행에 포함된 자유 일정을 즐기
고 있다는 말레이시아인 말릭(58)씨는

“랍스터구이, 군밤, 수제 어묵, 닭강정
같은 여러 먹거리를 구경하는 게 큰 재
미”라고 말했다.

엔데믹(전염병의 풍도병화) 국면에
이뤄진 출입국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
광객 유입이 늘었고, 명동을 비롯한 대
표적 관광 명소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
면 지난 2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47만9248명으로 지난해 2월(9만9999
명)보다 379.3% 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월(120만1802명)과 비교할 땐
40%가 안 된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아
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월
국내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4만5884명
으로 2019년 2월(45만3379명)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상인들은 구매력이 큰 유커(游客: 중
국인 관광객)가 늘어나 명동 상권이 정
상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명동상
인복지회 총무를 맡고 있는 22년 경력
의 노점상 이강수(50)씨는 “중국인 단
체 관광객이 없으니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50~60% 수준”이라며 “다행히

지난주부터 개인 단위 중국 관광객 유
입이 재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가 이어져 기대
감이 크다”고 했다.

이날 명동 거리에선 밀집한 노점과
북적이는 인파 탓에 아찔한 상황도 종
종 발생했다. 서서 음식을 먹거나 구경
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나가던
외국인이 뒤엎기거나, 카메라·스마트
폰 등으로 거리를 촬영하며 길을 걷던
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직
장인 김수현(29)씨는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나 포장지 길바닥에 나뒹굴어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구가 2016년 도입한 노점실명제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기
준 명동 노점상은 359곳으로 제도 도입
당시(364곳)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 단속반이 미허가
영업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노점이 보
행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민원이 접수
될 경우 자리를 조정하는 등 보행권과
안전 관리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내일신문

2023년 04월 25일 화요일
008면 국제경제

일본,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확대

가족 동반 영주자격 기간↑
자민당 보수, 이민확산 우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영주권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자격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가족 동반 및 기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유입을 적극 늘려 노동시장 공백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정부가 ‘특정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당에 외국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가족을 동반해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2호’의 기준을 현행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특정 1호’와 ‘특정 2호’를 도입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체류 및 영주자격을 줬다. 특정 1호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 △산업 기계의 제조 △농업부문 및 요양 등 12개 분야가 있다. 특정 1호의 경우 ‘상당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체류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했다. 다만 가족과 동반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2호는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가 해당한다. 현장에서 총괄이 가능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 능력을 요구한다. 이 경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고, 가족과 동반이 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분야는 건설과 조선 등의 2개 분야에 국한했다. 일본 정부 집계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특정 1호에 따른 체류자는 14만6000명에 달하지만, 특정 2호는 불과 1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 2호의 대상 분야를 크게 늘리고 체류 조건도 완화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자민당에 설명한 특정 2호 분야는 1호에서 요양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로 확대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기존에 특정 1호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4년 초까지 5년 상한을 연장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오는 6월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자민당내 일부 보수파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핵심은 외국인 이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보수파 등으로부터 사실상 이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며 “자민당 내부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07 주요 언론보도

5월

한국경제

2023/05/02 화요일
A27면 사회

제주 등 부동산 투자이민 기간 늘리고 금액은 상향

법무부는 1일 국내 다섯 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해운대 동부산), 강원 평창, 전남 여수(경도)에서 투자이민제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연장과 함께 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김진성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5월 03일 수요일 A10면 경제

“韓,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별비자 도입을”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ADB총회서 저출산 해법 제시여성 경제활동 늘리기 위해선
싱가포르·홍콩 이민모델 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해법으로 이민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별비자 도입을 통해 가사나 보육을 대신하게 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해 “한국은 저출산 상황이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낮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로 “낮은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고령화”를 꼽았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국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관련 복지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등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중 많은 국가에서 이미 채택한 방법이 이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가사도우미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오른쪽)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취업 허용 대상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인 전체로 확대시키자는 게 크레이머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민 정책은 예민한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단약 완전한 이민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교수가 언급한 부분적 이민 정책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특별비자를 도입해 이민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다. 그는 “가사나 아동돌봄·노인돌봄 등에 이민자를 허용함으로써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가진 가정의 싱가포르

나 홍콩처럼 외국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해 육아노동에서 해방되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가사나 보육 분야에 한정된 특별비자 도입은 주로 외국인 고령 여성 근로자가 대상인 만큼 범죄 우려나 정치적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와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재정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분이 취약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근로자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고용주에게만 전속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면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민 근로자가 늘어나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지적에 대해 그는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국내 저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연쇄적인 임금 인상이 일어나 내국인 근로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 퇴치 방법에 관한 ‘오링이론(O-ring Theory)’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오링이론은 1988년 미국 우주발사체 쉐린저호의 폭발이 아주 작은 연결 고리인 고무링 ‘O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작은 부분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홍해찬·이희조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신문

2023년 05월 04일 목요일 009면 사회

‘불법체류’ 칼 뽑은 한동훈... 두 달 만에 1만 3000명 출국·추방

정부합동단속~ 7500여명 적발
택배 등 일자리 잠식 업종 대상
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할 것”

정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1만 3000명가량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 또는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체류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업무보고 내용대로 대거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8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해 단속했고 이 중 9명은 구속, 2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국시킬 인원까지 고려하면 강제 퇴거와 자진 출국 인원은 총 1만 3000명에 육박한다.

이번 단속은 유증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인의 상습·다수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한 장관은 올 1월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출입국·이민 정책의 하나로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여겠다고 밝혔다.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명대까지 줄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지난달까지 약 2만 5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속시켰다고 한다. 한 장관은 “유인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 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The JoongAng

2023년 05월 06일 토요일 008면 종합

WHO, 코로나 비상사태 3년4개월 만에 해제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태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코로나19는 더 이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처럼 코로나19를 팬데믹 질병으로 관리하겠지만, 더 이상 긴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비상 상황으로 취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미 전세계 상당수 국가에서 강력한 방역정책을 완화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정부, 위기경보 ‘경계’로 완화
확진자 격리기간 7일→5일 단속

중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도 완전한 일상 회복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WHO의 결정을 토대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계’ 단계로 내려가는 1단계 조정이 결정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입국 후 3일 내로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멈춘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 관련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뀐다. 다만 1단계로 조정해도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확진자 5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2단계 조정 시점은 이르면 7월쯤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한다.

한편 5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87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꾸준히 늘어 최근 2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신규 감염자 수는 25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본(80명), 미국(35명), 독일(15명)보다 많다. 다만 신규 사망자는 100만명당 0.1명으로 미국(0.44명), 일본(0.19명)보다 적다. 방역당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3년 05월 09일 화요일 A25면 사회

하반기 서울에 '동남아 베이비시터' 온다

비전문취업 'E-9 비자'로 100명 시범운영

정부가 서울시가 올가을에 비(非)중국 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100명 규모로 시범사업

8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재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해당 지역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E-9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근로해야 한다.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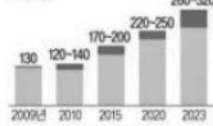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소지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입주형은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규모와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여러군데 발생할 수 있는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소정의 고용비를 지급해 출퇴근하게 하면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부모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를 도울 이은비 베이비시터 이모넌을 고용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이들의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다들' '단디' '피' 등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미취학 아홉 두 명을 돌보기 위해 입주형으로 중국동포를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대 중·후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인을 고용하면 비용은 300만원대 초·중반으로 뛴다. 한국 여성의 편

가파르게 오른 가사도우미 월급
(단위:만원)



※중국동포 재류, 입주형 주 5.5~6일 근무 기준
자료: 서울신문, 한국경제, 네이버 카페(임스·출력·임대·임고)

"육아부담 덜어 저출산 해소"

필리핀 등 비중국동포 대상
집 상주 대신 출퇴근 형식 검토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 설정 현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할 듯

근 명목 임금(월 247만원,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넌'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해 수도권보다 비싼 가격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에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서울은 중국동포가 많아 입주 도우

미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종에는 아예 공급이 없다"며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했다.

※수급가격 경쟁력 두 마리 토끼 겨냥

정부와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3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170만원 정도다.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추가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월 70만~100만원 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가량 저렴하다. 종전 여성 중심인 현재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은 있다.

육아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 간병인 등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도 비슷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 이성은/비즈니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5월 11일 목요일 A01면 종합

공장부터 호텔까지... 일터에 한국사람이 없다

G5경제강국 모자이크 코리아 ①

“외국인 없으면 벌써 문닫아”...전국 곳곳 인력난
급격한 인구절벽에...국민 56% “이민 활성화 필요”

경기도 포천에서 급속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최근 부인과 딸을 직원 명단에 올렸다. 한국인 13명과 나탈, 미안마,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근무하는 공장에 외국인인 더 채용하기 위한 교육자책이다. 한행 고용허가제에선 외국인 직원이 한국 직원보다 급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A대표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4성급 B호텔은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드로 채용했다. 그동안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어 문제가 될까 고수했던 창업주의 지문, 한국인 채용 원칙을 켜 것이다. B호텔 관계자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도 필요한 인력 규모를 가깝스로 맞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인구절벽과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등 지역 미스매치로 한국에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명에서 4700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에 50년 후인 2070년이면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고갈되면서 “역성장” 경제로 전락하는 “인구 디스트피아”가 현실화될 위기에 있다.

인구위기를 맞은 G7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민자 비율이 20%에 달하는 캐나다나 이민자 유입으로 작년 한 해만 인구가 무려 100만명 늘어났다. 한국

은 이민자 비율이 4.5%로 G7 평균(13.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외국인 불모지다. 이민사회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은 G5 경제강국 도약은커녕 글로벌 “나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성장위기에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하면서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재비를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고급 인력들의 정주형 이민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 구축이 시급한 여유다.

관련기사 A4-5면
10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5명은 이민자 유입이 국내 경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인식변화를 기초로 이민 활성화에 국민을 설득이 넘는 5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이민정책의 시초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을 맞는 올해 매일경제신문은 법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손흥기 이민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40만여 명 단숨에 무인력, 80만여 명 동포 및 영주 인력, 20만여 명 유학생, 40만여 명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각각의 이민정책 파종을 맞춰 종합적인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환·홍지성·임정훈 기자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연출
일 선진국들은 인구위기에 앞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이민율이 4.5%에 불과한 외국인 불모지다. 대외경제사정의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모자이크 코리아”를 만들어 내야기에 매일경제가 제안한다. 한국 곳곳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한다. (이승훈·김효을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겨레

2023년 05월 18일 화요일 008면 기획/특집

낮선 한국살이 외롭던 아이들...“함께 공 튀기며 꿈도 생겨”



이주 청소년들이 농구공을 던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송파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농구를 던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 송파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농구를 던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이주 청소년 250만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는다

이주청소년과 스포츠

한국은 이미 이주 사회다. 출생과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인 25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단일문화 사회가 될 때까지 2020년 이민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선다. 이중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보면 40%에 달하는 응답에서 이주인생을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10%를 넘어, 청소년은 10%를 넘어 20%에 달한다. 이 점을 전제해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다.

스포츠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송파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농구를 던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 송파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농구를 던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다문화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의 힘

농구단 선수들이 재능 기부로 찾던 이곳 거점 300여명 이주민 청소년들 한국 곳곳서 자리잡고 다양한 활동

이주민 청소년 배려를 그리는 희망 한국서 농구 만난 뒤 꿈 향해 달려 작은 한걸음 속엔 큰 소망이 들어

농구는 이주민과 선주민 만나는 곳 그날, 이주민 스포츠에 관심 없어 개인 피치나 기업 후원에만 의존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고민 적어

스포츠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교육이나 한국 문화 체험 등에 참여하는 선주민은 많지만 재능 기부 스포츠는 다르다. 많은 농구 팀들이 농구단 출신 중국이나 한국 가정 출신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농구를 한다. 원인은 이주민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농구는 이주민과 선주민 만나는 곳 그날, 이주민 스포츠에 관심 없어 개인 피치나 기업 후원에만 의존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고민 적어

스포츠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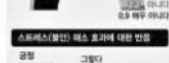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을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다.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가 없다. 3개월만 40%에 달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10%에 달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스포츠 참여 후 이주배경 청소년 어떻게 변했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3년 05월 18일 목요일 A04면 종합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尹 “이주민 사회인식 변화 필요”… 이민청 힘써

동행특위 회의에 이례적 참석
김한길 “국가차원 통합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 정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

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세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

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거듭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행보는 정부 출범 이후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과 연계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선 이민청 설립이 제외됐지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속의 과정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윤균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5월 19일 금요일 A05면 종합

캐나다선 기술인재에 신속 영주권... 지자체가 이민자 스카우트도



캐나다 토론토의 유니온 기차역 앞 거리를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 캐나다는 연평균 22%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자이크 이민사회'로 불린다.

모자이크 코리아 ④ 이민강국 캐나다의 비결

이달 초 방문한 캐나다 오타와 소재 테크인사이드는 1980년 설립된 세계 적인 반도체 기술, 지식재산권 분석 기관이다. 이곳에서 선임 펠로우로 일하는 최정동 씨(55)는 테크인사이드(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오래 근무했다. 2010년 캐나다로 건너간 이민자이다. 그는 이민자 신분임에도 캐나다에서 전문직을 인정 받고 있다. 이민 전까지 한 번도 해외에서 살아본 적 없는 순수한 한국 토박이인 열이가 달리는 그였지만 캐나다에선 문제가 안됐다.

최씨는 "전문성이 있으면 영어는 와 서 배워도 된다는 것이 이곳 이민정책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근로자와 고급 인력 할 것 없이 그에 맞는 정책지원책도가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윌리엄 출신 텍스드 무우지언 씨(51)는 2000년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 직업은 청소부다. 주로 공방서 건물 청소를 맡고 있다. 계속된 저임금 근로자에 속하지만 연봉도 높다. 두 자녀가 수준 높은 캐나다 교육을 무상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우지언 씨는 "윌리엄에서 내 술의 정수가 10점 만점에 5점이었다면 캐나다에선 8점 이상"이라 웃었다.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이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971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다문화주의였다. 일명 '피에르 트뤼도 선언'이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상징으로 불리 는 피에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다 른 어원인 스튜어트 트뤼도 현 총리의 아버 지다.

이민자 선별에서 입학, 정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신속입국제 도(Express Entry)'가 캐나다 이민 제도의 핵심이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에 한해 적용되는 우선 선발 제도다. 언어 능력·교육 수준·종사직군·연령 등 점 수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교육점차도 졸업한 후 1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1년이 면 영주권이 나온다. 이후 5년이 지나 면 시민권도 전환이 쉽다. 시민권 취득 역시 특별한 방법의 정복만 있으면

가능하다. 캐나다 이민부 관계 자는 이에 대해 "우리 이민정책의 대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언어시험은 물론 단계별 교육과정 평가와 소득·자산 기준까지 까다로운 것들을 들어서는 한국의 영주권 발급 과 대비된다. 캐나다에서는 유학생들 도 졸업한 후 1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1년이 면 영주권이 나온다. 이후 5년이 지나 면 시민권도 전환이 쉽다. 시민권 취득 역시 특별한 방법의 정복만 있으면

가능하다. 캐나다 이민부 관계 자는 이에 대해 "우리 이민정책의 대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실상 100% 통과되는 게 현지 이민자 들 때문이다.

계속된 근로자들의 취업과 복지 전 장은 더욱 간단했다. 어떤 업종이든 가 능하다. 최씨는 "공무원이나 보안 관 련 업종을 제외하면 이민자들이 취업 하지 못할 곳은 없다"고 전했다. 건설·도목업의 경우 캐나다도 인력난이 심 각하기 때문에 계속된 근로자가 일할 곳은 넘쳐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캐나다 의회는 지 난해 8월 16일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속이민제 개정안(C-19)을 통과시켰다. 기존 일괄적인 점수제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기술이나 교육

연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필요할 경 우 별도 그룹으로 분리해 그 안에서 점 수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시켰다. 간호 사 직군이 부족하면 영주권 신청자 중 간호사들끼리만 그룹으로 묶어 평가 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고급 인력을 유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민 개 편을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가 로 20만~22만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맞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또다른 축은 '주 정부지명제(Provincial Nominee Program)'다. 캐나다 내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지역 내 노동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기반해 필요한 인력 을 어떤 자원에서 중해서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일종의 '스카우트' 제도다. 해당 지역 노동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저 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도 예방하는 '일 식이조'의 정책으로 꼽힌다. 지명된 지원자는 점수제에서 최대 600점의 가산 점을 얻게 되며 영주권 획득 시 매우 유리 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캐나다도 1980년대 초 점수제를 도입하면서 고급 인력 유치를 이민정책 을 전환했다. 다문화주의 선언으로 인 한 기존 백인 위주에서 전 세계로 확 대된 것이다. 캐나다가 신속입국제도, 주정부지명제 등 사실상 '이민자 트릭' 제도를 속속 시행하면서 이민자 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캐나다 이민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은 55%에 시혜단체가 이민자들의 구직, 주거, 언어교육 등을 위해 전폭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이 정책 프로그램의 도움을 본 은 이민자는 12만8000명이었다.

오타와-토론토 일출을 가리



07 주요 언론보도

The JoongAng

2023년 05월 23일 화요일 009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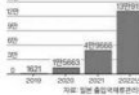
‘이민 오고 싶은 나라로’ 일본의 몸부림

이제는 이민 시대

서울산 고령화 일본, 생산인구 급감
외국인 이직 허용-체류기간 폐지 등
일본 확보 위해 이민제도 혁신 나서
현장선 “한국도 놀라 다 재를 뒀해”

일본 ‘특정기능 비자’ 1년 자격자 급증

비자 취득 후 1년 이내 취업 가능, 1년 만료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개호요양시설 '니노미야'에서 요양사로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후지코와 이케노, 나오키와 후지코와 이케노, 마키 크리스티안스, 유키코, 미키 나카모리, 유키코. 도쿄=이영근 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The JoongAng

2023년 05월 23일 화요일 009면 종합

일본 “외국노동자 무제한 체류비자 확대”... 가족동반도 가능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개호요양시설 '니노미야'에서 요양사로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후지코와 이케노, 나오키와 후지코와 이케노, 마키 크리스티안스, 유키코, 미키 나카모리, 유키코. 도쿄=이영근 기자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3월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일본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민법 개정 후 이민이 가능해진 것
“한국도 배척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The JoongAng

2023년 05월 23일 화요일 009면 종합

“노동 부족, 출산율 높여 해결하려면 15년 넘게 걸려”

사사키 일본 초대 이민청장 조연

“외국인 받아들이는 생각 넘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논의해야”

“외국인을 지역공동체의 이웃으로 끌어

안고, 일본 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일본 이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사사키 쇼코(佐々木 幸子·61살) 일

본 초대 출입국대류관리청장은 “심

각한 노동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도 이민정책을 놓고 국민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를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区)의 한 카

페에서 만났다.

-일본이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편에 나

선 이유는.

-“그만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서다.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다”

-한국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저

출산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의 출산율(0.78명)이 일본

(1.27명)보다 훨씬 낮다는 건 알고 있

다.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 출산율과 연결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출산율

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5년 이

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노동

력 부족은 미래가 아닌 현

실의 문제다. 사급대 대

해야 한다.”

-이민정책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무조건 싫다” ‘인력’이 부

족하니 무조건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식의 무책임한 논쟁을 넘어야 한다. 외

국인이 싫다면 왜 싫은지, 어떻게 받아

들어야 공생할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

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이민 후유

증을 최소화한다.”

-일본이 꿈꾸는 이민사회는.

“다문화 공생사회다. 최근 일본에서

는 단일민족 국가란 용어를 잘 안 쓴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방

침은 정해졌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

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쿄=이태윤·이영근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The JoongAng

2022년 05월 24일 수요일 09:09 독집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인데,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검증된 외국인도 ‘이민 빚’

영주권 빨리 따려면 대학 나오고
소득 8500만원 이상 돼야 가능
영주권자 비율, 한국 8% 일본 28%

정작된 이민정책이 불법체류 양산
2017년 25만명 → 올 41만명 급증

한·일 영주권자 비율

단위: %, 2022년 기준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 8%

일본: 28%

“한국에서 15년간 요리사로 일했는데,

이제 와서 대학 졸업장을 따 오라니 어

이가 없지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뷔티크에

음식점에서 만난 세로달 아카키(34)는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 그는 오랜 고

민 끝에 올해 초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다짐했다.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준전문인력(7-4) 비자를 이미 보유

하고 있지만, 때마침 경산해야 하는 계

실였다. 최근의 뷔티크에 대치전도 그

의 경산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영주권

은 “학벌”과 “연봉”의 장벽 앞에서 막히

고 말았다.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안내하던 행정사는

그에게 “일반영주권(F-5-1)을 받으

게 따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반영주권 취득

에 필요한 소득 기준은 “한국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022년 4220만원의 공준

이상”이었다. 세로달은 “5년간 세금 한

번 납은한 적 없고, 성실히 일했는데도 요

리사가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가. 한국

인 중에서도 34세에 8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부동산업 외국인도 ‘이민 빚’

“이민 시대”를 준비하려면 이미 국내

로 들어온 외국인의 적응을 돕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세로달처럼 “검증된” 외

국인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불법 체류자를 줄여 불필요한 비용이나

검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 정책은 여전히 규

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의 주

무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도 이와 무관

치 않다. 김도균 전 제주출입국·외국인

청장은 “비자를 설계하는 이민 정책이

‘누가 DNA를 가진 법무부의 결이 맞

지 없는 측면이 강하다”며 “검정하 어떤

정책을 넣어 실현 가능한 ‘영주(定住)



뷔티크에 국적의 요리사 세로달 아카키가 근무 중인 음식점에서 요리하고 있다. 한국 체류 15년째인 그는 손님에게 “좋은 밥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등 능숙한 한국어 솜씨를 뽐냈다. 이영근 기자

사다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가 관리하는 현행 비자

제에서 외국인의 영주까지 가려면 합

계다. 대분류인 37개 소분류로는

25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제도를 외국

인이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안이 행정사는 “한국에

10년, 20년 넘게 거주한 인력이 높은 비

자 문턱 때문에 좌절할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체류 외국인 224

만여 명 중 영주권자는 17만여 명으로

7.8%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해 총 체류 외국인 307만여 명 중 영주

권자가 86만여 명(28%)에 이른다. 일본

은 소득 요건도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교적 합리적이다. 보

통 연 소득 3000~4000(2000만원) 이상

이면 충분하다.

법무부가 2017년 아산 차게 도입한

‘외국인 숙련기술인력 특수비자’ 제

도도 ‘유망 DNA’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었다. 비숙련 취업이민제도(F-9-1)

10-11-2로 들어온 외국인의 소득·자

격증·특허·한국어 능력에서 일정 점

수를 확보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

는 준숙련기술(F-7-4) 비자로 전환해 주

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0.5%(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100%

중 한 명도 안 되는 비율이었던 제도의

실용성을 의심해야 한다. 관료들의 탁상

행정의 제도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자학박자가 많은 데다 한국이

활용도가 낮은 입출종사자에게는

불리하다. 현행별 제도 유연화 필요성

이 제기되는 이유다. 34급 유급자 선

진격(4024)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로

중국어 전월 리자(43)를 내보내야 하

는 처지다. 김재는 “중국에서도 별일

다 없어서 처음부터 일을 할했다. 이

만한 신원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일이 손에 익을 만

하면 내보내야 한다”는 불만이 많다. 이

런 측면에서 주목받는 게 ‘제1산업 외

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제도다. 대학

이 외국 한자에서 용량 급형 등 주력산

업에 취업한 외국인을 모집한 외국에

서 2년간 맞춤형 인력으로 키워낸 국

가부리산업진흥센터가 검증 후 유망 비

자(D-2)에서 숙련기술인력(7-4) 비

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해 준다. 체류 기

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비자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도·외국

인보다 한국어와 기술 수준이 높아 기

업의 만족도가 높다. 문제는 정부 예산

자원이 전혀 없는 데다 초기 입국 관련

자재가 높아 시행 폭이 제한된다. 노력

출입생은 660명씩 불과하다는 점이다.

“준숙련 이상 외국 인력 정착 도모”

물론 국제 문제가 대수는 아니다. 실

용론(현 한국이민정책) 전복대 사회

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가

정착할 경우 복지 비용 증가와 사회적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숙련 이상 인력이 정착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유망외국인 선별

적인 이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종근 의원도 경제학과 교수

는 “이민자 유입으로 건설 분야 지속

발전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조

업 등 다른 분야에는 영향이 미미했다”

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외국인을 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반론도 있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17년 25만여 명에서 지난 3월 41

만여 명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김도

균 전 청장은 “규제권 강화했다가 시장

경제에 심대한 피해”라고 경고했다.

이영근 기자

※ 본 기획 기사는 정부보조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육아 쉽게” vs “수요 의문”

“저출산 해결책” 하반기 시범사업
“맞벌이 부부 출산을 늘릴” 기대속
“언어문제 등 실효성 부족” 반론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비자가 허용되는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석계 대통령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의 비공개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제도 및 임금 형평성 문제, 실효성, 인권 유린 우려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 맞벌이 늘고 가사 근로자는 줄고

25일 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기사 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고용부는 기사·도봉 서비스 근로자에게 비전문취업(F-4) 비자를 주는 방안과 일정 시간의 취업 교육을 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F-2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 기사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인력이 사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해외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비교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도입 시기	1972년	1978년	1992년	2017년
가사 근로자 출신 국가	북한 등 일부 국가 제한	12개국만 허용	없음	없음
가사 근로자 자격 기준	없음	기초학력 이수 함	없음	언어능력, 가사 능력 등
이류화 차별 기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일정 자산 및 소득 필요, 이종 무부	연차, 기공제 유무	없음
이류화 및 입국비 부담 추가 부담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해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권력 단순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38.7% 줄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현재 근로자의 92.3%에 달한다.

반면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사 서비스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인력의 부족과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했다. 2017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6개 특구 지역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신국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제한을 둔

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에게도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 물품 기대 수준 높아...수요조사 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 인력 도입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내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남 토론회에 참석한 최명기 가사·물류비즈니스 위원장은 "국내 가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내국인 중·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연 정부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에 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이 돌봄 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언어도 잘 못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실용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콩 등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줄속 도입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고흥부는 가급적 근로자들의 출신국별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로 제한하고 관련 경력 및 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 능력과 범의 이해' 같은 자격 요건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부와 함께 사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서울경제

2023년 05월 31일 수요일 A04면 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5개월→8개월로 연장...농어촌 인력난 해소 '숨통'

농식품·법무부 개선안 발표

1회 한해 3개월 내 연장 허용
채류중인 근로자도 소급적용
이탈 방지·적용 지원도 강화

농·어업 분야와 밀접한 부문을 복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원을 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한다. 외국인 자원을 근로하는 표준·수확기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
도록 한 청정 3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해



한정환 의원은 연두부 장관과 정경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회담을 하고 있다. 오승환 기자

다. 이미 국회로 들어와 제정하고 있는
외국인 제철 근로자도 3개월 추가 연장
배려해 주길 바란다. 이 같은 조치는

서 게릴라로 변신했다. 그는 장교로
 임명된 뒤 국군을 지키면서 임원 생활에
 전념하며 국군을 복귀하는 임무를
 맡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고장조
 다.

또 정부부는 체류 기간 연장 조치와 비정
확대로 인해 근무가 늘어는 때 따른 이
심기부터 수확까지 인력 수급에 커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보 사색을 구축하고는 '아랍 봄'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1. **지자체별 예산·회계·재정·세무·공공기관** 관련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계열 근로 프로그램에는 근로자 자
재와 계열 근로 관련 영향요소(MCI)를
제외한 외국 자재세의 주된 스폰서 이인
자 본국의 가격 및 세율 차이(현직 C
대우이코프) 스폰서(세율, 유류, 이윤
수, 국적, 통관, 통관 비용, 손익
동향)을 요인으로 갖춘 국내 세무 외국인의
종류가 가능하다. 합당성은 자체 비용
과 산정이 계열 근로자 2인 68명
(124개 자회사)에 대해 21일 추가
로인 288명(1,077개 자회사)에 해당
했다.

농식품부는 제철 근로작가 합법화·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제철 근로작가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유영민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6월

서울신문

2023년 06월 02일 금요일 010면 전국



해외 인재 944명 지역 주민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결실

9개 시도에 최대 1500명 배정
한국 학위·소득·언어 능력 갖춰
5년 의무 거주... 일손 늘어 환영
경북 100%-전북 80% 인원 확보

전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유학생 등 322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은 전북도 내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지역 우수 인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제시의 경우 125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역 특장차 업체 등은 일손 부족 현상을 덜게 돼 지자체와 업체가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에서 장기 체류에 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선순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9개 시도 27개 시군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1500명을 배정받았다. 인구 소멸 지역인 이들 지자체는 최근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944명을 확보해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하는 조건이다.

이들은 한국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2954만 21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부인과 자녀 등 가족 동반도 가능해 체류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특히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규정 외에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부산, 충남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배정 현황

광역(기초)	선발	배정 (단위: 명)
부산(3)	19	(110)
대구(1)	13	(20)
경기(2)	42	(80)
충북(2)	115	(170)
충남(2)	14	(150)
전북(6)		322 (400)
전남(4)	102	(200)
경북(5)		290 (290)
경남(1)	27	(80)

경북의 경우 올해 배정받은 290명을 모두 선발했다. 영주 55명, 의성 144명, 영천 33명, 고령 17명, 성주 41명이 새로운 주민으로 등록됐다.

전북도 올해 쿼터량 400명 가운데 80.5%인 322명을 선발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인원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와 취업 여건이 좋은 김제(125명), 정읍(59명), 고창(43명), 부안(52명) 등이 인기다.

충북도 목표 인원인 170명의 68%인 115명을 선발했고 경기는 80명 중 4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전남도 200명을 배정받아 영암 92명, 해남 10명 등 102명을 선발했다.

반면 보령과 예산에 75명씩 150명을 배정받은 충남은 1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교장 추천,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 등 별도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0명을 배정받은 부산도 19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법무부 요건 외에 부산지역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학교 추천 등 별도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비자 발급 인원이 많아지고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형 이민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6월 07일 수요일 A05면 종합

“범죄 느는것 아니냐” 막연한 불안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 발목잡아“위험한 사회 물려주기 싫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게 범죄

조선족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중국계 불법체류자 왕리 웨이의 안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필리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양주여 중생 살인 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만행들이다.

살인은 물론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피의자 중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도 많다. 지난 4월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됐는데 무려 68명이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모 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이민자들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범죄였다. 이는 이민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주부 정 모씨
외국인이 많은
많은데 이민자

해질 것 같다”며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 ‘다문화정책반대’는 회원이 3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다문화 반대 단체다. 카페 공지 사항에는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여 서민과 저임금 경정을 유발했다”며 “다문화라는 미명으로 외국인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준다”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 이민선진국인 해외에서도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 등은 피할 수 없는 이민사회의 그늘이다.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시도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영국에 도착한 후 4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 이주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스웨

서울신문

2023년 06월 07일 수요일 012면 전국

“지방소멸 막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작전

경북도지사, 인도 델리대 등 방문
도지사 특강·유학생 유치 설명회

충남·중앙아시아 5개국 등 협력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도
충남 경제인구 2만명 증가 기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설명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일 인도 델리대 등을 방문한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지사 특강과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보기술(IT)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유학생 1만명 유치를 지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많은 기회, 좋은 환경, 코리아 드림을 주제로 젊은이들이 경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도 델리대에서 코리안 드림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의 강연을 펼쳤다. 강연장인 델리대 강당 600석이 현지 대학생들과 교직원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어진 유학 설명회에서는 경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입주부터 취업·정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경북만의 특화된 외국인 지원 정책과 지역 대학의 우수한 학위·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네트워킹

제도 경북 유학박람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충남도·천안시·아산시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5개국 주안 대사관, 고원도 동부 천안지청,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0개 기관도 최근 천문대 야산캠퍼스에서 ‘충남·중앙아시아 지역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키르

吉斯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 지역 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선호한다. 고려인이 3만여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학생을 선발해 한국 관광 대학에 파견하고 파견 학생 지도와 연구·강의를 위한 교직원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학생과 산업 연구 등 충남 경제 인구가 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이브라힘 술탄을 만나 양 지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기업 간 교류 및 유학생 파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브라힘 조호르주 술탄은 내년 1월 말레이시아에 국한해 즉위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라이믹스(IPEF)의 핵심 국가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8.7%를 기록했다. 안동김성호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3년 06월 08일 목요일 019면 기획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마약·불법취업 브로커 등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단속에는 법무부와 함께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일간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절차 위반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바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마약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체류절차를 다잡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외국인 체류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세웠으며, 그 핵심 내용은 2023년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것

매일경제

2023년 06월 19일 월요일 A01면 종합

이민자 비율 2배로 늘리면
10년간 ‘경제효과’ 446조

모자이크 코리아

취업자 연평균 22만명 감소
외국인 고숙련 인력 적극 유치해
한국경제 ‘성장절벽’ 넘어야

미국인 로저 씨(45)는 지난해 한국의 중견 바이오 업체로 이직했다.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바이오 전문가인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 두둑한 성과급 보장도 한몫했지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근무 여건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다만 로저 씨는 “초기 정착하는 데 생활, 세금, 금융, 자녀 교육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전문인력 이민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명을 넘어섰지만 전문인력 비중은 5만명 수준(2.6%)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87만7000여 명인데, 저숙련 인력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39만8621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A4면**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선 단계적으로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력 유치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인력 이민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매년 20만~30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인력을 비롯한 이민자를 대폭 늘려 ‘성장절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22만3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44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총 446조원의 경제효과를 잃게 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한국으로선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이민자를 확대하면 취업자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

현재 4.5%에 불과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려 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선 매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1% 수준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민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를 주요 5개국(G5) 평균인 11.9%까지 끌어올리면 매년 65조원, 10년간 650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성현·정지성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국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요일 011면 종합

가족관계등록법상 한계
미등록 아동 사례 수도 두둑미혼·혼외 부모, 아이 등록 어려워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 의무 없어 문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당시 12세)은 2019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3~4년 전에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법적 아버지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서였다.

A군은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아이였는데,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긴 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안 남편은 이혼 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친자관계를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A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했지만 어머니는 A군을 시설에 맡긴 뒤 연락이 끊겼다. A군은 한참 지나서야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 '그림자 아이'로 지내야 했다.

A군처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미등록 아동 사례가 비밀 비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때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에 달했다.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활동

하는 김희진 변호사는 "출생 미등록 아이 중에는 미혼부모나 혼외출생 등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한계 때문에 진실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가 태어난 즉시 부모 정보가 온전히 기록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국적 아동 역시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 출생신고 의무가 없다. 이번 감사원 조사대상에서도 병원에서 신생아 임시번호는 발급됐지만 출생신고를 안 된 전체 6000여명 가운데 외국 국적 아동 4000여명은 제외됐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서 버려진 아이의 경우 출생신고까지 평균 2~3개월 걸리고, 친생부 모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소요된다. 그사이 아이들은 행정적으로 없는 존재다 보니 필수 의료서비스나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고원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사회가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출생신고라는 시작점이 없는 아이들은 우연히 발견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b.co.kr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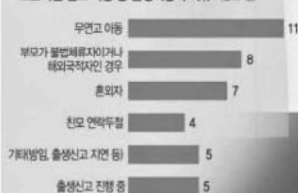
2023년 06월 21일 수요일
020면 사람들“혼재된 이주민 용어 정비로”
국민통합위 동행 특별위 토론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20일 이주민 관련 혼재된 용어를 정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정책제안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지난 3월 출범 후 논의의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부처별·대상별 용어 혼용으로 인해 (이주민 관련) 정책 집행 혼선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 '이민자', '귀화자' 등 여러 용어가 혼재돼 관련 정책에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이어 체계적인 정책 조율과 부처 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총괄 책임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제 이주배경주민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발전적인 논의가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보호시설 입소 아동 중 출생미등록 사유 (단위: 건)



*2020년 1월~2022년 9월 입소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東亞日報

2023년 06월 21일 수요일 A01면 종합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차단”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野 “국가 미래 책임지는 자세 아쉬워”
金 “상속세 인하 등 조세개혁 착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20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에 거주 중인 약 10만 명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재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빚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



가”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소평 자금으로 줄줄 새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대 50% 상속세와 최대 26.4%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동종주 기자 djc@donga.com

▶ A5면에 관련기사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3년 06월 23일 금요일 019면 기획

법무부 비자 개선 “유학생 국내 정착 유도”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유학 비자 발급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고 학위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유학생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재정능력이 학위과정

은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으로 추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학위과정은 2만달러(약2600만원), 지방대 1만8000달러(약2330만원), 어학연수생은 1만달러(약1300만원) 이상 재정능력을 갖춰야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유학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전문취업(E-10)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

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간제취업 제도도 개선했다. 이밖에 방학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분홍 기자 bhkoo@naeil.com

서울경제

2023년 06월 27일 화요일 A08면 정치

정부 ‘외국인력 관리체계’ 한 곳에 모은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력 통합 관리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조선·건설업이나 중소기업, 농촌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1월 3일자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처리’ 참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현대수국무총리와외의주례 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외국인력을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실 산

하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주무총리실 산하 ‘통합관리 TF’ 꾸려 대통령실 “이민청 설치도 검토중”

하에 외국 인력 통합 관리 TF를 꾸리고 관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외국 인력 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외국 인력 관리 담당 부서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절성 농촌 인력은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수급을 주도한다”며 “관련 선원 위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이 모든 인력들에 대한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영역마다 개별 부처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 효과적인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조율하고 통합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총리실 산하에 TF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최근 불거진 ‘외국인 기사근로자 제도’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 곳은 산업 현장과 농촌”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민청 설치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에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정부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산업·농촌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자 발급 요건을 근무 경력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올해 5000명으로 예정된 선방을 조기 마무리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가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겨레

2023년 06월 28일 수요일 002면 종합

엄마 성·본 따르게된 이주여성 아들 ‘부성우선주의’ 갇힌 이례적 판결, 왜?

법원, 성·본 변경 허가

“‘밀양 박씨’는 수백만명이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대를 이어가요. ‘양주 박씨’의 시조인 우리 아내의 대는 누가 잇나요?”

아들의 성·본을 베트남 이주인 출신인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박화연(29세)의 한국인 남편 박규정(63세)은 청구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혼인 관계 중에, 그것도 자녀의 성·본을 이주여성인 ‘엄마’ 것으로 바꾼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행 민법상 사람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2005년 호주제 폐지 뒤 민법이 바뀌면서,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엄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엄마의 성·본을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랐다면 중간에 변경하기 매우 어렵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사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따져 성·본 변경을 허가한다.

베트남 하노이대학을 다니던 베트남인 화연씨는 2016년 베트남 여행을 온 규정씨를 만나 1년 뒤 결혼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가정을 꾸리며 2018년 1월 아들을 낳았다. 2021년 화연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된 뒤 본관을 ‘양주’로 정했다.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성·본’을 새로 만드는 걸 허가한다. 부부는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웠을 때를 제외하면 겨울마다 베트남에서 몇달씩 지냈다. 아이가 베트남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 유치원에도 보냈다.

지난 2월 규정씨는 아내에게 아들의 성·본을 바꾸고 먼저 제안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늘 아내를 존경한다”며 “한국에 와서 정착한 아내의 ‘양주 박씨’의 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연씨도 아들에게 베트남인의 뿌리를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성·본 변경 신청에 동의했다.

부부는 법원에 가서야 이주여성의 자녀가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은 전례가 없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창성·창본을 할 때도 어렵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법원 장구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막혔다. 법원 장구 직원이나 법률 상담 변호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왕좌왕했다.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께 간 아들을 보여주며 규정씨는 말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

베트남 이주 여성, 결혼 뒤 귀화 양주를 본관으로 새 성·본 지어 남편이 아내에 먼저 대물림 제안 “아들이 분명한 정체성 갖기를”

현행 민법상 부성우선주의가 원칙 혼인신고 때 아니면 변경 어렵지만 법원, 아들 궁지가 더 이익이라 판단 “개인 존엄·양성평등 헌법에 부합”

여성계, 법원 판결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제도 폐지를” 지적

은 저와 타국에서 결혼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아내입니다. 자신의 성·본을 아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엄마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규정씨는 성·본 변경 허가 청구서에 “아들이 엄마의 성·본을 따름으로써 베트남 이주민의 한국인 후손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싶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도 이겨내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 19일 외정부지법 가사1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부성우선주의보다는 아들이 베트남 엄마의 정체성을 이어감으로써 궁지와 자부심을 얻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들의 성·본 변경이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도움

이 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들의 성은 ‘밀양 박씨’에서 엄마 성·본을 따라 ‘양주 박씨’로 바뀌었다.

이 판사는 허가 결정을 하면서 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차별을 걱정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게 오랜 관습인 한국 사회에서 엄마의 성·본을 따른 자녀에게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 성·본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이상한 호기심과 편견이 부성우선주의를 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성·본 변경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우선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돼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여성계에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본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던 초경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법원 결정은 아버지의 본관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 부성우선주의를 흔든 것으로 아버지와 성·본이 같아야 사회 주류로 보는 편견을 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상생활에서 본이 갖는 의미는 거의 없다.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 의식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표시되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오면서 기자 koveletter@hani.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6월 29일 목요일 A05면 종합

외국인 숙련공 을 15배 파격 증원 조선·플랜트 등 '인맥경화'에 숨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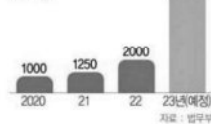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대폭 수혈
전한 요건 근무기간 단축에도
인력부족 해소 안돼 정부 결단
중소기업 '가뭄에 단비' 환영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연내 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기존 선발 규모로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요청이 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E-7-4)제도'는 오랜 기간 국내에서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020년 1000명에서 올해 5000명까지 3년 새 쿼터를 5배 늘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국내 근무 기간 기준이 5년에 달하는 등 전환 요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법무부가 요건 완화, 쿼터 확대 등 숙련기능인력제도 개선에 착수한 이유다.

법무부는 앞서 체류 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자국민 고용 인원의 20%(뿌리산업·농축어업·비수도권 제조 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현황
(단위: 명)



해로 예정됐던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다음 달까지 앞당겨 선발한다.

숙련기능인력은 2020년 1000명에서 이듬해 1250명,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 바 있다. 올해 5000명까지 꾸준히 쿼터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외국 숙련기능인력 수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결국 지난해보다 규모를 15배가량

증인력 수혈이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숙련기능인력(E-7)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안정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숙련 기술 인력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E-7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세계일보

2023년 06월 29일 목요일
011면 사회

“외국인 숙련공 쿼터 2000명→3만명으로”

한동훈, 재정전략회의서 밝혀
“계절 근로체류 5개월+3개월”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해소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계절 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朝鮮日報

2023년 06월 30일 금요일
A12면 사회

외국인 투자이민 하한, 5억서 15억으로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국내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며 이들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 지방선거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기준을 2~3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이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 이민'도 투자 금액 기준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반면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은퇴 투자 이민'은 폐

지된다. 새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한국 투자 이민을 하라며 지원자를 모으는 중개 업체들도 성행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익사업 투자 이민이 허용된 외국인 전체(1799명) 가운데 중국인(1274명)이 7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욱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7월

주요보도

2023년 07월 07일 목요일 A02면 종합

800만원에 산땅 9450만원에 판 중국인... 외국인 이상거래 437건

국토부, 6년치 토지거래 조사·특별
명목상·분양권 전세매각 위반 등
위법사례, 중국인 50% 미국인 22%
'검은 머리 외국인' 상당수 포함된 듯

■1. 외국인 A씨는 2017년 자신이 태어난
일본과 일본 땅도 같이 살면서 있는 땅을 매
매했다. 현재도 가격은 8000만원 뿐, 땅값 A씨는
자신을 가진 20%에 1년 내 매매했다. 국토교통
부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도 4000만원 땅을 두
두 명만에서 매매했다. 자의의 개인 돈 한 번도
아무리 많은 돈, 국토부 관제하는 '자영업' 중
20%로, 국토부 땅을 매매했다. 부동산
것으로 의심과 국책에 포함됐다"고 했다.

■2. 중국인 B씨는 2018년 중국인 C씨에게
땅 10000만원 땅을 팔기 위해 배우자도 보유한
지다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사에서 토지 소유권 C씨가 아닌 배우자인 중국
인 D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C씨가 실제 토지 소유자인지 확인한 D씨에게
땅을 팔라선하지 의뢰와 경찰청에 포함됐다. 국
토부 관제하는 '자영업' 중 20%로, 국토부
것으로 의심과 국책에 포함됐다"고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에 의해
매각된 토지 거래 30만 건이 넘는 땅을 외국
인이 매매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중국인 50%,
미국인 22%, 일본인 10%, 기타 18%로
분포했다. 국토부는 특히 부동산
업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외국인
중지 하에서 토지 매매를 10000만원에 매
수한 뒤, 10000만원에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사태 중에는 일정한 수익이 없는 한 20%
이내 한국인 40% 밖에 안 되는 토지를 12%
8000만원에 매매했다. 중국인 50%, 미국인 22%,
일본인 10%, 기타 18%로 분포했다. 국토부는
특히 부동산업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외국인 중지 하에서 토지 매매를 10000만원에
매수한 뒤, 10000만원에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포함했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전체
거래 대비 외국인 수도권 등 개발이 집중
지역에서는 이런 거래가 가격을 폭락할 수 있
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록지를 발간했고 477건의 위법
사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 129만8000건 중 이
상 거래 4000건을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 토지
거래를 국토부가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
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 4000건 중 2017년
의 위법 사례 4000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거래는 4000건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운영
행위 규정에도 제해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
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매일경제

2023년 07월 06일 목요일 A02면 종합

“아시아 통합경제권 구축... 유럽처럼 무비자 이동을”

서울서 아시아 비즈니스서밋
전경련·게이단련 공동주최
한일 등 13개 경제단체 참여
인적교류·공급망 강화 성명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13개 경제단체가 인적 교류 확대
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다.

5일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게이단련과 공동으로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행사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경련과 게
이단련을 비롯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
원회, 인도산업연맹, 인도네시아상
회소,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태국
경제인연합회, 미얀마상공회의소 등
13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번영을 향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 이
해·신뢰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를 꼽았다. 지역 내 노동 이동을 촉진



아시아 13개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이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지배 부러 인도산업연맹 회장, 최창호, 도우라 마사카즈 게이단련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최무대행, 최무대행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송환 기자

회소,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태국
경제인연합회, 미얀마상공회의소 등
13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번영을 향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 이
해·신뢰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를 꼽았다. 지역 내 노동 이동을 촉진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번영을 향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 이
해·신뢰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를 꼽았다. 지역 내 노동 이동을 촉진

시아 국가 간 이동이 유럽 수준만큼 편
리해진다면 아시아 경제권 통합은 아
니라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비자 국경 이동의 문
제점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
간다면 장기적으로 아시아도 유럽과
같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전자여
권 등을 활용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아시아 주요 도시 무비자 시범지역 지
정 △기업인 비자 면제 등이다. 현재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중국·인도·미
얀마 등의 경우 비자가 필요하다.

공동성명에는 인적·자원 교류 외에
도 △경제 성장과 탈탄소 사회로의 여
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촉진 △법치
기반 국제경제 질서 재구축 △핵심 자
원에 대한 아시아 경제계의 공급망 구
축 시스템 모색 등이 포함됐다.

최승환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朝鮮日報

2023년 07월 06일 목요일
A05면 종합“외국 이주민 인구
늘어야 한다” 42%

“줄어야” 응답은 22% 불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민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야 한다”는 사람의 2배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 4~5월 만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이주민 인구가 늘어ना야 한다”는 응답이 41.9%였다. 반대로 이주민이 줄어야 한다는 응답은 22.3%였다. 이주민 인구가 현재와 동일해야 한다는 답변은 35.9%였다. 이 조사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의뢰로 진행됐다.

다수 국민들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이주민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다양한 배경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다” (80.4%), “한국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번영한 사회

‘이주민 늘어야 하나 줄어야 하나’ 국민 인식 조사



다” (78.2%), “한국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다” (76.3%) 등 항목에 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도 비교적 느그러웠다. “한국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세금을 냈다면 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귀화해야 한다” (26.3%),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24.3%) 순이었다.

이미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흔히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상가·길거리에서 이주민을 본 빈도”를 묻자 주 1회 이상 마주친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을 넘었다. 매일 만난다는 사람도 13.3%였다. 아예 만날 일이 없다는 답변은 9.4%에 그쳤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주민 통합 정책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근욱 기자

朝鮮日報

2023년 07월 10일 월요일
A10면 사회인천공항 출국장
안면 인식으로 패스

법무부 심사 댄 여권 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달 말부터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사전 등록한 안면 인식 정보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면 인식 기술로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하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달 말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도입에 앞서 10일부터 안면 인식 정보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행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한 뒤,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한 후 출국장과 탑승구 게이트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안면 인식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승객을 위한 전용 출국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 출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여권을 꺼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ICN 스마트패스’를 검색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등록하고 안내에 따라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면 된다.

곽재권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7월 06일 목요일 A27면 사회

외국인 근로자 '지역 내 이직'만 허용

〈E-9 비자〉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 정책 변경안

9월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권역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사용자(기업 등)가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쉬워진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넓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문 외국 인력(E-9) 사업장 제도 변경안과 숙소비 기준 및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현재 업종만 적용되던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에 지역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	업종 내	업종+지역 내
내국인 구인 노력	7~14일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이 발생시 면제
숙소비 징수 상한	월 통상임금 8~20%	지역 시세 고려
장기근속 지원	없음	장기근속특례 산설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범위에 지역 추가
인력난 심한 업종, 이직 더 제한
1년 이상 근무 땀 재입국 특례
노동계선 "기본권 제한" 비판

임금이 높은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비수도권의 구인난이 심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력 이동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한 세부 업종은 업종 내에서만 변경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고용부는 월 통상임금의 8~20%로 설정한 숙소비 징수 상한을 낮추고 지역 시세별로 노사가 숙소비를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4년 10개월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주어지던 재입국 특례 기준을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또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하면 출국할 필요 없이 계속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사는 사업장 변경제를 두고 늘 대립해왔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구인난에 승통을 띄웠다고 반기면서도 아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 금지나 약의적 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관계자는 "권역별 지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은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판하는 고

朝鮮日報

2023년 07월 07일 금요일 B03면 경제종합

외국인 근로자 입국일, 최소 한달 전엔 안다

중企에 한주전 통보되던 입국정보
부처 정보 공유 통해 시스템 개선

울산에 있는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체 린노와미늄의 이세영 대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6명 도입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국 소식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직원들이 언제쯤 입국하는지 알아야 숙소도 미리 마련하고 작업 일정도 확정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정보가 전혀 없으니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는 신청 이후 두세 달 정도 걸린다. 하지만 정확한 입국 날짜는 1~2주 전에야 통보되기 때문

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예정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총 11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고용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법무부가 고용부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여부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이런 탓에 고용부조차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여부를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뒤에야 항공기를 수배해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실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유무즈만이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소기업 유무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관급 위원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 사

항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미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개인 정보를 얻게 되고, 비자 발급 여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비자 포털과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날짜를 미리 확정해 최소 한 달 전 해당 기업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7월 11일 화요일 A10면 경제

한동훈 “외국인 숙련공
3만5천명으로 늘릴 것”

조선현장 찾은 韓 법무장관
인력난 해소 정책지원 약속
“우수 외국 근로자 유치 사활
인력 쿼터 17배로 늘리겠다”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민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을 찾아 숙련인력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쿼터를 17배나 늘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고 연내 이민청 등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장관은 10일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의 당면한 과제 중 인력 문제가 가장 심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 도움을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15만8000급 유조선 등 34척(58억1000만달러 규모)을 수주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2748명에 달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비전문 취업(E-9) 비자인 외국인 근로자 360명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선제 도입·도정 등 특화훈련 과정까지 도입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2000명이었는데,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 LNG선 제작에 쓰이는 자동용접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 연장선상이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10년 뒤 인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LNG선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대표, 외국인 근로자 등과 면담을 했다. 이어 11일에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확대와 관련해 면담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당장 속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으로 지난해 1230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지만 농번기 인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 친환경 기차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7월 12일 수요일 A22면 사회

한동훈, 전남서 이민정책 ‘광폭 행보’

현대삼호중 이어 도청 방문
외국인·이민정책 의견 수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이민 정책과 관련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 특히 취임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다”며 해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해외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지역민과 국민이 잘살게 하고 싶다는 선의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안전하고 잘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올 때 계절근로자 1명을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기업이나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부

한 장관은 전남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10년 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자발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 인력 수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추진은 물론 연이은 연구용역 등 법무부의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안현덕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3년 07월 12일 수요일 002면 종합

『코리아 드림』 외국인 사장 늘었다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만큼 우리 국민이 외국인을 배려하는 사선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진행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가능성' 조사에서 외국인을 '형편한 친구'로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2015년 21.6%에서 지난해 16.6%로 7년 새 5% 포인트

트 하락했다. '이웃'으로 생각한 사람은 같은 기간 35.4%에서 29.8%로 감소했다. 배우자라는 답변 역시 3.9%에서 3분의1 수준인 1.3%로 줄었다. 반면 외국인을 '직장 동료'로 인식한 비율은 31.0%에서 42.3%로 11.3% 포인트 급증했다. 외국인을 알아서 쉽게 만나는 동료로 인식한다는 건 그들을 더는 '특이한 이웃' 정도의 소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만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8.1%에서 10.0%로 소폭 늘면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³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산기 줄었던 외국인 유입은 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외국인 연구는 16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기준 130만명에서 34만명 증가했다. 전체 연구의 3.2% 수준이다. 통계

청은 2040이면 상주 외국인이 216만명으로 늘고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도 고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 외국인 비율은 2012년 33.4%에서 지난해 36.6%로 10년 새 6.8%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외국인은 같은 기간 5.8%에서 12.9%로 7.1%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신문』

2023년 07월 12일 수요일 001면 종합

『코리아 드림』 외국인 사장 늘었다

1년 새 6100명 증가한 4만 3200명
비자 확대 등 창업 벽 뚫고 정착

『코리아 드림』을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이 200만명을 향하는 가운데 자영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서 벗어나 한 명의 고용주로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근 외국인을 배려해야 할 이웃이나 친구라기보다 대등한 위치의 직장동료로 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인구의날을 맞아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기준 6.0%로, 2012년 3.8%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0년 새 2.2%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임금근로자 수는 5만 300명으로 1년 새 6300명(14.3%) 증가했다.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는 지난해 4만 3200명(85.9%)으로 1년 새 6100명(16.4%) 늘었다.

자영업 등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비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

외국인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건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능력 그리고 언어능력까지 향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히 고용되는 것보다 난도가 훨씬 높은 창업의 벽을 뚫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창업 비자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창업 교육도 외국인 자영업자를 늘리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당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까다로운 비자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건 그만큼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이 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준 기자

▶ 2면에 계속/관련기사 2면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세계일보

2023년 07월 13일 목요일 011면 사회

외국인 유입 늘려 '빈 일자리' 21만개 채운다

정부, 제2차 구인난 해소 대책

연구팀 기자, 세종=연용성 기자 ks@segye.com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산·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와 비과세 혜택 확대, 편의 시설 개선 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고용시장의 '마스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1차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운·건설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

해외 인력 쿼터 3만명 추가 확대
비자 요건 완화·고용기준 개편도
건설·제조·수산·자원순환업 중
편의시설 개선·비과세 혜택 지원

19 사태 여파로 2019년(17만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는 현장의 편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능인양성과 연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준을 개편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에서는 근로 조건과 실업급여 개선을 목표로 외항선선과 원양선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

건설업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스마트 기술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외국인 고용제한 기준 개편
제조업	외항선선·원양선선 선원의 근로조건 비과세 확대, 외항선선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개선
수산업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 확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 함선어업인 육성
자원순환업	인력 유입 위한 지역별 거점 구축, 작업 환경의 현행화·개선, 외국 인력 지원

선원의 근로조건 비과세를 확대하고, 신원발령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에 적용,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자원순환업에서는 인쇄 유입을 위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제1차 방안이 잠정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1차 방안 대상 업종인 조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6월 기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산

업의 '원하청 상생협력' 후속 조치로 예정대로 추진하고, 조산업 제작자 희망 공제 사업 산실을 내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E-7(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9(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신규 허용 업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직시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3년 07월 14일 금요일 A12면 경제

한국서 취업·유학... 작년 외국인 입국자 87% ↑



모자이크 코리아

코로나 규제 풀리자 우르르
중국·베트남·태국인이 44%

지난해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7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이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이동자는 11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다. 국제 이동자는 입·출국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머문 기간이

90일을 넘긴 내·외국인을 말한다.

2021년에는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많았지만 작년에는 8만8000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작년 외국인 입국자는 41만3000명으로 87.2% 늘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에 외국인 출국자는 24만5000명으로 7.1%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 때 체류 자격은 취업(3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일반연수, 단기방문, 영주·결혼 이민 순이었다. 취업 입국자는 13만8000명

으로 2배 늘었는데, 특히 지난해 정부가 고용 허가 쿼터를 늘린 E-9 비자 입국자가 8만7000명으로 638.6% 급증했다.

다만 비전문취업(H2)은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5000명),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 등 상위 3개국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3.9%를 차지했다. 중국은 유학·일반연수, 베트남은 영주·결혼 이민, 태국은 단기 체류 자격 입국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외로 떠난 내국인 출국자는 27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인 28.3% 급증했다. 출국한 일자



07 주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23년 07월 14일 금요일 012면 사회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7번째 법원 판결서 승소

법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별도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면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이 있어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려고 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고 파기환송심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외교당국은 확정판결이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상 문제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불복해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유씨의 비자 관련 7번째 법원 판단이다.

판결 확정시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유씨 측은 "비자 발급이 입

세계일보

2023년 07월 17일 월요일 009면 사회

비자 연장?... 밀린 세금 없나 어디 볼까요?

외국인 체납 세금 확인제 성과
작년 징수액 2185억1200만원
누적 5743억·"지법적 납부 견인"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정부가 이른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체납액 2185억여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 체납액 2185억1200만원이 납부됐다. 이 중 2150억3400만원은 자진 납부, 나머지 34억7800만원은 납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206억7500만원)과 비교해 10배 넘

게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주 신고를 한 19세 이상 체류 외국인은 국세·지방세·관세를 낸다. 이 제도는 비자 연장과 연계해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민원을 접수할 때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명령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해 교부한다. 납부 명령에도 체납액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3회 체납 시까지 체류 기간을 최장 6개월씩만 연장하고, 4회까지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행돼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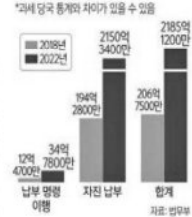
관세청이 협업해 시행 중이다.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의 자발적 세금 납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퍼져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기 전 미리 체납액을 내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또 이 제도로 국고에 들어온 체납액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년간 누적 금액은 5743억100만 원이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2019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구조와 원리는 세금 체납 확인 제도와 같다. 이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340억5600만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운영 실적(단위: 원)

*과세 당국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소속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등 '지방행정체제·부과금' 체납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부와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 증원 등 인프라 개선 환경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7월 17일 월요일 A02면 종합

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정책 만들겠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
출국없이 체류 연장 가능한
전문인력 비자발급 늘리고
한국어 능숙자 우대할 것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 정책을 만들겠다. 특히 전문인력과 한국어 능숙자를 우대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적 이민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이 지난 15일 제주 제비지초등학교에서 제비지 제주포럼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한상의

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한민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출산을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이민 정책에 해당

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 인력 확보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인데 IT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 거주)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우수한 IT 인력도 비숙련 노동자와 비자 트랙이 같은데 차라리 한국에 안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10개월인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달리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출국 없이 지속해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초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발 인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7-4 비자 발급자는 지난해 2000명에 불과했다.

한 장관은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전일 정부 말 1000명여 있는 데 앞으로 연 3만5000명까지 늘리겠다”며 “E-9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검증된 분들에게는 E-7-4 승급 심사 우선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E-9에서 E-7-4로의 승급 인센티브로 한국어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융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가 중요하며 외국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게 해야 한다”면서 “용접을 잘하는 사람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청송윤 기자

The JoongAng

2023년 07월 21일 금요일 014면 종합



외국인 유학생들, 뜨거운 구직 열기 2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한국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원도심 인구감소지역(동구·서구·영도구)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장 추천을 받아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업종을 포함해 16개 지역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송봉근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3년 07월 26일 수요일 A23면 사람들

국가유공자 아버지 묻으려 아들이 한국 못 간다니... 말이 됩니까

재미동포 백정순씨
尹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 탄원서

"아버지를 고국에 인정하려는 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들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하는 천 제제 동료들을 위해 불합리한 법 조항이 고쳐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재미동포 백정순(72)씨는 24일(현지 시각) 한국 방문 길이 막힌 아들이 국가유공자인 신친의 유해를 충북 국립과산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국 법률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한 백씨의 아들(37)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교포 2세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백씨의 아들이 한국을 찾아 안장하길 원하는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75세 나이로 별세한 고(故) 백두현씨가 월남전 참전 용사다. 1965년 백두현씨도 소속으로 월남해 3년간 베트남에서 싸웠다. 1984년 11월 새 생애가 달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의 뉴욕에서 아들을 낳고 길렀다. 백씨는 탄원서에 이렇게 적었다. "난민과 30년간 '적은 개'인 상으로 아낀 정(情)을 문질렀습니다. 미국 우리는 힘들게 살았지만 언제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편과 백씨 모두 미국 시민권을 일부러 따지 않고 영주권자로 남았다. 대한민국



美서 태어나美서만 큰 아들
18년 전 바뀐 한국 국적법에 따른
'신친적 복수국적자' 뒤늦게 알아
줄지에 행정기피자 신세...

수년전 일부 개정됐지만 교민들은
"국적포기 너무 어려워 현실성 없어"

"동포 2·3세를 잠재적 귀인 취급
한국 방문 막는 것은 불합리"

국을 잊지 않았다 다정다감한 젊은 교포들과 같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백씨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잊혀져 버려야 할까"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부원공·비시민권 등만 없으면 불합당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백씨의 아들은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며 신(新)고인(故人)의 뜻을 기려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에 모시기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잃고 살았던 그에게 본인도 모르는 한국 국적과 함께 행정 기피자가 되고 있었다



위 사진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사망한 백두현씨가 월남전 참전 용사였음을 증명하는 유해 운송 원적증 사진으로 그 오른쪽에서 둘째가 미국 이민 후 아내 백정순(현 백씨)와 함께 오존틱, 마릴라 나들이하는 모습

는 사실이다. 백씨 모자는 "한국 호적에 도인(有)에 있는데 종지에 '방역 기피자'가 되어 있음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아들이 배웅하지 못하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세상을 큰 백두현씨는 생전 가족들에게 "미국에 살지만 한국이 좋아서라도 고국에 묻히고 싶다"고 이야기해 왔다. 백씨 모자는 유언을 따라 한국 정부 준비를 하다가 뉴욕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방문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들이 '신친적 복수국적자'라 한국을 찾게 되면 미국에 공매로

몰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2005년 개정된 국적법 때문이다. 가수 유승준(47)의 방역 기피 논란이 한창이던 때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영주권자 포함)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20년 방역 의무가 부과된다. 그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이 법은 1962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소

급 적용됐다. 백씨 모자에 따르면 개정법도 없었다 한다.

원칙 출신 등을 역용한 방역 기피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실제 이민 과정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제2세대 2·3 세대가 종지에 '방역적 방역 기피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포 2세 여성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은 복수국적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위장 문턱까지 갔다가 자신도 몰랐던,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연구소는 2005년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간을 재량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동포 사회에선 "국적 포기기가 너무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백씨 아들처럼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신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의 출생 신고 및 국적 상실 신고, 자신의 출생 신고 등을 마친 후에야 국적 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정부에 '복수 국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류 처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는 데다가, 승인도 거절되기 일쑤다. 친통은 미국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태어날 때부터 동포 2·3세대를 잠재적 귀인으로 취급해 동포 방문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박정현·이민서 특파원

2023년 07월 27일 목요일 (08면) 특집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어느 정도까지 포용할 수 있나

개업 전에는 '외국인이 장사하니가 시끄러울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두 사장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달라"며 이웃들에게 내심 통쾌하게 말을 나눠줬다. 지금은 이웃들이 아들에게 인사할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부른다.

외국인 인구 164만 '융화'는
단순 노동력 넘어 화이트칼라
자영업 종사 외국인 4만명
'외국인 수용도' 5.3점-3년
"다양성 존중하는 인식 전환

지난 28일 부산에서 열린 '2023 부
활절 비자 외국인 유학생 재등록
국민 유학생들이 아티스트를 만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인 일상 속에
위치는데 한국 사회의 인식 변
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
태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도'는 10점 기준 5.3점에 그쳤
를 시작한 2019년(5.2점)부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 수

여기서 입장을 거절한답니
"한국 사회가 나를 다르게 보
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중,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위해 외국인 인력의 역할이 클
지속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그는 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증 동
 존재 렷의 연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다 한 교수는 또 "현재 노동자
 렷으로 분할돼 있는 정책을 유기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
 하다 강조했다. 서지
 심화 seo.jwan2@korea

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동훈(전 한국이민학회장) 전총대차회장과 김수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 가운데 일부는 '일차

한국의 연구구조에 맞게 다문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한글이외국어)와 가톨릭 대학의

한 교수는 "인권이 온다는 건 결국 사람이 온다는 것이다. 외국인과의 만남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존중 등 시민사회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현재 노동·가족·교육 등으로 분절돼 있는 정책들 유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seo.jwon2@kookje.co.kr

07 주요 언론보도

2023년 07월 31일 월요일 A04면 종합

숙련·전문인력 이민문턱 낮추고… 지역소멸 막을 특화비자 확대

한국은 제1차 외국인 전문인력 4.5%에 그치는 여전한 불모지다. 그나마 저수 계층 전문인력 구조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집단 불평등 현상이 여전하다. 대졸자가 한국기업 인사사냥을 위해 난여야 할 정도이다. 한국경제는 총 13회에 걸친 1차 외국인 고졸 전문인력 도입을 거쳐도 한국의 저숙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사후에 도착하기 위한 '1차 전문인력'으로 압축될 수/전

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체류하며 근로하면 영주권 자격을 주
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과 이민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가가족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제각각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들이 서로 늘어난 대책을 강구한다. 법무부·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부·외국인정책위원회, 여가부·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일관성이 없고, 추진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심각하다고 평가며 부처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인철을 불만하고 크게 위화
되어 반신반의 중대한 인간적 대립정
착을 촉발시킴으로써 말과 위상을 잃어
올랐 필요가 있다. 대립정착에도 아무
런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할 '이인철
서판'이나 연구 정책까지 포괄하는 '인
구비서판'을 신선했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

도가 떨어지는 외국인의 생산성 문제다. 기술 숙련도와 함께 근로자의 생산

금속이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간병인 등 돌봄인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인력이 외면한 자리를 외국인인 매우고 있지만 여타 인력 공급층상에 심각하다. 현재 간병 외국인은 방문취업(E-2)과 재외동포(D-4)가 대다수인데 이를 비전문취업(E-9) 비자에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원인과 확충을 위해선 고령자의 필요인 일종의 '개호복지'와 같은 전용비자 도입이 시급하다. 2017년 신상설 동북항로 전환비자도,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기존 5년간 제할 수 있고 로소설 연금도 있다. 놓여온은 그처럼 로소설 위기다. 외국인을 열은 자격증 제 자해가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 놓여온 이민자를 위한 전용비자 도입

국내 일손 부족 전망
(단위: 만명)

연도	일손 부족 (만명)
2014	33.5
2017	118.2
2024	200.7

3 수출국 직업교육 투자로
숙련된 외국인력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 때는 지방·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은 추가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의 생산성 문제다. 기술 숙련도와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 구사 능력이다. 한일합동연구부 장관도 최근

[illegible]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이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인 기층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는 농림수출(6~45%)이 적용되는 내국인과 달리 취업 후 20%

5 인구감소 지역 외에도
지역특화비자 확 늘려야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8월

朝鮮日報

2023년 08월 01일 화요일 A12면 사회

출퇴근하는 '필리핀 이모' 月 200만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 온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중 맞벌이 부부와 합부모, 임신 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안 된다. 비용은 국내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시급 9620원이고, 월급으로는 201만원 정도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최대 근무 시간은 미정이다. 도우미 1명당 최소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과 휴일에도 고용할 수 있지만 국내법에 따라 1.5배 임금을 줘야 한다. 외국인 도우미의 최소 근로 기간은 6개월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월급이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한국에서 월 200만원은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지만 대개 서울시는 이번 사업 초기엔 임금 중 숙박비·교통비·복합비 등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다. 지급 한국인 가사 인력을 쓰려면 출퇴근 방식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줘야 한다. 일주일은 월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해당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다.

외국인 도우미는 일주가 아닌 된다.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집 안에 가사 도우미가 자를 별도 공간에 대량하지 않아 사생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

시기	지역	이용료	이용 시간	근무 형태	출신 국적	도입 안력
이르면 연내	서울 시내	최저임금 이상(올해 기준 최저임금 월 201만원) ※올해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	몇 시간 또는 종일 모두 가능(개별 협의)	출퇴근형 출퇴근형 (일주 불가)	필리핀 등 가사 관련 자격을 있는 나라	100여 명 자세히 고충도, 등부

정부 시범사업, 연내 도입

서울 맞벌이·합부모 등 대상
가사와 육아만... 일주는 안돼
야간·휴일 근무 땀 임금 1.5배

출신국은 필리핀 유력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는 방식
한국어 능력·범죄 이력 등 검증

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토·외 비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도우미의 숙소는 이들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가사와 육아 일만 시킬 수 있다. 청소, 세탁, 설거지, 아이 돌봄 등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환자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돌볼 수 없다.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맡길 수 없다. 전문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사 도우미 출신국은 사실상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도우미의 경력, 연령, 한국어나 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내국인 가사 근로자는 계속 줄어든다고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며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

국인 가사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 6000여 명에서 작년 11만4000여 명으로 줄었다. 고령화도 심각해 63.5%가 60대 이상이다.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고용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5000 육아 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은 2030 부부가 가지지 못한 육아 경험이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도우미가 이른 만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도 "육아 도우미는 임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알려나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분화도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외국인 도우미에게 줄 임금 국내 부모나 친인척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근육 가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3년 08월 02일 수요일 A25면 사회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무부, 하반기 시범사업 진행

법무부가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맡을 외부기관으로 한국행정학회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 기관이 하반기 외국인이 많은 다섯 개 지자체를 상대로 먼저 시범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산업 현황에 맞는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단 지역 특성별 분석 자료를 활용해 이민자들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민자의 지역 통합 정도, 이민 정책의 효율성 등을 파

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2004년 개발해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에 활용 중인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MIPEX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직업, 소득, 주거,

외국인 많은 지자체 5곳 대상 직업·주거 등 사회통합수준 측정 인력난·인구소멸 해결방안 모색

건강과 의료, 선거 참여율, 차별 피해 등 총 167가지 영역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 보여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은 이민 정책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사회통합도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민자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인력 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민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과 전남 등 인구소멸 문제를 겪는 지자체들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분위기”라며 “이민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캐나다처럼 젊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많이 유입돼 융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수준 측정사업 외에 청년 동포와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사증)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청년 재외동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동포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 제한 범위를 다른 고시를 개정해 음식업, 숙박업 등 구인난이 벌어진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취업을 허용했다. 권용훈 기자

한국일보

2023년 08월 03일 목요일 A19면 사회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 선정

송파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등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회 정부혁신 최우수·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2일 발표

했다. 이는 나라마다 뛰어난 공공 서비스를 선보인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자동출입국심사대와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승객 상황에 따라 심사관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전 세계 427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는 특허청의 언더넷 출입 시스템이 뽑혔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 24년간 인터넷으로 87만 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지금은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송파구

는 2007년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바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형과 채육문화화한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마련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데 바탕이 됐다. 이밖에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는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서울시와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국내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재현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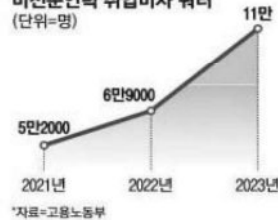
매일경제

2023년 08월 07일 월요일 A10면 경제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로
‘땀질식’ 인력확대 막는다

모자이크 코리아

업종별·지역별 수요 예측해
전문인력 도입목표 설정
법무부, 11일 연구결과 발표

비전문인력 취업비자 쿼터
(단위=명)

정부가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취업비자 총량제를 시행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쿼터를 확대하는 현행 ‘땀질식’ 외국인력 고용 정책 대신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해 도입 목표 총량을 미리 선정해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1일 공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토론회에서 부문별 외국인력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총량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제의 핵심은 인력 수급 전망에 맞춰 매년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의 총량을 정해놓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부족 여건은 물론이고 향후 인구 변화 전망도 반영해 매년 필요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체류자격별, 송출국별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물론 일본, 대만 등도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부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땀질식으로 외국인력 규모를 확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방침이다. 부문별 인력 공급 변화를 전망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수요를 조사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 분석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민 선진국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저숙련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숙련 및 전문인력 간 이중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숙련 근로자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목표 규모를 설정해 보다 과감한 인력 유치에 나서게 된다. 향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설립될 이민청(가칭)은 이 같은 업종별, 체류자격별, 지역별 등 인력 수급 여건과 도입총량을 기초로 각 분야에 맞는 이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한국형 취업비자 총량제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양세호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The JoongAng

2023년 08월 08일 화요일 014면 종합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린 7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독립유공자 13명의 해외 국적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연합뉴스]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3년 08월 09일 수요일 019면 기획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재수강' 유료화

법무부는 그동안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체류 외국인 증가로 교육 참가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서울신문

2023년 08월 10일 목요일 017면 사람들

"한국생활 성공 비결은 도전... 인생 재설계 중"

스리랑카 출신 MZ세대 차마라 EPS 콘퍼런스 '최우수 근로자'에

"일해서 돈만 벌겠다는 생각이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재밌고 배울 것이 많은 한국 생활이 즐겁습니다."

9일 개막한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에서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출신 MZ세대인 차마라(사진·



27)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의 비결로 '도전'을 강조했다. EPS 콘퍼런스는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위한 행사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와 노무관 등이 참여했다.

차마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고용허가(E9 비자)를 취득해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입국 후 전북 완주의 자동차 팔을 만드는 업체에서 6년 3개월간 근무했다. 지난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안정을 받고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한국 생활은 열정과 노력의 연속이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국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독학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최고 등급(6등급)을 취득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까지 따내며 역량을 높

였다. 포기했던 대학 공부도 한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 주 3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다음 목표는 영주권 취득이다.

인구절벽 시대 외국인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부정적인 현상도 부각되지만 차마라처럼 한국에서의 인생을 성실하게 재설계 중인 근로자도 늘고 있다. 그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으로 스리랑카 동료들에게 한국어를 전수하고 전북경찰청 스리랑카 통역원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등 경험을 나누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08월 14일 월요일
A25면 사회

늘어난 외국인 강력사건 10명중 3명이 4대 범죄

상반기 772명 검거·143명 구속
경찰, 집중단속 10월까지 연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주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이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속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만 9249명에 달했던 외국인 피의자는 코로나19로 2021년 3만 2470명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 3만 4472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 중 4대 범죄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2%로 다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 30.3%를 기록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의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강력·폭력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돼 시도 경찰청별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등으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3년 08월 17일 목요일 A25면 사회

입학 문턱 낮춰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 학생의 한국 대학 입학 문턱을 대폭 낮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약 16만 명의 유학생 규모를 단기간에 두 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경쟁력 제고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격적 유치 전략이다. 정부는 30만 명의 유학생이 약 4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 유학생 4년 안에 30만 명 유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생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12년 8만 6878명이던 유학생 수는 지난해 16만 6892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유학생시장의 2%에 불과하다. 전공과 지역 편중도 심한 편이다.

이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첨단·신기술 분야 제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입학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해외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개편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설하고 규제도 완화해준다.

유학생유치센터는 2027년까지 해외 한국교육원 23곳에 세울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 요건 개선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개편한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기준을 낮추는 대신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 현황 및 목표
(단위:만명)

2027년까지 유학생 두 배 늘려 대학 경쟁력 제고·지역소멸 대응

광역 지자체 단위 특구 신설
해외에 유학생유치센터도 설치
"첨단산업 우수인재 선제 확보"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은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초청장학생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또 잠재적 유학 수요 확보를 위해 학생 교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4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보다 약 2조15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는 1617만원에 달한다"며 "유학생의 유학 활동이 지역경

매일경제

2023년 08월 22일 화요일 A10면 경제

'중구난방'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화



모자이크 코리아

정부가 그간 중구난방으로 관리해 온 외국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면서 입국자부터 불법체류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 표기법 및 관리 체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인적 정보 표기법을 통일시켜 동일한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HONG DAVID'란 이름의 외국인을 A기관은 '홍데이비드'로, B기관은 '홍다비드'로 표기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여부 확인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생년월일 표기에서도 '1971년 6월 12일생'의 경우 어떤 기관은 '1971.06.12.'로, 다른 기관은 '1971.12.06.'으로 적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를 '외국인이 입국 시 제시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부가 파악·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축될 예정인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8월 22일 화요일 A03면 종합

외국인 인재 유치 '거북이 걸음'

과기인재 1600명 영주권 땀지만...전체 1% 그쳐

<영주자격 외국인>

한 해 국내 영주권을 획득하는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여전히 1000여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하려 등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 우수·숙련 인력의 '외부 수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물론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언어 장벽 해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국내 영주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1648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576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해마다 늘면서 2020년 1000명을 웃돈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0명 선도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영주 자격 외국인(6월 기준·18만 1949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도 오랜 경험·노하우를 지닌 기능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 중인 제도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자격 현황
(단위:명)



5년새 3배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
숙련기능인력 비지도 2000명 수준
언어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취업(H-2) 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 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 이를 통해 E-7-4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2017년 293명에서 올해 현재(7월 기준) 2403명까지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2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

는 KAIST 등 국내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자격(F-2-7S)을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 경력과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주고 연구 실적이 매우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총장 추천서가 발급된 것은 108명. 이 가운데 80%가량에 해당하는 88명이 F-2-7S 허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언어·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병원은 물론 은행 등을 찾았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이 우리말이라는 측면에서 언어 분야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업 등 국내에 필요한 외국 현지의 해당 분야 전공자들에게 취업비자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겨레

2023년 08월 23일 수요일 009면 사회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탄압 받아온 인권운동가

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를 타고 밀입국하려다 인천 앞바다에서 체포된 30대 중국인이 인권운동가 취안핑(권핑·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안핑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견디지 못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려고 바다를 건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300km 건너와 붙잡힌 30대
시진핑 풍자한 뒤 복역한 취안핑
망명 위해 한국행...난민 신청할듯



지난 16일 취안핑이 타고 온 제트스키 위 작은 사진은 2016년 취안핑이 에스엔에스에 올린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뜻의 '시틀러(XITLER·시진핑+히틀러)'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이대선 국제인권활동가 제공

22일 취안핑을 면회한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밀입국으로 체포된 중국인은 인권운동가 취안핑"이라며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비밀경찰에 체포되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

아온 인물"이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 유치장에 수감된 취안핑을 면회했다.

이씨는 취안핑을 두고 "중국 당국의 탄압에 맞서 정치적 망명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안핑이 출국 금지를 당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 제트스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취안핑은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 제도를 비판하고, 구급 중인 인권번호사들을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고 했다.

취안핑은 2016년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4개월간 독방에 구금되고, 2017년 2월에는 지린성 연변재판소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출소하기도 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취안핑이 남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난민 신청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중국동포이기도 한 취안핑은 한국에 친인척이 있어 이곳으로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해경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안핑이 망명이나 난민 이야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취안핑에 대한 법적 조력을 검토 중인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는 "알려진 활동만 보면, 취안핑은 난민협약 31조와 긴급피난 법리에 따라 충분히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난민협약에선 난민의 불법 입국 자체를 문제삼아 처벌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경은 이날 취안핑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고병한 이승욱 기자 kick@hani.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등 7424명 적발... 취업브로커 5명 구속

법무부, 1만958명에 출국·취거
불법고용주 1290명 법치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있던 종대재에 사망
정부, 건설·제조업 안전점검 점검

유경민·권승기 기자 yookim@sogye.com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
국인 1만명 이상을 강제퇴거·자진출국한
외국인은 1만958명이다.

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8월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취업 알선 브로커 7424
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체
류 외국인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
거 등 출국 조치했고, 142명에게 법치
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547명은 자진출국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로써 강제퇴거·자진출국한
외국인은 1만958명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마약을 무약

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아랍에 대한 형사처
리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
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고용주
1290명에게는 법치금을 부과했다.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
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
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
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

2023년 08월 24일 목요일 011면 사회

하는 건설·제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종대재
때로 숨졌다.

고용 단속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
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 현장에 배
치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로 안
전·보건 정보를 얻지 못해 종대재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
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점도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 위해 외
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사업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요일 A06면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이하)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일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외국인 고용 12만명으로 확대... 화학물질·환경평가 규제도 완화

정부는 앞으로 택배와 공화 일부 직
종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
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외국인력
확대입 규모는 지난해에 2배 가까운
12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방·중소기업
인력난에 승용이 트일 전망이다. 열악
한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력 소자만 불
러는 건 부작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규제 차등 적용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지만, 환경은 뒷전
에 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이하) 손질에 기업에 고용 한도
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활
력 제고'를 위한 일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만9000
명인 전체 해에는 올해 달초 계획했던
11만명에서 1만 명 더 늘게 되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을 도입한다.

**정부, 일러규제 20건 제도 개선
기업 인력난 승용·비용 부담 완화
"노동권·환경보호 약영향" 비판도**

제2차에서는 기존 최대 40명에서 80
명, 농·축산업에서는 기존 25명에서 50
명, 서비스업에서는 기존 30명에서 75명까지
늘어난다. 주주·용장급형 등 "뿌리산업
에선 300명 이상 사업장에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택배와 공화 지상 조영
의 상·하차 직종도 마찬가지다. 호텔·콘
도호텔·식당의 청소 및 주방 보조 업무도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출국·입국 절차는 폐지한다. 현재는 비
전문취업비자(E-9비자)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4년 10개월 일한 뒤 돌아갔다
가 재입국해야 전문취업비자(E-7비자)를
받아 같은 기간을 더 일할 수 있다.

현행 680개 안전보건규제 전제도 개

편한다. 반도체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
해온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변경,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
화선 발파기준 삭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제기준에 뒤
처진 낡은 규제와 중복 규제를 없애
자"라고 말했다.

외국인력 고용 확대 및 체류 자격 완
화를 요구해온 경영계는 "중소·중견기
업 구인난에 급한 불을 끌 것"(대환상
의)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
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노동 환경 개
선 없이 이주노동자를 밀어넣는 건 안전
과 인권을 내세워진 노동기(본권) 일러방
안"(한국노동총연맹)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도 이날 "화학물질 관리 등 환
경 일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화
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
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
는 게 골자다.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의

정기검사 면제와,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해와 평가자료의 정부 확인 등이
다. 신규 등록 의무 기준은 100kg 이상에
서 1,000kg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에는
'간이' 환경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이미 개발된 지대나 사설이나 주변에 끼
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의 생략을 생략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에도 확대하고 있다. 긴급 재난 대응 사
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하지만 우리도 적지 않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 상향에 대해 하마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E-9에서는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우
리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
지 체 아들이 지역 개발 명분 아래 요식행
위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재용·서재훈 기자

교육편제에 따른

Annual Report 369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요일 Y19면 지방

경북교육청, 고교 해외유학생 유치 탄력

내년 직업계고에 56명 선발키로
10월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충원을 제고·인력난 도움 기대

임종식 교육감, 지난달 베트남
태국 등 방문해 당국과 협의...
내달 인나-몽골 등과 MOU추진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의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부족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태국 베트남 등 유치대상 국가 교육당국이 긍정적이라서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해외 중학생이 국내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학생들이 도내 직업계고에 진학하면 학생 충원율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갖춘 기능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

라로 변신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수 인재 양성이 지속적 발전의 원천인 만큼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4학년도에 5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현지 국가에서 1차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들에게 유학비자를 발급, 10월에 실시할 유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태국 베트남 등에 보내 유학생 특별전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에는 인도네시아, 몽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국, 베트남 방문에서 경북의 직업교육에 대한 동경과 한국과의 기술 교류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 사업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국 상급 기관의 승인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더 우수한 해외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임종식(왼쪽 6번째) 경북도교육감 등이 지난 7월 태국 교육부를 방문, 현지 중학생의 경북지역 고교 유학을 협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제공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JoongAng

2023년 09월 06일 화요일 09면 중판

유커 150만명 잡는다...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면세 확대

(해방기)

워렛-알리페이 가맹점 25만곳 확대
1만명 추첨해 치맥 등 체험 이벤트
중국인 상반기의 3배 유치 목표
"단편관광 막고 상품 고밀도화"

중국인 단편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인과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면세 혜택은 늘린다. 쇼핑 위주 자가 방문 관광은 유지한다. 정부가 유커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유커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 방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세제상 변동과 함께 한국 경제에 양면적 영향을 미친다. 유커 유치에 유망한 중국인 방문객은 2022년 150만명에서 2023년 450만명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 한국 방문이 편해지면 해외에서 유커 대상 전자비자 발급이 쉬워진다. 2019년 12월 이후 3개월마다 발급이 쉬워졌다. 2023년 12월 이후 3개월마다 발급이 쉬워진다. 유커 유치에 유망한 중국인 방문객은 2022년 150만명에서 2023년 450만명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부산,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 외곽을 가며, 약국 등에서 면세품 구매 시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023년 10월부터는 사후 면세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소 금액을 3만 원~4만5000원으로 내린다. 즉시 환급한다는 1회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워렛-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25만곳 늘리기로 했다.

할인 이벤트 혜택도 마련했다. 내년 3월까지 출산하는 항공편을 10월 15일까지 예약할 경우 5~30% 할인해 준다. 유커 1만 명을 초청해 해바라기축제, '자매지킴이' 행사, 한국 공립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한국 관광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은 보편적이다. 쇼핑을 강요하는 단편 관광을 막기 위해 여행사 관광 상품을 상시 50% 할인하고 기온에 미달할 경우 피싱하기로 했다. 무자비 관광몰이던 내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질 좋은 상품을 운송하는 관광사에 품질 인증 마크를 붙이고 인증을 증명한 경우 우대 혜택을 준다.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중국 현지 K-관광 마케팅 다변화

- 국경일 연휴 기념 현지 K-관광 프로모션(2023년 10월 10일~11월 10일)
- 중국 현지 여행사 대상 송년 설명회(2023년 12월 15일~16일)
- 중국 언론(중국인민망) 100인 초청 행사(베이징·상하이·광저우)
- 중국 3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한국여행의 달(2023년 10월 10일~11월 10일)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성 제고

-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성 제고
-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성 제고
-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성 제고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방기순 상급관과 중국대한국 교수는 "중국의 황금연휴로 불리는 중국 춘절 연휴(1월 29일~31일)와 2월 10일~12일 기간을 앞두고 정부가 발 빠르게 유커 끌어안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중국인 1만명 한국 여행 지원 캠페인도 함께 외국인 관광객 30% 늘린다. 가맹점은 유커 유치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반기의 3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가점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폭 양자율은 중국 소비의 심리가 변수다. 중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청년실업률은 20%를 돌파했다. 2023년 12월 15일 이후 여행 선 호근거 단편관광-여행 자유여행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이화재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물가는 크게 뛰었는데, 유커의 구매력은 낮아졌다"며 "이 기회에 단편 관광을 유치하고 관광 상품을 다양화·고급화해 유커를 붙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화재 기자 ihw@joongang.co.kr

東亞日報

2023년 09월 06일 수요일 J16면 지방



4월 강원 홍천군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공항에서 받은 표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천근 재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0' 홍천군의 기적

전국의 많은 시군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강원 홍천군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난해 54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지만 무단 이탈은 단 1명도 없었다. 지난해 강원도 전체에서 입국자 31,329명 가운데 61,899명(19.7%)이 무단 이탈한 것과 비교하면 기적 같은 일이다.

5월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54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단 1명도 없었고, 올해는 입국자 809명 가운데 1명만 이탈했다. 이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는 그 나름의 비결이 있다.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외국 근로자지원재단의 입국행사를 통해, 관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계절 근로자 선별에서부터 '믿을 만' 사람을 뽑는다.

홍천군은 2009년 5월 필리핀 산투안시와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3월에는 계절 근로자 도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방식은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차단해 무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협약 인력 까다롭게 뽑고 출국 전 교육 도우미 지원해 농가와 소통 도와

지나해 545명 입국 후 이탈자 없어
평택-제주 등서 노후우 벤치마킹

단 이탈 방지에 효과적이다.

계절 근로자 선별을 대상으로 검토 높은 연봉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출국 전에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행사 내에 '홍천-산투안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해 계절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가에 대한 지원도 큰 몫을 한다. 언어 교육으로 인한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주자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민원 발생 시 민정, 농가 소통 담당, 근로자 소통 담당 등 3명이 1개 조로 출동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

의료공제회'에 단체 가입해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한다. 농가주를 위해서는 신체 가입 신청, 마약 검사, 외국인 등록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홍천군은 1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강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홍천군은 4월과 8월 법무부 워크숍에 초청돼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자 지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선별부터 입국과 출국까지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달 중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재 기자 ihw@joong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3년 09월 07일 목요일
002면 종합

택시 댔더니 한국말 못한다고 '바가지' 국내 체류 외국인 20% “차별대우 받은 적 있다”

독일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아랍리야스 타브라지스(33)는 4년 전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국내 프로야구 팀 두산 베어스 '광란'을 자처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던 그는 2년간 한국에서 머무르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지만, 종종 일상에서 마주치는 차별의 순간들이 자신을 결국 외국인으로 느끼게 했다고 회상했다.

타브라지스는 “택시를 타면 운전 기사가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멀리 돌아간 적도 있다”면서 “한국은 외국인에게 열린 나라라고 스스로 홍보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면 다음날까지도 슬프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차별 원인의 과반은 출신 국가 탓이었으나 직장 등 일상 공간뿐 아니라 결혼이나 이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6일 발표한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19.7%가 최근 1년 내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출신 국가(58.0%)와 한국어 능력(27.9%)이 지목됐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은 외국인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외모(8.3%), 직업(1.8%), 경제력(1.4%) 등이 차별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들 외국인은 성별·연령·종교·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차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수준인 23.8%는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했다. 차별 정도가 가장 낮은 곳은 학교와 대학(11.1%)이었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최근 1년 차별 경험 여부
※2022년 5월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통계청, 한국 생활 분석 결과
23%는 공공기관에서도 경험
58%가 차별 원인 ‘출신’ 꼽아

만, 여기서도 10명 중 1명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겪는 한국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43.4%)였다. 외모(28.8%), 문화 차이(27.8%), 경제력 어려움(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32.7%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80.4%였는데, 40.8%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39.6%는 약간 만족한다고 했다.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1.9%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주로 TV 프로그램이나 시청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 기준 57.3%가 여가활동으로 TV를 본다고 답했다. 수면, 사우나 등 휴식 활동(49.1%)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외에 컴퓨터 게임(20.8%), 여행(17.6%), 스포츠 관람(10.3%) 순이었다.

이창종 기자 jchang@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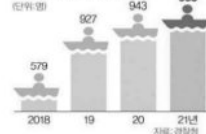
서울경제

2023년 09월 12일 화요일 A 27면 사회

“범죄자 해외 도피 막는다” 警, 출입국규제 절차 간소화

출항 요청 등 KICS로 일원화
현장 수사관 업무 효율성 제고

국외 도피 사범 현황



자료: 경찰청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경찰의 출입국 규제 요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유력 용의자의 해외 도피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수사관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이 개선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출입국 규제 요청 절차를 행사사범정보시스템(KICS·키스)으로 일원화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하게 돼 있다. 그간 경찰은 법무부에 출입국 규제 요청 시 사전 개요와 요청 사유 등을 키스가 아닌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공문으로 작성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현장 수사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절차가 변경되면서 현장 수사관은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경찰청 내 키스에 접속해 출국 금지와 정지(일한 및 긴급),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출입국 규제 절차 변경에 나선 것은 중요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579명이었던 국외 도피 사범은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실제 지난해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A 씨 역시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해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린 바 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공안과 경찰 주재관의 공조로 전남 A 씨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2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체포됐지만 한인의 결정적 제보가 없었다면 그의 도주 행각은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범인을 검거해도 국내 송환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주요 피의자들이 국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신속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8월) 국내 송환 인원 3781명 중 1583명이 국외로 송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도피 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은 같은 기간 국내 송환 요청 1271건 가운데 388건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 등 국내 경찰청청과 교수는 “키스는 형사 사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 진행 상황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며 “향후 출입국 규제 요청 관련 데이터가 쌓일 경우 범인의 국외 출국 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우원 기자

375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2년 09월 25일 월요일 P02면 특별기획

창업에 국경 없다... 한국인 해외 진출 돕고, 외국인 국내 진입 문턱 낮춰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할 때도

한국 경제 기여 댈까 지금 지원

정부부는 우수 사업 모델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 비자 확대하고

중기부는 자금 지원하는 방안 추진

정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가장 실행을 가할지는 부분은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이다. 이전에는 한 국에서 내국인이 창업하는 기업들 중심 으로 지원했지만, 이번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면 국경·국적에 위 하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두 가지 부분 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진출 을 돕도록 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 맞 게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 들어 와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

○한국인의 해외 창업 지원 '3대 전략'을 소개

먼저 한국인의 창업한 해외 현지 창업 기업들 지원한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한 한국계 유망기업인 Airbnb가 대표적 이다. Airbnb는 유망기업인 스타트업 기업 가 지원한다.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들은 대 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들과 달리 정부 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 정부 는 이와 같은 우수 사 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인이 해외 현지 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우수성과 잠재력 이 가늠되는 등 유망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 업자 자금을 지원할 요건에 해외 진출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원 관련 프로그램도 신선했다. 민간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matching)해 지원하는 '립스(LEPS) 프로그램'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대를 위한 '립스'를 글로벌 프랜차이즈 신선했다. '글로벌 립스'를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투자 및 진출을 유도하고, 초기 단



이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K-스타트업 코리아'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정부 에서 이상 투자받고 해외 행인을 실행하 면 자금을 지원한다.

세로 지원에서 가로 기능까지 큰 스타 트업 플랫폼으로 구축해 집중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초 투자'의 세 산 내로까지 벗어나 생태계를 낼 수 있는 기 업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세 정부 의 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해외 진출 프로 그램 사업도 준비 중이다. 한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중소벤처기업 부가 직접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 학교를 단계적으로 '글로벌 청년창업사 관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적 창업 지원책과 비교하면 해외 진출 을 지원하기는 우수 창업자 대상으로 고신 차 우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의 진출 자금 지원 ▲현지 진출 예산 등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이다. 한국이 등 국 중대사건에 협력해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교육 및 해외 시장 개척 도 높이는 프로그램도 별도 준비 중이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정착 지원 '안배'도 강화
그동안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이 아웃 브랜딩(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중심)이었 다면, 이번 대책은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 지원 부분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Sta-tex-F를 글로벌 창업허브(hub)에서는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내보 창업 생태계 로 육성한다. 정부도 정부 투자 자금 과 사회적 투자기금 내원으로 창업 생태 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는 외국인의 유망한 기술 창업 유도를 위해 이미 제도화 스타트업 전용적으로 개인별 창업비 지원, 기술-사 업자 등이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외 국인 대상으로 정부투자사업 내지 유망 요건을 확보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 업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 획이다. 또한 창업비지원 연방제도 조 기에 제정해 내다내기 어려운 스타트업 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유치 및 교육·특 화군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 안에 반영한다. 외국인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에도 한해는 단순 창업비 위주 라면 ▲인재 발굴 ▲사업비 ▲고용 ▲인 력 육성 등 3대 체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평균 단계에서는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K-스타트업' 제도를 도입한 다. 해외 기업 발굴 경쟁이 있는 연방기 인 스타트업들이 미래전략산업, 한국인 학 기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비도 우수으로 운영 되었다. K-스타트업은 두 외국인 창 업자의 국내 안착·성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지원 내역도 해외 외국인 창업자에게 실제 창 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자 등으로 운영 한다.

외국인 창업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도 제공한다. 해외 진출 기업-스타트업 투자 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로 드 창업과 취업까지 지원을 위한 신발 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술 창업비, 그랜드 밸런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이외에도 노력에 따라 우수 해외 창업자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연방제 한국 에서 국내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을 두도록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경과 국경 내외의 글로벌 '스타트업-스'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등 혁신 주체 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세계 최고 의 스타트업 허브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제부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K-스타트업 코리아' 행사에서 2022년 외국인 창업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시상식 모습이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세계일보

2023년 09월 25일 월요일
010면 사회

같은 범죄도... 국민 86% “중국인이면 유죄”

한국심리학회지 논문 게재

폭행 피고인 국적, 처벌판단 영향
보이스피싱·마약밀수는 차이 미미

윤준호 기자

동일한 범행이더라도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한국인·미국인·중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중국인일 때 가장 높았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에서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

을 벌인 상황이 설정됐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목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임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제시된
이 서울에
블에서 일

국민일보

2023년 09월 27일 수요일 012면 사회

현재 “외국인 건보료 1회 체납 땀 지급 중단, 평등권 침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내국인과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가

입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예외조항을 둔다. 공단 승인을 받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체납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에 행해진 진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부모·자녀와 함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이 같은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우선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

더라도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무회피도 내국인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이 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

양한주 기자 1week@kmb.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09월 28일 화요일 A02면 종합

외국인 숙련공에 문호 활짝... 1년 이상 근속때 기업에 추천권 준다

법무부, 숙련인력 확대 방안

연간 쿼터 3만5000명으로 늘려
심사 용해 2~7~4 미차 전환 허용비거슬급 받고 2년 미 근무 조건
근로자 연 고용 안정성 보장하고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 가능 전망
영주권 취득·가족 초청 등 기회도

법무부 'K-외인력 DNA'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연간 쿼터	3만5000명	연간 쿼터 3만5000명
심사 용해	2~7~4	심사 용해 2~7~4 미차 전환 허용
비거슬급	받고 2년 미 근무	비거슬급 받고 2년 미 근무 조건
고용 안정성	보장	고용 안정성 보장
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 취득 가능
가족 초청	가능	가족 초청 가능

외국인 숙련공 확대에 연한 쿼터 3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려 나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K-외인력 DNA'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7대 가산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연구·개발·제조·서비스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농업·제조·서비스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농업·제조·서비스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일반 비자 전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노동 인력을 늘리는 일차원적인 정책에서, 그리는 제 2차 연구·개발·제조·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노동 인력을 늘리는 일차원적인 정책에서, 그리는 제 2차 연구·개발·제조·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년 미 근무 조건 완화로 자생력(자립능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도 중간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기능인력(이하 숙련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10월

The JoongAng

2023년 10월 09일 화요일 02면 사설/칼럼

고용허가제 넘어 '이민의 시대'로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정착할 수 있어야 이민국가 가능

박영범의
이코노믹스한국경제연구소
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활용이 한국 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실 조성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전방위 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2배로

우선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렸다. 올해 쿼터는 작년의 2배 가까운 1만 명이다. 내년에는 쿼터가 1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외국인이 전문기능인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고, 문해 교육 규모도 20배 가까이 늘었다. 유정공통 언어도

외국인이 전문기능(원)으로 수출국 현지에서 기능 검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급 이상 관련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함께 기능 검정을 통과하여야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기능 검정이 면제된다.

높여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으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다. 연도에 따른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현재 1만9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 도입 및 관리제도 개혁의 큰 그림과 체계적인 검토 없이 연례 규모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도 우려가 있어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도 도입 규모 등을

조정하여도 늦지 않을 듯하며,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

불법체류자 4만여 명, 일본의 5배
현재 한국 경제와 산업 상황상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그중 하나다. 정부 통계를 2022년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4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인 28%이다. 체류 자격을 위반해 위법하고 있는 경우를 비롯해 파악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많다.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많다.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의 4분의 1,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위해

정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적

불법체류 양산하는 제도 고치고
한국 체류지원 체계적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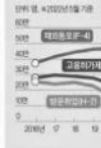
외국인 취업관리 체계 통합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 유도해야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사증 면제 단기 방문 체류자격자의 비중이 3분의 2가 된다. 이는 보다 일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불법 체류자 비중은 기존 제도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고용허가제 틀 밖에서 민간 주도 아래 도입되는 일반기능인력 체류 자격자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수출 국에서 현지 기능 검정을 받고 채용되는데,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얻기 위한 취업 알선비가 1000만원이 넘



주요 외국인 체류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12월 9일까지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

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증업소 종사 외국인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고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칙급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칙급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박시은 기자

2023년 10월 06일 금요일 A31면 사회

The JoongAng

2023년 10월 18일 화요일 B02면 경제

한국 오려다 일본 간다... 동남아 관광객 막는 'K-ETA' 논란

(한국 전자여행허가)

불법체류 대응 위해 2021년 도입 심사 카드로워 '제2의 비자' 인식 관련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말레이시아인 A는 최근 한국으로 관광을 계획했다가 급하게 일본으로 목적지를 바꿨다. 가족 5명 중 한 명이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승인을 받지 못해서다. 결국 가족 전체가 무비자 입국을 이용하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ETA가 여행객 동남아시아 출신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 유치와 불법 체류 대응을 위해 2021년 9월 도입됐으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 과정 탓에 예민한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여행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남아 현지에서 K-ETA를 '제2의 비자'로 인식하면서 방문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됐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K-ETA 발급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현지 여행사에서는 다른 국가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ETA는 특히



법무부는 최근 대한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명동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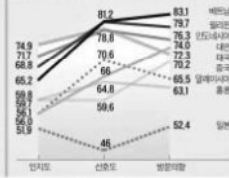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상위 10개국

(단위: 명, 기준: 한국관광공사)

2019년	2020년	2021년
중국 479만	중국 602만	미국 54만
일본 296만	일본 307만	일본 30만
대한 102만	대한 106만	중국 22만
미국 97만	미국 104만	일본 20만
홍콩 68만	홍콩 69만	베트남 19만
대국 56만	대국 57만	대국 17만
말레이시아 46만	베트남 55만	싱가포르 17만
베트남 46만	말레이시아 50만	인도네시아 17만
말레이시아 30만	말레이시아 40만	태국 9만
러시아 30만	러시아 34만	대한 7만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한국 인지도·선호도 병행 의향

(단위: 명, 기준: 한국관광공사)



불법 체류 이슈와 맞물려 있다 보니 동남아 출신 여행객에게 사실상 더 간편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K-ETA 신청 후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을 뿐더러, 3일 거부되면 별도의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는 K-ETA 도입 이후 사실상 무(無)비자국에서 유(有)비자국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내 여행 산업에서 동남아 관광객 비중은 계속늘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1%였던 동남아 여행객 비중은 지난해 26%로 증가했다. 필리핀·베트남·대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는 각각 4~8%를 기록했다. 정부가 '방한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동남아는 중요한 손님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24개국 대상 잠재 방한 여행객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잠재 방한 지수를 기록한 국가는 대국(63.5), 베트남(66.0), 인도네시아(68.0), 필리핀(64.6) 순이었다.

하지만 K-ETA는 여전히 이름에 걸 '벽'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일본·미국 등 22개국 여행객에 K-ETA 면제했으나 동남아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지난 7월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19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K-ETA에 대해 동남아 여행객에 대한 은근한 인종 차별 논란 역시 불어와 왔다. 지난해 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여행객들의 소감(미디어 SNS)을 분석한

결과 방한 태국 여행객 중 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 언급 비중은 42%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 언급은 28.2%에 그쳤다.

무엇보다 인종 차별 논란으로 인해 여행 중 불쾌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수년간 태국 한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는 태국인 관광객 김 나봄은 "입국 심사에서 불쾌한 일을 경험한 뒤로 한국을 싫어하게 됐다"며 "한국인은 무례하다. 외국인인 한국을 방문해서 돈을 쓰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014면 사회



“한국서 일하고 싶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1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ISF(International Student Fair)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 박람회 채용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한형 기자

東亞日報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A12면 사회

새만금 잼버리 참가한 아프리카 출신 등 50명 이상 난민 신청

난민심사 기간 국내 체류 가능 인정 조건 까다로워 결과 주목

올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월 난민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제

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난민 신청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하는 국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가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근거가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1~6월)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朝鮮日報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A01면 종합

외국인 창업가들 ‘코리안 드림’ 러시

NOW

K콘텐츠·뷰티가
세계 트렌드 선도한국서 제품 생산
전세계로 수출기술창업 비자
4년새 2배 급증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 국적의 로만 베르니두브씨는 2016년 한국에서 ‘코루파마’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에서 미용 시술용 필러 주사제를 제조해 전 세계 100개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 처음 한국에 온 뒤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며 ‘K뷰티’의 잠재력을 알아봤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지난해 연매출 260억원을 달성했고, 현재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표이고, 모든 제품을 수출하다 보니 회사 풍경도 이국적이다. 서울 사무실과 강원도 공장의 직원 110명 중 50명은 외국인이다. 베르니두브씨는 “한국은 뭐든 빠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며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우리 제품 역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그간 ‘외국인 창업 불모지’로 여겨졌던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등 ‘창업 강국’에서 외국인 창업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체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K컬처’ 열풍이 불고, 우리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국내 고용 창출, 새 판로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다는 기자 A8면에 계속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A08면 포커스

강남에 회사 차린 러시아인, 15개 국적 외국인 50명 채용

한국서 창업하는 외국인들

사진제공: 개국

한국에서 교육을 담당기를 만들어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 '테크라이프'의 대표인 인도 출신 아카시 칸카르다. 그는 2004년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 삼성전자에서 10여 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러던 중 사내벤처 제도를 'C-LAB'을 통해 삼성의 투자를 받고 2017년 회사를 차렸다. 현재 한국 안에서 교육기기를 만들어 인도 52개 지에 3000개 학교에 납품하는데, 수출액은 연 10억 원이다. 칸카르다 대표는 "한국은 IT와 교육 강국이라 에듀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라며 "아프리카 수출도 최근 주진 중"이라고 했다.

○외국인 창업가에게 '기회의 땅' 된 한국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인의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고, 다만 창업을 했을 경우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2018년 발급자는 40명이었다. 2019년 74명, 2020년 72명, 2021년 98명, 작년 110명으로 늘어난 추세다. 기술창업 준비(D-10-2) 비자 역시 2019년 47명에서 작년 100명으로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법인 설립을 지원하던 'K-스타트업' 2년도 열린 '지' 지원도 2022년 167개에서 지난해 263개로 100%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상당수가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왔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아이들을 찾아 창업에 결심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보부르 알파로프 씨는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다가 인공지능(AI)으로 건강·교육 관련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테크라이프 주사비 제조회사 '글로벌리프' 사무실에서 오만 베르나투스(오른쪽 첫 번째)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우주를 향한 학교 과학회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표가 러시아의 제2인인 아사라, 현재 직원이 절반가량이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유학 와서 '코퓨터' 보고 창업 결심
필터 주사비 만들어 100개국 수출

교육용 단말기 회사 차린 인도인
"한국은 에듀테크 산업 선도국"

외국 창업가가 세운 기업 늘면
국내 교육 시장, 수출에도 도움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타트업 '옥스포드'를 설립했다. 보부르 씨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 비즈니스 문화와 역인 후에 창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 "부러워, K콘텐츠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다. 화장을 등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좋다는 것이다. 멕시코 출신 미겔 수아레스 씨는 지난해 우라니움의 화장품으로 실패한 뒤 '옥스포드'를 남미 버전으로 바꾼 화장품

전 세계에서 한국 찾는 창업가들

대표	사명	출신	사업 내용
오만 베르나투스	코푸리파	러시아	디지털을 위한 제조-수출
파울 슈타르츠	코스메트릭스	멕시코	화장을 성분 정보 플랫폼
도미네 다닐라	세자르	오스트리아	포장 세제 서비스
아카시 칸카르다	테크라이프	인도	학생·직원·교사 연결 교육 플랫폼
사니 알파로프	코폴로	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교육 플랫폼
보부르 알파로프	옥스포드	우즈베키스탄	안면인식(AI)으로 교육-건강 관련 데이터 추출 분석

품 '코스메트릭스'를 만들었다. 그는 "브라질 등 남미에서 한국 제품은 최고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나는 남미 지역의 까다로운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반대로 개척하는 데 용이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헬리헬프' 문화 역시 큰 강점이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산업 환경이 역동적인 편이라 보니 창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 한국에선 창업 시 자금 지원

등 행정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포장 패키지 제작 회사 '세자르'를 설립한 도미네 다닐라 씨는 "나는 한국의 '헬리헬프' 문화의 편"이라며 "행정 절차도 빠르고, 사 개척하는 데 체리도 빠르다"고 했다.

○"한국만큼 변화 빠른 나라 없다"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인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해외 스타트업들도 늘고 있다. 한국의 시장 변화

가 빠르다 보니 '테스트베드'로 적합한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 전통적인 선진국의 창업가들도 이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 독일 푸드테크 기업 코델모도 최근 한국에 법인을 세웠다. 코델모도는 바건(채식주요자)을 생산·대량 생산 기업으로, 사나 알파로프 대표는 후쿠베르나투스 아사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아시아 첫 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유수 대기업이 있고, 삼성·현대차·LG 등

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해외 스타트업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 입국하고 외국인 창업가들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을 일이다. 해외에서인 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성기 기업을 세워 수출과 고용 증대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외국인 창업가가 세운 기업이 유·내 기업에 되고, 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인 창업가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朝鮮日報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A08면 포커스

"비자 받기도, 은행 대출도, 집 구하기도 어려워"

외국인 창업의 걸림돌

기술창업 비자 이전이 까다로워

장부는 창업가도 부모도 못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 안파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창업 환경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외국인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한국 창업의 걸림돌은 무엇?

가장 먼저 비자 문제를 꼽는다. 영구권이 나오지는 아니지만 영구 창업 비자 발급이 어렵다. 하지만 그 비자를 소지

한 외국인 1인 이상을 국내에 투자해 창업이 가능하다. 일부 비자의 경우 연 결산을 위해 매년 정부 산하 출결금과 외국인 정책본부에 회사 수익 등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 창업자를 위한 기술창업(D-8-4) 비자, 기술창업 준비(D-10-2) 비지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비자인데도, 이미 창업자이거나 창업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만 한 해에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한 외국인 기업가는 "대표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해외 수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외국인으로 뽑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이 함께 채용한 직원들조차 비자 문제로 퇴사하는 일이 많아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어떻게 창업을 하더라도 투자 유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 세계 벤처 투자자들이 몰리는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 '창업 강국'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 등 금

융기관은 외국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다. 한 외국인 창업가는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하데, 외국인을 잘 신뢰하지 않아 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 관련 제도 사항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유입 출신 한 기업가는 "특히 세무 상도가 어렵게 관세를 구했다. 지금 현재 사기에 휘말린 상태"라며 "현재는 것이 외국인에게 생소하다 보니,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고 했다.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부



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한국에서 창업을 한 외국인 기업가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기업 실태조사 등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한꺼번에 조사해놓고, 그간 창업한 외국인들의 현황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조사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Y26면 사회

외국인 컴백... 울산·거제 '행복한 공존' 모색

HD현대·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외국인 대거 채용
울산 총인구 88개월만 증가
거제 인구 감소세 절반 꺾여
다문화 공존 새로운 속제로
외국근로자 참여 자율방범대
지원센터 추진 등 정책 고심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과 함께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 조선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업	합계	비자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
현대중공업	2559명	1446명	1113명
현대미포조선	1449명	1004명	445명

* 6월 9일 기준, 자료=울산 통계청

울산 동구HD현대중공업 본사 인근
일산해수욕장. 요즘 들어 일산해수욕
장에서 외국인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
와 간식을 먹으며 여유로 노는 모습
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울산 조선업계가 외국인들을 대거 채용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6월 기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900여 명. 동구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더 늘어나 향후 동구에는 1만5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동구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한다. 울산의 한 조선협력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업 일자리를 꺼리는 현상이 계속되면 외국인 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채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1번지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의 외국인 인구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계 인력난에는 숨통이 트였으나 늘어난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공존이 숙제로 떠올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울산시 외국인 인구는 2만25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5명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889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3236명, 364.0%나 증가했다. 울산시 5개 구·군별로 보면 올해 증가한 외국인 4125명 중 거주지는 동구가 26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울주군 821명, 북구 346명으로 뒤를 이었

다. 동구는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곳으로 조선업 인력난 속에 외국인이 대거 채용된 결과로 분석됐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도 외국인 인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제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209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1만7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861명이었다.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와 산업계는 변화에 직면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소하기만 했던 총인구가 증가했거나 감소세가 둔화했다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인구는 112만 6671명으로 전달 대비 457명 증가했

다. 울산 총인구가 증가한 것은 2016년 5월 이후 7년4개월(88개월) 만이다. 내국인은 감소했으나 외국인이 더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거제시는 외국인 증가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만 4361명으로 지난해보다 2301명 감소했다. 거제시 인구가 해마다 4000~50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절반으로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 급증에 따른 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하는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다. 오는 29일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가족이 참여하는 세계문화축제도 개최한다. 울산 서대원·거제 회송군 기차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A31면 피플

“해외동포 복수국적 문 넓히면 인구·투자 시너지”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펴는 해외 동포들에게 복수국적과 우편·전자 투표를 허용한다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모국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 인도의 해외 동포 접촉력이 늘어난 정도인데 우리도 모국과 해외 동포 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인도한인회총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지낸 그는 약 400개의 한인회가 창제 2021년 만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약 750만 명의 해외 동포 중 480만여 명은 외국 국적이 있고 288만 명은 영주권자·주재원·유학생·기입인 등 한국 국적이다. 나라별로는 약 3분의 1이 미국에 거주한다. 심 회장은 27년 전 인도 천 나이로 이주해 현대그룹 관련 건설과 자동차 수출 대행 등을 하고 있으나 영주권도 받지 않고 애초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에서 대학을 나와 경영에 참여 중인 둘째 딸 부부와 서울에서 증권사 임원을 하는 큰딸(벤호사)도 마찬가지다. 세남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도에 내고 아파트 등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에 낸다. 건강보험료는 입국해 있는 기간만 낸다. 그는 “당초 현대차 공장 건설에 참여했다가 현지에 놀라움이 견속임과 레미콘 공장을 하는데 3년마다 사업 비자를 갱신한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과 실용적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750만명 동포 중 480만 외국 국적 복수국적으로 인구유입·애국심 고취 병행·남세 의무 등 하거요건은 엄격히 한국적 재외국민엔 인터넷투표 허용 동포들과 모국간 상생기회 넓려야

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 한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돌입한다. 심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해외 동포 정책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게 기가 돼야 한다”며 “복수국적 허용 시 인구주택 시대 인구 증가와 모국 투자 유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해외 유대인들이 하대스와 전쟁 중인 모국(이스라엘)을 위해 애비군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도 국가 비상

사태 시 힘을 보탬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기준은 △모국어를 할 수 있고 문화·풍습을 알 것 △일정 기간 모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낼 것 △난민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 등을 들었다. 심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적 취득을 허용해 모국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는데 우린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 허가 요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 국적이었다가 외국으로 귀화한 65세 이상 중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 허가를 허용할 경우 등에 국한된다. 이 규정은 재중 동포(조선족)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 회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영구 임대 아파트도 주고 생계·의료 급여 지원이나 취업 교육·훈련 등을 해주는 데 형평성에 맞느냐”며 “아사아열처럼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를 묶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미국·유럽 등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한 인도 출신들 OCI(Overseas Citizen of India)나 PIO(People of Indian Origin) 형태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아 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계 중에는 러시아 수배 영국 총리와 카밀라 캐리스 미국 부통령 등 정치권, 손다르 파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사타와 나텔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이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또한 해외 동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대선·총선 등에서 한국 국적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선거인단 등록을 한 뒤 투표함에 다시 방문해야 해 투표율이 11%가량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세계 한인회장 356명이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청원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11개국은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스페인·포르투갈 등은 우편 투표나 공관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심 회장은 “미국·인도 등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두 번씩 왕복하는 게 쉬운 일인가”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공공물 선정가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A08면 종합

외국인 근로자 수 1위 화성 ... “이 사람들 놓치면 공장 문 닫을 판”

❑ 아시아 용광로 된 화성시 - 인구 5%가 외국인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식물 제조업체 늘푸른 공장은 직원 세명 중 절반은 베트남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일용이다. 이들은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중년 여성 근로자들과 절단, 세척, 가공 등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안성고 늘푸른 대표는 “제조 현장에서 근로자 국가는 없지만 ‘제조 현장’이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체제로는 결코 돌아가고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한 경기 화성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별다른’을 끌어들여 화성으로 몰리고 있다. 인문 남동, 경기 한울·시흥·군단 공업들이 남부지역 등지를 뒤흔들고 있는 화성시 노동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다국적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 제조업에 수혜를 입은 화성시
26일 업무에 따르면 화성시 말 한국에서 중국, 외국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화성시로 나타났다. 현재 4만 3500명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귀화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5만 2000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한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조업체(2만 787개)가 몰려 있다. 외국인 고용하기 비자(주)에 따라서는 외국인 수도 2만 7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동북 화성시, 화성시, 안성시,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제조업체 한국에서 가장 많은데 대부분 30대 중반, 외국인 고용 늘어 ‘외국인력’이란 단어를 안 들어간다

발탁이 구직자보다 70% 많아 급속히 증가 중 실업률 10% 돌파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지자체다. 시 전체는 “현재의 94.2%에 달하는 50만 미만의 중소기업(2만 9000개) 대부분이 화성시 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안면은 10여 년 전까지도 화성시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늘푸른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 화성=김대현 기자

화성시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한 화성시 말 한국에서 중국, 외국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다. 현재 4만 3500명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귀화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5만 2000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한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조업체(2만 787개)가 몰려 있다. 외국인 고용하기 비자(주)에 따라서는 외국인 수도 2만 7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동북 화성시, 화성시, 안성시,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제조업체 한국에서 가장 많은데 대부분 30대 중반, 외국인 고용 늘어 ‘외국인력’이란 단어를 안 들어간다

발탁이 구직자보다 70% 많아 급속히 증가 중 실업률 10% 돌파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지자체다. 시 전체는 “현재의 94.2%에 달하는 50만 미만의 중소기업(2만 9000개) 대부분이 화성시 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안면은 10여 년 전까지도 화성시

파워는 지난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 수는 70%에 달했다. 구직자보다 일 자리가 70%에 달하는 데다가 불법 취업 외국인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성시에서 생활하며 화성시 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70%에 달하는 데다가 불법 취업 외국인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70%에 달하는 데다가 불법 취업 외국인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70%에 달하는 데다가 불법 취업 외국인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한국경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A08면 종합

발안만세시장 ‘화성판 이태원’ 됐다

26일 경기 화성시 평리 발안만세시장에 있는 눈꽃아시아마트는 다른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수, 커피, 가지 등이 진열돼 있었다. 직원 A씨는 “베트남인들이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해 먹는다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하기도 힘들어 화성에서 직접 재배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의 경기 남부 지역 발안만세시장에 서울 이태원에 이은 외국인 밀집 시장 지역이 되고 있다. 발안만세시장의 점포 800여 곳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이 주인이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상점들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만 17개국에 달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12개국 식당도 상점 중이다.

김동성 발안만세시장상인회 매니저는 “국적의 다양성에서 경기 남부의 외국인이 거점이라고 부르게 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찾은 발안만세시장에선 오가는 사람의 70~80%가 외국인이었다.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바구니를 들고 장



외국 식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경기 화성시 발안만세시장의 월드푸드마트. 화성=김대현 기자

17국 외국인상이 밀집지역
“손님 중 한국인은 20%뿐”

을 보고 있었다.

식당을 여러 곳 보유한 외국인 ‘자장’도 많다. 네팔 출신 영주권자인 카트리 카렌드라 사장은 네팔의 국화인 ‘팔라구라’라는 이름의 식당을 7년 전 열었다. 카트리와 네팔식 튀김만두인 서모스 등을 판매한다. 그는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람들이 주로 찾지만 최근엔 한국인 손님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에서 그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아시아 근로자들의 ‘사랑방’이다.

건물 한 채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장님들로 채워진 곳도 상당수다. 1층엔 캄보디아 마트인 캄진아가, 2층엔 할랄 레

스토랑인 자이툰이 있는 식당이다. 발안만세시장의 사출공장에서 일한다는 투아 씨(23·미얀마)는 “미얀마식 빵인 프라타와 쌀국수를 먹을 수 있어 장남이면 시장을 찾는다”며 “같은 쌀국수라고 해도 베트남식, 태국식하고 쓰는 양념과 맛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좌판 옆에선 네팔식 모자 토피를 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다. 시장 관계자는 “화성이 넓다 보니 시장 안 행정 사무실에서 외국인 대상 종교차 거제도 활발하다”고 했다.

시장 한쪽에 있는 대결수산은 각국의 국기가 그려진 간판을 내걸었다. 바닷고기보다는 민물고기를 주로 판매한다. 요즘 시골 장에서도 보기 힘든 가물치, 블루길에 눈에 띄었다. 직원 B씨는 “동남아 사람들이 튀김으로 먹으려고 주로 사간다”며 “네팔 베트남인들이 좋아한다는 개구리도 판다”고 했다.

30년 시장 터줏대감인 사진관 발안만세사진관 대표 C씨(59)는 “손님의 80~90%는 외국인으로, 주로 신분증용 증명사진이나 가족에게 보낼 사진을 찍는다”며 “발안만세시장에서 외국인과의 어울림이 보나 국적은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화성=김대현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A17면 산업

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악용 막는다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등재
외교관·주재원 가족 등은 예외**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

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지배주의 가족 등이 바로 건너

한국경제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A01면 종합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외국인 250만 시대 ③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비중 5% 돌파 전망
일본 제치고 아시아선 처음
"외국인 융화정책 재정비해야"**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장기근로·선원·영주 등의 비자를 보유한 장기체류자 196만7000명과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55만7000명을 더한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7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37%로 회복했다. 올 들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근로자 증가세를 볼 때 내년에 공식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5%'는 인구·통계학과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1989년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아직 2.38%(1억2541만 명 중 299만 명)에 그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5%만 정주민이 학교와 일터, 길거리 등 언제 어디서든 외국인 혹은 외국 문화 배경의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A17면에 계속 김대훈/최해린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A04면 종합

“자영업자 생사기로” ... ‘외국인 차등임금’ 거론한 尹

국무회의서 민생현장 목소리 생생히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율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었고, 전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최근 민생 현장에서 수집한 서민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또 “꼭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를 전하는 상황에 있다 바치는 현실에 대해 문명의 종노릇 하는 것 같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울 수 있는 국민의 외환, 현상이 일과에 산책하게 생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상이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만 봐도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민들의 거대한 절규가 있다면 거기에 응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은 고령과 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ILO 조항은 고령과 저임금 문제를 금지한 ILO

협약 111조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골 밑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기로 생각하고 있고,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ILO 조항을 탈피하는 것 아니냐”는 호소가 있었고, 전했다.

전통가들은 ILO 핵심 협약인 111조 비준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제국은 통상 협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생생하게 국무회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하는 종노릇 하는 것 같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소상공인 발언을 소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시장과 관련된 이익을 거둘 경우 일부를 종노릇하기 위한 ‘일대’로 도입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이날 주요 언론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은 고령과 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ILO 조항은 고령과 저임금 문제를 금지한 ILO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외국인 고용 식당 인건비 폭등 자영업자 ‘ILO 조항’ 탈피 호소 고령자에 ‘종노릇’ 하소연”

일각 “행정 연금개혁안” 비판에 “정치적 유훈려 계산 않고 추진”

자본에게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36건의

현장 소문을 다룬 뒤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강제연금법의 유식 가격 및 선별 가격 한도 규제 △50만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부작을 △연과 밀집 지역 내 CCTV 등 차단 인프라 부족 문제 △별과 후 어원이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 소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유훈려를 계산하지 않고 연구 개혁의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놓고 ‘알맹이가 없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연구 개혁의 필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가 없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연구 개혁의 필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가 없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연구 개혁의 필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서울신문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Z10면 전국

장기취업 ‘고학력 외국인’ 중도 출국 필요 없게

단체장 추천받으면 정착 쉽게
전북·법무부, 이민정책 업무협약

연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내년부터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학력 수준이 높고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켜 기업과 한층 높은 법률을 해소하고 연구 소멸 위기의 전주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기를 위한 시책이다.

전북도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이민

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 인력,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정착에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관련 의견제시 등 참여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구직자가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중도 출국이 필요 없고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프-4)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용업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등이다. 전북 163명 등 전국적으로 5500명이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30일 전북 전주시 도청 회의실에서 ‘법무부-전북도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 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특화외국인 사업은 내년에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 분야 이상 외국인 인건비에 연구감소자역에 5년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 동반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선별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적으로 1500명에게 발급됐다. 전북에서

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400명이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 안착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재공포할 경우 적어도 500명 이상의 위태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와 기술 근로자의 정착을 도모해 연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전북은 연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농생명산업 등을 통해 외국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돼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승학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11월

한국경제

2023년 11월 06일 월요일 A06면 정치

태국과 '입국거부 논란' 해결책 논의

현지 불만 '반한 감정'으로 확산
정부간 회의서 입국심사 등 협의

한국과 태국이 조만간 역사국장회의를 열어 태국인의 한국 내 체류 및 입국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태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하면서 태국 내 불만 여론이 '반한 감정'으로까지 번진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장효진 외교부 제1차관이 전날 태국 방콕에서 사단 차관 수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 언론 타이PBS에 따르면 사단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인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장 차관은 유감을 표시하며 태국 관광객을 거부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태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불편한 심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이 퍼지며 반한 감정을 부

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X(옛 트위터)의 트랜드 1위를 차지했다. 1일에는 세타 타워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자국 외교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국내 불법체류자 중 태국인 비율이 78%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 9월 15만7000명으로 3배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00명)보다 약 2.5배 많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을 두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은 18만 명으로,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 중 6위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태국인 27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태국인 입국 거부 사례가 늘면서 일본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태국인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일본은 한국보다 2.6배 더 유치했다. 행정규 기자

한국일보

2023년 11월 03일 금요일 A11면 사회

태국 '한국여행 보이콧'
총리도 "조사할 것" 나서

태국 출신 불법체류 많이 심사 엄격
"한국 입국장서 퇴짜" SNS 출몰이
현지선 '예비 범죄자 취급' 반한 정서
"자라리 일본-대만 가지" 관광 타격

"최근 한국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절 당했다. 과거 한국을 내 차례 방문했을 때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이번처럼 일방적 항공권, 호텔 예약 내역을 모두 증빙 서류로 제출했는데도 결국 한국 국경을 밟지 못한 채 강제 귀국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모른다. 이번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자신을 태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현재까지 1,000만 건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고, 수만 건 남게 공유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2일 태국 방콕 포스트와 타이거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SNS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연은 제각기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다. "한국 입국 절차가 불합리하게 까다롭다"는 것.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만을 입국하기 위해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항공권을 내며 스포츠장 스포츠에 관여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태국인들은 이 서류가 없더라도 거부당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태국인 여성은 "다른 서류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 항공권과 비교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며 "이번 한국 여행을 위해 5년간 돈을 모은 것도 문제가 됐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태국인은 "입국 심사관이 내 과거에 한국을 내 방문했던 기록을 보고는 '왜 다른 나라를 찾지 않는다고 묻는다'면서 '여기 내가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끊임없이 심문했다"고 말했다. 신분이 확실치 보장은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태국의 한 대학교수는 "20여 곳의 나라를 여행했는데, 한국에서만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영문 일간지에 밝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불만 공유 수준을 넘어 한국인 한테에 대한 비판

과 '한국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정도 문제다. 조화수 100만여 명의 한 개사원은 "한국은 체면도 있고 정을 반영하는 곳이지만 국민을 생가는 뒤처져 있다" "한국 사람은 태국인에 대해 인종 차별적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타어는 보도했다. 현재 '한국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는 엑스의 검색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입국 심사에 나선 건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 한국에 '비내국적'은 유령으로 불리는 불법 체류자 14만 명이 넘을 거중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태국 유령가수 양 추대식의 콘서트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6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태국 매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연정했다. 방콕포스트는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로 체조인 등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일어난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사과했다.

태국이 케미컬과 한국 드라-연화물 '합류' 연가 높은 나라이자 동남아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 수가 급증하는 나라이자 정을 반영하고, 어 같은 감정은 한국에도 악재다. 태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은 4만3,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적대유형이 이전인 2019년 3월 당시의 81.7%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하반기는 50%대로 떨어졌다. 그사이 일본을 찾는 태국인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일본은 한국보다 태국인 관광객을 1.7배 많이 유치했는데, 올해 5월에는 2.6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글과 함께 "자라리 일본이나 대만을 가는 게 낫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노이-하노이주 특파원



07 주요 언론보도

The JoongAng

2023년 11월 07일 화요일 001면 종합

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높은 시군구

전남 함평	경북 영양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영암
20.5%	20.2%	20.0%	19.5%	19.3%

아이들이 하교한 뒤 충북 청주 봉명 초등학교의 한 교실. 신발장에는 이름이 적힌 실내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6켤레 중 절반은 세 글자 이름, 나머지 절반은 '오백오리아, 김사오나, 김이오르' 등 너댓 글자 이름이다. 이 학교 전교생 538명 중 288명(53.5%)이 다문화 학생이다. 옛 소련 지역 출신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는 '고려인 타운'까지 있다.

최근 이 학교를 찾은 기자는 1학년 교실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교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묻자, 한 학생은 "미역국"이라고, 다른 학생은 "cynn(수프)"라고 대답했다. 이 학교 부임 2년째라는 한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러시아

다문화시대 공존의 교실

2014년 6만8000명→올해 18만명
함평·영양·신안군은 20% 넘어
"다중언어 가능한 교사 등 지원율"

어를 따로 공부한다"며 "아이들과 애기할 때 파파고 등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교실 풍경이 봉명초만의 애기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다문화 학생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4년 6만8000명이었던 게 올해는 18만1000명이다. 전체 학생 중 비율로 따지면 1.1%에서 3.5%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주 배경 인구(본인이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적, 귀화자, 이민 2세)가 2020년 218만 명(4.2%)에서 2040년 323만 명(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문화 학생 수도 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교육 통계 시스템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별 다문화 초등학교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인 곳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6곳(24.5%)에 달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20.5%)이었다. 경북 영양(20.2%), 전남 신안(20%), 전북 임실(19.5%), 전남 영암(19.3%)이 그 뒤를 이었다.

최민자·정윤서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 6면 '다문화 초등생'으로 계속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3년 11월 08일 수요일 A25면 사회

올해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투입

3분기까지 국내 인력은 2천여명

인력난을 겪는 국내 조선업계에 올 들어 외국인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신규 투입됐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E-7)과 비전문인력(E-9) 1만2339명을 국내 조선업계에 투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E-7 비자로 6966명, E-9 비자로 5373명이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도 이 기간 국내 인력 2020명이 조선업계에 취업했다. 이 인원까지 합하면 1만4359명이 조선업계에 신규

채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총원으로 올해 예상했던 조선업계 부족 인력(약 1만4000명)을 메웠다고 봤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선업계에 생산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충족한 비전문인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적극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현대미포조선에서 베트남인 25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연수형 E-7' 비자 제도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조선업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조선 관련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받아 채용되면 E-7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진성기자

東亞日報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 A27면 투데이

인천공항서 쓰러진 日 시장,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신속 대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70대 일본인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이 남성은 출장을 온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의 이와쿠라 히로후미 시장(73·사진)으로 밝혀졌다.

7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일본인 단체 방문객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근 심사장에서 근무하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종섭 팀장(53)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즉각 달려 나갔다. 쓰러진 남성은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정 팀장은 직원에게 제세동기(AED)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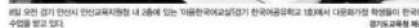
가져올 것과 119 신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항소방대가 올 때까지 약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직원들도 팔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처치에 나섰다.

공항소방대는 이 남성을 공항응급센터로 옮겼다가 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측은 추후에 이 남성이 이와쿠라 시장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부터 도마코마이 시장을 지내고 있는 그는 이날 함만 이용 축진을 위한 출장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 013면 전국



Annual Report 395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본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로”... 기능실습생 이직도 가능해진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미얀마인 소련(23)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뒤 자동차 정비학교에 진학해 기술을 익히고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다.

중국인 유웨이(23)도 같은 기능실습생으로 한 달째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는 “3년간의 기능실습을 마친 후 일본에서 일하게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꿈 실현을 돕는 제도까지 마련돼 있다.

기능실습 기간이 끝나면, 특정 기능 1종 자격을 취득하면 인턴십과 5년 동안 다 일할 수 있고, 숙련 노동자가 되면 자격시험을 거쳐 제1종 제2종이 없는 특종 기능 2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구분	기능실습생(1~10년)	특정기능(1년)	특종기능(5년)
시행대상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취업기간	초·중·고교 재학 중 3년 2년 2년 1년	1년	5년
비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고급 기술
거주지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좌)와 유웨이(우)는 자동차 정비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기능실습생들

호프타사라 유웨이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소련과 유웨이(23)는 일본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소련과 유웨이(23)는 일본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소련과 유웨이(23)는 일본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은 1993년 4,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주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1종(1~10년)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아베라카한 호프타사라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A14면 사회

‘광폭 행보’ 한동훈 울산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최선”

HD현대중형 현장 목소리 청취
‘설치는 암컷’ 최강욱 논란에
“공론장서 퇴출이 세계적 물”

최근 대구·대전 등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종전 출마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오전 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문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 앞에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다”며 “허허벌판 같은 백사장에 조선포를 건립한 정 회장의 용기와 그것을 알아보고 믿고 지일했던 정부, 무엇보다 조선포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울산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 장관은 “인력 부족으로 조선포들이 배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지만 정부는 물이 빠져나갈 때도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확대 등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과 잘 지내고 잘 섞이는 외국인들을 뽑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병명록에 글을 남기는 중에 김두겸(오른쪽) 울산시장이 글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장관은 최근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으로 당원 자택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인종차별이나 여성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물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그분이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It's Democracy, stupid(아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처럼 ‘아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남을 세웠다.

한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외국인 이슈마다 담당 부처가 다르지만 출입국

매일경제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A04면 종합

‘외국인 19% 단일세율’ 사라지면…우수인력 유치 어떡하라고

국회 특례에 특례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몰렸다.

올해 말 종료로 종료되는 특례제도의 연장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19% 단일세율 특례제도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입법부가 맞서고 있다. 상임위인 안건에 따른 심판·고충·의견 청취 위기를 통과할 국·민·유치 등 세 가지의 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유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말 제정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3년 5년~2025년 확대해놓

법률 “법정세 ‘아파트’ 환소리
근로자 소득·종교세까지 면제
‘우수·과학·고급인력 유치제’
특례 제외되면 타격 불보듯”

외국인근로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5년간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3년 만에 열린 ‘특례제’의 재검토는 안건이면서 정부와 입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19% 단일세율 적용을 늘리는 한편, “이제라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며 “유치에 합의하는 한 나라에서 그간 기술인력이 다 출몰하게 될

고충을 해결해 외국인근로자-정부 수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여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보람있는 일”이라며 “제정 기간만 5년(2023년 12월 31일)만 연장, 거기에서 또 불임도 개입하고 말은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4%포인트를 구조인 기본 소득에서 외국인근로자가 19%보다 낮은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넓히는 기본세율 인하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여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보람있는 일”이라며 “제정 기간만 5년(2023년 12월 31일)만 연장, 거기에서 또 불임도 개입하고 말은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4%포인트를 구조인 기본 소득에서 외국인근로자가 19%보다 낮은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넓히는 기본세율 인하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부(대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이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 세율을 19%에서 더 낮춰 해외 구간에 속한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세율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외국 인재들이 한국 근무를 고려할 때 고공가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소득세 특례까지 폐지되면 큰 크고 중소기업도 할 것”이라며 “모든 우수인력이나 생

명세로 국내 기술인력으로는 아직 소위특례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이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 세율을 19%에서 더 낮춰 해외 구간에 속한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세율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외국 인재들이 한국 근무를 고려할 때 고공가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소득세 특례까지 폐지되면 큰 크고 중소기업도 할 것”이라며 “모든 우수인력이나 생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국민일보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001면 종합

‘한동훈표 이민청’ 연내 발표 유력

노동력 공급·불체자 엄단 투트랙
韓 “국민 삶 위해 이민정책 불가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이민청)의 세부 내용이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계부처, 국회와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민청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력 공급’과 ‘불법체류 엄단’ 투트랙으로 요약된다.

이민청 설립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의 대표 정책이자 마지막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

문가들은 이민청이 기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넘어 외국인 필요 분야와 수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계획을 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방안과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 및 국회 법사위원 등과 마지막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은 의원 입법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등이 이민청

산하로 편입된다. 한 장관은 이달 들어 대구와 대전, 울산을 잇따라 방문해 외국인 인력 유지와 이민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인력을 끌어오는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수층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잡기, 불법체류와 치안 불안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외국인·이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11면에 계속

박재현 신지호 박성영 jhyun@kmbi.co.kr

국민일보

‘한동훈표 이민청’ 청사진 >연서 계속

법무부의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 일정

2023년 5월 17일	한동훈 장관 특임차기 1주년 기념 강연, 수도권 외국인 정책 추진
11월 7일	법무부 장관, 이민청관제에 관한 추진안 발표
2023년 1월 26일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3월 7~11일	법무부, 이민청관제 출범 1주년 기념 강연
3월 7~11일	한 장관,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
8월 14일	법무부, 외국인 노동력 관리 방안 발표
10월 30일	법무부, 한·미·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11월 17~19일	한 장관, 대구광역시(연세대학교 70주년 기념) 방문,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에 대한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 “외국인 인력 세부적으로 관리할 체계 갖춰야”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조선업 등에는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영역에 외국인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조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표 이민청’의 핵심은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는 엄단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가 대표적 예다. 지난 8월 말 법무부

는 200명 수준인 E-7-4(숙련 기술인력)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E-7-4 비자 확대는 곧 E-9(단순 노동력)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6년 이상 체류,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 한국 어 능력시험 20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E-7-4 비자 확대를 두고 “외국인력 부단 이동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 우수 인력에 대한 비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세우고 올해 시행 중이다. 올해 4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만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민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 문제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연구정책연구센터장은 “외국인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다”며 “이민청이 가급적 빨리 만들어져서 일본, 대만 등 해외와 비교 우위를 아깝게 가질 것인지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는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우수 인재 등의 비자를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인력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문화·언어적으로 적응시키고 관리할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12월

朝鮮日報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X15면 지방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 안착... 농가 인건비 28억 아껴

베에서 리오스 등과 인력공급 협약
한강 관평까지 시켜주며 적용 도와
농민들 "일손 급했는데 승용 트럭"



지난달 7일 송인원(사진) 괴산군수는
리오스를 방문했다. 괴산에 대외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다. 리오스 정
부와 농업 인력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
다. 군수가 해외를 찾아다녀 일손을 구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직업 소개인 역

총괄 괴산군에 보내지
음으로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농
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금 절감 효과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농업특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특집은 하루 단역, 혹은 반나절
씩 단기간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단
기 일손이 필요한데 숙식나 식사 제공 등
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들에게는 반가운 소
식이다.

괴산군은 괴산농협과 함께 지난 4월 필
리핀 군도자 30명을 데려왔다. 괴산읍 성
불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을 숙
소로 쓰면서 월배급 200여만원을 받수 있
도록 도와준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루

연봉은 12달 360원, 사망가능하다 5만
~6만원 정도 지령한다. 농가는 계절근로
운행선대에 인력을 지령하고, 선되는 숙
식비 정도만 배고 인명적인 월급을 보장에
주고 있다. 이 30명은 5개월 동안 1000원
농가에서 일했고, 괴산군 임용예산 누적
인원으로 3072명의 인력을 만들었다.

계자는
아 할
것이다
올해
이탈 시
이들의
리인 일
했고, 사
농사 한
고 있다
자 숙

朝鮮日報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A10면 사회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승소 확정

2020년 이후 두번째 대법 판결
정부 "법원 판결 존중하겠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
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
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30일 대법원이 유씨
의 승소를 확정했다. 정부는 "법원 판
결을 존중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
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한 차
레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가 비자
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
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
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갔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
했다. 그 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
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는 앞서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
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유씨
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
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유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
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가 두 번째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 판결이 같았다. 1심은 "LA 총
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
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유씨에게 승소 판
결을 하면서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
비자 발급 거부하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3부(주
심 이흥구 대법관)도 2심에 법 위반 등
이 없다며 별도 상리를 하지 않고 유씨
승소를 확정했다.

이세영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A23면 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확 늘린다

법무부 총 55명 증원 입법예고
스토킹 담당 인력도 대폭 확충

국내 노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법무부가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2월 5일자 A27면 보도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한 필요 인력 55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을 공개했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사증(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적발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전국에서 302명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1명당 1400명이 넘는 인원을 단속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속 인력 공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0년 동안 2배 넘게 폭증했다. 2013년 18만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43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입국 이후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하

지 않거나 출국 기록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들을 통계로 낸 수치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세웠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 관리 인력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예빈 기자

朝鮮日報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A12면 사회

'국가 안보 해칠 우려' 등 난민 불인정 조항 신설 추진

법무부 '난민법 개정' 입법 예고

법무부는 12일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해 난민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난민 불인정 사유'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입국 전에 해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난민 자

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터러 단체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외국의 전과 자료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입국한 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도 난민 자격을 불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을 심사하면서 '국가 안보 침해' 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에 저촉되면 난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난민으로 이미 인정받았더라도 '안보 침해' 등 사유가 생기면 난민 인정이 철회·위소될 수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동안 테러

리스트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이민규칙법, 유럽연합 난민보호 실효적 지침, 영국 이민규정, 독일 망명법 등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법 개정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외

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이주인 통합을 제고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한 난민 심사 강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상호주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인권센터의 강연주 변호사는 "현재도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어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에 위협이 될 경우'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릴 경우 난민을 추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유종현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01면 종합

비자 남은 유학생들, 강제출국 시킨 한신대

‘우즈베크 22명’ 행선지 속인재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 압수
학생들 “자진출국 서약서 강요”
학교쪽 “채류조건 미충족” 주장

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자진해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밝혔지만, 유학생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맞서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우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학교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관련기사 5면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여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은 지난 11월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쪽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버스는 처음 이야기와 달리 팔레의 출입국관리소로 가는 대신 화성 병영역에서 사실강아입체 직원들을 태운 뒤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직원과 경호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약해둔 귀국편 비행기에 태웠다.

유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은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금 비자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직원들은 경비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학교는 이날 스출입국서부 미제출 △기속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 모두를 제적처리했다.

한신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신대 여학당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11월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유학생이 이렇듯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들을 함박해 강제로 귀국시켜 도모했기 때문이다.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어학연수생용 3개월짜리 조건부 비자를 받았고, 만료 기간은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20일 전후다.

▶연관기사 1면

이은희 기자 eunhye@han.co.kr

朝鮮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A10면 사회

군대 가려고 했더니 내가 불법체류자?

한국·러시아 다문화 자녀 1만여명
바뀐 국적 제도 몰라 ‘불체자’ 신세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모(19)씨는 두 나라에 모두 출생신고가 됐지만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한국 여권으로 5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올해 초에는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군 입대를 위해 지난 6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려고 출입국사무소에 갔다가 ‘불법체류자’ 통보를 받았다. 한국 국적은 없고 러시아 국적만 가진 상태에서 불법체류했다는 판정이었다. 최씨는 “평생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황당하다”고 했지만 한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도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잘못 발급해줬다”고 했다.

최씨처럼 한국·러시아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가 최대 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2년 러시아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 ‘러시아 영토 외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은 후천적으로 부여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후

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포기된다’는 우리 국적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다. 최씨도 2004년 한국에, 2006년 러시아에 차례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러시아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은 잃은 것이다. 그는 “러시아 국적법이 바뀐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나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적 회복 과정도 복잡하다. 먼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인 체류 자격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에 평균 8개월 이상이 걸린다. 불법체류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3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한·러 부부로 미성년 자녀의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A씨는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 돼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다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나현 오디에스 대표는 “러시아 국적법 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지역이나 기관마다 설명도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채 불법체류자가 된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법 제도가 충돌하면서 생긴 특수한 경우인 만큼 국적을 회복하려는 한·러 가족들에게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경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JoongAng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B01면 경제

외국인 근로자 셋 중 한 명, 월 300만원 이상 번다

92만3000명이 취업해 역대 최대
중국 동포 33%, 베트남인 14%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 크지 않아
IT 등 고임력 유망도 서둘러야

지난달 20일 오후 6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식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 매뉴얼엔 중국어·베트남어로 '도움만 잘 부탁해요' 문구가 적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잡부'라고 불리며 저숙련 건설 노동자를 주로 맡았다"며 "최근엔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가 고임원화됐다"며 젊은 층이 '노키다(일용직 건설근로자)'를 기피하며 고숙련 노동도 외국인으로 채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슈링크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의 충격을 맞은 건설 현장의 모습이다. 슈링크노믹스는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소비-투자 불발의 경제 체제를 이끄는 현상이다. 슈링크노믹스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이민과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거론된다. 국내 이민자와 체류 외국인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 저숙련 근로자지만 일부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0일 넘게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9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임금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기간에 이민자 유입이 주춤하다 몰래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분류했을 때 조선족 등 한



국계 중국인 비중이 3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14.1%)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계를 제외한 이민자는 97%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관광·제조업(44.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업·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이었다. 취업자의 33.2%가 임시임용 근로자였다.

월적으로 과거보다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인 비중이 50.6%로 가장 많았다. 월 300만원 이상이 35.8%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 이상 받는 비중은 1년 전보다 5.7%포인트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 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00만 7000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78.5%가 근로시간, 67.7%가 임금 측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중장년구 추계(2022~2072년) 결과'에 따르면 인구 구조상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복·유망 선진국처럼 정보기술(IT)·첨단제조 분야 고급 인력까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민 대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림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숙련 일자리로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인력 같은 고숙련 일자리는 공급이 부족해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측면에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

고 고숙련·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이민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민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내국인 일자리 총량이 감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의 전체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UN인구기금은 '세계 인구 보고서'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부패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해 해당 국가의 기존 노동자에게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The JoongAng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X18면 국민

"베트남 월급의 4배" ... 굴 수확철에 찾아온 청년들

젊은 기간 노동자는 '제철근로자'로
근로자 만족도 높고, 이탈자 적어

젊은 기간 노동이 필요할 때 농가를 돕는 제철근로자 제도가 갈수록 수확철에 효과적이라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주에는 현재 베트남 남민성(南民省) 출신 20~30대 청년 40명이 제철근로자(농부)로 파견돼 있다. 지난 11월 54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온 이들은 내일 3월까지는 사귀지 위미농협 조합원 농가에 머물러 있다.

사귀지 위미농협에서 2만 6000원(16000원) 규모의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문진식(50)씨는 "고령화된 '수확부'에 주로 맡겨왔던 일을 젊은 청년들이 맡게 됐다. 베트남 젊은이들 덕분에 올해 감귤 수확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했다. 배

트린 청년들도 대체로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지역 농장에서는

일하는 연미영(39·여)은 "제주 월급이 고국보다 훨씬 많았다"며 "생애 처음으로 나 혼자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2년여 소름이 쫓고

있지만, 농장주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령 친구에게도 우연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에 감귤 수확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내년 3월 수확철이 다가오면

인구는 남상 15만명, 여성 925000명 수준이다. 베트남 제철근로자 일당은 남상 11만원, 여성 7만5000원으로 일당도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제철근로자라면 한 달에 받는 돈은 평균 180만원(일당 16000원) 정도다. 베트남 현지 임금 300만~400만원보다 4배 이상 높다. 이는 농협 측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가 높다고 보니 한계까지 이민자는 없었다.

위미농협은 지난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무단이탈 가능성을 점검했다. 일하다 함수영이 나타나진 않음, 근무 환경이 적성에 안 맞진 않음 등 중

점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 위미농협 김은주 상무는 "농가도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우려로 신중을 기울였지만, 작업 능력과 품성 등이 검증되면서 최근에는 애가 차를 정도"라고 했다.

문제는 농림·농부 본부는 "외국인 제철 근로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제주 농가에 오랜 귀환 손님"이라며 "이들이 전직 잡에 온 것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동 숙소를 마련해주고 휴일 문화체험 등도 진행해오고 있다"고 했다.

최종일 기자 choi.joongil@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A27면 사회

비자 확대에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열공'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250만 시대 '코리안드림' 쫓아 수강생 급증

경기 수원 지동동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비자 변경 관련 상담을 하는 수임 양씨 씨(43)는 요즘 쏟아지는 일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센터에서 운영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 하면 비자 발급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양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의 상담이 평소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정주제 비자(E-7-4 비자) 쿼터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채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E-7-4 비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업무 숙련도를 인정 받으면 장기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다.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선 KIIP를 2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 획득해야 한

'장기체류 보장' 쿼터 17배 늘자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문의 쇄도

관련 운영기관은 시설·예산 부족 "수용능력 한계인데 지원 귀고리"

다.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는 구조다.

KIIP 운영 기관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로 북새통이다. 지난 2월 초만 수원 영통동의 재한외국인협회의 80㎡ 남짓 한 교실은 5개국에서 온 25명의 학생으로 북적거리 들어차 있었다. 코로나19 전에는 수업당 인원이 15~20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까지 받아도 대기가 많고 수업이 더 열릴까라는 문의가 올 정도다.

이들이 이날 들은 수업은 중급 수준인 KIIP 3단계. 은행 업무와 가전제품 수리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필요한 문법과 말하는



듣기를 배운다. 이날 학생들은 도둑을 잡다와 도둑이 잡혔다 등의 차이를 배우고 있었다. 한국어 강사 김모씨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KIIP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올해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5개 기관에 KIIP를 위탁해 운영했는데 10월까지 총 1502명이 거쳐 갔다. 지난 해엔 8개 기관에 위탁 운영한 결과 총 수강생 수가 1468명이었다. 올해 전체로는 작년보다 20~30%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한국어 강의 수요와 별개

로 이들을 가르칠 인프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KIIP 0~5단계 가운데 학기당 한두 단계만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 예산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 141억5800만원에서 올해 140억2600만원으로 줄었다. 내년엔 154억2700만원으로 다시 10.0% 늘긴 했지만 인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17배 넘게 늘릴 동안 KIIP 교육 인프라 등은 달라진 게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관련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흥식 기자

東亞日報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A08면 종합

尹 "저출산 대책,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윤재 대통령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으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훈·대통령실장인사위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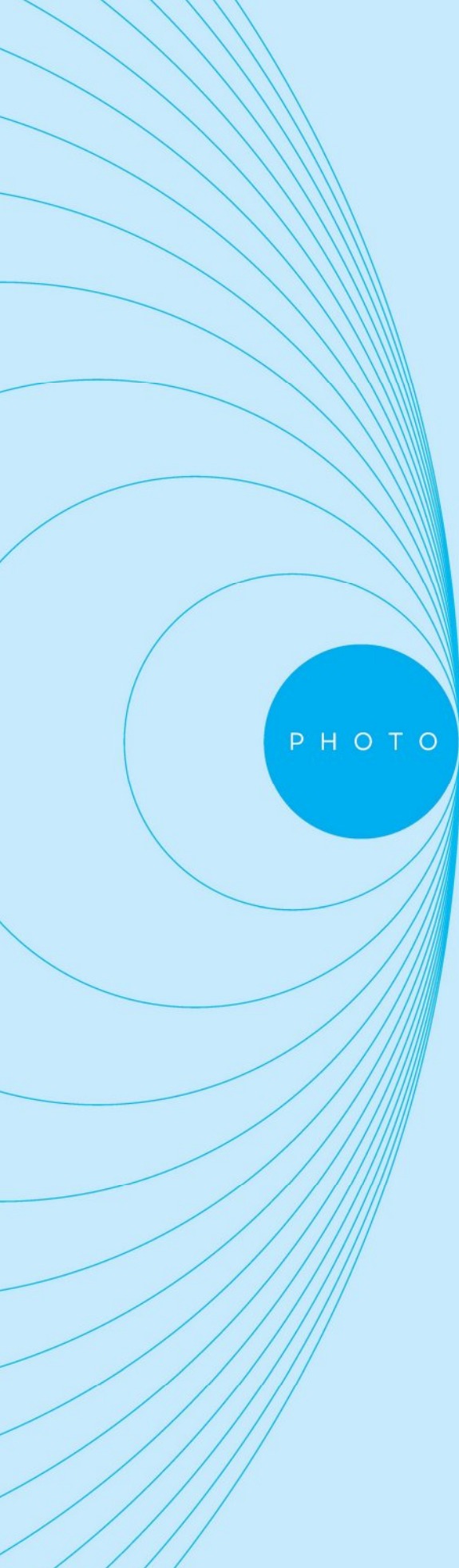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서울 등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

주변 공급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문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 없다. 즉각 바뀌어야 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영 기자 aimhigh@donga.com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4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PHOTO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정책 현장 방문 | 대전, 2023. 2. 22.



스카이트랙스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상 수상 | 인천공항, 2023. 3. 21.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상황실 감시감독 | 화성보호소, 2023. 3. 22.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 서울, 2023. 3. 31.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한-유엔난민기구(UNHCR) 고위급회의 개최 | 2023. 4. 2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중창대회 | 서울, 2023. 5. 11.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세계인의날 행사 | 안산, 2023. 5. 19.



운서 소방서 합동훈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23. 5. 2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몽골 이민청 연수단 방문 | 서울, 2023. 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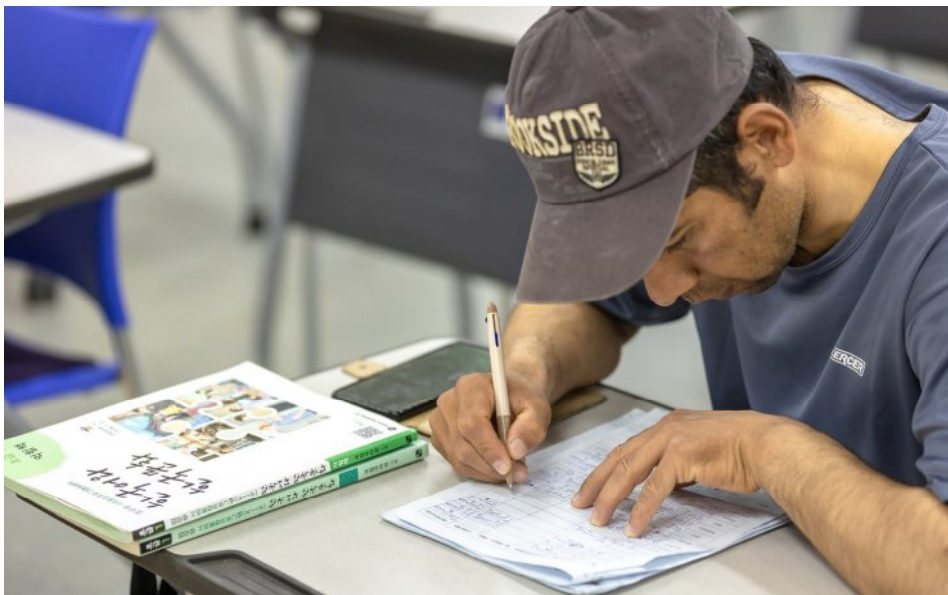


이민자가정 후원금 전달 | 서울남부, 2023. 6. 26.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재정착난민 9기 퇴소식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23. 6. 27.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 | 2023. 7. 1.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인구위기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 본부, 2023. 7. 3.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 양주, 2023. 7. 7.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 본부, 2023. 7. 18.



숙련기능인력 관계부처 회의 | 본부, 2023. 7. 19.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 본부, 2023. 7. 20.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방문 | 인천공항, 2023. 7. 21.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주한EU대표부 대표 면담 | 본부, 2023. 8. 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본부, 2023. 8. 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위촉식 | 본부, 2023. 8. 31.



출입국기동순찰팀 훈련 | 화성보호소, 2023. 10. 27.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마음걷기대회 | 서울, 2023. 10. 29.



정부혁신우수 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 인천공항, 2023. 11. 2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김장나눔 행사 | 대전, 2023. 11. 29.



출입국현장투어 | 대전, 2023. 11. 29.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김장담그기 행사 | 양주, 2023. 11. 30.



이민자와 함께하는 연말 나눔 수제초콜릿 만들기 | 부산, 2023. 12. 11.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 본부, 2023. 12. 14.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 수여식 | 본부, 2023. 12. 28.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4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